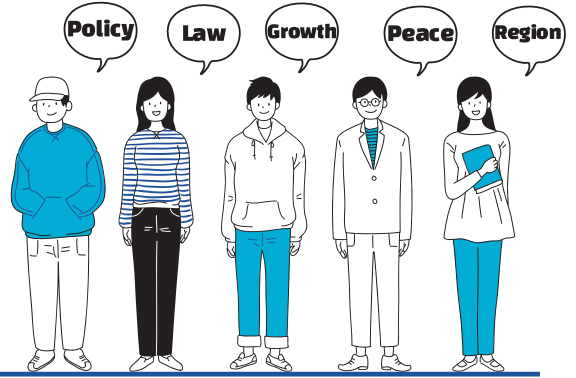


제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2021. 5. 11. ~ 6. 3.)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2021. 7.

주최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주관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Manifesto Youg Coop

발·간·사



노응래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노응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당과 함께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일 까지 시도당·지역위원회 정책담당자, 일반당원, 지방의회 의원 등 핵심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민주당 강령, 윤리규범, 선거법 등을 다루는 정치아카데미는 교육연수원 등 당의 다른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정책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 각 지역당원 및 정책 담당자 등에 대한 정책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연구원과 시·도당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정책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미래세대 발굴과 투자라는 차원에서 20~30대 청년 당원을 당의 자원으로 육성하고 청년당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아카데미를 기획하였습니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는 다양한 현안과 국가·지방 등 공공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청년 정책 전문가' 육성과 최고의 '인재 등용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기 아카데미 수강생은 사전에 17개 각 시·도당별로 만45세 이하 청년당원 3명씩 선발·추천 절차를 거쳐 총 5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아카데미 과정은 철저한 출결관리와 설문조사,



발·간·사

.....

현장 워크숍에서의 정책연구과제 발표(PT) 및 최종 보고서 제출 등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51명의 수강생 중 최종 36명(일반당원 10명, 지방의회의원 13명, 시·도당 당직자 13명)이 수료하여 '정책 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와 현장 워크숍을 결합한 온·오프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3주가량 진행된 아카데미 기간 동안 수강생들이 보여준 수준 높은 질의와 현장 워크숍 발표 등을 보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열정과 패기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교과 과정은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라는 대주제 아래 '국가 현안·비전 의제(3강)', '지방 재정·분권 의제(3강)', '지역 현안·비전 의제(4강)' 등 총 11강으로 구성하여 중앙 의제와 지방재정·분권 의제를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수강생들은 한국경제 전망과 한반도정책, 권력기관 개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거대담론부터 도시재생과 공동체 복원, 일자리, 주거 등 생활밀착형 의제까지 다양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시각을 키웠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비전 의제'를 다루는 현장 워크숍 4강은 각 수강생의 지역 비전과 정책 관련 연구과제 발표, 지도교수 코멘트와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식의 현장 워크숍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장 워크숍은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라는 대주제 아래 각 수강생이 준비한 정책연구과제를 7분씩 발표하고 네 분의 지도교수가 각각 1분 코멘트와 평가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수강생들은 현장 워크숍 지도교수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이 모음집은 이 보고서를 엮어서 담은 자료집입니다.

이 모음집은 본문 1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수강생이 제출한 37개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지역별 주제로 분류해서 실었고, 부록에는 ‘제1기 정책전문가 양성 과정 아카데미 소개’를 넣었습니다. 본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에는 주거·교육·일자리·복지·도시·교통·환경·관광, 청년·노인·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와 계층별로 돌봄, 도시재생과 공동체 복원, 인구소멸, 탄소중립, 자원순환체계, 해양생태, 산업재해, 고령사회와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지역 문제와 비전·정책에 대한 수강생들의 폭넓고 깊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음집에 담은 수강생들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내년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는 당과 민주연구원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와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아카데미 청년당원 수료생들이 정책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갖고 지방정치의 신진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카데미 과정 수료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포럼과 강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수료생들의 성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를 바탕으로 하반기 제2기 아카데미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실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인증하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수료생 여러분들은 여러 강의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훈련하며 한층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자 자리에서 지역문제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간·사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해주신 청년당원 수료생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김현철 서울대 교수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 김인희 인하대 교수님,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님, 김우영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님,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님과 행사를 주관한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박희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한 전임 민주연구원장 홍익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아카데미 운영과 모음집 발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정책네트워크실과 정책연구실 연구자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 07. 16.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CONTENTS

.....

■ 발간사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경기

지자체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경기도 현황 중심으로 3

김중훈 경기도당 당직자

지역사회 아이돌봄 체계 일원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도모 10

방재현 경기도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 당직자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확대·설치 필요성 18

유매희 경기도당 당직자

▶ 경남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29

김혜림 양산시의회 의원

체류 관광을 위한 함안 스마트 마을 리조트 37

장종하 경남도의회 의원

▶ 경북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

박정열 일반당원

인구 소멸되고 있는 10만 경상북도 영주시의 인구문제 해결 49

우병훈 경북도당 당직자



CONTENTS

.....

일상의 돌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 55
정다운 경북도당 당직자

▶ 광주

빛 있는 청년에서, 빛 나는 청년으로 58
강한솔 광주시당 당직자

광주광역시 금쪽동지 프로젝트 66
임성화 일반당원

▶ 대구

대구의 시민중심형 탄소중립 실천 제도화 방안 77
손혜민 대구시당 당직자

▶ 대전

대전 블루스(대전의 불편하고 루즈한 교통을 스마트하게!) 88
김민숙 대전시당 당직자

도시의 미래 '새숨' 도시 98
오은규 대전시당 당직자

새로운 청년의 등지 대덕 112
한종명 대전시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당직자

▶ 부산

사회적 질병 '고독사' 법제화 이후 동구가 가야 할 길 118
임정서 일반당원

» 서울

HI(Human Intelligence) 취업조정관 128
 박정용 일반당원

‘서대문구 Ecosystem - 페비닐 자원순환체계 구축’ 133
 차승연 서대문구의회 의원

2025년 우리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144
 황선화 성동구의회 의원

» 세종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153
 김효숙 일반당원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건강한 세종, 건강한 대한민국) 163
 박범중 일반당원

» 울산

고령화사회, “새삶” 미래를 설계하다 170
 김우성 울산시당 당직자

고래수족관의 새로운 미래 176
 김현정 남구의회 의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처벌법」 보완정책 183
 이승우 울산시당 당직자



CONTENTS

.....

» 인천

- 황해권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 및 평화지대 조성 정책 198
방지현 웅진군의회 의원
- 놀이터, 도시를 바꾸다 -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 제안 206
유세음 인천시의회 의원

» 전남

-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215
김수미 목포시의회 의원
- 지역 섬 자원 활용 방안 정책 제안 225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 전북

-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익산시 사례 중심) 236
오임선 익산시의회 의원
- 사회적 공동체마을 247
이정하 전북도당 당직자
- 언택트 시대! 전북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책 제안 259
장미숙 전북도당 당직자

» 제주

- 교육은 우리의 자화상 - 의무교육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 265
박현지 일반당원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 한·중·일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구축 278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

» **충남**

그린시티, 탁 트인 미래를 그리다 292
김미성 일반당원

젊은도시 천안 302
이병하 일반당원

K 허브 - 세계자유무역지구 형성 제안 307
조재환 일반당원

» **충북**

빛나는 고속도로(Green highway) 316
곽명환 충주시의회 의원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하여 325
이정현 제천시의회 의원

■ **부록**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339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자체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경기도 현황 중심으로

김중훈 경기도당 당직자

■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문제

우리는 모두 청년의 시간을 지난다. 청년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각자 인생의 빛을 한껏 발산하는 시기이다. 옛 70년대 청년의 시대는 “복지”라는 것은 없었지만, 사회 속에서 “경쟁”이 또한 없었다. 본인만의 능력으로 하고 싶은 꿈을 꾸며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80년대 청년들은 여러 민주화 시대를 겪으며 청년들이 싸워 이겨내 시대적인 흐름을 청년들이 지배했던 모습을 보였던 시기이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90년대 IMF이후로 청년들에게 경쟁을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승자독식의 세계로 변화되었다. 시대가 변한 지금의 청년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 점점 세상을 포기하는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를 뛰어넘어 숫자를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로 불리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통해 지금에 시대는 청년들이 더 이상 포기를 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서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다 지자체이다.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 허나, 때로는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만들게 되어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하여, 때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어 정작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청년은 무엇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였고, 정책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보장하고 의무화를 넣어 지역내 소외된 청년이 없도록, 더 이상 세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는 지역에 문제를 제기한다.

■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제가 만들 지역의 비전은 주제는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의 청년의 부분을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총 예산의 1%를 보장하여 돌려주자”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하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청년정책, 광역단체에서 해주는 청년정책, 지자체에서 해주는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어떠한 정책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한 막상 알아보고 그 정책이 필요해 혜택을 받으려고 했으나, 연령의 제한, 소득분위의 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두고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지금의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 청년들이 왜 부모님의 소득에 영향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의 청년층은 누구나 힘이 듭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른들의 잣대를 들이대어 살아야 하는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는 청년정책은 정작 필요한 청년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몫으로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배정하여 직접적으로 청년들이 결정하고 협의하고 반영하여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직접 청년들이 참여하여 예산까지 반영되도록 협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 사는 청년들이 노력하여 반영한 정책을 통해 바뀌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애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인생에서 한 번씩은 꼭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실패를 통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인 청년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이 원하고, 지역에서는 청년을 위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제는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그에 첫 번째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안 내용중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중 첫 번째로는 구성원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15명~20명 정도 이내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

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실,국장) 여러 명을 구성하고, 위촉직으로 해당 시의회 의원 여러 명과 전체 구성원의 청년은 절반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으로는 2년 임기제로 되어 있다.¹⁾ 이러한 현재 구성원 내용을 수정하여 인원은 정하지 않고 전체 구성원의 4/3가 청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또한 청년 중에서 뽑는 것으로 해야 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없애고 형평성 있는 회의가 되도록 전원 2년 임기제로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에서 당연직을 없애는 이유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청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당연직 위원들의 주도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직과 위촉직의 차별은 없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기본조례의 주요 활동 사항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²⁾ 청년 정책위원회는 시군에 전체 예산 중 1%의 청년 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청년 사업을 위해 제안 및 논의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각 시군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매년 전체 예산의 1%를 배정하여 현재 청년들과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의 다수의 시군이 안타깝게도 청년들을 위해 전체 예산의 1%를 못넘기는 지자체가 많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나서서 1%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안배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청년 정책위원회의 모집기준과 선정방법을 삭제하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⁴⁾ 현재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정하여 모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 관련 단체 등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청년, 그에 관계된 기관의 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이것저것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청년들은 문턱을 낮춰 줘야 할 수가 있다. 아무리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춰도 모집기준과 선정방법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 문턱을 낮추고자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좋은 정책을 내는데 의지만 있다면 위원회에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 15명~20명의 위원회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의 좋은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싶은 청년 누구나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년들 스스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서포터가 되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 대한 그만

1) [첨부자료1] 청년기본조례 구성원

2) [첨부자료2] 청년 기본조례 활동 사항

3) [첨부자료3] 경기도 기초단체 21년 청년예산 반영 비율표

4) [첨부자료1] 화성시, 안양시, 수원시 청년기본 조례 구성 및 임기.

큼 수도권은 지역에 애정이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 청년층들에 동네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접적인 정책 제안하고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만든 정책이 또는 내 친구가 만든 정책이 반영되어 그 청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혜택을 보게 된다면 동네에 자긍심을 느끼고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예산을 의무적으로 1%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재의 마을 청년들과 미래의 청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부터 청년들의 권리를 찾아 주면, 결국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세대입니다.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즉,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헬조선⁵⁾이라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우리에게 밀접한 지자체에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청년들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비전을 청년들이 만들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제가 원하는 비전의 방향을 가는 정책입니다.

■ 나의 지역 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앞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못한 나라이다. 아래 표를 보면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는 35위로 보이고 있다.⁶⁾



5) 삼포 세대·N포세대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하며 일컫는 말이다. 지옥(Hell)과 조선(朝鮮)을 합성한 신조어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

6) SDSN 2021 세계행복지수보고서 2018년~2020년 OECD 국가 행복지수 순위 참조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의 청년은 어떨까? 청년은 더욱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미래가 없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빈부의 격차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세대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고 또한, 의무적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1%의 예산을 반영하여 가장 청년들에게 가까이 있는 곳에서 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에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의 관문을 넓혀 주고, 주거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사무를 통해 역할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자체와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공무원들에게 행정력을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

[첨부자료1] 화성시 청년기본 조례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1인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년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청년 정책 업무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공무원이 아닌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첨부자료1] 안양시 청년기본 조례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당연직 위원: 기획·총무·경제·도시·복지·여성·문화 등의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첨부자료1] 수원시 청년기본 조례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첨부자료2]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항

제8조(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첨부자료2] 안양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항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 나. 청년의 능력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생활안정
-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안양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19>

[첨부자료2]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항

제9조(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첨부자료3] 경기도 기초단체 21년 청년예산 반영 비율

※ 굵은 표시 전체예산에 1%이상 반영하는 지자체(26지자체 중 7지자체)

지자체	전체예산	청년예산
평택시	1조5,640억원	131억원(0.84%)
부천시	2조8,45억원	182억원 (0.87%)
의왕시	5,080억원	69억원 (1.6%)
파주시	1조2,000억원	66억원 (0.66%)
수원시	2조4,222억원	245억원 (1.01%)
광명시	7,288억원	70억원 (0.96%)
화성시	2조6,527억원	147억원 (0.7%)
이천시	8,540억원	40억원 (0.5%)
양평군	8,182억원	29억4천만원 (0.36%)
하남시	6,885억원	31억8천만원 (0.48%)
군포시	6,290억원	51억원 (0.81%)
성남시	2조524억원	162억원 (0.64%)
광주시	9,215억원	48억원 (0.5%)
포천시	8,293억원	53억원 (0.63%)
동두천시	4,395억원	16억원 (0.36%)
안양시	1조2,463억원	165억원 (1.32%)
오산시	7,162억원	160억원 (2.23%)
여주시	6,423억원	25억6천만원 (0.4%)
안성시	8,115억	47억9천만원 (0.59%)
고양시	2조9,549억원	601억원 (2%)
양주시	8,801억원	53억원 (0.6%)
안산시	1조9,079억원	567억5천만원 (2.97%)
남양주시	1조6,146억원	103억원 (0.64%)
시흥시	1조2,843억원	100억9천만원 (0.79%)
구리시	7,421억원	35억9천만원 (0.62%)
용인시	2조3,596억원	557억6천 (2.3%)

지역사회 아이돌봄 체계 일원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도모

방재현 경기도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 당직자

▣ 과거 민간 중심의 공부방을 시작으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와 2019년 아동복지법 재개정 따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 통합 권고와 제언을 통해 지역사회 아이돌봄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

I. 제안배경

-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빈곤운동에 뿌리를 두고 자생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이 그 시초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이 법제화 되면서 관(官)의 지원이 시작되었음. 이용 아동은 2004년 기준 2만3347명(895곳)에서 2019년 기준 10만8971명(4217곳)으로 15년 동안 약 4.7배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을 통해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관(館)이 지원하던 민간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관(館)이 책임을 가지고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됨. 2021년 5월 기준, 전국에 478개 센터가 발족되어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징은 대부분 비슷하며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임. 지역아동센터는 소득, 가구특성, 연령 등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돌봄취약 아동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아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임.¹⁾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대상 기준이 없으며,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월 1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음. (이용료는 시설마다 상이)

1) 박선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2020, 2쪽.

- 이원화 되어 있는 두 개의 돌봄 체계를 통합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가난한 집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는 고정관념을²⁾ 없애고, 보편성에 초점을 둔 관(官) 주도 돌봄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

II. 센터 제도비교

○ 센터의 법적근거 (소관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신고제로 운영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2) [데스크 시각] 누가 아동 돌봄을 차별하는가, 서울신문, 2021년 1월 19일, 30면.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연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직영 및 위탁사업으로 운영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학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센터서비스 목적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아래 표 참고)

표 1 | 서비스 목적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2020, p.3.; 보건복지부,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안내」, 2020, p.3.

○ 센터 서비스 이용대상

- 지역아동센터는 사용신청 및 이용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다르게,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승인을 받아야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의 연령이 다소 상이함. (아래 표 참고)

표 3 |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료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취약아동 :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18세 미만 초등·중학교 아동)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⁷⁾ 2) 일반아동 :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3) 이용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이용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2) 다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수납가능 가) 이용료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수납가능하며, 해당 지역 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한도액 월 10만 원 (아동 1인당) - 센터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함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2020, p.45, p.169.; 보건복지부,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안내」, 2020, pp.38-39.

○ 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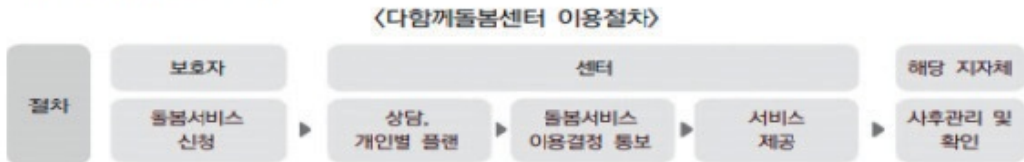
- 지역아동센터는 1.돌봄서비스 신청 > 2.자격확인 > 3.돌봄서비스 이용결정 > 4.아동입소 승인요청 > 5.이용승인 > 6.서비스 제공 > 7.사후관리 또는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함.
-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1.돌봄서비스 신청 > 2.상담, 개인별 플랜 > 3.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 4.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 및 확인 등으로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되어 있음. (아래 표 참고)

1 돌봄서비스 신청



1 돌봄서비스 신청

가. 신청방법 및 절차



(※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2021),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1))

○ 센터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 지역아동센터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하여야 함. 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고, 센터별 여건 등에 따라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 후 변경운영 가능. (아래 표 참고)

필수 운영시간 (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 14:00~19: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필수 운영시간)
- ※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다함께돌봄센터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하단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아래 표 참고)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 14:00~19:00
-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09:00~18:00

※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III. 예산현황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비교예산

- 2020년 말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음. ('22년 53만명까지 확대)
- 두 개의 사업을 합쳐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 3,847억원, 2020년 4,243억원으로 약 10% 이상 증가하였음.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사업초기이며 센터 신설로 인해 예산이 가파르게 증액. 정부정책에 따라 돌봄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임.

(단위 : 백만 원, 개소)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019년 확정	2020년	2019년 확정	2020년
사업량(개소)	4,135	4,148	150(산실)	400(산실)
사업비(백만 원)	366,127	379,038	18,564	45,307
- 국비(일반회계)	177,027	183,019	10,635	26,234
- 지방비	189,100	196,019	8,685	19,073 (편성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p.227, p.253.

IV. 정책제안

- 문재인 정부는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허나, 목표했던 마을돌봄 정량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현재 고전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은 약 10만, 다함께돌봄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은 약 1만으로 추산. (22년 목표 19만명까지 현재 약 8만이 계획에서 미달)

〈돌봄 공급 계획〉



(출처 - 온종일 돌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0년 2월 26일)

- 위와 같은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지역돌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그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됨.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계획(2018)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3,560억 원을 투자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1,817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2021년 기준 478개소를 확보 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개소된 센터의 3배 이상 늘리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렇기 때문에 기존 민간에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신고제)를 다함께돌봄센터(위탁사업)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목표를 이루진 못해도 민간에서 관(官)이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SOC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건강센터 등의 공간에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나, 공간임대 기부채납 및 매칭사업을 통한 (시·군·구)유지 개발 등으로 향후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체장이 바뀌어도 크게 부담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추측됨.
-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던 민간(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발족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하였음.

- 두 개의 센터 모두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을 통합한다면 다른 방법에 비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통합돌봄센터’ 발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위해 금액·연령·운영시간 등을 조정하고, 정기 일시·응급돌봄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질을 높이는 등의 프로세스 재정비가 이뤄진다면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2021.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2021.
-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2020.
-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2025), 2020.
- 박선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2020.
- 유해미,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 2018.
- [테스크 시각] 누가 아동 돌봄을 차별하는가, 서울신문, 2021년 1월 19일.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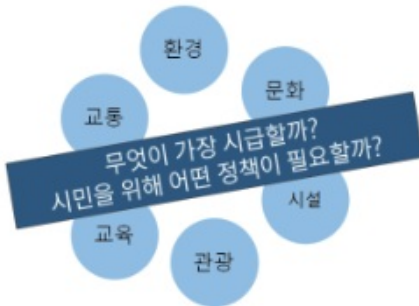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확대·설치 필요성

유매희 경기도당 당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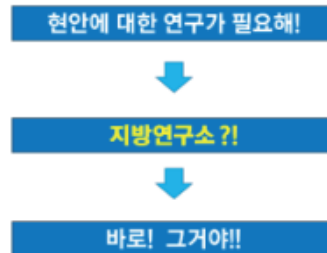
1 Paper point

정책제안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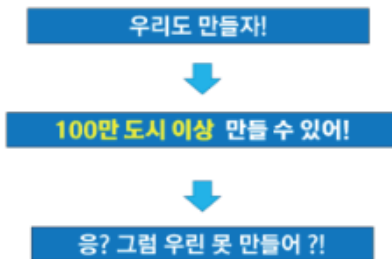
01



02



03



04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우리도
지방연구원이 필요해!!!

I.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약칭: 지방연구원)

1. 지방연구원 정의

〈지방 자치 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따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를 살펴보면,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지방연구원 상호 간 정보 교류, 연구실적 상호 활용 등을 위해 1993년 설립, 아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14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15개 단체가 회원으로 있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14개]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인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울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경남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 100만 이상 대도시

- 수원시 | 수원시정연구원 (2013년 개원, 4부서 · 3센터 / 45명)
- 고양시 | 고양시정연구원 (2017년 개원, 2센터 · 5개 실,부,팀 / 45명)
- 용인시 | 용인시정연구원 (2019년 개원, 1실 2팀, 4부서, 1개센터/ 22명)
- 창원시 | 창원시정연구원 (2015년 개원, 4실 1팀 2센터/ 25명)

3. 지방연구원 업무범위¹⁾

- 1) 연구업무: 기본과제, 수탁과제, 정책 · 현안과제
- 2) 네트워킹 · 연계업무: 지역혁신협의회 등 사무국, 연구회, 회의체 등 운영)
- 3) 교육훈련업무: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마을리더 양성 등

1)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현황과 발전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염도민 부원장 발표)

4) 정보 확산업무: 세미나, 뉴스레터 등 간행물 및 웹진 서비스

4. 지방연구원 운영현황

1) 2007년도

2007년 발표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현황과 발전전략」²⁾ 자료에 따르면, 시·도 출연연구원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시·도 출연연구원 운영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설립허가일	재정운영현황			현인력 (연구직)
		예산	지자체보조	기금	
계		845	409(48%)	1554	494(33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2.07.14	167	107(64)	125	90(63)
부산발전연구원	92.07.18	66.3	47(71)	111	43(31)
대구경북연구원	91.06.07	58	36(62)	97	37(25)
인천발전연구원	95.08.03	48	35(73)	105	41(27)
광주전남발전연구원	91.07.25	31	0	236	24(13)
대전발전연구원	01.02.28	25	15(75)	9	16(13)
울산발전연구원	00.12.23	50	13(25)	19	30(22)
경기개발연구원	95.01.20	167	88(53)	272	76(53)
강원발전연구원	94.06.09	68	15(22)	201	33(23)
충북개발연구원	90.04.23	28	5(18)	76.5	16(10)
충남발전연구원	95.04.14	62	12(19)	125	32(23)
전북발전연구원	05.02.16	29	22(76)	13	21(13)
경남발전연구원	92.07.08	117	12(10)	95.5	31(23)
제주발전연구원	97.03.19	36	11.5(32)	50	14(9)

지방연구원은 1990년도 충북개발연구원을 시작으로 2005년에 걸쳐 14개 개원하였고, 예산은 지자체보조금과 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25억에서 167억까지 수립되었다. 인력은 최소 14명(연구직 9명 포함)에서 최대 90명(연구직 63명)명으로 조사되었다.

2)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현황과 발전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염도민 부원장 발표)

2) 2015년도³⁾

① 100만 인구 자치단체 연구원 현황

[표2] 100만 인구 자치단체 연구원 현황

구분	설립연도	시출자금 (천원)	연구인원	조직					특성사업
				국	실	센터	기타	계	
광주발전연구원	2007년	2,300,000	51명		6	2	1	9	-
울산발전연구원	2001년	2,000,000	69명	1	5	1		7	문화재의 발굴·보존·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3년	500,000	30명 (비상근 26)						

100만~150만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광주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한 결과 연구원 설립 시 출자금은 500,000천원~2,300,000천 원이며 연구인원은 각 운영 조직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1개실, 과를 운영하기 위해 6명의 연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② 150만 이상 지방연구원 현황

[표3] 150만 이상 지방연구원 현황

구분	연간예산 (천원)	시출자금 (천원)	사업수입 (천원)	연구 인원(명)	조직					특성사업
					국	실	센터	기타	계	
평균	8,539,795	4,212,091	3,007,987	78					10	
서울연구원				111	1	5	4		10	
부산발전연구원	12,488,000	6,688,000	1,800,000	91		5	1		6	해양환경연구
대구경북연구원	11,204,533	6,600,000	2,300,000	122		8	3	1	12	농업정책연구
인천발전연구원	11,586,000	4,000,000	5,995,000	50	2	4	3	1	10	
대전발전연구원				52		3	6	1	10	
경기개발연구원	17,181,000	10,400,000	6,500,000	177	2	5		8	15	
강원발전연구원	8,006,000	3,000,000	3,658,188	49	1	4	6	1	12	DMZ북방연구 농업연구
충북발전연구원	5,721,000	1,734,000	3,987,000	39		4	5	1	10	
충남발전연구원	4,400,000	423,000	3,578,666	73		1	6	1	8	

3) 자료출처: 100만 이상 광역대도시의 시정연구원 설립 및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 100만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우인성 (2015)]

구분	연간예산 (천원)	시출자금 (천원)	사업수입 (천원)	연구 인원(명)	조직					특성사업
					국	실	센터	기타	계	
전북발전연구원	5,870,000	4,000,000	1,800,000	67		5	3	2	10	세만금지역개발 연구
전남발전연구원	4,861,251	2,300,000	1,495,000	47		4	4		8	중국연구센터
경남발전연구원	8,000,000	4,350,000	1,638,000	82		4	2	1	7	역사문화센터
제주발전연구원	4,919,961	2,838,000	336,000	53		2	6		8	

총 13개 지방연구원 조사결과 연간 평균 운영예산은 8,539,795천원이며, 연구인력은 평균 78명, 운영조직은 10개 조직을 운영 중에 있다.

(※ 2021년 현재, 명칭은 지역명+연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장 큰 규모인 서울연구원은 395명(연구직포함)으로 인력 증가 상태)

II.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치·확대 필요성

1. 제언배경

1) 현 시대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더욱 강조

주민에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분권은 기존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전체 인구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자기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도시발전 설계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2) 진정한 지방자치를 향한 첫 준비는 지역에 대한 분석과 연구

1988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통해 비로써 전면적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동시에 각 지방들은 정책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 충북경제연구소(현재, 충북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14개(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 통합운영) 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2. 경기도 김포시 사례

1) 특징

① 인구성장률 전국 1위 신도시

김포는 20만 인구에서 신도시 건설이후 현재 48만으로 2배 이상 성장한 도시이며, 2020년 기준 인구성장률 전국1위의 도시이다.

② 전체면적 70% 군사보호지역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립수역을 사이에 두고 불과 800M에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도시이며, 평화누리길 1,2,3코스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③ 도·농 복합도시

김포는 따뜻한 햇살과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토지를 근간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5,000년의 금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에도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대표적인 도·농복합 도시이다.

④ 교통대란의 신도시

출퇴근 혼잡률 285%, 서울로 가는 열차는 185석의 2량짜리 꼬마경전철 단 한 개가 전부인 도시이다.

(얼마 전 국토부가 발표한 GTX-D노선 변경발표에 따라 원안사수를 위해 4주 만에 22만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저력 있는 도시.)

⑤ 신도시와 구도시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도시

신도시는 한 학년에 13학급이 넘는 과밀, 읍면의 학교는 1학년 1학급의 폐교위기의 상태이다. 김포의 평균나이는 39.8세로 가장 젊은 동네는 35.2세, 반대는 53.9세로 최대와 최소가 18세가 차이 나는 도시이다.

2) 현황

① 위와 같이 지역 현안의 다양성·복잡성이 현저함에도 문제해결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② 장기적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입안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지역정치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 ③ 동일한 지역 사안에 대해서 바뀌는 단체장과 지역정치인들의 해법이 저마다 다름에도 그 정책 배경을 판단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다.
- ④ 중앙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비정기적이고 급작스런 사업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어렵다.

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치·확대는 필요성

“모든 도시마다 지역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대도시는 대도시대로의 문제, 중·소도시는 또 다른 문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노령화가 극심한 도시, 인구감소가 극심한 도시 등 각 지방마다 산재된 현안들이 다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 즉 지방연구원이 필요하다.

현재 100만 대도시 이상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법령은 지방도시는 정책에 대해 생각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지시에만 따르라는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이는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R&D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듯이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지방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III. 문제제기와 정책제안

1. 문제제기

1)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에 대한 제기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인 100만 이상 대도시 형성은 앞으로 더욱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2020년 출산율은 0.85%이다. 또한, 인구밀집의 불평등(수도권 인구 전체의 50%)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2) 지방연구원의 유무에 따른 양극화현상 문제점

① 지방연구원은 지역을 주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지방연구원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다루는 연구주제들은 광범위하고 다양

하지만 특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연구원이 설립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점차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대도시들은 도시에 필요한 정책 제시는 물론 다양한 자금확보를 통해 발전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도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일 지역의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질 것은 확연한 사실이다.

② 지방연구원이 없는 도시는 연구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연구용역은 대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그리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용역을 안하는 것보다야 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지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지방연구원과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예측가능한 일일 것이다.

2.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

1) 대한민국 시·군 인구현황 자료 (2021.04)

[표2] 2021년 04월 대한민국 인구현황

인구수	시·군	합계
100만 이상 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1특별시 6개 광역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4개 시
100만~5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13개 시
50만~30만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구미시, 양산시, 진주시, 아산시, 원주시, 제주시	12개 시
30만 미만 도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 영천시, 김천시, 경산시, 경주시, 밀양시, 산천시, 통영시, 거제시, 당진시,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강릉시, 동해시, 삼천시, 속초시, 제천시, 충주시, 춘천시, 태백시, 서귀포시	49개 시 76개 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앞서 설명처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설립기준은 ①특별 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②100만 이상의 시(대도시) 이다.

2021년 기준,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4개의 시이며, 50~100만에 해당하는 도시는 13개, 30만~50만의 시는 12개, 30만 미만은 49개의 시이다. (군·구 생략)

2) 2021년 김포시 연구용역비 예산계획 일부 분석자료

[표3] 2021년 김포시 연구용역비 예산계획표

연번	조직	부서	용역건수	예산액(천원)
1	미래전략담당관	-	2	1,160,000
2	기획담당관	-	11	656,521
3	행정국	행정과	2	104,000
		회계과	7	3,511,764
		민원여권과	1	12,200
		체육과	1	22,000
4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1	22,000
		문화예술과	7	817,000
		관광진흥과	1	204,000
5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4	1,221,366
		노인장애인과	1	50,000
6	환경녹지국	환경과	5	349,300
		환경지도과	2	122,632
		자원순환과	6	105,000
		공원녹지과	11	207,409
7	교통건설국	교통과	5	1,391,000
		대중교통과	2	438,000
		건설도로과	1	100,000
		철도과	2	76,397
8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2	543,000
		도시관리과	1	200,000
		건축과	2	27,060
		토지정보과	1	67,950
9	보건소	보건행정과	1	10,140
		보건사업과	1	68,966
10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3	40,000
		공원관리과	1	400,000
11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5	147,271
		축수산과	1	70,000
		농업진흥과	1	6,000
12	도시안전정보센터	-	1	100,000
13	읍·면·동	마산동	1	5,000
총액				12,299,976

(※ 학술용역 5,531,106천원 , 기술용역 6,768,870천원)

위의 자료는 2021년 김포의 연구용역비의 일부로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용역만 선별한 것이다. 총액은 122억 9997만 6천원이며, 이 중 학술용역은 55억 3110만 6천원이며, 기술용역은 67억 6887만원이다.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치·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지방연구원이 설치·확대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① 지역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질 높은 정책방안 제시 기대

서울연구원 사이트에는 1588개의 연구데이터, 경기연구원에는 2020년 한 해에만 146개의 연구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다. 2013년 개원한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도 326건의 연구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다. 이처럼 특정지역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나온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나온 정책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실효성 높은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시민 행복으로 직결될 것이다.

② 지역정책의 연속성 기대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의 대표들(정치인)은 정해진 임기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민선 기수가 시작되면 기존의 정책들이 취소·중지·변경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지방연구원이 생긴다면 이러한 것들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정책 연속성은 결국 도시 안정적 발전에 기여될 것이다.

③ 입찰방식을 통한 연구용역의 한계성 극복 및 예산의 실효성 증가

공정성을 위한 입찰을 통한 연구용역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선정 업체에 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거나 연구결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분명히 발생한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대로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나, 지방연구원이 생긴다면 이러한 한계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에 따라 예산의 실효성이 크게 증가될 거라 기대한다.

④ 지역 간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의 근간

지방연구원은 현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설립 가능하다. 2013년 수원시정연구원개원을 시작으로 2015년 창원시, 2017년 고양시, 2019년 용인시에 지방연구원이 개원되었다. 중소도시보다 모든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성한 대도시에는 그 지역을 중점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도 보유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될 것이

다. 지방연구원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 뿐 아니라 모든 도시에 설립이 가능하다면 지역 간 불평 등 및 양극화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치 확대 정책제안

지방간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정책과 현안을 연구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약칭:지방연구원) 설치·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해 본다.

모든 도시에는 지방연구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2.18.]
강원발전연구원(2007 염도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현황과 발전전략
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200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2018),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최국렬·김병수(2007), 지방자치시대와 지역통계의 개발 필요성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우인성 (2015), 100만 이상 광역대도시의 시정연구원 설립 및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 100만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김포시 기획담당관(2021), 2021년 김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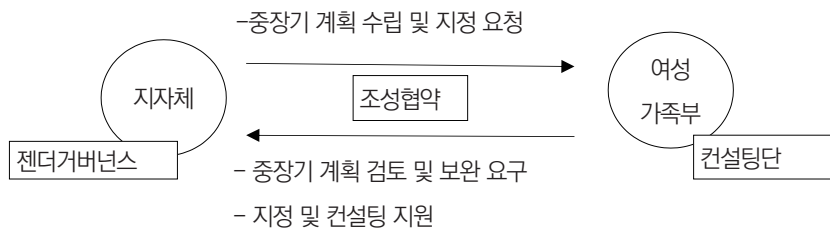
김혜림 양산시의회 의원

1. 여성친화도시

1) 여성친화도시의 의미

- 양성평등 :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고 하고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 「양성평등기본법」의 여성친화도시 : 지역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안전, 돌봄이 강화되도록 시 전반의 제도, 사업, 공간,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도시를 말한다.
-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는 그 도시가 여성만이 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축이 된 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밑바탕에 깔 인간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 단계이다.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이며,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를 말한다.

○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여성친화도시가 갖는 규범적 의미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 기존의 도시 공공재와 정책, 공공서비스 등에 대해 성별이슈가 제기됨으로써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제약 혹은 사회, 문화적 제약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찾기 시작하는 것에 있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팀 또는 여성친화팀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무부서로 지정하였다.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여성친화도시’ 근거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어 향후 지역 여성정책의 중요한 프레임으로서 여성친화도시는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2)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3)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지역	구분 계	재지정					신규지정				
		16지정	17지정	18지정	19지정	20지정	'16 지정	'17 지정	'18 지정	'19 지정	'20 지정
계	96	14	11	9	4	7	16	8	3	10	14
서울	13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종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부산	6	사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동구				
대구	2		수성구							달성군	
인천	4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광주	5	동구·서구 남구·북구	광산구								
대전	4			서구		대덕구	유성구				중구
울산	1						중구				
경기	14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강원	7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충북	6				제천시		충주시 영동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충남	11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전북	3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전남	8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광양시 강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경북	5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김천시	
경남	5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고성군 진주시
제주	1	제주특별 자치도									
세종	1						세종특별 자치시				

('21. 1월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4) 전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순위

행정구역별	2020 1/2			전국순위 (위)
	15세이상여성인구 (천명)	여성경제활동인구 (천명)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서울특별시	4,456	2,404	53.9	5
부산광역시	1,533	755	49.2	15
대구광역시	1,080	492	45.5	17
인천광역시	1,285	692	53.8	6
광주광역시	652	338	51.8	10
대전광역시	653	347	53.1	9
울산광역시	473	216	45.6	16
세종특별자치시	142	76	53.4	8
경기도	5,724	2,915	50.9	13
강원도	666	368	55.3	3
충청북도	699	384	54.9	4
충청남도	927	497	53.6	7
전라북도	793	400	50.5	14
전라남도	769	430	56.0	2
경상북도	1,163	600	51.6	11
경상남도	1,426	735	51.6	12
제주특별자치도	283	175	61.9	1

출처: 성인지통계시스템

2.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현황 및 성과

1)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현황

- 최초 지정(1단계) : 2011. 6. 10. → 2012. 1. ~ 2016. 12.(5년)
⇒ 사업기반구축과 여성친화도시 전담팀 신설 및 시민참여단 등 구성
- 재 지 정(2단계) : 2016. 12. 9. → 2017. 1. ~ 2021. 12.(5년)
⇒ 민관협력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목표별 사업 지속적 추진
- 재 지 정(3단계) : 2021. 8. 지정 신청 예정
- 양산시는 2012년 1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12년 12월에 「양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2020.9.17., 일부개정]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

-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
- 도시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 공무원(시), 경찰, 모니터요원 합동 근무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 현재 4기 운영, 50명, 누계 216명
-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 : 25명
-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남부센터 유치로 역량 강화
- 여성리더대학 및 여성인재학당 운영으로 사회참여 유도 : 332명 수료
-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등) 일제 정비
- 성별영향평가(법령·계획·사업) 시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점검
- 야간 안전확보를 위한 여성친화거리 및 테마거리 조성 : 2개소
-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도내 최초) : 5개소, 6,400건
-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서비스 실시, 공동육아나눔터·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
- 양성평등지원 공모사업 및 친화도시조성 활성화 지원사업 : 매년
- 범죄 취약지역 CCTV 및 가로등, 보안등 설치
- 여성기업 우대지원 여성창업 활성화 추진

- 관리직 여성 및 위원회 등 여성비율 제고 추진
-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여성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 성인지 통계집 발간 : 10개 부문, 235개 지표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실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으로 여성친화기업 육성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여성복지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 실시
-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및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통한 여성 창업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기능습득 교육사업 지원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및 양성평등 공모사업 추진
- 돌봄경감을 위한 보육인프라 확대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단 운영
- 도 여성친화도시 포럼 참석(공무원, 시민참여단)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① 구성 및 기능

-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30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
- 최초 구성 : 2012. 4. 24(현 4기 4개 분과, 50명 운영 중)
- 기능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등

②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우수사례

- 시민참여형 여성친화테마거리 조성사업
 - 여성친화도시 간판, 포토존, 여류시인 및 여성 관련 주제 시화액자, 로고젝트, 울타리 보드 그림판, 가로등커버, 바닥조명, 벤치 등 설치

-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

<p>새들교 시민참여단 등 재능 기부(시화액자) 여성친화거리 안전 고보조명</p>	<p>여성친화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그림그리기 개최</p>
 <p>The left column shows three vertical panels of citizen-submitted art. The top panel is titled '엄마의 웃음' (Mother's Smile), the middle '행복' (Happiness), and the bottom '안심' (Safety). The right panel shows a night view of a street with illuminated arches and a mural on the ground.</p>	 <p>The right panel shows a photograph of a community drawing event for a women-friendly street. A banner in the background reads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양산' (Even More Happy Women-Friendly City Yangsan).</p>

○ 여성안심귀갓길 10개소

- 민·관·경 합동(시민참여단, 양산경찰서) 현장 점검 대상지 선정
-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
- 112신고 안내 표지판 부착, 태양광 조명 및 안심거울, 고보조명 등 설치
- 불편 및 개선사항 의견 제시, 사후 야간 모니터링 및 관리



3.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개선 과제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어려움.
- 민간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자체활동 위축.
- 2020 ~ 2021년 현재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 시민참여단, 여성단체 및 각 사회단체, 시민들의 활동 제한으로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운영으로 실적 저조, 최소 인원 활동 및 비대면 사업 추진 병행

○ 전담인력 증원 필요

- 현재의 실무담당자로는 순환보직을 하는 일반 공무원이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수많은 성평등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
- 성 주류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와 같은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도 집행부 내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 부서간 협업 강화

- 타부서 연계 사업추진의 경우 매년 유사반복적 현상 대두.
- 여성친화도시 실천을 위해 교통·건축·보건의료·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요구.
- 각 실국의 성과평가기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실적 지표 반영하여 우수담당자 인센티브 도입 방안 필요.

○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 제3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지난 5년간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분석 필요, 향후 5년간 양산시의 특성에 맞는 비전, 정책목표 제시,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 방향 설정 필요.
-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기간 동안 추진사업 이행점검,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3단계 비전 계획 수립.
- 양산시 지역적 특성 분석 및 정책기반 분석.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대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여성친화도시 3단계 과제발굴(지역특화)을 위한 조사 및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 제시.
- 민간의 참여 활성화 위한 지역 수요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
- 우리시 특성·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친화 과제 발굴.
- 여성친화도시 선도단계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 마련.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체류 관광을 위한 함안 스마트 마을 리조트

장종하 경남도의회 의원



1. 정책제안 이유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함안군은 100만 인구의 창원시와 가장 인접한 기초 지자체이다.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편리한 광역 교통망의 이점을 갖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농어촌 지역이 그렇듯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 비율, 인구분포의 불균형,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풍부한 자원들 간의 연계 활용의 미흡,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남해안 시대의 도래와 접근성의 향상, 수박의 고장, 가야사 국정과제와 202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함안군의 현 관광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경남 연구원에서 제안한 체류형 관광을 위한 함안 스마트 마을 리조트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함안 관광산업의 문제점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함안군도 함안만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라가야 왕도의 고장으로 전국 유일의 가야사 왕성지와 마갑이 출토된 지역이기도 하다.

구분	관광자원현황
산·계곡·물레길	여왕산, 병어산, 정동산, 봉화산, 백미산, 외방미산, 불전계곡, 여왕산물레길
생태관광	연꽃테마파크, 입석교립공원, 입석문화공원, 함안역사박물관, 범수연못지, 익장생태공원
문화체육	함안역사박물관, 함안문화예술회관, 함안문화원, 공설운동장, 함안승마공원, 함안스포츠타운, 함주공원, 충의공원, 범수공원, 경나루오보행길, 함성정원, 예곡지사신촌순영원기념관
일일명소	아라한궁지, 함안역사박물관, 범수정수농, 함안주리시가지서업, 아전·함안아시·아전길, 조연묘소, 칠백안회화사, 함안대정리공룡발자국화석, 함안대리리공룡발자국화석, 아라고개, 안우가리주서고기오버지, 함안문화전시관, 함안중이서원박물관, 추사정유물
체험마을	함안어촌체험마을, 함안함스마을, 정보재마을, 별천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함안농촌체험마을수확전시관

자료 : 함안군 문화관광

목적	계회월	주요행사
아이제	4월	사천행사교인동맹대회 등, 공개행사, 민속행사농악경연 등, 문화·전시 행사, 체육행사, 문화제, 아라가야 왕성 조성, 가요제, 축회행사 등
차이센서공 가요제	4월	전국 만16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가, 대성·금성 수상자 한국인예협회 회원증 교부
함안 낙화놀이	4월	사천문화, 무오문화재단, 재계행사 낙화놀이 정화 공연행사, 축하공연 등
함안 수박축제	4월	장년농사기원제, 수확감사행회, 우수농가 시상식, 우수농산물 전시, 수박 축구, 수박벨리데이 등
남함안수몰다리기	2~3월 중	놀이, 기원부, 대박공연, 풍자극 재현 등
함안체육제	9월	백일장, 음악회 등
강주 애국가축제	8~9월 중	민요공연, 엑스콘, 물바, 초창가수 공연, 족석노래자랑, 농·축산물 민속 행사, 체험행사, 먹거리 등

자료 : 함안군 문화관광

활용 가능한 많은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함안의 관광산업은 그동안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함안의 관광사업과 정책은 아이러니 하게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의 장점으로 오래 머무르고 깊이 만끽하는 체류형 관광의 형태가 아닌 진주와 창원과 같은 인근 대도시의 주민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지역으로 인지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함안의 주민들은 함안의 관광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속된 표현으로 ‘화장실만 쓰고 가는 지역 관광’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부정적 함안 지역 관광의 문제는 함안 행정의 단일한 관광정책도 한몫했다. 매년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구호가 남발했지만, 호텔과 리조트를 추진하겠다는 민간 투자자의 투자 의향을 지역 민원 발생의 이유로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정 조직상에도 가야사 담당관실 내 관광진흥계와 관광개발계의 형태로 5명의 공무원이 함안군 관광 행정의 모든 업무를 맡아보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의 구색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3. 체류관광을 위한 함안의 가능성

관광 사업과 정책에 대한 행정의 총체적 부실과 관광산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않고도 함안의 관광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이다.

낙화놀이 축제로 유명한 무진정과 범수 악양생태공원, 악양 독방길, 함주공원, 산인 입곡공원 등은 평일과 주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았고, 1박2일을 비롯한 TV 프로그램 방영과 각종 SNS를 통한 전파로 인해 ‘논뷰’, ‘밭뷰’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며 농촌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거창·함안 숙박업소, 코로나에도 웃었다

문화부·한국관광공사, 지난해 매출 분석
전년 대비 841%~244% 각각 증가
중가속 거창 전국 1위·함안 3위

기사입력 : 2021-09-26 21:37:16

지난해 코로나 불황에도 거창과 함안의 숙박업소들은 도내에서 가장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과 유명관광지는 직격탄을 맞은 대신 사람들이 평소 찾지 않는 경남과 전남의 체류형 힐링 여행지가 각광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소셜 미디어, 이동통신사(KT), 카드사(BC) 빅데이터 등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창군과 함안군의 숙박업소 매출액은 카드 사용액 기준 지난 2019년 대비 841%(143만원)와 244%(405만원)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신문

뉴스 스포츠 생활 지역 경남여행 동영상 독자서비스

경남신문 > 제1면

함안 무진정에 관광객 무진장 찾아오네

TV예능 '1박2일' 방영 후 영향로
지난달 '낙화놀이'와 함께 관광 소개
평일 300명·주말 1500명 등 3배 증가

기사입력 : 2021-09-27 08:03:42

4월초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의 함안편에서 '무진정'과 '함안낙화놀이'가 소개된 이후 무진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3배 이상 늘면서 군이 체험프로그램 확대, 먹거리 및 볼거리 보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함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후 무인계측기를 통해 함안면 괴산리 무진정 관광객 수를 파악한 결과 평일은 300여명, 주말은 15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TV방송 전 평일 100여명, 주말 500여명보다 무려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무진정이 위치한 '괴항마을'의 마을 관광 상품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본 대표적인 마을 관광 콘텐츠로서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용역사 중심, 행정 주도로 지역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의 모습과 대비되며 관광산업에 있어서 지역의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잠시 들르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함안의 마을', 경남연구원에서 제안한 '스마트 마을 리조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4. 함안 스마트 마을 리조트를 위한 제언



경남연구원에서 제안한 스마트 마을 리조트란 역사, 문화, 생태, 인문 등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마을에서 숙박, 음식, 문화, 쇼핑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의미한다.

스마트 마을 리조트 유형

			
산악경관형	해양위락형	스파&건강증진형(웰니스)	스포츠형(골프, 스키 등)
			
역사문화형	농산어촌형	도시형	복합형

이 스마트 관광 모델은 마을 인근 관광지와 시설을 단일 플랫폼이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연결하고, 관광객이 자전거나 스쿠터, 전동 킥보드, 택시, 버스 등 '그린뉴딜 모빌리티'로 마을의 안과 관광지를 누비며 체류형 관광을 즐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경남연구원에서 제안한 스마트 마을 리조트 사업이 경남 18개 시,군중에서 함안에 적용하기 적당한 이유는 우선 타 시군과 달리 함안군이 집약적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함안군은 경남의 10개 군 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지만, 10개 읍면으로 가장 적은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군의 면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넓지 않고, 대부분의 역사, 문화 관광지들이 밀집되어 있어 관광지 간의 이동이 용이하다.

둘째, 함안은 고대 가야문화의 원형과 스토리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고, 아라가야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점, 수박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농특산물을 보유한 점도 체류형 관광지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한 세계적인 예술가인 이우환 화백과 대암 이태준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탄생지로서 교육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폐교와 폐가를 활용한 농촌 호텔 사업 등 숙박이 가능한 관광지가 지역이 된다면 체류형 관광지로써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는 우리 사회 주요 화두 중 하나이다. 그 중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격차 해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제일 것이다.

함안 스마트마을 리조트 사업의 도입으로 함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 관광 산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함안이 되길 기대하며, 함안에서 민주당 지방정권 창출로 민주당 정책 사업으로 실현되길 바래 본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정열 일반당원

말 많고 탈 많은 도시재생사업.

새마을운동이나 재개발사업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도시재생사업에 깊이 침투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가벼운 표현일 뿐이다. 차라리 재개발사업이 훨씬 심플하다.

도시재생사업은 경제, 관광, 주거, 복지 등 여러 사회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개념정립 자체에서부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도대체 무얼 재생한다는 것인가?

초창기 대부분의 성공사례는 관광을 통한 상권활성화 사례가 많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복지모델로 성공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어디 한 둘인가?

어려운 사업인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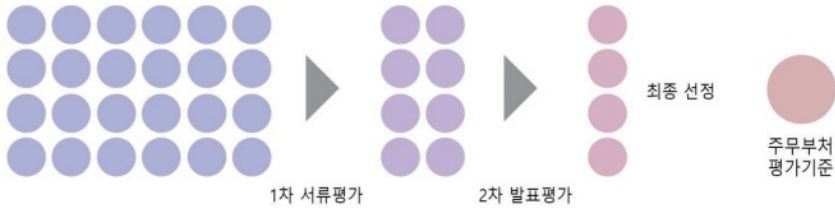
관광객들이 급증해 주민들의 일상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점잖은 편이다.

그렇게라도 되보고 싶은 지방 도시들이 수두룩하다. 구체적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것 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하나씩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장 원초적 병폐는 공모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진행에 있다.

사업의 선정이 최대의 목표가 되니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평가요소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더 나은 점수를 따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국토부 심사요건에 맞춘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들려고 재생사업을 하는데 심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물론 국토부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 등의 여러 요소들을 평가하겠지만 어디에도 해당 지역의 진짜 전문가는 없다.

도시재생사업이 획일화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원초적 문제다.



주무부처의 평가기준에 맞추어지는 사업계획 -> 획일화 과정

[개선방안]

중앙 주도적 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도의 토너먼트-제도를 제안한다.

중앙에서 특정기준을 갖고 선발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했으니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의 인구, 경제 등 사회 인프라의 격차가 있는데 중앙에서 만든 평가요소로 평가를 하면 지방의 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지역이 가진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지역내에 있는 자원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 해답을 찾아내느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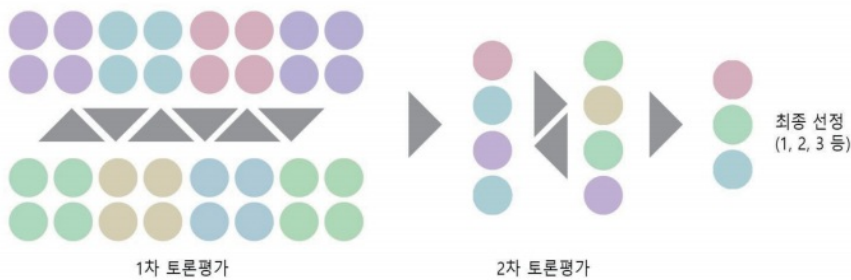
공모의 진행을 심사위원들의 일방적 비공개심사로 진행하지 않고 공개토론 방식의 토너먼트 형태를 응용하여 진행하되 그 주체를 지역주민으로 하여 진행한다면 현재와 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양산되지 않을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설정하여 평가과정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1. 경북 지역에 2개의 도시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낸다.
2. 신청도시를 모집한다.
3. 각 도시는 저마다의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4. 사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각 지역 대표단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자료는 모두 공유한 뒤 발표회를 마친다.
5. 이후 각 지역 대표단들은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 타 지역 사업계획과 자기 지역 사업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질의사항을 도출하고 자기 지역의 사업계획이 더 우수함을 어필할 요소를 찾는다.

6. 2차 사업 발표회를 개최한다. 각 지역 대표단들은 다른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응수하는 공방을 이어간다. 국토부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관전하며 각 지역에 대한 심사를 한다.
7. 1차 탈락지역을 선발하고 공고한다.
8. 3차 최종 사업 발표회를 개최한다. 남은 지역의 대표단들과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하며 심사를 한다. 최종 우승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회를 끝낸다.



다양성과 지역의 특수성이 존중되는 사업계획 -> 민주화 과정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늘 비슷한 방식으로 중앙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끼리의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최근 많은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공개오디션 형태의 방식과도 유사하다. 선정된 도시만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도시들에게 1, 2, 3 등의 순서를 매겨 공모를 진행하면 사업의 체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2. 주민도 지자체도 아닌 전문 용역사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역사에 의뢰하게 된다. 전문용역사는 대부분 도시공학자나 건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활동한다.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 내 그러한 전문용역사 조차 없어 인근 대도시에 위치한 용역사들에게

사업을 의뢰하는데, 어떤 경우 한 용역사가 인근 2~3개 도시의 용역을 동시에 맡아 같은 날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용역사들이 해당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 지역의 세부사업을 이름만 바꿔 채용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전국 어딜 가나 도시재생사업은 비슷하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주민참여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애초에 지자체에서 주민을 패스하고 용역사로 사업계획의 의뢰를 맡기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독창적인 새로운 계획을 생산하기보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먼저 찾는걸 선호하므로 지역에 어울리는 창의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용역회사에 의해 유사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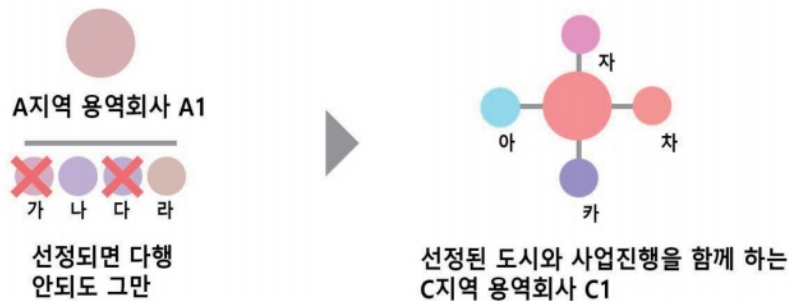
〈도시재생사업 이미지 검색결과 화면 : 용역사에 의해 생산된 유사한 사업계획의 단적인 예. 주민들의 삶에 관한 내용 보다는 용역사들의 사업계획수립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과 하드웨어 중심적이고 건축 중심적인 내용들의 사업계획서가 검색된다.〉

[개선방안]

용역사를 ‘사업계획서 공장’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사업멘토’로 활용하자.

이 또한 앞서 1항에서 언급한 중앙 주도의 선정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자체도 주민도 도시공학이나 타 지역 사례 등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막을 방법도 없고 이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기존의 ‘선정’방식에서 토론 방식으로 바뀌면 용역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향과 질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용역사를 나 몰라라 계획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도시재생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MOU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서비스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용역회사와 지속성 있는 사업관리체계 구축

이상 도시재생사업의 두 가지 문제를 짚어 보았다.

필자의 경우 안동이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마을활동가 및 기타 관련자로 다년간 관여를 해오며 현장에서 다양한 단면들을 살펴보았다. 비단 안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 핵심은 역시나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행정적 문제와 관료주의, 용역사들과 지자체와의 관계 등에 있었다. 물론 주민들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

업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하는 숙제이다.

주민들에겐 ‘갈등관리’란 명목으로 스스로 숙제를 해결하라 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찾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지자체와 행정시스템의 문제는 꼭 짚어 보아야 할 문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고 창의적인 면모를 갖추어 지방소멸에 접어든 지역사회의 생명력이 되어 주길 바란다. 또한 지역사회가 고령화되고 쇠퇴하는 현상을 무조건 막아야만 하는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도시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관점을 통한 도시재생계획의 수립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국가재정으로만 막는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점의 전환과 창의적 발상을 통해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인구 소멸되고 있는 10만 경상북도 영주시의 인구문제 해결

우병훈 경북도당 당직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 영주시는 대한민국 5대 철도 도시였으며,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 철도의 거점도시였다. 하지만 철도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2002년 중앙고속도로 개설 및 KTX 가 들어서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40 세대 청년인구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타 지역이 부러워하는 좋은 놀이터가 있지만, 아이들은 이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며, 다른 곳으로 놀이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는 점차 인구소멸 위험 국면에 다다르고 있는 경제가 낙후된 도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유모차와 구르마

농촌 시골에서 흔히 있었던 할머니 전용 유모차와 폐지수집 구르마가 영주시 도심에는 흔하게 있었다. 지역의 대형 마트에서 모여진 폐지는 재활용 센터로 모이고 있으며, 고령층 실버 세대의 사회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단절된 세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영주의 이미지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영주시 인구는 1970년대 철도 산업의 중심지로서 거점 도시 역할을 하게 되면서, 17만 도시로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마다 2000~3000명이 유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안에 10만 인구조차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여성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식을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니즈와 원츠가 영주시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현실이 되었으며, 인구가 10만이 붕괴되는 현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낮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인구 유출에 대해서 영주의 문제점 :

첫 번째,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토후 영주 시민들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 이웃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한다는 영주시민의 정서들은 타 지역에서 온

2040 신혼부부에게 반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런 모습들은 지역 어머니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사회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회적 저항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

두 번째, 영주시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자녀 출산 가정에 여러 가지 물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 혜택이 타 지역과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시군구의 행정 정책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현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출산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 앞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어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영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선비도시 이미지가 젊은 부모에게 반감으로 작용되고 있다.



세 번째, 병원에 대한 요구사항, 영주에는 종합 병원이 3 개가 있다. 세 곳은 영주 성누가 병원, 영주 기독교병원, 영주 적십자 병원이며, 그중 최근에 들어선 영주 적십자 병원에 대해, 지역내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아플 때 적제적소의 응급치료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영주 적십자 병원은 안동 성소병원, 안동병원에 버금가는 큰 건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이 학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엄마들은 내 아이가 아플 때면, 안동병원, 안동 성소병원으로 자가 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직접 내 아이의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현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소수서원과 부석사, 두 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영주시는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지 않는 실버 친화도시이며, 지역 내 경제 문화, 사회적 인프라는 50대 이상 중년에게 친숙한 사회적 인프라로 맞춰져 있으며, 여러 가지 정책들, 지역민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나 평생 교육 또한 아이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보다는 어른들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취미와 여가를 위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에서 양로원, 경로당을 짓는 과정이나 절차는 쉽게 만들어지는 반면,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소, 공간의 태부족으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으며, 영주 관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주국민학교는 1990년대 6개 학급이었으나, 2020년 현재 영주초등학교 (구 영주 초등학교)는 각 학년마다 1~2개 학급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의 통합, 학교 존폐 문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 되고 있다. 하나는 젊은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과, 일자리를 늘려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현 영주시가 채택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의 일원화 중 하나이며, 그 효과와 영주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구 증가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만 2000여명의 영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들을 보더라도 영주의 사회적 환경, 사회적 인프라에 맞는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30호 2021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요일 및 시간	장차원
연말 풍수기		3. 22~24. 8	목 12:00~12:00	영남대
남한 귀족 부흥의 열매		3. 22~24. 8	목 14:00~18:00	영남대
한시 시경	학부생	3. 24~24. 23	수 10:00~12:00	영남대
초기 전통을 위한 교양	남성	3. 23~24. 10	목 10:00~11:00	영남대
공공포럼 영남의 미래		3. 25~24. 10	목 14:00~18:00	영남대
역사 탐방		3. 26~24. 11	금 09:00~09:00	영남대
기후 변화 대응기		3. 27~24. 12	목 10:00~12:00	영남대
장차원 교육 과정능력	초등교사	3. 27~24. 12	목 14:00~18:00	영남대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영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우연하게 알게 된 인구유입방법이다. 당o마켓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주로 귀촌한 어른을 알게 되었고, 영주로 귀촌하게 된 계기를 듣게 되었다. 외부의 젊은 부부가 영주에 유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50대 이상 부부라면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영주의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50대 이상 남녀 부부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 뿐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사회 복지 혜택도 그렇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 퇴직한 분들이 노후대책으로 영주는 최적화된 곳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물가가 싸며, 대도시에 비해, 물과 공기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 과거에 비해 문화적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대구로 가는 교통과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상당히 편리한 영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다만 영주 관내 몇몇 공장이 들어서면서, 영주시민들에게 불신을 얻고 있는 것만 해결된다면 지속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금상첨화이다. 가까운 곳에 부석사, 소

서원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중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교육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에서 행해지는 사서삼경을 읽고 외우는 ‘선비 사마과정’이 있어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배웠던 학습법, 유교적인 덕목을 습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타시군구에서는 행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동양 고전강독이며,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평생교육원, 영주 문화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풍기 인근에는 심신을 다스릴 수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이 있으며, 소백산 초입에는 풍기온천이 있으며, 이곳에서 자신만의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귀촌에 최적화되어 있는 영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영주만의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밀 도시 서울, 수도권 대도시 인구를 영주가 흡수할 수 있다. 단 영주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주시민들의 사회적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낯선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 불친절함이 해결되는 것, 그들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 소위 수도권 지역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영주시 또한 가지고 있으며, 추후 사회,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보하다면, 노후 문제의 대안, 더 나아가 안정적인 실버 세대로서의 입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일상의 돌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

정다운 경북도당 당직자

I. 돌봄의 현 주소는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라 사전적으로 돌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돌봄 지원은 초등의 경우에는 ‘방과 후’, ‘베이비시터’로 맞벌이 부부가 평일 생산 활동을 위해 아동돌봄서비스, 학교돌봄 등으로 돌봄 공백을 채우는 것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II. 일상에서의 돌봄이 부족합니다.

공연을 보거나 회사 업무 외의 토론회(정당, 시민단체 등의 국가와 지역의 비전 제시를 위한) 등 불규칙적인 일에 참석해야 될 때 부모가 그 일을 충분히 즐기고 수행 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 공연장의 경우

설계 당시부터 돌봄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돌봄 공간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문화 공연을 즐기러 오는 부모를 위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토론회 등의 비규칙적인 장소와 일정의 경우

장소를 마련 할 때 돌봄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 한 후 행사 시간 동안 아이 돌봄 교사를 고용합니다. 이 경우에 민간에서 바로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거릴 것이므로 국회나 정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아울렛에는 놀이방, 블록방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쇼핑하는 것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겠습니다.



III. 세심한 돌봄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불용처리가 2019년 기준 23.7%입니다. 올해부터 학교돌봄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신청은 미미합니다. 학교 교사와 돌봄 교사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형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자체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생산 활동의 일상에서의 돌봄에 대해서도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모들이 수의 창출 외 시민단체와 정당 등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시민단체와 정당 활동을 하며 8살 10살 두 아이를 데리고 전국을 다니는 것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활동하려면 돌봄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제 저항의 방법입니다.

정치는 더 젊어져야 합니다. 지자체와 국회 등 모든 곳에 아이 키우는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의 법과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출생, 돌봄, 교육 등에 대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빛 있는 청년에서, 빛 나는 청년으로

강한솔 광주시당 당직자

제1장 연구 배경

제1절 문제 제기

“어렸을적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동경했다.
평범하다는 것은 지루한 것이며, 눈에 띄지 않는 것이며, 모욕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 것이며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저 평범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학업, 취업준비, 알바 등으로 하루 24시간을 치열하게 살아 내지만 결국 소원은 평범해 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 어떤 이에게는 죽을 만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현실은 매우 잔혹하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빛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중산층 이상은 투자를 위해 빛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은 생존을 위한 빛을 낸다(통계청, 2017).

청년부채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지가 대출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망이 없는 청년들의 시작은 마이너스이다. 청년부채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었다. 교육비, 주거비 등 기본권 측면에서 채워져야 할 부분이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부채의 특성상 직면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실감할 수 없게 한다. 미래를 빌려 현재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청년부채 문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청년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이외에 심리적·사회적 현황이 함께 도출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광주지역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현황과 실태

청년들의 부채 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며,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을 하게 된다. 반면 사회는 고비용 사회로 교육비와 주거비는 너무 높고,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비도 벅차다.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은 경제적 타격에도 청년들은 무너지게 되며, 교육과 주거 상황에 따라 세대 내의 격차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청년드림은행’ 자료집을 바탕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1] 광주지역 청년의 연령대별 대출 잔액

구분	빈도(명)	평균 (단위 : 만원)
만 19세~24세	25	908
만25세~29세	57	1,317
만 30세~34세	82	3,796
합계	164	2,494

광주청년들의 대출 잔액은 19세~24세는 908만원, 만25세~29세는 1,317만원, 만30세~34세는 3,796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494만원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2] 광주지역 청년의 대출목적

구분	전체	만 19세~24세
주거비(매매, 전세보증금, 월세 등)	33.5%	8%
교육비(학자금 대출 포함)/보육비	32.3%	36%
생활비(식료품, 외식비)	27.4%	32%
가족의 요청	15.2%	24%
또 다른 빛의 번제	14.6%	12%
결혼	3.7%	0%
의료비	3.0%	4%
창업	3.0%	4%
기타	10.4%	8%

대출 목적 또한 다양하게 구분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주거비가 전체의 33.5%, 교육비가 32.3%, 생활비가 2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4명중 1명은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부채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표3] 광주지역 청년의 총 저축액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없음	59	11.8
1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6	21.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61	12.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75	15.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6.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9	5.8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9	5.8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	8.0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44	8.8
5,000만원 이상	27	5.4
합계	500	100

광주청년의 저축액 평균은 784만원이며, 10명 중 1명은 저축액이 전혀 없었다. 총 저축액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은 2명 중 1명으로 광주청년들의 금융자산이 매우 빈약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광주지역 청년의 총 비상금액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없음	131	26.2
1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24	24.8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3	10.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76	15.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4	6.8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8	5.6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9	5.8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7	3.4
2,000만원 이상	8	1.6
합계	500	100.0

광주청년의 26.2%는 생활비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윌돈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평균 예비비는 161만원으로 광주청년 한 달 생활비 평균인 125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윌돈이 없

다는 것은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살펴볼 부분이다.

[표5] 광주지역 청년의 저축이 어려운 요소

구분	1순위	2순위
생활비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28.3%	21.7%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함	13.3%	28.3%
저축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음	16.3%	15.0%
수입이 줄어들었음	20.5%	10.2%
이자율이 너무 낮음	8.4%	12.1%
부채상환으로 처분가능 소득이 적음	10.8%	2.5%
기타	2.4%	1.2%

더불어 광주청년들은 생활비 지출을 줄이지 못하거나, 수입이 줄어들거나, 저축 습관이 배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예상치 못한 지출들을 줄이지 못하고 있었다. 수입이 줄어든 문제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6] 광주지역 청년의 재무관리역량

항목 대상	재무상태 이해도	긴급 예비비 보유	꾸준한 저축	금융상품 이해도	계획지출	재무역량 강화교육 참여
전체	56.5%	49.6%	49.0%	30.6%	38.6%	13.8%
미혼	52.3%	46.9%	46.5%	27.5%	36.2%	12.7%
대학 재학	48.7%	44.3%	44.3%	19.1%	28.7%	9.6%
무소득	47.3%	35.5%	35.5%	24.7%	30.1%	8.6%
연소득 천만원 미만	52.1%	45.7%	45.7%	22.1%	31.4%	7.9%

광주청년의 2명 중 1명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을 위한 여윌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특히 저연령과 미혼, 대학생과 저소득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광주 청년드림은행을 통해 부채상담을 신청한 청년들은 2019년 403명에서 658명으로 33%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청년들의 신용상태와 상황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가 가중되었다. 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1:1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상담사A)**

A는 상담에 1시간 30분씩이나 걸리냐고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돈 문제는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들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개별적인 1:1 맞춤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정치의 변화가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상담사B)**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상담사A)

상담사 A와 B는 청년들의 현 상황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국회에도 새로운 유입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2장 결론과 정책 제안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광주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청년들은 저축액과 여윗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저축을 하고 싶은 욕구는 높았지만, 부족한 재무관리역량 탓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 대출의 목적 또한 주거, 교육, 가족의 요청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채상환 탓에 대인관계는 점점 위축되고, 10명 중 1명은 연체의 경험이 있었다. 청년부채는 더 이상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단위의 개입이 분명히 필요하다. 위축된 대인관계는 연애, 결혼, 출산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N포 세대'가 되게 하였으며, 부채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었다. 연체자를 위한 긴급지원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부채와 연체는 사회관계망을 위축시키며, 의논할 가족과 지인의 부재는 서비스의 확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

제2절 결론

본 연구는 광주지역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주 지역 청년들의 부채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저축액이 부족하다.

광주청년들의 10명중 1명은 저축액이 전혀 없으며, 2명중 1명은 총 저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광주청년들의 금융자산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여윗돈이 없다.

광주청년들의 4명중 1명은 여윗돈이 전혀 없으며, 삶의 여유가 없이 불안하게 버텨 가고 있는 청년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소득계층에서는 저축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재무관리역량이 취약하다.

광주청년들의 2명중 1명은 본인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지역 청년들은 재무역량강화 교육이나 금융상담에 대한 참여 경험과 금융상품과 대출 등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

넷째, 부채 문제를 논의할 가족 또는 지인이 부족하다.

부채가 있는 광주청년들은 돈 문제를 논의할 가족과 지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금융 상담과 1:1 맞춤 개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제3절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한 제안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다.

첫째, 고비용 낮추기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삶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 부채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반값등록금, 주거제공 등 기본권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무관리역량 향상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켜 스스로 개인의 금융상태를 점검하고 환경이 뒷받침 되는 다양한 교육들과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년은행운영

청년부채는 단순히 부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심리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청년 개인 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시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살필 수 있는 구별로 청년은행 플랫폼을 지속·확대 운영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유미(2018). 청년 호명과 주체의 전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편선·전아름·박연(2010). 『발칙한 반란을 꿈꾸는 요새 젊은것들』. 자리
- 류연미(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진경(2018). 『청년흡담보고서』. 들녘
- 송화준,한솔(2014). 『우리에게는 또다른 영토가 있다』. 알렙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7). 『청춘의가격』. 사계절
- 엄기호(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숲
- 오찬호(2013). 『우리는차별에찬성합니다』. 개마고원
- 이윤경·신승철(2014) 『달려라청춘』. 삼인
- 조한혜정,엄기호,천주희 외(2016). 『노오력의 배신』. 창비
- 후루이치노리토시(2015).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민음사
- 광주광역시(2017).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 광주청년드림은행(2020). 『보통 청년, 여깁습니다』

광주청년드림은행(2020). 『나 청년할 수 있을까』

2013~2017 서울시마을공동체 청년 지원사업 백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0

2014SEEKER:S(2014). 『우리 시대 청년의 명량 르포르타주』. 에이지21

KBS NEWS(2019). 대책없는 ‘젊은층 고독사’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광주광역시 금쪽등지 프로젝트

임성화 일반당원

1. 검토배경

1.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요구되어지고 있음.

최근에 우리 사회에 밝혀진 '부모에 의한 어린 아동의 학대와 사망, 은폐 과정'은 모두를 경악케 함은 물론 그 과정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무지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미래의 희망으로서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능을 잠시 잊었거나, 이 기능이 작동하는데 있어 **엄청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냄**. 이에 국가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역적(광주광역시) 대안 마련이 요구.



■ 그것이 알고 싶다.(SBS) 1247회 2021.1.23.(토)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2. 아동학대에 범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동학대 접수 건수가 **전국 5위**를 차지할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도 평균치인 75.6%를 웃도는 77.2%(19년), 2020년에는 81.4%로 매년 상향,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어떤 아이들에겐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지역적 문제로 인식.

■ [별첨1] 아동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시도별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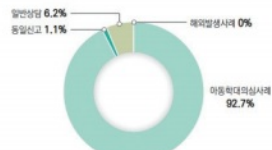
연도별 신고건수 접수 (2018년 36,416건 접수)

1) 신고접수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7%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460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6,920건으로 총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전체 신고접수액의 92.7%로 나타났다. 이외 일반상담은 449건(1.1%), 일반상담은 2,560건(6.2%)이었다.

(표 1-1-1)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신고	일반상담	제외대상 사례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1,460	36,920	38,380	449	2,560	0	41,389
(3.5)	(89.2)	(92.7)	(1.1)	(6.2)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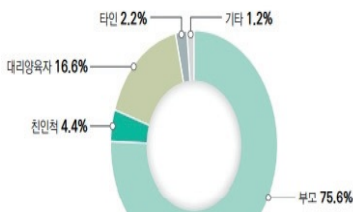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시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86 (5.9)	3,267 (8.8)	3,353 (8.7)
부산	12 (0.8)	2,290 (6.2)	2,302 (6.0)
대구	64 (4.4)	1,823 (4.9)	1,887 (4.9)
인천	93 (6.4)	2,940 (8.0)	3,033 (7.9)
광주	23 (1.6)	1,066 (2.9)	1,089 (2.8)
대전	74 (5.1)	1,138 (3.1)	1,212 (3.2)
울산	15 (1.0)	898 (2.4)	913 (2.4)
경기	646 (44.2)	9,331 (25.3)	9,977 (26.0)
강원	64 (4.4)	1,772 (4.8)	1,836 (4.8)
충북	66 (4.5)	1,336 (3.6)	1,402 (3.7)
충남	62 (4.2)	1,801 (4.9)	1,863 (4.9)
전북	58 (4.0)	1,935 (5.2)	1,993 (5.2)
전남	64 (4.4)	2,389 (6.5)	2,453 (6.4)
경북	54 (3.7)	2,155 (5.8)	2,209 (5.8)
경남	63 (4.3)	1,456 (3.9)	1,519 (4.0)
제주	11 (0.8)	948 (2.6)	959 (2.5)
세종	5 (0.3)	375 (1.0)	380 (1.0)
총계	1,460 (100.0)	36,920 (100.0)	38,380 (100.0)

2019년 접수건(41,389건) 분석 [보건복지부]

2019년_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 [보건복지부]

■ [별첨2]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관계 조사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 부모비율: 75.6%

'아동학대 신고건수 1116건' 광주시 점검체계 강화

뉴스 | 2020.08.24 | 신고



[광주=뉴스시스] 영리한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성시 점검체계 강화에 나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말 기준 1116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876건(78.5%)이며, 가장 큰 부모에 의한 학대가 676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행위자 부모비율: 77.2% (광주광역시)
*'20년 행위자 부모비율: 81.4% (광주광역시)

3.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매년 증가해온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 정부와 아동전문가들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 된 것으로 분석**.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아동학대 우려가 높아지는 ‘조용한 위험징후’가 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본 교육생은 **“가족프로그램 의무화를 통한 건강한 광주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을 제안함.**

■ [별첨3] 코로나19 이후 광주광역시 신고건수 현황 ('20년)

광주광역시

줄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2020년) : **860건**

- 아동학대 판정 건수 : **694건(80.7%)**

* 가해자 유형 : 부모 565건 (81.4%), 대리양육자 79건(11.4%), 친인척 50건(7.2%)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신고건수 : **1029건,**

- 아동학대 판정 건수 : **844건**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학대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과 개원이 늦어지면서 신고의무자 신고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

‘조용한’ 위험징후

“늘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분석)

■ [별첨4] 코로나19 아동학대 신고건수 분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출처: 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북아동옹호센터)

II. 현황 및 문제점

1. 아동학대 대응 정책 현황과 문제점

-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 옴.
 -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 등
- '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대응체계 개편방향* 확립
 - * '20.10월부터 학대조사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에 집중
- '20.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통해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인프라 확충, 단계 별 제도개선 등 세부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21.01.20)

<p style="text-align: center;">1</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학대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체험형 교육 확대 80 시간 → 160 시간 ✓ 정확한 판단으로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운영 * 시·군·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시 학교) 참여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 확대,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 상향 * 변경 신고된 현장 * 개선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중 시행예정) 	<p style="text-align: center;">2</p> <p style="text-align: center;">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추가 필요인력 보강, 아동보호전문요원도 '22년까지 381명 확충 ✓ 시·도 경찰청 '여청수사대' 신설,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전담 수사 ✓ 현장대응 전용차량 확보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 지원 ✓ 시·도 전담인력의 시·군·구 업무조정 역할 강화 아동학대 대응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방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3</p> <p style="text-align: center;">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아동쉼터 연내 29개소 확충, 0-2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 ✓ 시·도 차원 일시보호 현황 주기적 점검, 보호시설 적극 확보 ✓ 분리 이후 피해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4</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 마련, 사법부(양형위원회) 제출 ✓ 약국·편의점 등과 협업을 통한 신고 활성화 ✓ 학교·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5</p> <p style="text-align: center;">입양전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지원을 활성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기관 공적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입양기관에 대해 연2회 지도점검 추진 ✓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양 초기 아동 양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 및 조속한 입법 추진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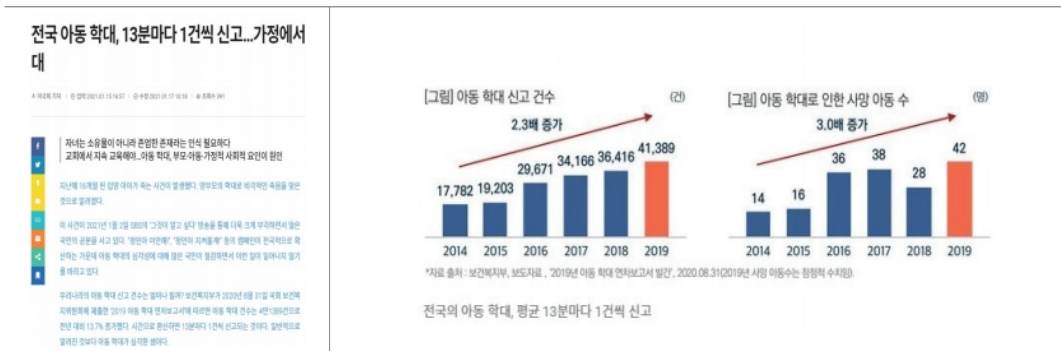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친권 제한보완
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 발굴 강화 ② 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③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활용	① 징계권 조항 개정 ② 보호대상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③ 즉각 분리제도 도입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① 아동보호전문기관·보호시설 확대 ②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	① 예방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 ② [발굴] 신고제도 내실화 등 ③ [초기대응]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 등 ④ [보호·지원] 지원 편차 완화 등 ⑤ [재발방지] 학대발생가정 사후관리 등

★ 문제점

☞ **감독과 처벌에 관한 대책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 부재**

→ 그마저 제시된 인식개선 대책의 경우, 공익광고 캠페인 확산으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 학대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부모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모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가 되지만,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양육방식을 교육받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임. 과거에는 친정어머니를 포함한 집안의 어른들과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자녀양육의 방법들을 습득했지만, 이러한 사적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이 개개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대한 더 적극적인 공적개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임.



※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서 **공교육에 준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보편적 부모교육(가족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설문조사(2017년, 광주전남정책연구 제21호)에 따르면 시민들의 부모교육 참여의사가 78%에 이르고 있으며, 부모교육의 기대효과도 80%로 조사되어,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적극적 시민 요구가 확인됨.

2. 그간 추진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부모교육 주체 현황(조사)

정부가 실시하는 부모교육 현황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보았음. 여성가족부의 경우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녀연령대별 부모교육과 아버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를 지원하는 센터(학부모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1) 여성가족부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으로 가족정책이 추진되고,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됨.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교육’(법령 제32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모교육은 현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상별 교육이며, 남성대상교육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 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남성대상 자기돌봄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임(〈표 1〉 참조)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공통사업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 예비/신혼기부부교육(결혼준비교육), 영유아기 자녀교육, 초등학교 자녀교육, 청소년기 자녀교육, 성인기 자녀 부모교육, 조부모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 남성대상 자기돌봄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p.58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관 고유기능의 하나로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두고 있음(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3개소로 전국에 총92개소가 설치 운영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 2018년 기준)

(3)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권리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구체적으로 학부모지원센터(전국 93개소)와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상담, 연수, 학교 참여 컨설팅 등 제공과 지역사회 유관기관1)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자녀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함. (교육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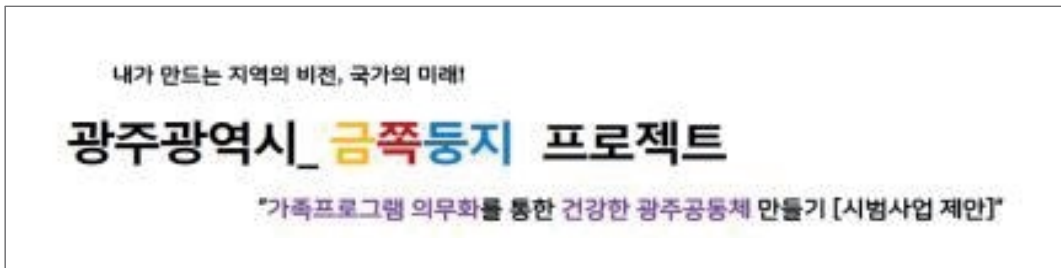
★ 문제점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2017년)에 따르면 국민들의 부모교육 참여의사가 78%에 이르고 있으며, 부모교육의 기대효과도 80%로 조사되는 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부모교육의 참여자도 적고, 그 성과도 미비함.**

-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앙부서별 분리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교육 프로그램 통합 조정이 어렵고, 단순 이론 교육, 교양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음.** (중복 등)

- 또한 기관별 수시 운영되고, 안내, 신청, 접수, 교육 등이 각각 진행됨에 따라 **부모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 문의를 통해 참여를 해야하는 등 시민들의 효율적인 교육 참여가 어려움.**

III. 정책 제안(개선방안)



1. 정책 방향

- 부모교육을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있는 관점으로 접근.
 - 전통사회에서처럼 조부모, 친인척 등 다양한 성인들로부터 양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형제가 적어서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육아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요즘 특히 **20~30대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음. 또 1~2명의 자녀를 출산하다 보니 “잘” 키우고 싶은 욕구도 매우 큼. 이에 부모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
 - 요즘 젊은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삶도 중시하는 다양한 욕구와 의식 수준을 갖고 있으므로 **무조건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부모로서 권리(참여)와 책임(의무)를 균형있게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 **패널티 방식이 아닌 → 인센티브 방식**)

* [용어에 대한 고민]_ 부모교육이 아닌, <가족프로그램>으로 제안 배경

“교육” → 단어가 갖고 있는 수직적 어감을 ‘프로그램’으로 변경 (실효적, 상호적 의미부여)

“부모” → 한부모, 조부모 등 부모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가족”으로 포괄 검토

2. 정책 제안

- 가. 광역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 ‘**행복가족지원센터**’(가칭) 운영을 통한 통합적+전문적+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가족프로그램 플랫폼** 마련

- 온라인/오프라인 부모들의 만남(소통)의 장 마련
- 행복가족 전문강사 '보듬이'(가칭) 양성
- 정부지원 혹은 정부주도의 부모교육 수요처 발굴
- 연령별, 대상별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연구 및 보급
- 부모교육 조사 연구 및 자조모임(그룹) 지원_ 공동육아나눔터, 마을작은도서관 등
- 정보제공 (가족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 등

※ 광주사회서비스원 내 1차 시범운영(3년, 실효성 모니터링)

(문제1) 현재 부모교육은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시행
문화센터나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가벼운 교양 수준**에 그침.

정책 (제안1) 광역단체(*광주)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 [행복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설+전문' 가족프로그램 시스템 마련 [\(광주서비스원 내 설치검토\)](#)
 + 조례 개정_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
 + [가족프로그램 전문 강사] '보듬이' 양성 (보수교육 실시 등 체계적 지원 및 육성)
 → 부모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프로그램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광주형 가족프로그램 의무화'를 위한 근거 자치 법규 마련

나. '광주 행복가족프로그램 이수제' 실시_ 인센티브 제공 방식

정책 (제안2) 사회경제 상황과 가치관 변화에 맞춰 **모든 성인이 부모가 되기 전 배워야 할**
 + [광주 행복가족프로그램 이수제] 실시_ 인센티브 방식 (예_ 웃는 아빠, 웃는 엄마 Program)
 * 단계별 접근 : 위기가정 판별(정부 위기스크리닝 제도 이용) 1차 선별 시행, 모니터링
 (예) 학대 의심으로 경찰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법원으로 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정(부모)

◦ [광주 행복가족프로그램 이수제]

- 수요친화적 교육 콘텐츠(프로그램)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광주관내 모든 부모(가족)가 일정 시간을 이수하는 방식.
 (*이수시간에 대한 지역 내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 필요)

★ 이수시 **인센티브 제공방안 (안)**

- ①안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시 우선권 부여
- ②안 : '광주행복가족 마일리지'제 실시 (일정 point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 ③안 : 육아수당(행복수당) 추가 지급 (광주지역화폐 '상생카드' 적립)
 - * 광주광역시 경우, 2021년부터 출산시 출산축하금(100만원), 육아수당(20만원*24개월 지원) 지급 중
 - * 초등과 중등 입학 전 행복가족프로그램 이수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수당(가칭)으로 함.

(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 및 실현시킬 것인가?

정책 (제안) **광주 행복가족프로그램 이수제** 실시 _인센티브 방식

1) 영유아기 가족프로그램 : (대상) 자녀출산 전인 예비부모 →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시 이수증** 제출 필수
 2) 취학전-후 가족프로그램: (대상) 초등1(7세) 부모 → 초등 입학시 이수증 제출
 초등6(13세)부모 → 중등 입학시 이수증 제출

(유도) 1)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입학) 우선권 부여
 2) **마일리지제**- 일정 포인트 이상 되면 현금으로 사용
 3) 육아(행복)수당 **추가** 지급 (지역화폐 '상생카드')

다. '찾아가는행복가족지원서비스' 실시

(문제3)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들은 경제적 결핍이 가장 실질적이고 시급한 삶의 문제여서 **따로 시간을 내어 부모교육을 듣거나 참여하기가 어렵다.**

정책 (제안3) + '찾아가는 행복가족 지원' 서비스 실시 (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 온라인시스템 도입 (비대면 zoom 방식, 화상강의 인증방식 등)

- 부모들의 부모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참여도가 높지 않은 현실 고려,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엄마행복캠프' 등

IV. 기대효과 (비전 및 지향점)

<p>가족 프로그램 의무화를 통한 건강한 광주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제안)</p> <p style="text-align: right;">[비전 및 지향점]</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광역시_금쪽동지 프로젝트</p> <p>성숙한 가족이 있는 도시, 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육자... 자아 존중감 증대 ▽ 제발 방지 (내적 통제 증진 및 인식 전환) ▽ 잠재적 위험 요소 해소 (예방 교육) <p>"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과 아량한 권리를 보장받는 광주" "우리(we)가 있는 건강한 광주 공동체"</p> <p>성숙한 정치인이 있는 정당</p> <p>성숙한 대한민국을 함께(더불어) 꿈꿉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p>	<p>*인구현상 유지 필요한 합계출산율 : 2.1명 *OECD 회원국 평균(1.63명) *초(超)저출산 기준(1.3명) *한국 : 0.84명</p> <p>인류역사상 최초의 출산율 '1 미만'의 나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 명을 살리는 것은 한 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p>
---	---

"좋은부모, 나쁜부모는 없다. 성숙한 부모와 성숙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 뿐이다." - 오은영 박사

- 통합적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문제(아동학대 등) 획기적 해소
- 보편적 공공 행복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숙한 가정공동체 실현
- 광주행복가족프로그램 성공적 실행을 통한 전국 모델링 제시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대구의 시민중심형 탄소중립 실천 제도화 방안

손혜민 대구시당 당직자

1. 서론

2016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 2019년에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2050탄소중립’이 글로벌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뒤이어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이다. 지방정부도 2050탄소중립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출범한 이후 대구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2021년 1월, 대구형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고, 대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민의 직접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 대구시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는 별도의 시민중심 실천 분야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 사회조사를 보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대구시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욕구가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 대구는 대구시민이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실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대구형 그린뉴딜의 비전과는 모순된다.

대구시는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발굴하여 완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2050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대구가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에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 제도화 및 활성화’를 제안한다. 대구시의 모든 지역구(구·군)의 특정 구역에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입점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유인하고, 조성된 거리에 입점해 있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이는 대구시민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구가 완전한 형태의 2050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뒷받침해주고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가, 한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II. 정책 연구배경

1. 대구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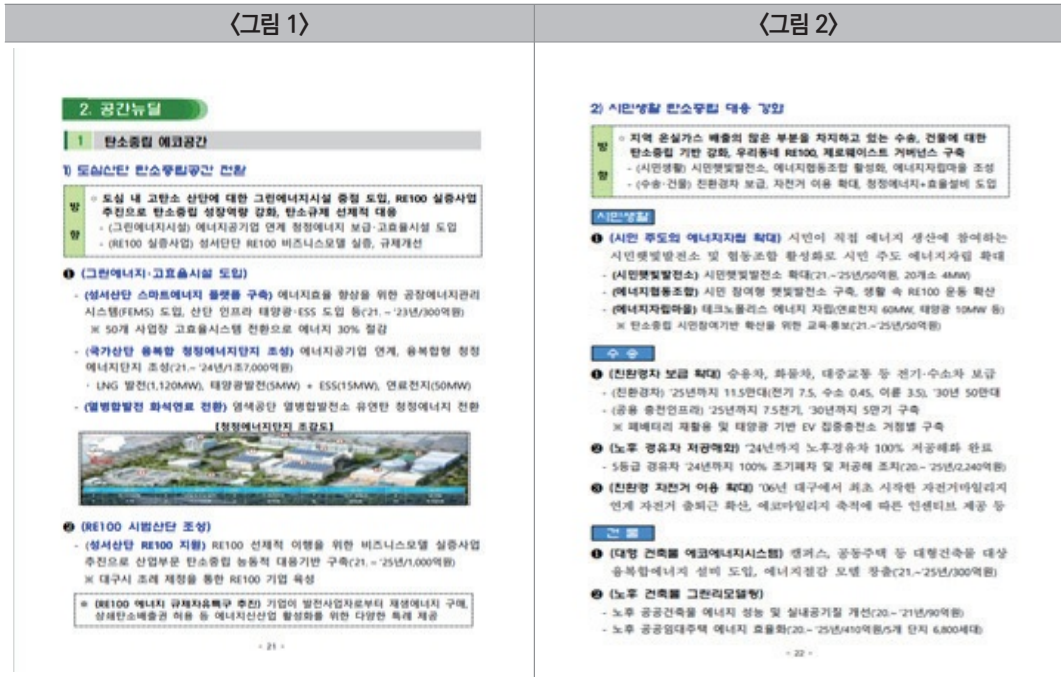
2021년 1월 28일, 대구는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대구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을 산업 분야와 도시 공간, 인재 양성에 폭넓게 접목해 산업뉴딜·휴먼뉴딜·공간뉴딜이라는 3대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3대 전략 간 연계를 통해 2025년까지 2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이 대구의 1차 목표이다.

2050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대구시, 기업, 소상공인, 시민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대구의 탄소중립 정책은 30% 부족한 모습이다. 30%는 ‘실천과 창의성 부족’에 있다.

1) 실천 분야의 불충분성

대구형 그린뉴딜의 비전은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 대구’이다. 비전과는 다르게 실제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시민이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가 진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이다. 2021년 5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대구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대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 단위의 실천을 강조하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구형 그린뉴딜의 3대 전략 중 시민 차원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간뉴딜의 3대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 에코 공간 조성’분야 밖에 없다. <그림1> 참고. 그 중에서도 시민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31개의 사업 중 3개 정도이다. 나머지 분야 및 세부 사업은 대구시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정책의 창의성 부족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대구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탄소중립 예코 공간 조성’ 분야이다. 직·간접적인 실천이 가능한 대표적인 세부사업은 에너지 협동조합 및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 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 확대, 생활 속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생활권 내 근거리 도시숲 확충, 폐자원활용 업사이클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그림2> 참고. 대구시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업들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구가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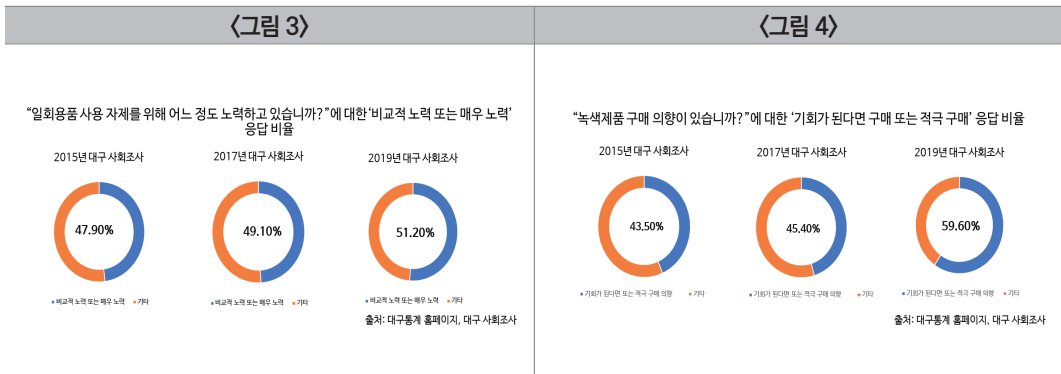
2. 대구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욕구와 현실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구의 탄소중립 정책이 부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대구시민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있다. 대구시민의 욕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구시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대구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욕구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회용품 사용 자제 노력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비닐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은 재활용률이 20%가 채 되지 않으며,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2019년 대구시 사회조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노력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노력한다’ 또는 ‘적극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였다. 이는 2015년에 47.9%, 2017년에 49.1%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둘째, 녹색제품을 구매하려는 욕구이다. 녹색제품¹⁾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녹색제품처럼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최대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도 있다. 2019년 대구시 사회조사에서 녹색제품 구매 의향에 대한 질문에 ‘기회가 되면 구매’ 또는 ‘적극 구매’라 응답한 비율이 59.6%였다. 2015년에 43.5%, 2017년에 45.4%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무려 약 60%의 응답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의 경우, 에너지 절약 부문 다음으로 높은 실천 비율을 기록했다. 〈그림 5〉참고. 그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녹색제품의 경우, 대구시민의 60%가 녹색제품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강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욕구가 실현되기 힘든 구조이다. 2019년 대구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의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 녹색제품을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6〉참고. 2019년 대구시 사회지표에서는 녹색제품 이용 감소를 녹색제품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서 찾았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민들은 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에 가는 것은 비효율성,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녹색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1)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III. 정책목표

1. 완전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로의 도약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대구의 노력은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출범했다. 대구는 수원시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에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17개의 모든 시·도, 6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했다. 대구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출범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4월, 대구 동대구역에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되었다. 전 세계에서 3번째, 한국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같은 해 5월, 대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탄소 중립 이행을 다짐하는 국제 캠페인 ‘탄소 제로 레이스(Race To Zero)’에 가입했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역대학인 경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위 사례들은 대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것에 그 의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구가 완전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대구시민이 주도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실천 방안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2. 대구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욕구 실현 및 탄소중립 실천주체로의 부상

지역주민의 욕구는 지역사회에서 해소 및 실현되어야 한다. 대구시민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있다면 대구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구시민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옹기고 있으며,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녹색제품(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를 위한 개인 단위의 노력 중에서도 핵심적인 실천 방안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그린피스²⁾ 등에서 챌린지 형식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챌린지 형식의 참여는 일회성이 강하다.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의 실천 욕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챌린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대구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실천 제도화 방안은 대구시민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대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구시민을 탄소중립 정책의 주체로 부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정책과제

- 제로 웨이스트(Zero - Waste) 거리 조성 제도화 및 활성화

1) 정의 및 추진 계획

제로 웨이스트란 제품의 포장,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원칙이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란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고, 친환경 제품 구매 및 다회용기 사용 등이 가능한 공간이다. 제로 웨이스트 거리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입점해 상권을 이루는 거리이다.

□ ‘제로 웨이스트(Zero - Waste) 거리’ 조성 추진 계획

진행과정	세부사항
협업체 구성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 협업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현재 대구 내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자체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대구녹색소비자연대(2명) - 각 구·군 의회의 환경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 2인(해당 지구구에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장) - 모집을 통한 각 구·군별 시민참여단(2명)
조례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 등) 조항에 “④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자원의 순환적 이용 공간 조성을 위해 대구 내에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구 내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친환경 제품 및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를 인증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 그린피스 홈페이지

진행과정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에 “⑤ 시장은 녹색제품 및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구시 자체 인증 시행 및 진행” 조항 신설 -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 11조의2(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2항에 “7. 대구 내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 입점하는 상품” 조항 신설
사업자 및 사업체 발굴	- 대구시 창업 허브 기관 ‘DASH(대시)’를 통해 각 구·군의 제로 웨이스트 창업자 공고 모집 대구 구·군청 거리에 창업자 모집 현수막 부착
인증 사업	- 제로 웨이스트 가게 인증서 및 인증 간판 제작 제로 웨이스트 가게 입점 후, 인증서 및 인증 간판 수여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 웨이스트 거리 환경 조성 - ‘제로 웨이스트 거리’ 입구 안내판 설치 - ‘제로 웨이스트 거리’ 안내서 제작 및 배포

2) 예산 및 타당성

□ ‘제로 웨이스트(Zero - Waste) 거리’ 조성 예산 (단위: 백만 원)

항목	계	국비	시비
창업 지원	1,120	1,000	120
인증 사업	7	0	7
환경 조성(설치 및 정비)	105	5	100
합계	1,232	1,005	227

제로 웨이스트 거리가 시민 중심 탄소중립 실천방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제로 웨이스트는 탄소중립 시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생산과정에서부터 61%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³⁾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비닐은 실제 재활용률이 20%에 불과하다.⁴⁾ 기존에는 버려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수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 시대에는 처음부터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 및 소비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최종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탄소중립인데 배출량 자체가 없다면 흡수할 이산화탄소는 없다.

3) 김명화, 플라스틱 쓰레기, 쉬운 재활용에 방점, ecomedia

4) 그린피스 홈페이지

VI. 의의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 방안은 4가지 관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탄소중립에 대한 실질적 기여이다. 현재 대구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양⁵⁾은 1.2kg이며 2020년 상반기에 대구에서 배출된 종이는 하루 평균 3.5톤, 비닐류는 연 4.78톤⁶⁾이다. 이에 비해 재활용률은 40%에 그친다. 포장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들만 취급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통해 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40%보다 높일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다. 5월 24일,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P4G정상회의 사전행사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셋째,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 아닌 대구시민의 욕구에 기반을 둔 실천 방안이다. 마지막, 대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탄소중립 정책이다. P4G 정상회의의 사전 행사였던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특별세션을 통해 243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상호 협력과 함께 창의적인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한 경쟁도 예상된다. 해당 정책 과제는 대구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되기 위한 획기적인 실천 방안이다.

1. 실현가능성

1) 사업자 발굴

경제성 등의 이유로 제로 웨이스트 가게 창업을 원하는 사업자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구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 추이와 변화하는 소비 동향을 고려한다면, 사업자 발굴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구경의 경우, 2019년에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는 단 9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20개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현재 대구에서 운영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문화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이끌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동향은 제품을 구매할 때 상품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상품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MZ세대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과 제로 웨이스트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제조·유통업계는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

제로 웨이스트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는 ‘제로 웨이스트를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모델’을 모색하기

5) 통계청 홈페이지(2020)

6) 김수란, 코로나 이후 재활용쓰레기 급증하자, 대구시 생활폐기물 대책 마련 시급, 오늘경제

위해 전문가간담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이번 정책 연구 주제와 비슷한 ‘제로 웨이스트 마켓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2) 법률·조례 제정

대구에서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조례가 필요하다. 현재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한 사업을 제도화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책 과제를 제도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로 웨이스트샵 설치 의무화 규정을 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에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정의하고 설치·운영·지원·위탁사업 규정 조항이 있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할 수 있다.

2. 효과

1) 대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 공고화

대구 is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의 주축 역할을 한 것으로 시작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스스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라 지칭하며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1년 5월 24일 P4G정상회의 사전행사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특별세션에 초청받았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발표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대구는 소개되지 못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것에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이 제도화·활성화되면 대구에서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 개최될 P4G정상회의에서 대구가 탄소중립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로서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시민중심형 모델로서 대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를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2) 한국의 미래에 기여

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국이 탄소중립 선언 준비과정에 착수했던 2019년에 이미 EU는 그린딜을 통해 2050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으며,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2050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는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2050탄소중립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국’이라 불려왔다. 정부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당시에는 2억 9천 톤 정도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엔 7억 2천 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44kg⁷⁾으로 세계 3위이며 1인당 연간 46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이는 탄소중립 이행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기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제로 웨이스트 거리 조성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위치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정책이다. 제도로써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중심형 탄소중립 실천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 한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최우리.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석탄발전,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겨레 대구시청 홈페이지. 2019 대구사회조사

윤병효. 서울·충남·대구 등 8개 지자체 “2050탄소중립 실현”, 전기신문

손성락.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 ‘대구형 뉴딜’ 시동 걸었다, 서울경제

대구광역시, 2020. 대구시 녹색제품 판매장 현황, 2021. 대구형 뉴딜 추진계획,

김서중. 시민단체가 이끌어 나가는 2050탄소중립, 국제뉴스

정현수. 시민 중심 탄소중립, 매일신문

정우용. 권영진 대구시장,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대표 재선임, 뉴스원

최일영. ‘탄소중립’ 선언 대구에 세계 세 번째 기후시계 설치, 경북대, 전국 최초 대학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 국민일보

김덕용. 대구시, 지자체 최초 ‘탄소 제로 레이스’ 가입...탄소중립 선도, 세계일보

7) JTBC,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1위 중국, 한국은 얼마나?

환경부 블로그, 2021. 2021 환경정책,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권혁준. 친환경 소비 생활화로 녹색사회 전환 앞당긴다, 뉴스원
임성수. 권 시장,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 세계에 알려, 영남일보
류희선. “제로 웨이스트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모델 모색”, 투데이 에너지
윤정훈, 고체치약, 대나무 칫솔, '제로 웨이스트'에 빠진 MZ세대, 이데일리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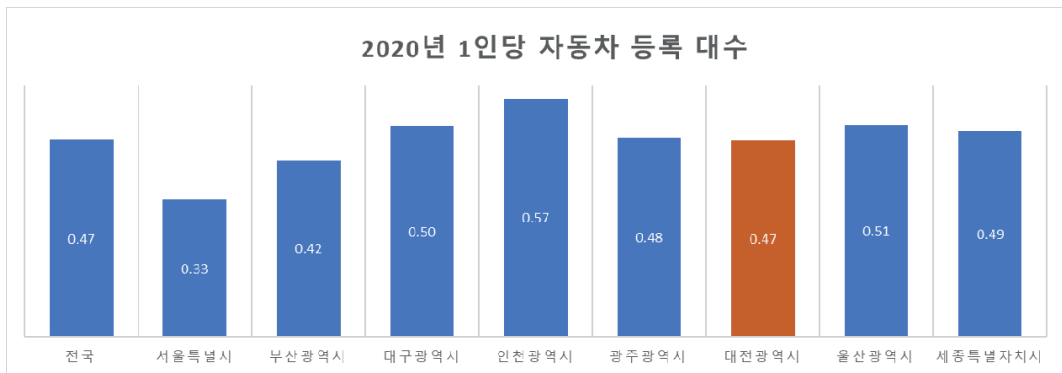
대전 블루스(대전의 불편하고 루즈한 교통을 스마트하게!)

김민숙 대전시당 당직자

□ 대전의 대중교통 현황

○ 대전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0년 기준 0.47대¹⁾

- 전국 평균 수준에 해당함



○ 대도시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서울(65.1%)이 가장 높고 대전(25.7%)이 가장 낮음²⁾

1)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731&conn_path=I2

2) 서울시 교통통계,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289>

KOSIS 국가통계포털(부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2&tblId=DT_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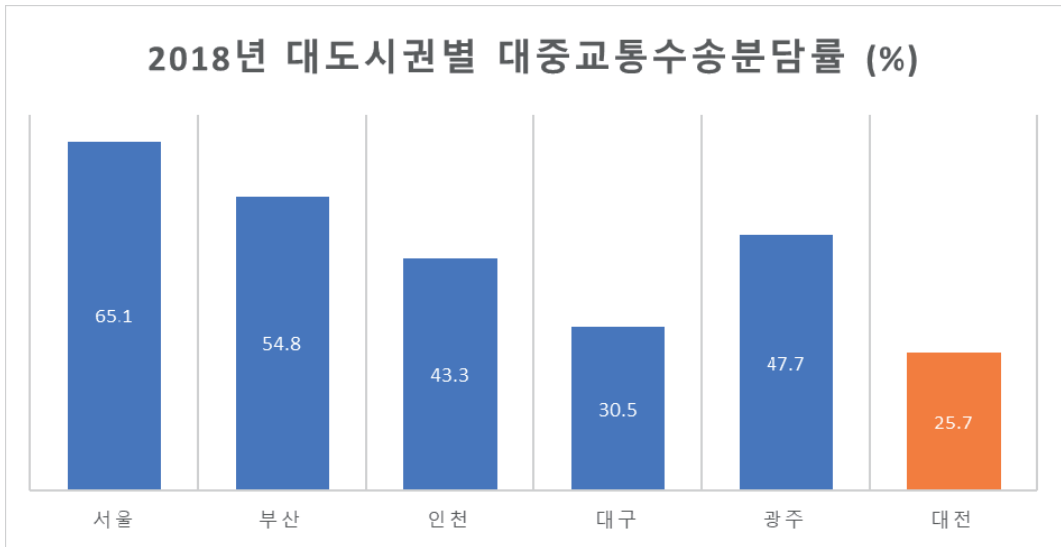
KOSIS 국가통계포털(인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4&tblId=DT_20402_J000038

대구매일신문, <http://mnews.imaail.com/Society/2019061211293427745>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traffic/contentsView.do?pagelId=traffic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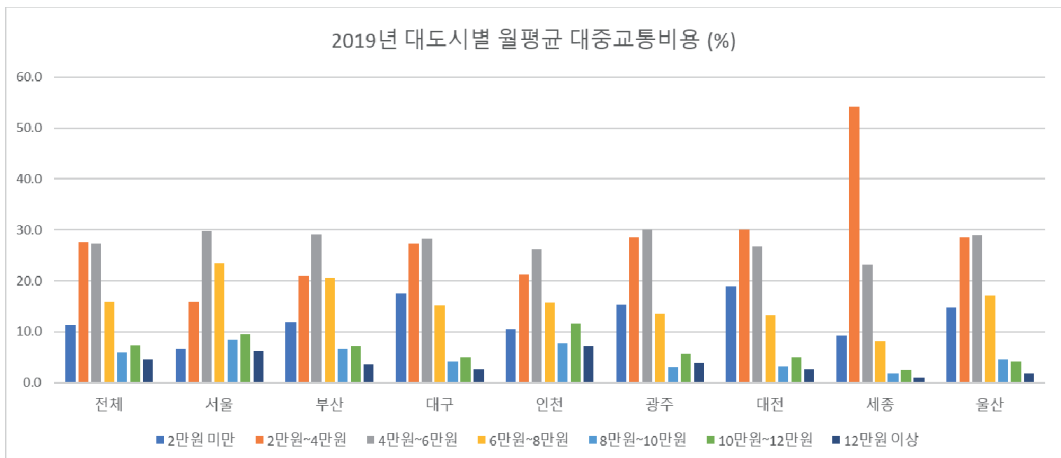
디트뉴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252>

대구광역시는 자료가 없어서 2016년도 기준이며, 다른 도시는 2018년 기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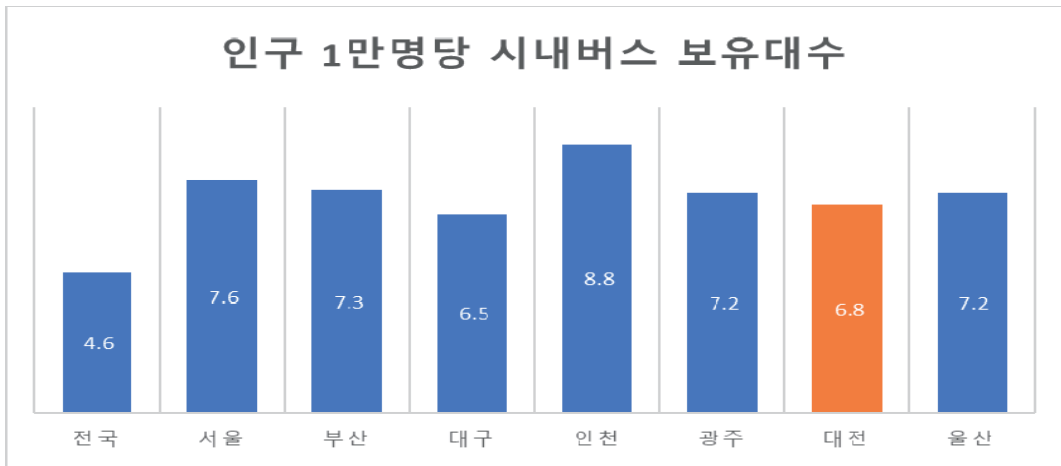
○ 대도시별 월평균 대중교통비용을 보면, 대전과 세종만 2만원~4만원 구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³⁾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유추할 수 있음



3)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725

- 인구 1만명 당 시내버스 보유대수 통계에서 대전은 6.8대로 대구(6.5대)와 함께 낮은 수준임⁴⁾



- 대전의 대중교통 주요노선 정체시간은 대전 7.5분, 수도권 7분, 대구권 5.3분, 광주권 4.6분 등보다 높은 수준이며 평균 배차시간은 15분 이상으로 서울(10분)보다 열악한 수준임⁵⁾

□ 대전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제안들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

- 2012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 있음”으로 분석
- 2013년 민관정위원회에서 자기부상열차로 추진하기로 결정
- 2014년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공약에 따라 트램으로 기종 변경
- 2016년 트램 노선계획 발표
- 2020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 버스 승강장 위치 조정⁶⁾

- 버스와 도시철도간 환승거리를 줄이기 위한 버스 승강장 위치 조정을 제안

4)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 대중교통 DB, <https://www.kotsa.or.kr/ptc>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

서울시는 2017년도 기준, 다른 도시 및 전국은 2018년도 기준 자료임.

5) 대전시민들만 모르는 대전의 대중교통 문제점, <https://goldcham.tistory.com/643>

6) 이정범(2016),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 증진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신도시 지역에 공공자전거 확대 필요⁷⁾**

- 인근 도시철도 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설치를 제안

○ **마을버스 증설 및 운영관리 방안 재정립 필요⁸⁾**

- 현재 마을버스는 유성구에 3개 노선이 있으나 노선길이, 배차간격이 길어 시내버스의 기능을 하고 있음
- 마을버스는 구에서, 시내버스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통합관리를 제안

○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⁹⁾**

- 1호선,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등 3개 철도노선에 시내버스와 타슈가 연계되고 청주 공항, 세종시 등 주변지역까지 철도 연결을 제안

○ **트램 기반의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¹⁰⁾**

- 트램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적극 검토
- 지하철, 버스, 트램 및 택시, 자전거, 개인교통수단 등과의 연계서비스 필요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¹¹⁾**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드론 택시 등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육성 필요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¹²⁾**

- 공유 플랫폼 기반의 공공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의 확산 필요
- 키포드, 대리주차, 전기자전거, 공유차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자의 서비스 참여 강화와 선순환 구조 정립을 통한 MaaS 공유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제고 필요

7) 이정범(2016),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 증진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8) 이정범(2016),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 증진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9) 이정범(2020), 대전의 미래교통정책 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10) 이정범(2020), 대전의 미래교통정책 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11) 이정범(2020), 대전의 미래교통정책 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12) 이정범(2020), 대전의 미래교통정책 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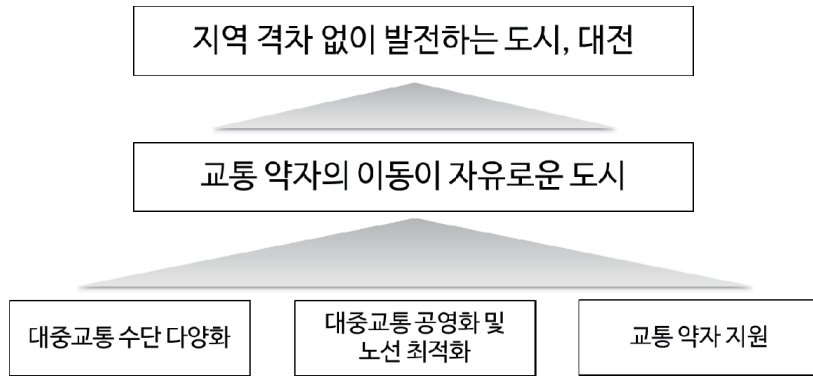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전환¹³⁾

- 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연간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 대신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

□ 시사점

- 버스, 지하철, 트램 등을 연계한 통합적 관점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필요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대전시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비전 및 정책 과제



- 교통정책 비전 : 지역격차 없이 발전하는 도시, 대전
- 정책 목표 : 교통 약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 정책 과제 :
 - 대중교통수단 다양화
 - 대중교통 공영화 및 노선 최적화
 - 교통 약자 지원

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512680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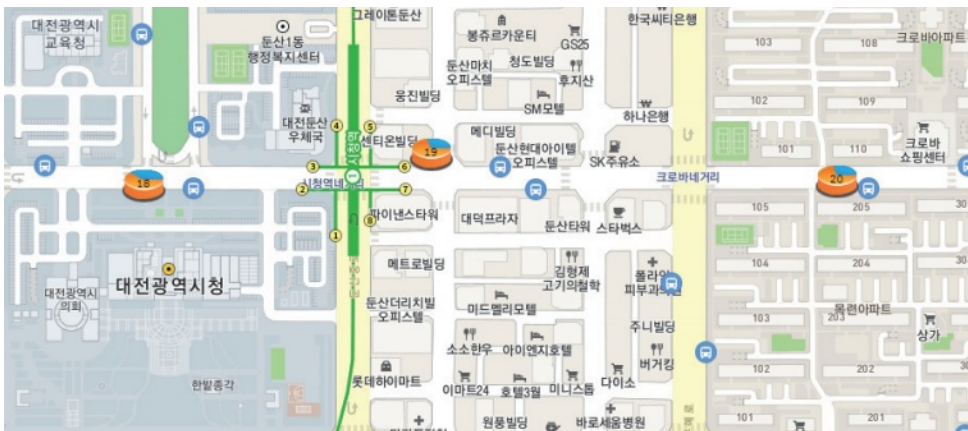
□ 대중교통 수단 다양화

○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 전동 킷보드, 전기자동차 등 개인용 운송수단으로 지하철역, 버스승강장 등 대중교통 거점으로부터 실제 목적지까지 약 1마일 이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서울 (강남, 대학가) 중심으로 공유 킷보드 플랫폼 사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전에 서도 “디어”, “알파카”, “지쿠터”, “하이킵” 등에서 상업용 서비스를 하고 있음
- 아직 산업의 초기 단계로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전의 지역적 특성상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세제 등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환승 정책 수립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타슈(대전시 시민공영자전거 공유 플랫폼) 설치 확대

- 2020년까지 거치대 265개, 자전거 2895개 설치되어 있었으며, 2021년 거치소 1000개, 자전거 5000대 추가 설치 예정¹⁴⁾
- 기존 ‘타슈’의 경우 키오스크 조작이 어렵고 거치대가 일부 지역에만 있어 시민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
- 버스 및 지하철과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에 거치대 설치 확대 필요 (아래 지도에서 버스정류장 10개, 지하철역 입구 8개, 타슈 대여소는 3개)



14)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1500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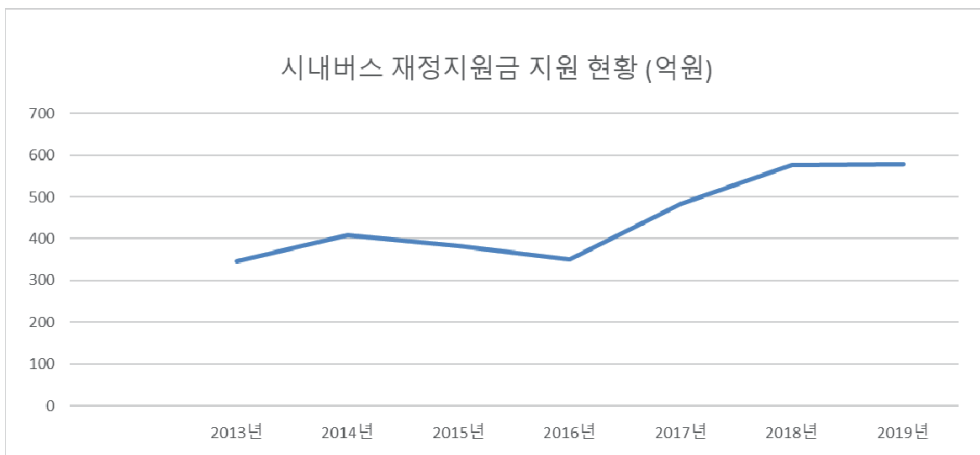
- 키오스크가 아닌 앱을 통한 대여-반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편의성 확대 필요



□ 대중교통 수단 다양화

○ 버스 공영화 및 노선 정비

- 2019년까지 재정지원 및 무료환승 손실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은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 및 무료환승 손실금이 발생함¹⁵⁾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인건비 및 수익을 보장(2019년 기준 70억원)하고

15)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rh/depart/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79&menuSeq=2709&ntatcSeq=133677377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5126800063>

있어 완전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간접비 등을 절약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대전의 버스 노선은 지나치게 굴곡져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¹⁶⁾

우측은 116번 노선 일부를 표시한 것임. 지족역에서 5단지까지 버스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노선이 만들어져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트램 등 환승을 통해 짧은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버스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타슈,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용 이동수단과의 연계도 고려 필요

○ 주요 거점 환승센터 설치

- 지하철 종점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주요 거점에 자가용 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출퇴근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음
- 서울 양재역 환승센터의 경우 광역철도는 물론,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등 모든 환승 수단에 대해 5분 이내 빠른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¹⁷⁾

□ 교통 약자 지원

○ 교통 약자 택시 지원금 제도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지만 할인 및 무료 혜택은 전용서비스 또는 버스나 지하철에만 지원이 되고 있음
-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전용교통카드를 발급하여 매월 일정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16) 대전시민들만 모르는 대전의 대중교통 문제점, <https://goldcham.tistory.com/643>

17) 서초구청복합청사·GTX 환승센터 '양재권 상전벽해', <http://seocho.newstool.co.kr/view.php?eid=8631&aid=10016>

- 현금으로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소멸되도록 함
-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 택시운전자 및 택시회사의 수입 축소에 따른 반발이 발생할 텐데, 이 제도를 통해 택시 영업 소득을 일정수준 보전할 수 있음
- 대전 외곽의 기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비 지원 정책 집행을 요청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음
- 다만, 장기적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예산계획

○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 정책 결정만 있으면 되므로 현재로서는 예산계획이 필요 없음

○ 타슈 설치 확대

- 2021년도 예산 중 자전거 자재 등 구입에 3억원, 수선유지교체비 4,173만원이 수립되어 있음¹⁸⁾
- 대전시의 버스 정류장 수는 2,280 여 곳이며, 2021년도 1,000개의 거치대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1,000 개 거치대를 추가 설치하면 전체 버스정류장 수만큼 설치 가능함
- 따라서 자전거 자재 등 구입 3억원, 수선유지교체비 연간 4천만원 등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자전거 수량이 많아지면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해당 비용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반영하지 않음

항목	예산 (천원)	비고
자전거 등 자재 구입	300,000	2022년
수선유지교체비	40,000	기존 예산에 추가

○ 버스 공영화 및 노선 정비

-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 회사는 산호교통 외 13개
- 시내버스 완전공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버스회사 및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버스회사의 인수 비용 및 연간 운영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함

18)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50202_view.asp?g_seq=374

- 이에 따라 예산계획 수립은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는 것이 적절함
- 현 시점에서는 예산계획 수립 불가

○ 주요 거점 환승센터 설치

- 주차시설, 환승시설 등 건설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
- 현 시점에서는 예산계획 수립 불가

○ 교통 약자 택시 지원금 제도

-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17,047명이며, 이들에게 월 10만원의 교통약자 택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수립함
- 농촌 지역 교통약자 택시 지원금 대상은 약 5000 가구로 추산하고, 가구당 10만원의 택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함

항목	예산 (천원)	비고
65세 이상 택시 지원금	20,000,000	별도의 자원 마련 필요
농촌지역 교통약자 택시 지원금	500,000	별도의 자원 마련 필요

-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택시 지원금 지급 시 기존의 대중교통 무료 탑승 정책을 중단하는 것 고려 (재원 이관)
- 자동차 취득등록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 (교통혼잡세 개념)

□ 기대효과

- 교통 약자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교통 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동 역시 자유롭게 됨
- 도심 내 자유로운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주거환경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위치도 도시 내 넓게 분포될 수 있음
- 도시 곳곳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되므로 교육환경이나 문화적 경험이 증대될
- 도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도시의 미래 '새숨' 도시

오은규 대전시당 당직자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근혜정부 때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이 원조다. 2014년 선도지역 13곳, 2016년 33곳을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국정 의 핵심 과제로 삼아 사업 이름에 '뉴딜'을 추가했다. 사업 유형이 좀 더 다양해졌고 대상 지역도 크게 늘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50조 원을 전국 500개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22조 2,000억 원)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아닌 분산형이다.

* 모두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가 큰 것에서부터 차례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 있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도심부 재생을 위한 사업이다. 낡고 쇠퇴한 도심부를 재생하기 위해 큰 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처럼 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다.



▲ 5가지 유형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처음 사업 취지는 좋았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건설회사를 통한 전면적인 개발은 고려하지 않았다. 노후화한 원도심의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 적잖아서다. 기존 동네가 가진 장점들은 살리면서 낡고 쇠락한 부분 위주로 정비한다. 궁극적으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했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도심부 재생을 위한 사업이다.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은 모두 주거지에 적용되는 사업들이다. 집수리·리모델링 등 주택 정비 지원,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 빈집 매입, 주민 공동 경제 기반 시설 조성 등이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 동네 살리기)으로 추진된다. 규모가 작은 동네 살리기나 주거지 지원형 사업은 문재인 정부 버전의 ‘새마을 운동’이나 다름없다.

2. 도시재생 뉴딜 이상한 선정 기준… 부자도시 서울, 세종도 포함

그런데, 죽어 가는 원도심을 도시재생 사업이 되살릴 수 있을까? 쇠퇴하는 지역에 가뭍에 콩나듯 ‘짚뭇’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그 지역이 살아날까? 또 전국의 모든 쇠퇴 지역을 살리는 게 가능할까? 결코 아니다.

실상은 도시재생을 빙자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본질이다. 지방 예산 투입도 문제다. 뉴딜사업은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방비도 함께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다. 열악한 지자체 사정상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어렵다. 모든 쇠퇴 지역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공공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재정이 넉넉한 서울이나 세종시 보다는 지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019년 10월 8일,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76곳 중 서울에서 동대문구 홍릉 일대 사업 등 7곳이 선정됐다. 심지어 세종시까지 2018년 2곳에 이어 2019년도 2곳이 선정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의 수요를 반영했다기 보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노리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투자비 규모가 크거나 주변 파급효과가 큰 알짜 사업지역 2/3가 3선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였다.

부동산 개발업자 배만 불렀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혜원 국회의원이 부동산을 산 목포 뉴딜사업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투기 논란이 일었다.

3. 도시 재생뉴딜 사업은 지방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앞으로 지방의 지속 가능성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역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주장은 대략 네 가지로 모아진다. 요컨대 한정된 지역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지향점은 ‘단편적 시각에서 종합적 시각으로의 전환’이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야 할지,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으로 가야 할지, 그도 아니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역사·문화자산을 지역재생 차원과 연계할 때는 대상 지역을 점 단위에서 선과 면 단위로 확장해서 넓게 봐야 한다.

둘째, ‘보전적 관리에서 창조적 활용으로의 전환’이다. 물건도, 집안 정리도, 인생도 정리가 필요하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고치고 되살려 써야 할 것을 현명하게 골라내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마냥 울타리를 치기보다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활용해야 거미줄이 안 생긴다.

셋째, ‘일방적 관리에서 참여적 관리로의 전환’이다.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엇갈린 도시 재생은 늘 뜨거운 감자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돌아다닌다. 어린 학생들의 희망이 건물주라는 씁쓰레한 소식도 들린다. ‘닥치고 재개발’이 아닌 조화를 품은 도시 재생이야말로 중요한 화두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고 개발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획일적 관리에서 차별적 특화로의 전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문화자산을 잘 가꾼 성공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관련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결코 서둘지 않는 점진적인 투자와 추진’이다.

그래야만 ‘젠트리피케이션’(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공공 재원이 투입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상인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라는 괴물이 안 생긴다. 현장 전문가들은 효율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수 조절,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 및 사업유형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권한의 지자체 위임, 기금 및 회계 탄력 운영 등의 도시재생법 개정이 필요하다.

II. 첫 단추부터 잘못 꿰 도시재생 뉴딜사업

1.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대한민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91.8% 달한다. 국토의 95%가 사막이라 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 사우디아라비아(84%)와 비슷한 수준이다.(2018년 기준) 도시는 사람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

도시 쇠퇴를 부른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 원인을 따지면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일자리가 있으면 재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 도시재생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도시재생은 한 시기의 반짝 사업이 아니다. 도시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다. 1980년대 이후 재개발 정책이 생겼다. 부동산 값이 급등하자 노태우 정부는 88년 9월, 92년까지 200만 호 건설을 발표했다. 낡고 비좁은 달동네가 줄줄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21세기부터는 재건축 사업이 유행하면서 오래된 저층 아파트가 새로운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다.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 주는, 민요 속 두꺼비와 같은 역할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신해 준 것이다.

2. 대전 중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셀프 삭감’ 논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온전한 도시재생 작업이 아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사업 지구를 선정해 예산 투입이 이뤄진다. 우선 민간의 참여 유도에 필요한 법·제도적 인센티브가 미흡하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확보 지연, 관련 행정 절차 소요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곳간이 빈약한 지자체는 정부가 요구하는 ‘총 사업비 중 50%’를 부담할 수 없어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실제 대전 중구청은 열악한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업 예산을 줄여 신청했다. 2018년 말 확정된 중촌동 도시재생 사업의 총예산은 87억 9800만 원.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근린형 사업은 최대 2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와 견줬을 때 중촌동 뉴딜 사업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촌동 국비 지원 금액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3억 9900만 원을 투입했다. 관계 당국에서는 사업금액을 상향해 국비를 추가 지원받으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중구는 지방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가 챙겨 주는 국비 60억 원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셈이다.

중촌동 지역 뉴딜사업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비율로 사업비가 짜였다.(국비 4,399백만: 시비 3,079.3백만: 구비 1,319.7백만) 중구가 16억 8000만 원만 추가 부담할 경우 6.6배에 달하는 112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200억 원이 중촌동에 투입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중구에서 ‘매칭’(일정 비율의 사업비 부담)을 거부함에 따라 국비를 비롯, 시비까지 모두 포기한 꼴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촌동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사업지 중 전국 최하위 규모로 졸속 추진되었다.

뉴딜사업이 지역 경제 희생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 대부분 부분적인 구도심 복원과 환경 개선 사업 위주라서 일자리카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도시재생 사업에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

뉴딜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가 나머지 50%를 투입한다. 이처럼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대대적인 재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좌절되고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시비 매칭 사업의 매칭 비율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등 대부분 사업에 일률적으로 지자체 부담률 50%를 적용하지 말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최대 80%까지 늘려야 한다.

현장에서는 소규모 지역 도시재생에만 치우쳐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경제기반형 뉴딜 사업 등은 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다. 재정분권 없는 매칭사업 확대에 지방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민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모델 발굴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 경쟁력 제고 차원의 복합개발 방식이 병행되는 게 보통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민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 기능 재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도시계획 관련 특례 제공 등을 통해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학계나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해외 모범사례의 국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소규모 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복합개발 형태의 도시재생이 펼쳐져야 한다.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도시재생 사업은 아픈 곳을 찾아내 이를 치유하는 대증요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수도 없이 생겨날 것이고, 정부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4.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 권한 부여해야

첫째, 지방 중소도시들은 외곽 개발을 멈춰야 한다. 수도권처럼 외곽에 많은 수의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식의 성장과 팽창 중심 정책은 재앙이 될 뿐이다. 도시 재생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원도심을 황폐화시키는 도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부터 막아야 한다.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 원도심이 비는데다가, 신도시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진다.

둘째, 흩어진 도시의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야 한다. 그곳에 공공서비스도 집중하고, 광역 교통망으로 인근의 지방 거점 도시와 연결하고, 거점 도시는 중소도시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떠안아 주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 주거지에는 공공임대주택, 공원, 공용 주차장 등을 복합 개발하고 개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색을 무기 삼아 도시 체질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구 도심에는 창업공간과 주거기능 등이 어우러진 혁신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4차 산업, 6차 산업 관련 창업이나 창직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위치한 도시조차 다른 회생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강원랜드로부터 나온 직간접적 지원액과 세금 등을 합쳐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정선 태백 영월 등의 폐광 지역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주변 도시들은 여전히 침체 상태며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넷째, 가장 으뜸 과제는 일자리다. 무엇보다 중소도시에는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손질이 필요하다. 낙후된 지역에 스토리를 덧입혀 활력을 되찾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다. 네트워크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물리적 시설을 더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회생이 가능하다.

당그러니 주차장만 먼저 건설하고 담장에 벽화 정도나 그리는 물리적 시설만으로는 도시재생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도시재생 역시 스토리를 만들고 운영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갖추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대학과 병원 등 지역 자원,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합심한다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의 거대 담론을 넘어 ‘맞춤형 지방 재생’의 각론을 마련할 때다.

III. 역사와 문화의 웃을 입은 ‘문화적 도시재생’

1.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추억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80년대, 산업화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의 신산한 삶을 그렸다. 흥포하고 무지막지했던 철거와 재개발 광풍 속 힘없는 아버지의 존재는 ‘난쟁이’로 표현됐다.

도시의 가치, 지역의 가치, 공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멋진 건물, 편리한 교통, 높은 땅값만이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부일까? 왜 사람들은 서울의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로

오는가? 바로 현대적인 건물이 줄 수 없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성장은 시대의 얼굴과 같다. 도시 역시 사람처럼 생로병사의 순환 사이클을 겪는다.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 도시는 낙후되어 버린다. 가정의 난방 연료가 연탄이었던 시대, 강원도의 탄광 도시들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다. 하지만 석유가 주원료로 바뀌면서 탄광 도시들은 낙후되기 시작했다. 빛을 잃어 가던 도시를 되살려 내는 문화적 도시재생은 더 이상 새롭고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도시의 공간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한 번 없어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철거는 역사성과 그 장소에서만 드러나는 특별한 장소성을 파괴한다.

그동안 도시재생이라 하면 새로 건물을 올리고 길을 넓히거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계획을 세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치중했다. 이제는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자라난 유무형의 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해, 쇠퇴해 가던 도시에 다시금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2. 도시의 재발견, 오래된 공간이 부활하다

평생을 민족의 독립과 남북통일에 힘쓴 백범 김구 선생은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경제력도, 자연과학도 아니고, 인의와 자비와 사랑이며, 이를 키우는 것은 오직 문화”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문화와 스토리가 도시를 재생시킨다. 전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특화된 콘셉트를 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를 가보면 문화의 옷을 입은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얻은 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재생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 런던 템스 강 하구의 도클랜드 지역이 대표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와 슬럼화를 겪던 약 2200만㎡ 규모의 도클랜드 낙후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상업·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기능 도시로 변신했다.

낡은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 관광명소가 된 사례도 많다. 버려지거나 방치된 공장 등 도시의 흉물이 된 산업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시의 낙후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다. 미국 맨해튼 남동쪽 ‘피어 세븐틴’과 영국의 ‘테이트 모던’ 등이 그 예다. ‘피어 세븐틴’은 항구와 어물 시장으로 쓰이던 부둣가였다. 낡은 건물을 개조한 결과 해양 박물관과 레스토랑이 어우러진 공간이 됐다.

‘테이트 모던’의 경우 본래 화력발전소였다. 2차 대전 이후 공해문제로 문을 닫았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영국정부는 약 8년 동안의 대공사 끝에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다. 독일 뒤스부르크 ‘티센 제철소’의 변신은 더욱 놀랍다. 약 200만㎡의 광활한 대지에 버려진 엄청난 고철 덩어리는 친환경공원으로 변신했다. 뒤스부르크 시 당국과 시민들의 참신한 발상은 학습 대상이다. 스페인 빌바오는 네르비온 강변 재개발사업에 구겐하임 뮤지엄을 포함함으로써 쇠락한 옛 철강도시가 세계 관광 0순위로 떠올랐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면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도입하려는 많은 도시에 영감을 끼치고 있다.



▲ 곡선으로 리뉴얼해 사람, 생태, 문화를 살린 전주역 앞 ‘첫마중길’

3. 왜 문화적 도시재생이 화두인가?

역사와 예술, 생활에 기반을 둔 문화는 곧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문화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와 연결됨과 동시에 생태, 교육, 산업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도시는 단순히 건축물들을 한데 모아 놓은 공간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들이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눈을 돌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가 안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 전주에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이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길이 850m, 왕복 8차선이었던 황량한 도로의 차선을 2개 줄이고, 도로 중앙에 보행자 광장을 만드는 대대적인 사업이었다. 공사 초기부터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 전국적인 도시 재생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많은 지자체 벤치마킹의 모델이 됐다. 2018년 말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갖춘 ‘빛의 거리’로 탈바꿈했다.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을 지향하는 전주시의 상징 공간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재생은 지역브랜드의 확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이 된다. 전북 완주는 일제가 만경평야에서 생산된 곡식을 수탈하면서 세운 삼례 양곡창고를 문화예술촌으로 꾸몄다. 7개의 창고 건물을 미디어아트 전시장·활판 인쇄 체험장·갤러리·목공방 등으로 채웠다. 쌀 대신 문화를 담은 이곳은 덕분에 젊은 활력이 느껴지는 여행지로 거듭났다. 삼례문화예술촌은 문화예술시설을 접할 기회가 없는 군민을 위한 시설을 넘어 완주에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한옥·방앗간·양조장 등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이나 주민 공동 지역 특산물 판매장,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 경남 함양 개평마을은 한옥을 개보수해 종가음식 체험과 민박집으로 재탄생시켰다. 개평마을 일두 정여창 고택은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고애신의 집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 순천 ‘청춘창고’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한 세련된 인테리어

4. 감소의 시대, 지방에서 찾는 새로운 가능성

전북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에 흉물로 버려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거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남 순천시도 순천농협의 낡은 창고를 개보수해 청년들에게 빌려줬다. 시는 이들에게 6개월간의 창업교육을 시행했고, 최대 2년간 멘토링을 지원한다. ‘청춘창고’라는 이름으로 2017년 개장한 이곳엔 청년들이 개설한 점포 22개가 들어섰다. 지금까지 40만 명이 찾았을 정도로 순천의 명물이 됐다. 충북 청주에서도 농협과 공동 추진하는 유사한 ‘청춘공간’이 문을 열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에선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유휴시설은 충분하다. 전국에 농협 양곡창고가 3000개나 된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많은 창고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창업 초기 교육·컨설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귀농·귀촌 등 농촌 유입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전망이다.

전남 고흥 작은 섬 연흥도는 흔히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린다. 폐교를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지붕은 빨강과 초록, 파란색으로 단장했다. 담벼락은 그림으로 채워졌다. 마을 전체를 ‘예술의 섬’으로 가꾸고 있다. 그곳에서 쟁기질하는 농부도 그림 속의 풍경처럼 보인다. 지금 연흥도는 과거의 영화를 다시 꿈꾼다.

도시를 재발견하면 할수록 오래된 공간이 부활하고 있다.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은 켜켜이 쌓여 있던 공간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확보해 다시 사람 냄새나는 온기를 지피는 일이다. 세계 어디에나 있는 거대한 고층 빌딩은 아무런 스토리가 배어 있지 않다.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은 오늘날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문화적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쓸모를 잃고 버려진 산업시설과 근대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공간 개선 프로젝트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공간 업사이클링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타임캡슐이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공간 업사이클링이 개별 시설이나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용도 역시 보다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방에는 더욱 특별한 상상력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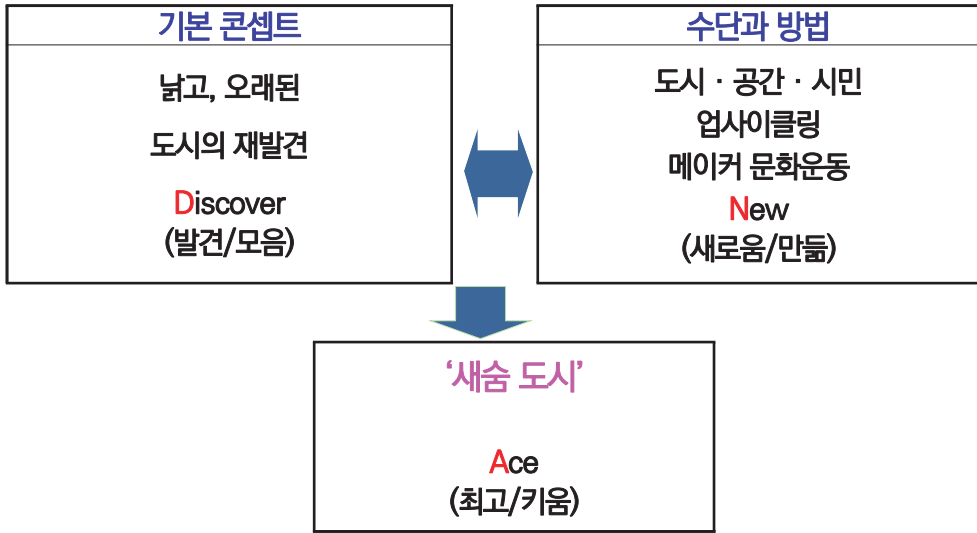


IV. 도시에 새숨을.... ‘새움 도시’의 가치와 철학

1.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변화

우리나라 도시정책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신규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늘어난 인구와 공간 수요에 맞춘 외곽 지역 신규 개발 중심의 도시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오히려 기성 시가지 쇠퇴가 중요한 도시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 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대신 보존과 쇠퇴한 도시기능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한편 도시성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했으나, 문화적 도시재생 개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회복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2. 도시에 새숨을... 원도심에 새숨을...

도시도 인간의 생로병사와 마찬가지로 흥망성쇠를 겪는다. 새숨 도시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즉 쉽게 말해 ‘도시에 새 숨을 불어 넣는 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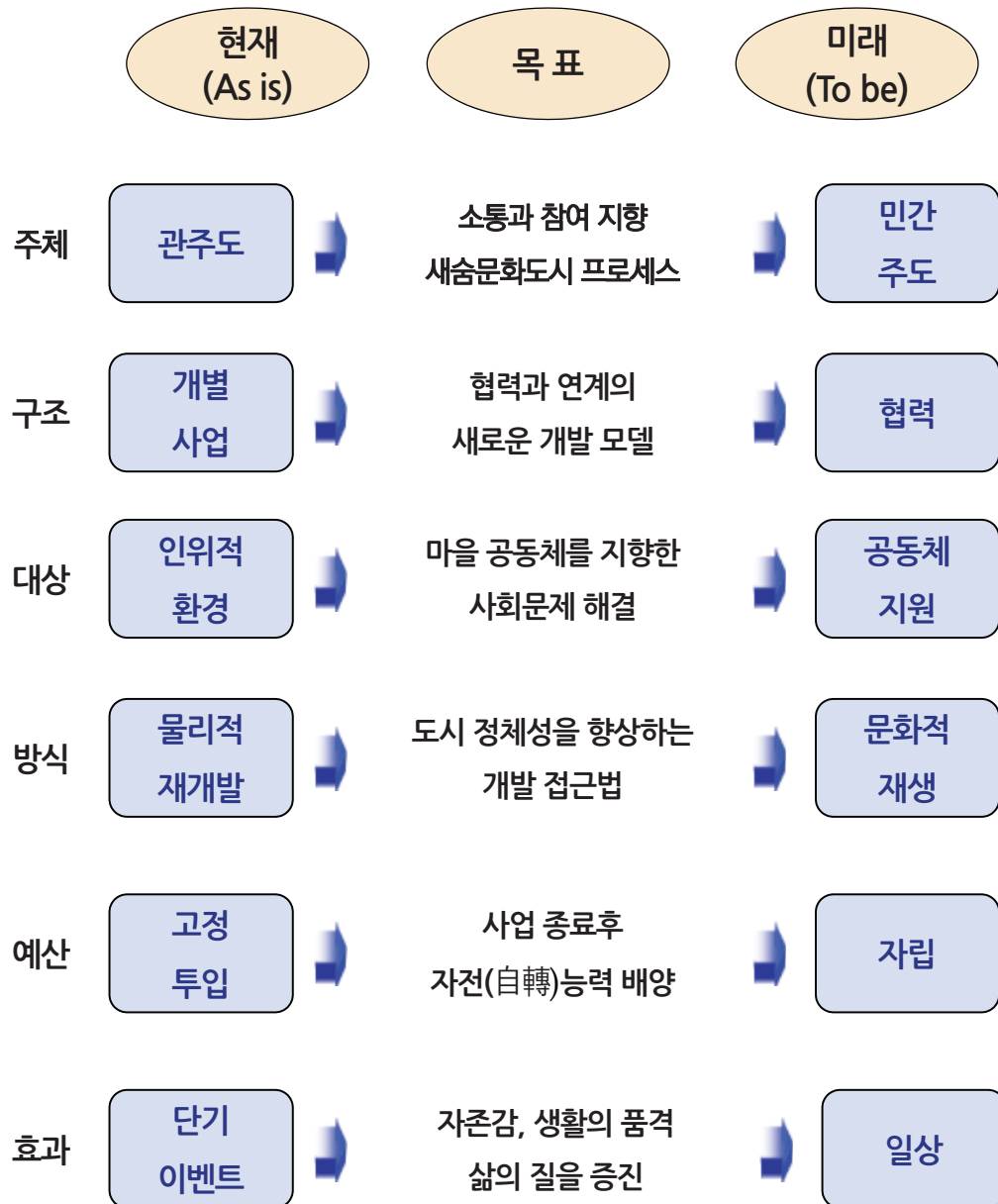
새숨 도시의 기본 철학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 환경을 되살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도시의 공간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지역 공간 및 문화자원의 ‘새로운 DNA’를 발굴하기 위해 ‘업사이클링’과 ‘메이커 문화운동’이 양대 축이다.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Recycling)의 합성어다. 단순히 재활용이나 소극적 업사이클링 차원을 넘어 도시, 공간, 시민의식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나눔의 개념을 실천하는 개념이다. 메이커(Maker) 운동은 디지털 시대의 ‘노마드’ 창조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모두는 만드는 사람들이다’ Do-It-Yourself (DIY)에서 출발해 ‘모든 사람이 메이커가 될 수 있다’(Zero to Maker)라는 문화 운동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새숨 도시는 주민 주도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도시 기능이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가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표] '새숨 도시'사업목표와 기대 효과

- (사업 목표) 낡고 오래된 도시에 새숨을... '새숨 도시'
- (사업 내용) 도시와 공간 업사이클링, 메이커운동 특화사업
- (사업 결과) 도시 공간의 재창조, 메이커문화 확산, 자원순환과 고용창출



새로운 청년의 등지 대덕

한종명 대전시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당직자

1. 대덕구의 여건

1. 기본현황

- (인구) 175,409명 * 대전광역시의 12.3% (2021년 04월 기준)
 - 남성 89,254 명, 여성 86,155 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송촌동이 27,628명으로 가장 많고 목상동이 7,051명으로 가장 적으며, 인구밀도는 km^2 당 2,600명임
 -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경우 50대가 33,32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 26,800명, 20대 24,379명의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신탄진동이 22.98km^2 로 가장 넓고 법1동이 0.77km^2 로 가장 작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27.92km^2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면적) 68.68km^2 * 대전광역시의 12.7% 차지하고 있음
- (행정구역) 12개 동(법정동 26개동)

2. 지역경제

- (산업구조) 제조업 30.3%, 도매 및 소매업 17%, 숙박 및 음식점업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3%, 운수업 7.1% 등 (2018년 기준)
 - 사업체수 18,131개, 종사자수 92,774명
- (지역내 총생산) 7.2조원 (2018년 기준)

3. 재정현황

- (예산규모) 총 4,569억원 (2020년도 예산)

- 2012년 2,743억원에서 2016년 3,930억원으로 약 9.4%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임

(단위:백만원)

세입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56,900	421,900	3,900	31,009

4. 주택현황

○ (일반가구수) 71,582 가구 (2018.06.30. 기준)

○ (주택수) 76,513호

(단위:호)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76,513	25,754 (다가구: 18,256)	40,639	2,501	7,619

5. 지역특성

-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과 동은 충청북도와 남은 동구와 중구, 서는 서구·유성구와 경계하고 있으며, 영·호남 교통의 분기점
 -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경부·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IC)가 위치
- 옛 회덕현의 주요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구는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을 갖춘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이며, 예로부터 충절과 도덕을 숭상하여 수많은 선비와 충신·열사·효녀·효부를 배출하였고 회덕향교·동춘당·계족산성을 비롯한 무수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한 한발 정신문화의 발상지
- 대전의 전 지역이 바라보이는 계족산과 대전시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있는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대전 경제중흥의 거점지
 - 대덕구의 가장 높은 산인 해발 423m의 계족산을 대청호가 휘감고 있고 대청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 기후의 경우 한반도의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덜 받지만, 여름은 북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류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시베리아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기류의 영향을 받아 저온 건조함
 - 대전산업단지 408개 업체, 대덕산업단지 38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대전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6. 낙후된 대덕구

-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및 영화관 조차 없는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구
예)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에는 대형마트 최소 2개 이상 영화관 최소 2개이 상
- 대전도시철도1호선(지하철)도 관통을 하지 않는 지역구
예) 유성구=7개역, 서구=7개역, 중구=5개역, 동구=3개역
- 대덕구의 가장끝자락에 위치한 신탄진 네거리 에서 대전시의 변화가 대전광역시청 까지
의 대중교통이용으로 소요시간은 약 53분(네이버 빠른 길 찾기 참조)

7. 새롭게 변모하는 대덕구

- 국가적으로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정
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
반도를 추진하고 있음
- 대덕구는 대전의 부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새
롭게 강화할 필요성을 느낌
-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
진과 더불어 대덕구의 발전에 동력을 얻고 있음

II. 청년의 새로운 동지 대덕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덕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1. 현황

- 대덕구 경제활동인구 유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육격차 문제임
- 대덕구 학생 수 41,719명(2013)→33,561명(2018) 감소, 동서 교육격차에 따라 학생과 함
께 경제활동인구가 유출
- 축소도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불가피 함

2. 정책목표

- 초등학교, 중학교 혁신학교 전환을 통해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변화
- 혁신교육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대전 혁신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동서교육격차를 점진
적으로 해소

3. 추진계획

- 대덕 혁신교육지구 적극 유치
- 초등학교, 중학교 혁신학교 전환 및 지역사회와 연계 체계 구축
- 혁신교육지원센터 유치,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동서교육격차 해소
- 혁신교육 성과 연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시너지 확대

4. 기대효과

-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통해 혁신교육 수요계층의 인구유입
-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적 혁신교육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4차산업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오정,대화지구 일대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

1. 현황

- 대덕구 청년 중 청년 창업을 선호하는 비율 41%
- 대덕구에 소셜벤처,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대덕구 공단 및 공구 상가 거리의 특수성을 활용한 특구 단지 환경 조성 필요

2. 정책목표

- 청년창업과 소셜벤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마련
- 지역사회 연관 경제효과 제고: 부자재 조달과 시제품 생산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구상가와 공구단지를 4차산업혁명 거리와 단지로 조성
- 대덕연구단지 등 주변 인프라를 청년창업과 소셜벤처 산업화로 확산
-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창업 문화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모범사례 창출
- 창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청년 친화적 이미지 구축
- 청년이 오고 싶은 대덕구 조성

3. 추진계획

- 오정동, 대화동 일대를 '4차산업 특구' 지역으로 지정

- 청년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 청년상공회의소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4차산업 청년창업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 청년창업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오정로 주변 4차산업 주거 융합형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4. 기대효과

- 청년창업과 소셜벤처 산업 육성으로 대덕구는 물론 대전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조세수입과 부품소재, 주거, 먹거리, 소비재, 여가문화 등에서 지역사회 연관 경제효과 발생
- 산학협력 대덕연구단지 인프라를 청년창업과 소셜벤처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하여 '4차산업혁명 특별도시 대전'을 대덕구에서 실현
-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전의 특화가로 구현

〈'더 좋은 일자리' 3,000개 창출〉

1. 현황

- (심각한 청년 실업률) 대전 실업률은 3.3% 수준으로 전국 평균 3.2%대비 소폭 높은 편이지만 청년실업률은 8.5%(2017년 4/4분기 기준)로 매우 심각한 편
-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대덕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3.09%(2018.4 기준, 24,268명)로 고령화 사회(인구비율 7~14%)에서 고령사회(14~20%)로 진입하고 있음. 고령화 속도에 대응해 노인일 자리를 마련해야 함
 - 2017 대전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대덕구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38.9%)로 나타남
- (더 좋은 일자리)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저임금 생계형 일자리 ▶ 대덕형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더 좋은 일자리

2. 정책목표

- 대덕형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사회적 기업 50개 설립
- 협동조합 25개, 마을기업 5개 설립
- 더 좋은 일자리 3,000개 창출

3. 추진계획

- 대덕구 생활임금, 더 좋은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제정
- 민·관 일자리 협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 전담기구 사회적 협동조합 ‘더 좋은 대덕(가칭)’ 설립
-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대덕구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가칭) 설립
 - 현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관내 주요 기업 참여추진
 - 민·관이 함께하는 워킹그룹 설치
- 사회적기업 50개 설립
- 협동조합 25개, 마을기업 5개(연간 협동조합 5개, 마을기업 1개 설립)

4. 기대효과

- ‘대덕형 더 좋은 일자리’ 3,000개 창출
-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지역 순환형 지자체 모델 선도
- 타 시·도에 민·관 협치 성공사례를 제시

사회적 질병 ‘고독사’ 법제화 이후 동구가 가야 할 길

임정서 일반당원

1 고독사 법제화, 변화의 첫걸음

① ‘고독사예방법’ 드디어 시행되다

- 그간 고독사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망자 통계에만 의존하는 등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됐음
- 고독사의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범국가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② 고독사예방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

- 제2조와 제3조에 고독사의 정의를 비롯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됨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여기에는 고독사 현황 파악을 비롯 예방 및 대응 등 단계적 정책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 및 발표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③ 고독사예방법 시행의 의의

-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 놓음으로써 책임 관계가 설정됨
- 그간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고독사 예방 정책이 법의 테두리 안

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시행 계획에 따라 민관정이 협력함으로써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관련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각 지자체별 고독사 대응 역량이 강화됨과 더불어 국민 인식 전환과 관심도 증가가 기대됨

2 통계로 본 노인 인구 분포 실태와 문제의식

① 멀지 않은 초고령도시 부산



- 매년 평균 3만명 가량 증가 추이 보임
- 올해 하반기 노인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면 7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② 독거노인 비율 1위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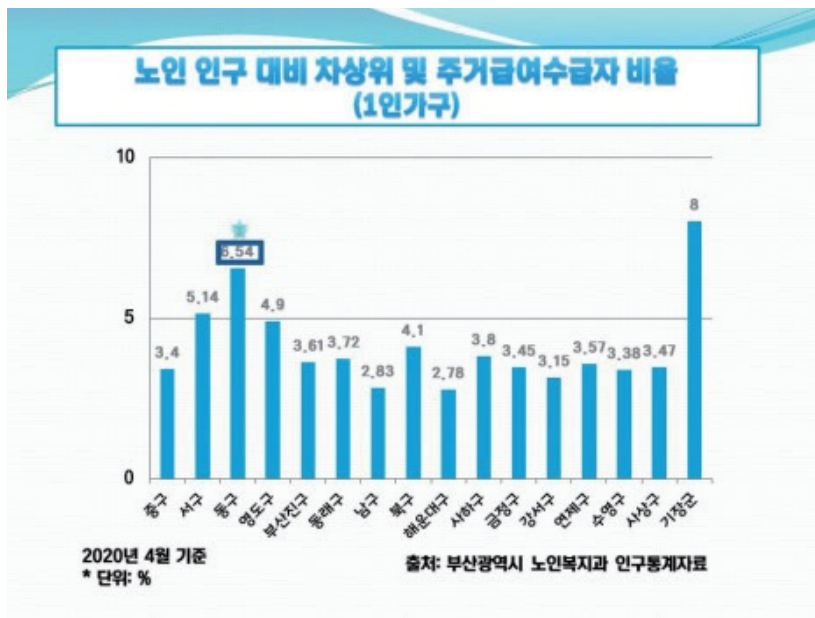


- 같은 해 6월 전국 비율 19.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
- 같은 해 6월 부산 비율이 28.4%인 것을 감안하면 동구(1위)와 복합 선거구인 서구(3위)는 매우 높은 축에 속함

③ 저소득층 노인 비율 1위 동구



- 원도심이 상위권에 자리한 가운데 동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동구의 현행 고독사 예방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만큼, 주목해야 할 지표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고독사 예방 필요성은 상호 연관됨



4 증가하는 1인 가구



⑤ 고독사 위험자가 갖는 특성



- 주거불안은 쪽방, 고시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의미
- 고용불안은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의미
- 관계단절은 경제적 이유와 이혼 등 전통적 가족 구조의 해체로 인해 발생
- 건강취약은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고립감 등 육체적·정신적 건강 취약을 의미
- 고독사 위험자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 불안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비자발적 고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7년 6월 12일 동구 단칸방에서 50대 남성이 사망 후 무려 석 달만에 발견되고, 같은 해 9월 6일과 7일에는 서구 여관(60대 남성)과 동구 초량2동 여관(50대 남성)이 발견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각종 대면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심화하고 있음
- 고독사는 사후 관리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생활 실태와 피드백을 반영한 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개편이 요구됨

3

쇠퇴하는 원도심 동구의 새 비전



- 데이터가 돈이 되고 힘을 갖는 시대, 디지털 복지 정책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육체 및 정신건강 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이미 SK, 카카오를 비롯한 IT 통신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AI 스피커, 웨어러블 기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축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로서의 상당한 가치를 지님
- 그러나 이를 확보해 관련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축적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림
- 축적된 데이터는 지역 내 관련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분야별 전통적 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됨
- 이로써 동구민과 부산시민의 선호 경향이나 만족도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시행이 가능하고, 이는 곧 건강하고 유의미한 삶으로 이어짐
- 지자체가 일방적·전통적·하향식의 사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지역민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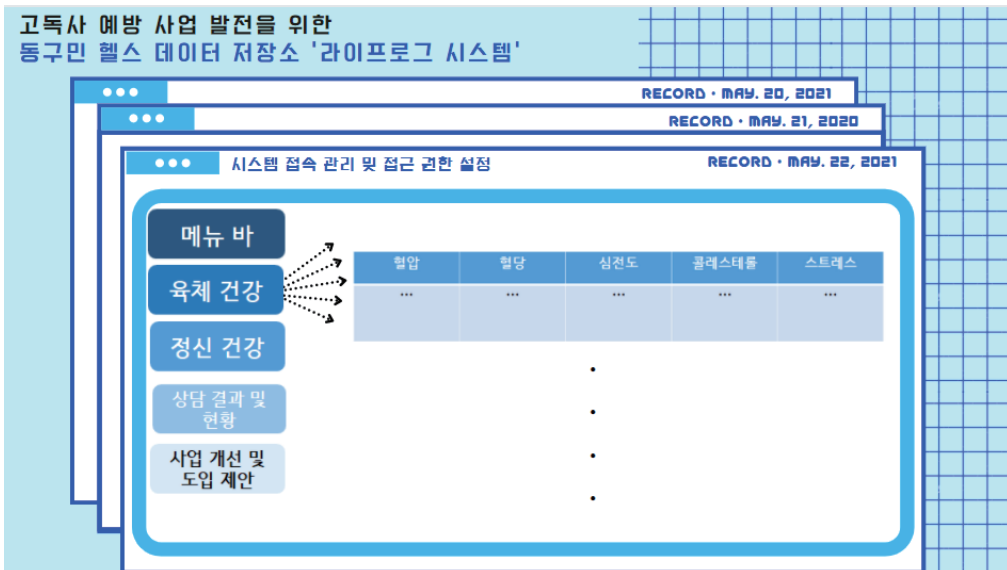
4 정책 현황 짚어보기

① 현황 짚어보기 - 동구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 실태

- 현재 관 주도의 고독사 예방 사업은 직접 물품 지급, 심리 상담,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건강음료 지원 △생필품 꾸러미 전달 △어르신 일촌 맺기 △밀반찬 제공 △해피콜 안부전화 서비스 △만들기 등 취미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시행 중임
- 사업 참여 주체는 △동구 희망복지지원단 △동 찾아가는 복지지원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찾아가는 마을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부산에서는 2019년 처음 시작됐으며, 짬짬방 주인, 고시텔 관리인, 음식점 배달부 등 생업과 병행 가능한 인력이나 소방관, 도시가스 검침원 등 공공 인력 위주로 임명하고 있음

5 나의 'PT 키퍼' 라이프로그(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 나의 'PT 키퍼' 시스템 구축 시 예상되는 실제 형태



① 업무 부담은 DOWN, 민간 협력은 UP!

○ 육체 건강 자가진단 및 빅데이터 기록

- IT 통신 기업과 제휴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해당 기업 클라우드에 축적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동구 라이프로그 시스템에 공유되도록 함
- 지정맥(손가락 정맥) 초기 등록 후 혈압·혈당·심전도·콜레스테롤·신장 상태·스트레스 수치 측정 가능
- 실시간 혹은 일일 데이터 전송으로 지역민 건강 상태 확인 후 필요 서비스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이 가능
- 복지 담당 인력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부터 기록, 저장까지 모두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수

○ 정신 건강 상태 관련 빅데이터 자동 기록

- IT 통신 기업에서 개발한 AI 스피커 사용
- 사용자들이 AI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정보를 주로 원하는지의 데이터가 저장됨
- 이 역시 기업이 동구 시스템에 공유함으로써 정신 건강 관련 복지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됨

② 시행 계획 알리고 전문가 자문 구하기 -“예산·인력 부족의 산을 넘어야”

- 동구 복지지원과 담당 주무관 인터뷰 결과,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자 발굴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주민등록 기준상 △1인 가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공단 재가 서비스 신청자
- 현재 쪽방 상담소, 마을건강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복지 사업 시행기관들은 대상자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데이터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대상자 관리 또한 아날로그 방식(유선, 방문, 민간 위탁)이 대부분이라, 향후 복지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움
-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한 곳에 축적하는 ‘동구 라이프로그 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의견을 자문한 결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나, 기존 복지 담당 인력들의 업무 과중, 예산 부족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 이로써 정책 실현 시 고려해야 할 필수사항은 인력 부담 최소화와 관련 예산 확보라는 결론에 도달함
-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 동구-스마트 헬스케어 기업 간 협약 체결
 - 자가진단용 웨어러블 장치 등 기업이 개발한 기기를 지역민들이 사용함으로써 자가진단

결과 데이터가 기업에 전송됨

-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대신 기업은 동구에 기기를 무상 대여 혹은 최소 가격에 제공하는 협약 체결
- 실제 S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기업들이 지자체와 'ICT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업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스템 접근 권한은 동구청 등 공공 기관을 비롯, 쪽방 상담소나 구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존의 공공복지사업 위탁 기관에 부여함
-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실시간 지역민 헬스 데이터 확인 가능
-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사업 개선 혹은 도입 제안 기회를 상시로 열어 주는 효과가 있음
- 단, 개인정보이므로 시스템 보안 강화와 상세한 사용 지침(매뉴얼) 구축, 데이터 제공자(구민)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필수적임

○ 나의 'PT 키퍼' 시스템 구축 시 예측 소요 예산

구분	항목	예상 소요 예산 ※타 지자체 및 지방재정 365 참조	비고
하드웨어 (장비)	· 자가진단용 웨어러블 장치 · 진단결과 기록용 스마트폰, 태블릿 · AI 스피커 등 기기 대여	· SK 자체 사업 <2019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30억 원 투입	
소프트웨어 (앱, 시스템)	· 자가진단 기록용 앱 · 데이터 저장소 역할의 '라이 프로그 시스템' 개발	· 보건복지부 <2021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 예산 1,981억 (총 41개 사업) · 동구 2021 사회복지비 예산 1,693억	
대상자 교육	· 어르신 대상 스마트 기기활용 교육 인건비	· 인천시 <2021 취약계층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 3억 원 배정	

- 단,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 하향식·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공모 및 조달 계획을 구축하거나, 별도 시·구예산 배정이 필요함

6 국가 미래 기여도와 기대 효과

- 전국적으로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복지 디지털화는 서울·부산만의 과제가 아님
- 초고령화 및 고독사 위기 지역의 복지 디지털화 성공 사례를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음
-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추세와 발맞춰, 공공 주도의 '적극 행정 실현'을 통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짐
- 일원화된 시스템 내에서의 데이터 관리로 복지 체계의 통합성을 높이고, 전체 노인 인구 중 사업 대상자 규모를 점차 늘려 감으로써 국민 이해도가 향상됨
-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 안정성이 높아짐
-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되면 복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대상자들의 정책 만족도도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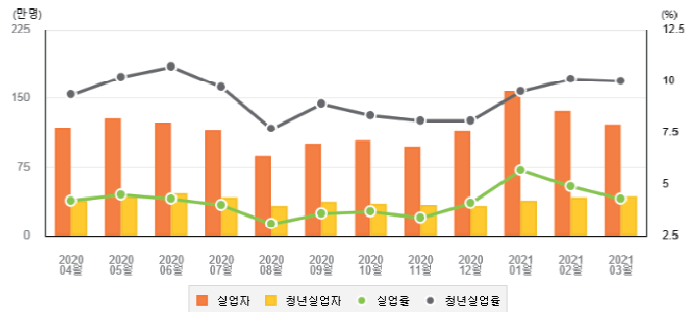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HI(Human Intelligence) 취업조정관

박정용 일반당원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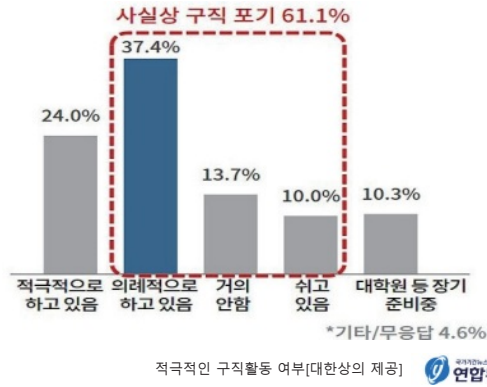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전체실업률은 5%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청년 실업률 10%**로 위험하다

- 전체적인 실업률은 5%로 안정되어 보이지만 장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0%로 위험함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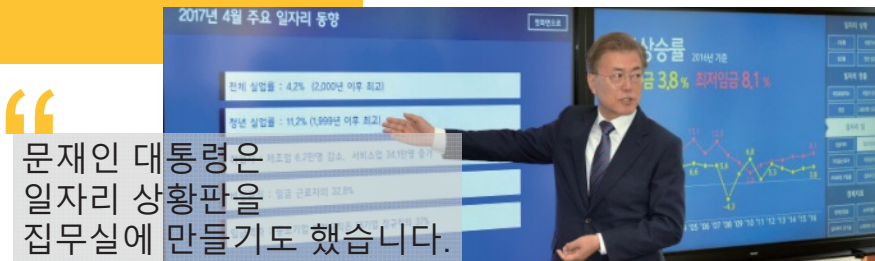
청년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47.4%)**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청년층 기회감소 (26.1%) **대학 졸업자 과다 (13.4%)**

- 청년들이 필요한 일자리는 장기적이고 필요한 일자리인데 시장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매칭하는 것도 어려움
- 기존의 구인영역에서도 훈련되어진 인력을 요구하고 있음
- 결국 훈련되어진 인력을 제공하고 또한 구직자들에게 합당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구직과 구인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일자리문제는
정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의외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시험 준비, 사실상 취업활동을 중단한 사람 등 실제 제각 실업률은 23.6%"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안 나오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를 보면 청년실업률은 34.2%에 달하며 이는 청년 세명 중에 한 명은 백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17년 5월24일 매일경제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 정부는 특히 이런 문제에 과거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기존의 제도는 다음과 같이 존재함

2. 기존의 제도

기존 구인 구직을 위한 제도



- 01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 인쿠르트, 사람인, 벼룩시장, 잡플래닛 등
- 02 **중앙정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잡알리오, 직업훈련포털 HRD-Net 등
- 03 **중앙정부 지원 정책**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제도 등
- 04 **자치단체 지원 정책**
서울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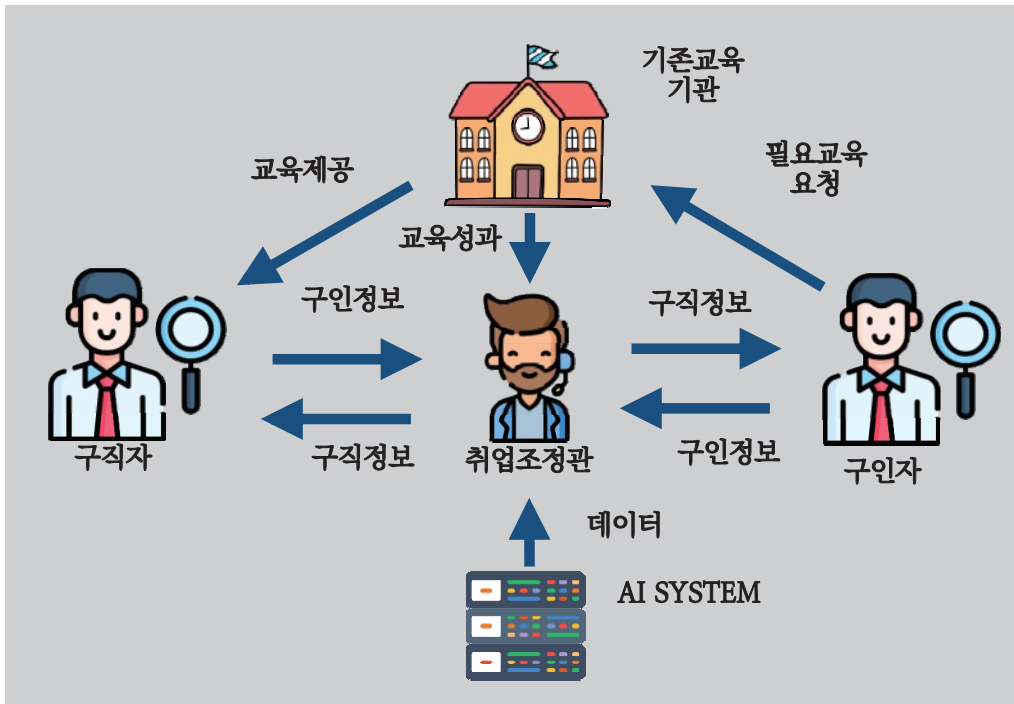
3. 기존제도의 문제점

기존 구인 구직 정책의 문제점



- 양쪽은 연계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은 수동적이고 비적극적인 형태로 한계점이 존재하였음

4. 제안정책의 개요



-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데이터화하여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 인력이 필요한 회사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구직자를 찾아주는 것을 데이터화하여 언제든지 접근하도록
- 기존의 구인 구직 사이트와는 다른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과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정관이 개입하여 일자리 조정을 해주는 플랫폼
-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인력이 개입하여 구직과 구인간의 개입을 통해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5. 정책실행방안

정책 실행 방안



6. 기대효과

기대효과

Expected Results

- 01 이직률과 실업률 낮춤**
구인과 구직이 단순 매칭 시스템 구조가 아닌 인간이 개입된 차세대 융합 시스템으로 보다 더 잘 매칭된 구인 구직으로 이직률 및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음
- 02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업조정관이라는 일자리가 만들어져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 가능함
- 03 4차산업혁명에 맞는 차세대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과 AI기술 도입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도입으로 현 직업 매칭 시스템의 개선 가능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서대문구 Ecosystem - 폐비닐 자원순환체계 구축’

차승연 서대문구의회 의원

Policy goal : 정책목표

- 서대문구에서 배출한 폐비닐을 선별하여 재활용한 제품을 다시 서대문구에서 사용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
 - ‘서대문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배출→수거→선별→1차처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 마련
 - 1차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펠렛을 2차 가공업체에 판매하여 만들어진 재활용 제품의 일정량을 서대문구에서 매입하도록 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 쓰레기 문제 해결, 재활용 제품 사용 활성화, 예산 절감 등의 기대효과로 서대문구 2050 탄소중립정책 실현

서대문구 자원순환체계 구축

서대문구에서 배출한 폐비닐을 선별하여
재활용한 제품을 다시 서대문구에서 사용



기대 효과

쓰레기 문제 해결, 재활용 제품 사용 활성화, 예산 절감 등



2050 탄소중립도시 서대문구

Problem : 해결하고 싶은 지역문제

- 정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¹⁾
 - 폐기물 발생 계속 증가, 경기침체·유가하락 등으로 재활용시장 침체, 폐기물 처리시설 포화 등 자원순환 쉼 과정에서 한계점 노출
 - 2021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원칙
 - 2022년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 2022년 지자체 공공책임수거 시행
 -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 서울시 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²⁾
 -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페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페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
 - 2020년 7월에는 전국 아파트에서, 2021년 1월엔 전국 단독주택에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의 혼합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저하: 페비닐이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되어 2차 오염, 선별장 처리능력 한계 등으로 잔재율이 50%에 달하고 페비닐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
 -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80%)은 높은 편이나 타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워 고품질 페페트병은 대부분 일본 등에서 수입: 국내 페페트병의 품질을 높여 페페트병 수입 최소화 필요

- ⇒ 서대문구 쓰레기 문제 해결 초점. 특히 ‘페비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제안코자 함.
 - 서대문구의 쓰레기 문제도 타 지자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쓰레기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자 생활실천이 필요한 사항
 - 더구나 201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는 서울시에 당면한 현안이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에 따라 해결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함
 - 서울시의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페페트병 재활용에만 집중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고, 평상시에도 사용량이 많았던 페

1)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0923. 정부 관계부처 합동

2) “2월부터 ‘비닐, 투명 페트병’ 따로따로 버리세요.” 서울시 2020년 01월 28일 보도자료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66482>

비닐의 재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도 시행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함. 따라서 '폐비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Current state : 서대문구 쓰레기 현황

▣ 생활폐기물 발생량(최근 5년)³⁾

(단위: 톤)

구분	계	일반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2016년	79,594	37,822	22,936	13,237	5,599
2017년	77,274	37,766	21,603	12,776	5,129
2018년	79,887	39,410	21,213	13,698	5,566
2019년	80,508	40,815	20,688	13,881	5,124
2020년	83,030	40,080	19,228	16,958	6,764

- 모든 쓰레기양 꾸준히 증가
- 특히 2020년 재활용, 대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띄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배달시장 확대, 인테리어 제품 판매 증가)
-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으로 처리되지만, 오염되거나 분류처리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도 있음

▶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려우며, 세밀한 분류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함

▣ 폐비닐 등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최근 5년)⁴⁾

(단위: 톤)

연도	반입량 총 계	폐비닐	종이류 (종이팩 포함)	플라스틱 (PET포함)	금속캔	유리병	스티로폼	기타 (고철등)	잔재물	비고 (계약업체)
2016년	13,237	7,223	320	361	533	416	180	-	4,204	현대자원
2017년	12,776	8,258	369	413	331	475	207	279	2,444	현대자원
2018년	13,698	9,733	440	487	390	560	244	329	1,514	현대자원
2019년	13,881	10,039	456	503	402	665	164	339	1,313	현대자원
2020년	16,958	4,384	2,767	2,442	548	775	193	1,399	4,449	금호자원

※ 혼합재활용품 반입에 따른 성상별 선별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재활용품 판매단가 추이, 업체별 시설장비 및 처리현황에 따른 주력 선별품목, 코로나19 현황 등에 따라 선별량 일부 차이 있음.(2020년 업체변경 : 현대자원 → 금호자원)

3)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

4)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

▣ 연간 폐비닐 처리비용(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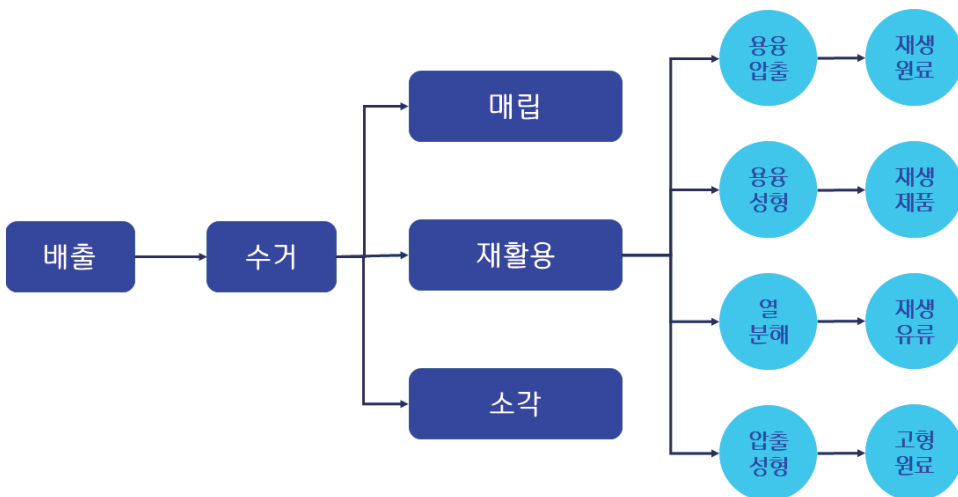
(단위 : 원/톤)

연도	재활용쓰레기 톤당 처리단가	폐비닐 발생량	폐비닐 처리비용
2016년	50,000원	7,223	361,150,000
2017년	58,000원	8,258	478,964,000
2018년	89,000원	9,733	866,237,000
2019년	118,000원	10,039	1,184,602,000
2020년	93,714.2857원	4,384	410,843,428

- 2020년 선별·처리업체 변경으로 폐비닐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서울시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잔재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선별·처리업체의 능력으로 보이며, 개선할 필요 있음. 그럼에도 잔재물량 증가의 주범인 폐비닐의 깨끗한 분리배출이 되어야 함
- 폐비닐 처리비용을 단순계산하면 최고 12억원 정도의 비용 투입됨. 분리배출하지 않았거나 오염된 비닐이 일반쓰레기로 혼입된 현실을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음.

Ecosystem : 세대문구 자원순환체계 구축

▣ 일반적인 폐비닐 처리 과정



- 수거된 페비닐은 보통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재활용을 할 경우 용융압출로 재생원료(펠릿), 용융성형으로 재생제품을 생산하거나,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류를 뽑아내고 압출성형으로 고품원료를 만들어냄

▣ 서대문구 재활용폐기물 처리 과정⁵⁾

○ 단독주택, 상가 및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 : 공공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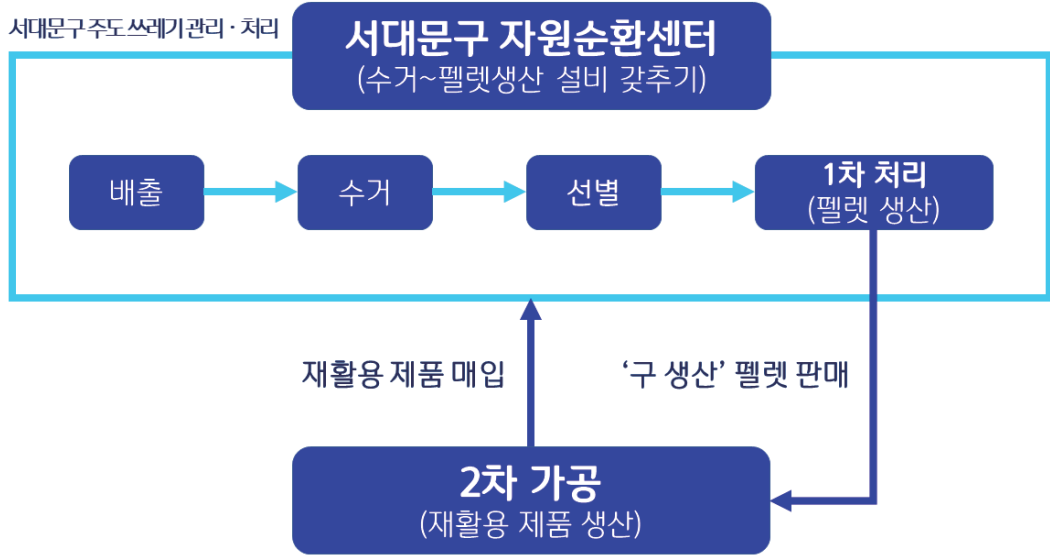
배출	수거	선별·처리
동별 배출요일에 따라 주 3회 수거	수집·운반 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구역 : 서부/ING/서울환경)	선별·처리업체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 구역 : 금호자원)
18시 이후 내 집 앞 배출	혼합재활용품 수거 후 선별업체까지 운반	- 혼합재활용품을 성상별로 선별, 잔재폐기물 처리 - 선별품목은 업체에서 압축 등 처리 후 최종 재활용업체 등에 판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환경부)」 등에 따라 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판매 계약

- 서대문구는 페비닐을 배출하면 수거업체(서부/ING/서울환경)가 혼합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처리업체(금호자원)에 운반하고, 이후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압축처리 후 최종 재활용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가 마무리 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면 자체적으로 재활용업체와 수거·판매 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수 있음
- 서대문구의 페비닐 처리과정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수거·선별·처리 비용), 재활용 판매로 인한 수익발생 대책은 없음
- 따라서 수거 및 선별·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는 생길 수 있으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분리배출에 대한 고려는 부족할 수 있음

5)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

▣ '서대문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제안



○ 서대문구에 수거~펠릿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자원순환센터 건립

- 관내 발생 쓰레기(폐비닐)를 대행업체(수거/선별·처리)를 통해 처리하기보다 서대문구가 종합적인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처리할 필요가 있음.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책임에도 부합하는 방향
- 첫 번째 과제로 폐비닐 처리에 집중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갖추고, 다른 쓰레기 처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대문구 (폐비닐) 자원순환센터'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한 후 용융압출로 재생원료인 '펠릿'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자원순환 원스톱체계 구축



○ 서대문구와 2차 가공업체(재활용 제품 생산) MOU체결

- 서대문구 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제품의 원료가 되는 ‘펠릿’ 생산까지 하고, 2차 가공업체에 판매하여 재활용 제품이 생산되도록 함
- 폐비닐을 재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활용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재활용제품의 경우 판매처가 불안정하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라인을 각각 둘 수 없으므로, 서대문구는 1차 펠릿 생산까지만 하고,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서대문구 생산 펠릿 판매
- MOU의 내용은 2차 가공업체가 구매한 서대문구 생산 펠릿으로 만든 재활용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서대문구에 조달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서대문구에서 활용 가능한 폐비닐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도록 업체와 협의할 수 있음

※ 폐비닐 재활용제품 예⁶⁾

- 우리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라면봉지, 빵 봉지, 일회용봉투 등의 비닐(필름) 포장재는 가로수 보호판, 수출용 합지박, 인삼 지주대를 비롯한 토목, 건축 자재 등의 성형제품으로 생산 가능



6) 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171109 재활용제품 카탈로그



○ 현실적 가능성

-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과 수거·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경우, 관내 부지를 확보하여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 지하수 사용 여부, 폐비닐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설비가동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반대가 예상되므로 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님
- 쓰레기 처리 시설의 지하화, 집진기 등 문제해결 설비의 발전 등으로 문제 발생 최소화 방안은 있음. 또한 여러 사정으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관내 적합한 부지도 있음

Effect : 기대효과

“ 서대문구에서 배출한 폐비닐을 재활용한 제품을 다시 서대문구에서 사용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 ”

○ ‘친환경도시 서대문구’ 위상 확립

- 쓰레기 정책 민관협치 가동
 - 배출을 줄이고, 잘 분리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민관협치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 자원순환 홍보관 및 현장 교육장 운영
 - 폐비닐 선별과 펠릿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자원순환 필요성 체감
 - 폐비닐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률을 수치로 알 수 있는 현황판 제작
 - 다양한 폐비닐 재활용제품 소개로 재활용 필요성 강조

○ 구 책임 자원순환체계 구축

- 매립 쓰레기양 감소 및 자원 재활용률 상승
- ‘재활용쓰레기 수거중단’ 등 주민 불편문제 사전예방

○ 자원순환경제 효과 발생

- 지역 일자리 창출
 - 분리배출 관리, 수거, 선별·처리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 일자리 발생
- 펠릿 생산비 감소
 - 쓰레기 유통거리가 짧아지고,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해서 펠릿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음
- 제품생산업체와 winwin전략
 - 구 생산 펠릿 판매처 확보, 업체는 재활용제품 수요처 확보
 - 일반제품과 재활용제품 사용차액에 따른 비용 절감

Essential point : 올바른 분리배출

- 비닐 사용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최소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꼭 필요함
- 특히 음식물 접촉이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낸 후, 부피를 줄여서 투명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일에 내놓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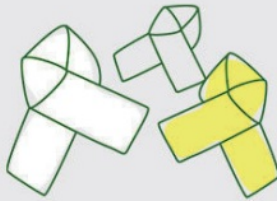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비닐 분리배출법



비우고 행구기



부피 줄이기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출처 : 한화토탈 공식블로그 <https://hanwhatotal.tistory.com/433?category=851449>〉

참고자료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0923, 정부 관계부처 합동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225, 환경부(폐자원관리과)
- “2월부터 ‘비닐, 투명 페트병’ 따로따로 버리세요.” 서울시 20200128 보도자료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66482>
- ‘고양시 자원순환센터 설립 사업제안서’, 2020년 12월, 고양시 재활용협동조합
- ‘Wannabe 성동, 생활계 폐비닐 순환생태계 구축방안’
- 뉴스핌 2020121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18000630>
- 한화토탈 블로그 <https://www.chemi-in.com>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료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2025년 우리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황선화 성동구의회 의원

1. 정책의 필요성

2018년 지방선거가 시작될 즈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수거가 안 된 쓰레기들은 도시 미관을 해쳤고 악취를 진동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자체 처리하지 않고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컨테이너에 담아 보냈습니다.



PPT 자료 20,21P. 개발도상국에 버려지는 쓰레기



PPT 자료 20P. 쓰레기와 함께사는 개발도상국 바세코



PPT 7P. 쓰레기물로 머리빗는 중국의 소녀

2018년 1월부터 중국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0% 이상을 수입했던 중국의 결정은 환경을 위한 조치였고, 이에 따라 거부당한 쓰레기 컨테이너들은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향했습니다. 2018년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PPT 5P. 중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중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한편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인천이 2025년부터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2025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면 서울과 경기도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우리 서울의 쓰레기, 우리 성동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PPT 9P. 인천 '한도초과'

2. 정책의 목적

유럽,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은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거부 이후 대체지로 인도, 이집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서 대안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 수입 2위인 인도의 수입량은 중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PPT 12P. 대체지로는 대안이 안 됨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스마트 서울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만큼은 회피하고 떠넘기는 비겁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웃 도시에 버리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쓰레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죽은 고래 플라스틱 1000조각

이젠 우리의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성이 가려져 있지만 한편으론 쓰레기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PPT 10P. 매년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2025년 이후 우리는 우리의 쓰레기를 어떻게든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정책제안

서울의 쓰레기 중 약 1000t 가량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일 묻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4개의 소각 에너지 시설에서 2200톤가량이 소각처리 되고 있으나 연한이 오래돼 효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노원 소각장과 양천 소각장은 노후화로 10년~15년 이후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하루에 1200t 처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PPT 16P. 서울 자원회수시설 현황

게다가 2025년 이후부터는 쓰레기를 통으로 땅에 묻는 **직매립은 금지될 예정입니다.**

엠티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산업의 발달로 쓰레기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내 쓰레기처리량의 증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심 속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사실상 매립 방식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독일과 룩셈부르크, 스웨덴과 핀란드 등에서는 매립 비율을 1% 이하로 유지하며 더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옆 나라 일본 역시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된 최소한의 재만 묻거나 이조차 에코시멘트로 만들어 친환경 보도블록을 만드는 등 자원순환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매립을 줄이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도심 속에 소각 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PPT 24P. 코펜하겐 아마게르바케 소각장

코펜하겐 도심 옆에 있는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이 스키장과 암벽등반 시설로 조성된 것은 유명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랜드마크인 슈피텔라우는 궁전처럼 지어진 소각장 건물입니다. 유명한 건축예술가가 아름답게 건축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습니다.



PPT 25P.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일본은 1000개가 넘는 소각시설이 있고, 상당수의 소각장이 구청이나 시청 바로 앞에 있거나 도심 속에 주택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설의 기술적 수준도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제한된 영토에서 지속 가능한 쓰레기처리의 해법은 소각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 도시들 역시 한때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이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반대 시위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당국과 정치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시민들과 공론장을 열어 처리시설과 공존을 위한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정보공개와 시설 운영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소각 에너지시설 운용을 통해 열과 난방, 전기 등의 혜택이 지역 주민이나 지역공동체에 쓰이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이곳을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내에 소각 에너지시설 기반을 갖춘 채, 개발도상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와 에너지 공급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각장 외교, 쓰레기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부, 환경부, 자이카(jica) 등 국가 부처가 나서 외교의 일환, 산업의 일환, 국제원조의 일환 등 여러 명분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자국의 소각 에너지시설 건설과 운영, 선진적인 쓰레기처리 시스템 등을 이식하며 발판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나서서 설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닫는다면 미래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결과만을 남겨 주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대응은 어쩌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대, 최고의 친환경적 소각 에너지시설이 도심 중심에 필요합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민들에게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쓰레기 처리와, 에너지 생성이라고 하는 그린 뉴딜의 기조에 부응하고 보조적 수단으로 재활용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실을 알리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20세기 최고 반전의 역사를 쓴 스마트한 서울이 21세기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귀감이 되는 정치는 미래를 걱정하고 지금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도전의 정치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미래 또는 해결될 토대를 남기는 편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서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담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PPT 29,30P. 쓰레기 책임 행동 연대 구성

4. 실천 방안

-도심속 소각장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5번째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청지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넘비에서 핼비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해외에도 좋은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남시가 갖춘 소각장이 좋은 예입니다. 하남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50%를 처리하는 하남의 소각장은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및 하수처리장을 모두 지하에 둔 최첨단 시설입니다. 시민들은 소각장 위 잔디에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며 삶의 여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곳이 되었으며 하남의 가장 살기 좋은 동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4년 하남시는 현재와 동일한 소각장을 더 짓습니다. 2025년이 되기 전에 하남은 자체 쓰레기 100% 처리가능한 도시가 됩니다.



PPT 27P. 유니온 파크

서울에서도 하남처럼 기초단위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면 좋겠지만 부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클수록 효율이 높아지기에 광역단위의 도심속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이 되기 전 부지를 찾고 하남처럼 지하시설로 소각장을 만들고, 소각열로 음식을 건조하여 사료를 만드는 시설과 재활용선별장과 하수처리장을 겸비한 완벽한 시설을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산 미군기지를 제안합니다. 이미 기름유출로 정화 작업으로 공원이 멈춰 있습니다. 하남처럼 지상에는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PPT 28P. 기름 유출된 용산 미군기지

5. 기대효과

도시의 쓰레기를 다른 도시로 떠넘겨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불가피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소각에너지발전소를 통해 그린뉴딜시대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뜨거운 물과 난방도 텁입니다. 해외의 사례처럼 주변의 수만 가구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수 있고, 일부의 전력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서울, 자원순환도시로의 비전을 서울에서 실현하고,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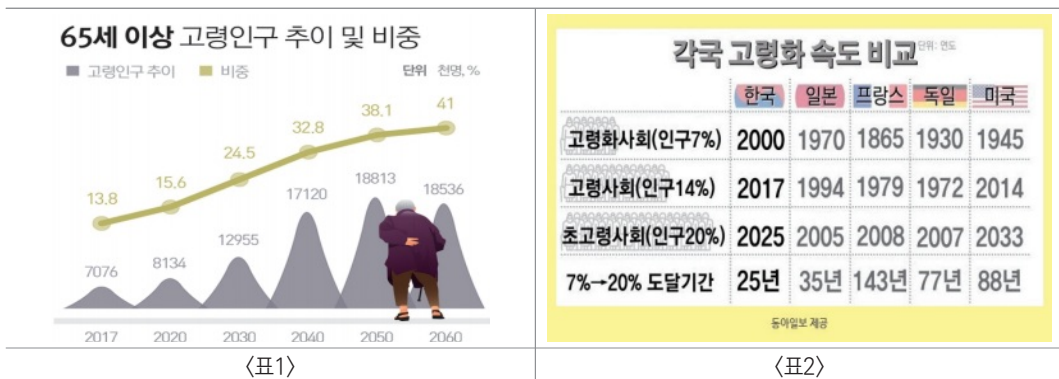
김효숙 일반당원

- 정부 노인일자리아사업 예산 꾸준히 증가…수요조사 통한 맞춤형 일자리 양성
- 단순노동 벗어나 일의 연계성, 전문성 존중해주는 다양한 일자리 증설 필요
- 특화된 ‘시장형’ 일자리 확대…노인생산물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대안 마련

1. 대한민국, 4년 뒤면 초고령사회 진입

전 세계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급행열차를 탔다. 합계출산율이 낮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한국 역시 4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현재 한국은 전체인구의 15.7%(812만명, 2020년 기준)가 65세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표1 참조>

옆 나라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20년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945년부터 1948년에 태어난 일명 ‘단카이세대’가 초고령사회의 주축으로, 독거노인 고독사부터, 노인들만 사는 초고령화 마을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닥친 고민들을 이미 직면했고, 법적정년 65세 고용보장, 실버인재센터 운영 등 국민 대다수에 달하는 노인들을 위한 구체적, 현실적 정책을 모색 중이다. <표2 참조>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 또한 노인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노인의 삶 역시 2-3배 길어졌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해도 61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떠들썩하게 열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 2018년 OECD 평균 기대수명(80.7세)보다 더 높은 82.7세다.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신(新)중년, 꽃할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표3 참조>

이 같은 현실에서 ‘61세는 곧 은퇴’는 개인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말 그대로 건강한 노인, 신(新)중년이 매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기를 60대 초중반으로 고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것이다.



<표3>

2. 일하는 노인이 행복하고,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일하는 노인’이라는 패러다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1946년-1965년생)의 일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은퇴’라는 개념은 없어 진지 오래다. 61세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기대수명이 70-8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연금에만 기댈 수도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재산이 넉넉한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없이 지내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나도 길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 4명 중 3명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통계청, 2020년 고령화 통계), 65세 이상 고령층의 31.3%(2019년 기준)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빈곤율은 43.8%(202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기사4 참조>

이투데이 로그인 회원가입 속보알 구독신청

경제 경제 정책 일반

경제 > 정책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입력 2020-10-14 05:00 | 수정 2020-10-14 12:40
세종=김지영 기자 [구독하기](#)

비취업가구 감소 114만원... 비노인 비취업가구 절반 수준

노인(65세 이상) 가구 구성비

비취업 가구 65.4%
취업 가구 34.6%

총자산 상위별 상대적 소득수준
(연령 및 노인 빈곤 가구 가계 소득 100으로 환산)

양극화 가구	38.0
일중근로자 가구	35.9
저임가구	29.0
비취업 가구	28.2

한국 사회에서 가구 양극화는 사실상 노인(65세 이상) 가구 양극화의 문제다. 소수의 부유·빈곤층과 다수의 중산층이 있는 비노인 가구와 달리, 노인 가구에선 빈곤층이 절대다수다.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

많이 본 뉴스 >

<기사4>

이렇듯 생계를 위해, 삶의 활력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소통을 하며 보람을 느끼기 위해 등 각자 상황과 바람은 다르지만, 은퇴 후에도 적절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 노인들의 바람이자 현실이다.

한창 일하던 시절처럼 매일 8-9시간 근무가 아닌, 노인의 노동생산력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 배분은 노인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 건강을 지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기대되는 역할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3. 신노년세대에 맞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절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노력과 투자가 중요하다. '은퇴 후 또 다시, 일'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는 등 노인일자리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30조600억 원 편성, 102만8000개 일자리 공급 예정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5.5% 차지한다.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78만5000명(76.4%)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 규모는 매해 늘어나고 또 비용도 큰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공공근로 형태인 단순 노무직에 그친다. 단순 노무직도 일의 강도나 업무 영역이 각기 다르지만 활동비는 1인당

월 27만원 이내, 부대경비 1인당 연 18만원으로 똑같이 고정돼 있다. 같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다 쉬운 일 쪽으로 몰리는 단점이 발생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2020)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노년세대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잠재적 수요집단은 노동시장 지위, 소득 수준 및 건강 등을 고려해 노후에 일하거나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이때 직접 수요 집단은 잠재 수요 집단 중 은퇴 후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봉사활동 또는 소일거리를 원하는 집단으로 분류한다.

조사 분석 결과, 잠재적 수요집단은 신노년세대의 25.1%였으며, 직접수요 집단은 10.5%였다. 이를 인구추계에 적용하면 2019년 노인일자리수요는 117만명이며, 이중 신노년세대는 43만8000명에 해당된다. 이들의 근로생애 특성을 확인한 결과, 일자리는 사무직과 서비스판매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 농림어업, 기능기계조립, 단순노무직 비율을 감소한다.

이렇듯 신노년층의 은퇴 후 일자리에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의 대다수가 단순노동에 그치는 공익활동에 그치면서 정부의 정책이 욕구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4. 세종시 노인일자리사업 현안은?

2021년도 세종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국비 58억7000여 만원, 시비 58억9000여 만원, 총 117억640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업은 주로 참여노인 활동비 및 수행기관 부대비, 전담인력 인건비로 현재 3,300명의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표5 참조>

4

세종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
- (사업예산) 11,764,073천원(국비 5,871,996천원, 시비 5,892,077천원)
- (사업량) 3,330명

(단위 : 명)

연도	유형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2021년(A)		3,330	2,700	280	120	230
2020년(B)		3,030	2,400	200	230	200
증감(A-B)		300	300	80	△110	30

- (사업내용) 어르신 활동비, 수행기관 부대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 (참여자 선발 기준)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업알선형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일부 만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등

〈표5〉

수행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59개 사업단이 운영 중으로, 이중 37개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12개, 시장형 8개, 취업알선형 2개 등이다.

공익활동의 경우 ▶취약노인 밑반찬 배달 및 안부 확인하는 노노케어 ▶지역내 환경정화 ▶스쿨존 교통안전도우미 ▶학교 급식실 보조 ▶주정차관리지도 ▶금연홍보도우미 등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집 또는 보육시설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내 장남감 정리 및 소독활동 등이다,

시장형은 ▶어린이집, 유치원 공연 꽃노인밴드 ▶반찬제조 판매하는 맛있는 부엌 ▶수영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 ▶도서판매 단지 내 택배배송 ▶커피 등 음료제조판매 등이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사회서비스형을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이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단순일자리인 공익형이 사업전체에서 63%에 달하는 등 다각화,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5. 지역 특화된 '시장형사업' 확대 필요

세종시는 현재 총 8개의 시장형사업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맛있는 반찬을 파는 반찬가게를 운영한다. 서점에서 도서를 판매하고, 커피 등 음료를 제조하기도 한다. <사진6 참조>

시장형은 연간 월 267만원, 한 달이면 23만원의 부대경비를 지원받고 매출에 따라 이익금을 받는다. 일주일에 두 세 차례, 하루에 4-5시간씩 근무하고 한 달이면 많이 받는 곳은 60만원 가까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 참여하는 노인들은 일할 의욕이 넘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사업단마다 20-30명씩 밀려 있는 상태다.



꽃노인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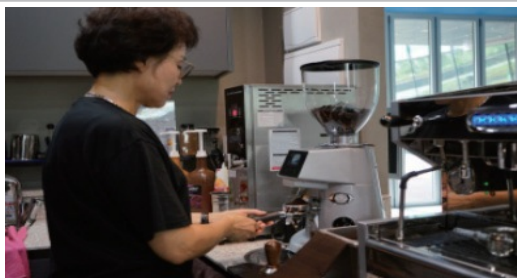
맛있는 부엌



매일씩씩사업단



세종익책방 집현



콩카페 새롬점



콩카페 보람점

〈사진 6〉

하지만 시장형 사업 대다수가 공간 및 사업 아이템에 따라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총 활동인원이 2000명이 넘는 공익활동과 달리 시장형은 112명에 불과하다.

정윤경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은 “전주는 한옥마을 내 백반 및 막걸리를 파는

주막인 '천년누리봄'을 운영 중이고, 전북 완주는 로컬푸드는 활용해 슬로우푸드 레스토랑을 2호점 까지 열었다"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만의 시장형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 다양한 욕구 충족하는 전문적 일자리 매칭 중요

신노년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문일자리파견사업의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노동에 그치는 업무 외에 다양성 추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직, 통번역 등 외국어, 페인트 등 기술직, 의상디자인 및 수선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해 왔던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

일찌감치 노인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정부 지원으로 실버인재센터가 전국에 설치됐다. 일본 실버인재센터 운영 60세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공공, 민간, 개인 등 일손이 필요한 곳 센터의 사업영역도 아동 돌보거나 등하교 지원부터 배달, 건물관리, 지역특산물 제조, 대필, 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세종시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은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로 취업알선형 사업으로 시니어 슈퍼파워사업단(SSP)을 운영해 현재 230명이 취업했거나 구직활동 중이다. <사진7 참조>



<사진 7>

인근 지역인 대전에 연구단지가 밀접해 있는 특수성을 활용해 은퇴자 및 노령경력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종 연결을 해주고 있다. 협회는 세종 331개사, 대전 298개사, 충남 172개사, 기타 54개사 등 총 855개사를 과학기술 및 R&D 등 관련업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노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및 세종형 노인 적합 직무 모델 개발 중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CEO포럼, HRD혁신클러스터위원회 등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은퇴자를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민·관의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7. 도농복합도시특성 활용한 노인일자리 및 놀이 공간 제안

세종시는 현재 읍면동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다. 신도시를 제외하고 조치원읍 등 1개의 읍과 전의, 전동, 소정 등 총 9개의 면지역으로 구성됐다.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많은 인구가 신도심으로 빠져나가 원도심 공실률이 높고, 유희공간이 많은 편이다.

세종시는 다수의 유희공간을 활용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조치원에서 폐공장으로 방치됐던 한림제지 공장터를 청년의 창업과 놀거리, 볼거리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이처럼 청년뿐 아니라 매해 늘어나는 노인층을 위한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노인층의 창업과 시장형사업의 이용 공간이 마련되고 더불어 노인층의 건강과 사교, 휴식과 소통 등을 위한 공간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종시 조치원에 거주하는 명석근 님(75세)은 “아파트에 노인정이 없어지고,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며 “오전에 3시간 교통도우미(공공근로 노인일자리)를 하고나면 조치원역사 앞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무료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노인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곳에 일하는 노인을 위한 거점마을건강센터를 운영,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의 은퇴한 의료 인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또 다른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다

른 장점은 일하는 노인의 꾸준한 건강체크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노년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잘 반영된 로컬푸드직매장(세종싱싱장터) 내 노인생산물 전용 판매 코너를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읍면지역에서 ‘생산’하고, 곧바로 도심에서 ‘판매’ 및 ‘소비’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 단위로 고령농업인 등이 참여한 농업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지면, 공동 경작 및 상품 제작을 통해 비용 및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생산품의 홍보와 디자인 등은 지역 내 대학생(청년)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은 물론 청년 일자리카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 노인생산물우선구매 조례 제정

위의 제안처럼 노인생산품이 만들어지면, 소비가 촉진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바로 노인생산물우선구매제도 도입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대상자는 장애인과 여성이다. 장애인제품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개정돼 17년차를 맞이했으며, 제품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됐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2019년 6488억 원에서 2020년 7024억 원으로 536억 원(8.3%) 증가했다. 이는 총구매액 62조8356억 원 중 1.12%를 차지한다. <표8 참조>

2020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7,024억 원, 우선구매율 1.12%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총 구매액	우선 구매액(A)	구매 비율(a)	총 구매액	우선 구매액(B)	(%)	우선 구매액(B-A)	구매 비율 (b-a)
합계	570,285	6,488	1.14	628,356	7,024	1.12	536	Δ0.02%p
국기관	95,751	1,285	1.32	119,660	1,375	1.12	110	Δ0.11%p
지방자치단체	144,049	1,320	0.92	163,900	1,503	0.92	183	0.00%p
교육청	72,256	685	0.95	65,912	732	1.11	47	0.16%p
공기업등	255,658	3,205	1.25	282,259	3,401	1.20	196	Δ0.03%p
지방의료원	2,371	13	0.54	2,625	13	0.48	0	Δ0.03%p

2020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자료=복지부)

여성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일정비율이상 (물품·용역: 구매총액 5%/공사: 구매총액 3%) 구매하여야 합니다.

경쟁력제고, 판로 확대

<표 8>

여성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도 실행 중이다.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가 구매필수로 법제화된 상태다.

제도의 안착에 따라 이제는 노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도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기업이나 노인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로, 이는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조례로는 ▶노인생산품에 관한 시책마련 및 우선구매대상기관으로 관내 공공기관 선정 ▶특별법에 따른 노인생산품에 관한 우선구매 이행 계획 및 이를 촉진하는 근거마련 등이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의 실행 이후 장애인과 여성 등 관련 기업이 많이 육성 됐듯이, 노인생산품우선구매 조례 제정은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및 노인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아 세종시니어클럽 대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시작된 우선구매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늘어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한 노인에 대한 적극적, 현실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건강한 세종, 건강한 대한민국)

박범중 일반당원

I. 정책의 선정

1. 시작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외 활동이 감소되고 있다. 이는 절대적 운동량 부족으로 연결되어 건강관리 악화가 예상된다. 이에 국민 건강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선정하였다.

2. 정책의 선정기준

첫번째, 인근 자원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자원이란 기존 정책의 결과물이다. 기존 정책을 연결하여 소규모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국민 건강성 향상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신속한 대안이 필요하며, 이에 국민 삶의 현장에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세번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 다수가 참여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 정책의 선정(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는 정책이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이다.

걸을 수 있고, 걷고 싶은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며, 이를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결과물이다.

4. 정책의 적용대상

“동네 한바퀴”의 적용대상은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는 구도심이다. 이는 구도심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자원을 이용하여 실행될 것이며, 신도심과의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는데 방향성이 있다.

II. 정책의 방향성

1. 균형발전을 위한 시작

내가 사는 우리 지역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동등한 환경과 방향을 갖는 것이 균형발전이라 생각한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주거환경은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어느 곳에 살던 동일한 주거환경이 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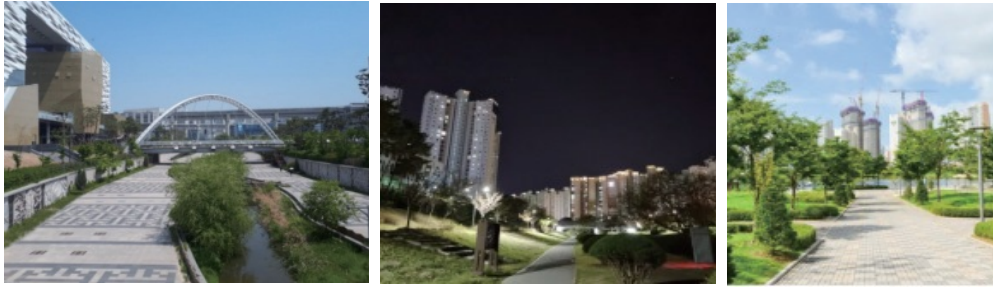
2. 주거환경의 균형

주거환경이란 크게 생활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이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생활, 교육, 교통에서 큰 환경 차이를 보이며 이에 대한 차이를 줄여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성을 큰 틀로 잡아 주거환경 중 생활환경에 해당하는 “동네 한바퀴”를 주거환경개선과 국민 건강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거환경 격차



신도시 대비 낙후된 부대시설과 집 인근에 조성된 주거환경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과 집 인근에 조성된 둘레길은 주거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Ⅲ. 구체적 방안

1. 하루 걷기 권장량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해 매일 30분씩 일주일 기준 5일을 걷는다면 권장량에 도달할 수가 있다. 30분 걷기를 위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km(빨리 걷기 4km/h)거리를 걸어야 한다.

2. 집에서 쉬운 접근성 필요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거환경은 이러한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30분 걷기를 하기 위해서 20~30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규칙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점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이다.

3. 구체적 사례(세종시 조치원읍)

- 인도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연결 통로 조성
- “도시재생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원
- 집 어디에서 나와도 5분안에 둘레길을 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완성









각 시군구에서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기존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사업속도, 활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증대된다.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구도심 일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 완성된 사업을 본 사업을 통하여 연결하는 구상으로 전체를 걷기 좋은 도심으로 변화시킨다.



집에서 5분내 접근 가능한 “동네 한 바퀴”는 세종시 조치원읍 기준으로 7개를 조성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쉽게 국민 건강 향상을 시키는 정책인 것이다.

IV. 주민 참여 방안

		
<p>“동네 한바퀴”에 QR코드 배치하여 이용 횟수를 파악. 횟수 기준으로 도장 쿠폰시스템 도입하여 프로모션 진행.</p>	<p>걷기 앱과 연계하여 실시간 운동량 파악. 저장된 이력을 통하여 규칙적인 운동 유도가능.</p>	<p>“동네 한바퀴” 인근 상점과 협약하여 할인 행사 적용.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p>
		
<p>QR코드 및 걷기앱으로 파악된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지역화폐와 연계된 시스템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확대 유도.</p>	<p>인근 운동관련 사업장과 연계하여 1회 무료 쿠폰 발급. 꾸준한 운동 환경을 조성.</p>	<p>지속적인 운동을 유도, 생활체육 동호회로 연결. 생활체육 정착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p>

V. 기대효과

1. 주민 삶의 질 향상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규칙적인 운동의 우선점이 접근성이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하여 주민 삶에 접근할 수가 있고, 운동을 통한 삶의 활력 증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된다.

2.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내에서 실천되는 걷기 운동은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차량으로 이동시 지나치게 되는 상권은 걷기를 통하여 가까운 곳에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과 운동시설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3. 지역내 양극화 완화

지금까지 정책을 이끌어 오는 방향성이 지역내 주거환경 양극화의 완화이다. 전국 많은 곳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주거환경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 한사람이 느끼는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이를 적용하기도 쉬워 전국 어디서나 적용하여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되길 희망한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고령화사회, “새삶” 미래를 설계하다

김우성 울산시당 당직자



고령화사회, “새삶” 미래를 설계하다

Contents

<p>01</p> <p>서론</p> 	<p>02</p> <p>여건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고령화 정책- 한국의 고령화 정책 	<p>03</p> <p>비전 및 정책 제언</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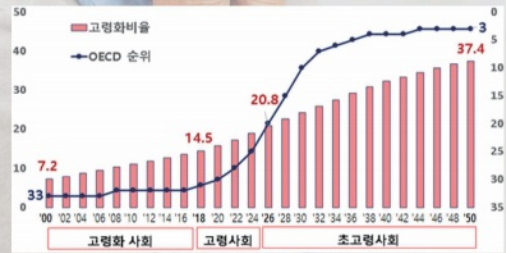
서론

- 197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임
-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 3.3%



1970년~2018년 OECD 주요국 연평균 고령화비율 증가율 비교

- 2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 진입
- OECD,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



자료: OECD

서론

-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합계출산율: 0.25명 감소 시, 경제성장률 0.9% 감소
고령인구 비율: 1%p 상승시 경제성장률 0.5% 감소
- 고령인구의 상승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성장잠재력 가능성의 보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성장잠재력 가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새살미래도시'를 조성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함



여건분석

해외 고령화 정책(OECD 국가 정책 대응)



- ✓ 주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의료비 절감에 중점
- 연금 관련 법정 연금 지급 연령은 ('02년) 65세 → ('27년) 67세 연장



- ✓ 정부, 민간, 지역사회 공동으로 다양한 서비스 기회 부여
- 자금자족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태도·생활방식·지역사회 지원
- 건강한 노후, 세계적 수준의 보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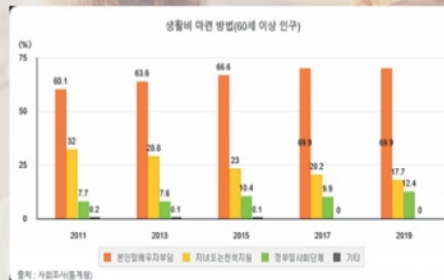


- ✓ 노인보호 대책 및 사회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 중점
- 고용부문, 노동인력의 부족 문제 발생에 따른 고령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도입
- 기업에서는 연공제 및 종신고용제 소멸에 따른 새로운 기업 패러다임 도입 검토

여건분석

한국의 고령화 정책 현황

- ✓ 2017년 이후 공공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높고, 꾸준히 증가
- ✓ 2011년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비중 증가 추세
- ✓ 반면, 재능나눔 및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기업은 저조
- ✓ 2019년에는 비중이 9.8%로 증가하여 10명 중 7명이 스스로 생활비 마련하는 추세
- ✓ 반면, 자녀 또는 친척에 의한 생활비 마련 비중은 감소



비전 및 목표

비전 노후.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변화의 삶, "새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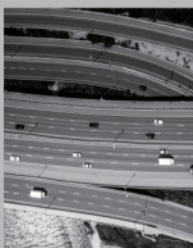
목표 지역경제 강화 고령화 인식변화 자급자족 공동체 사회

핵심요소 소기업 일자리 고령화 맞춤산업 노인맞춤거리 (Street) 맞춤 거주 환경

고령화사회, "새삶" 미래를 설계하다

정책 제언

도시환경



노인 거리 조성 구간 일부 차량 통제 및 가계 문턱을 없애 쉽게 이동



한글 간판 표기 및 크기 확장



음식점, 옷, 카페, 마트 등 노인 맞춤형 상점 및 거리 활성화
예) 대학로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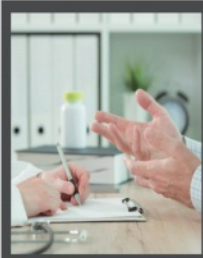


정책 제언

일자리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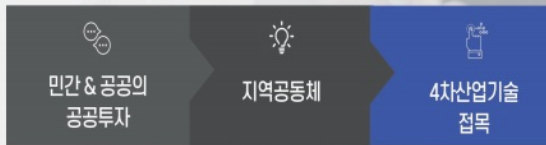
기업, 정년기준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



· 시니어 창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활성화
(65세 이상 무상교육)
· 정년퇴직 의무교육실시 야간, 주말 의무교육시간 배정



노인을 위한 도시 "새삶"도시



극빈층 노인을 위한 시설 요양 공적 투자 확대

개인거주 노인에게 맞는 주거 환경 개선

대상

- ✔ 교육이수 및 공동체사업 희망자
- ✔ 빈곤층 노인 중 안전한 일자리 희망자
- ✔ 노후가 아닌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분

방안

- ✔ 노인 복지 주택 건설 지원
- ✔ 시설안전실대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대비
- ✔ 주거계획 지원을 위한 리빙력 운영계획
- ✔ 노인을 위한 거리 조성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고래수족관의 새로운 미래

김현정 남구의회 의원

1.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시작과 문제점

①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시작

2009년 11월 24일 일본 다이지 순치장에서 한 마리에 1억원(수송비포함) 정도씩 주고, 큰돌고래 4마리 구매해온 고래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고래 수족관 개관.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은 "일본 다이지 순치장은 어민에게서 돌고래 한 마리를 600만원에 사들여 3~4개월 길들이고 나서 세계 각국에 마리당 1억원 정도를 받고 판다"며 "우리도 장기적으로 장생포 해양공원부지에 운하식 돌고래 순치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이지 순치장을 관리하는 다이지개발공단 직원 남부(南部) 씨는 "범고래는 길들이기 어려워 한 마리에 70억원 정도를 받는다"며 "1억원 정도에 팔리는 큰돌고래는 한 해 40~50마리 정도씩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11월30일 연합뉴스 기사발취)

그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등에서 반대시위와 항의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화되고 있는 시대감성을 읽어 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의 시작을 보여준다.



② 문제점

- 해수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1차 수족관관리 종합계획에서 고래류의 사육·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발더 나아가 2021년 올해 범고래유통금지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밍크고래 유통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물에 걸린 고래조차도 유통과 식용을 금지한다는 강력한 조치로 지역 고래고기식당 업주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 다이지에서 들여온 돌고래 총8마리 수족관 내에서 4마리 번식 그중 8마리 폐사.

현재 장생포수족관에는 4마리의 돌고래가 남아 있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는 필연적으로 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현재는 1마리 있는 수컷이 어려 번식능력이 없지만, 조금만 더 자란다면 또다시 수족관내에서 다른 암컷 돌고래들이 임신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돌고래 폐사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고래는 지능이 높은 종으로 좁은 수족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미돌고래가 출산한 새끼돌고래를 죽이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고 전한다.

2. 해결과제

돌고래 방류를 위한 해결과제는 크게 5가지이다.

- ①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
- ② 지역상인들의 생존권
- ③ 고용의 승계
- ④ 방류실패 시 여론의 비난
- ⑤ 고래수족관 활용방안 등이다.

①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

울주군 간절곶 송정가두리 낚시체험장으로 쓰이던 송정방파제를 유력한 쉼터조성 가능 장소로 본다.

낚시터로 쓰이던 곳이라 바다쉼터로 쓰기 전 준설작업등의 정화작업과, 태풍시 돌고래가 피난 할 수 있는 안전지대설치가 필요하다.

간절곶관광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또다시 돌고래를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나는 시민단체의 불만도 있으나, 쉼터조성과 향후 돌고래 관리에 많은 예산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울주군을 설득하는데 유리할 것이라 본다.

또 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② 지역상인들의 생존권

해수부에서는 예서는 고래류의 전시.체험관광을 금지한데 이어 고래의 유통과 식용까지 금지 할 예정이다.

이것은 장생포고래고기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업주들과, 고래생태체험관의 고래를 보기위해 왔던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왔던 업주들에게 또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

장생포에 고래가 아닌 다른 콘텐츠로 관광객들이 정주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지역

민과 상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사유사들의 고용승계

다이지고래는 제주연안에 방류한 제돌이(남방큰돌고래)와는 다른 큰돌고래종으로써 우리나라 연안에 자연 방류할 수 없다.

쉽터에 임시로 머물다 적응기를 거쳐 성공적으로 방류를 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생을 마칠 때 까지 쉽터에 정주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바다쉽터가 조성된다고 해도, 돌고래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 되므로 사유사들의 계속 고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④ 방류실패시 여론의 질타

큰돌고래가 생활하던 바다와 수족관에서 태어나 평생을 수족관에서 살던 고래가 쉽터의 환경에 적응을 못해 폐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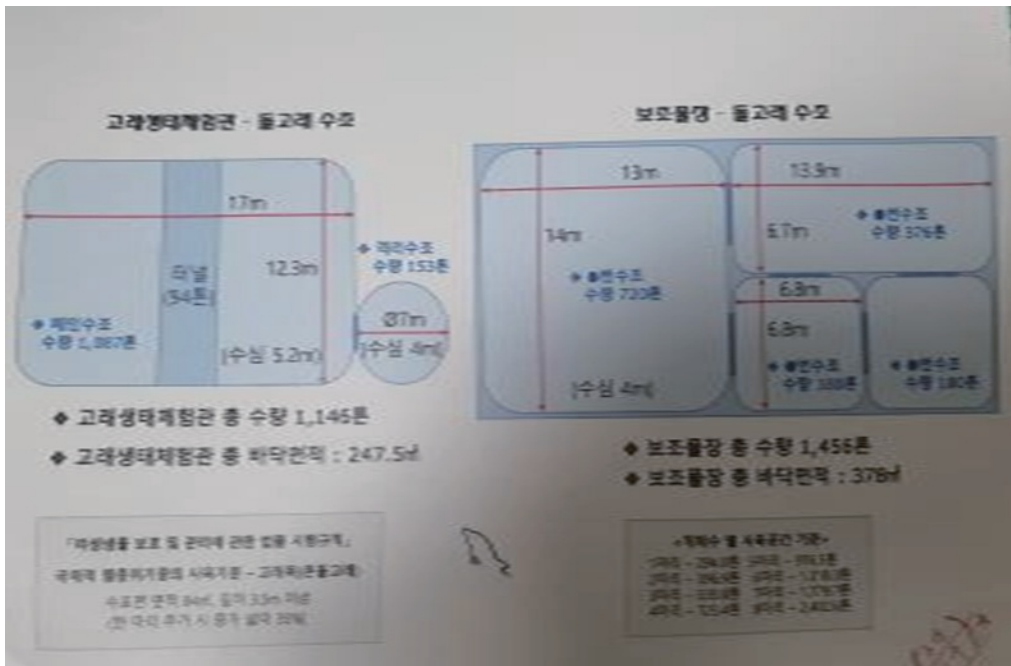
이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력한 비난여론으로 인해 의미 있는 한걸음이 무너져 다른 수족관의 돌고래 방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옹호가 필요하다.

⑤ 수족관의 활용방안

-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공간이다.
- 이곳을 잘 활용해야 다른 고래수족관에도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 고래가 없어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장소.
- 학대 없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 그래서 주변 상권까지 살릴 수 있는 장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시설활용방안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수조의 크기는
가로17m×세로12.3m×깊이5.2m 연결 격리수조 Ø7m

보조플장은 가로26.9m×세로14m×깊이4m 로서

고래가 있기에는 좁은 수조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에는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고래를 위해 깨끗한 바닷물을 상시 공급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한다면 해수를 활용한 다양한 수중레포츠 시설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기대된다.

① 조선, 정유, 화학, 자동차 등의 산업수도출산에 걸맞은 산업잠수사 교육,실 습장으로 활용가능

산업잠수사는 수중교각설치, 기초부두 및 방파제축조, 해난구조,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냉각 시설, 선박접안시설, 유조선터미널시설 건축 등을 한다.

그만큼 수중촬영, 수중용접 및 절단 수중토목, 유압사용 기술 등의 수중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잠수산업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보고 있는 만큼 인력양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초.중.고 생존수영 연습장 활용 및 대한적십자사, 군.경 인명구조훈련장활용

③ 가평의 K-26 과 같은 해양레저 스포츠시설활용

Ø7m부분을 깊이 40m로 새롭게 조성하여, 수심40m 프리다이빙 훈련장, 수중포토그래퍼, 수중사진작가, 야간잠수등 다양한 수중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

경험적 소비를 지향하고, 직접 활동과 체험을 즐기는 트렌드에 맞추어 영남권에 없는 해양레저스포츠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프리다이빙 연습장은 3시간기준 평일33,000원 공휴일55,000원 으로 고래생태체험관의 성인5,000원보다 수익이 높다.

수영을 못하는 초보들도 수중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잠수체험을 하면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는다.

4. 마무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해양레저수영장으로 전환된다면 각종 해양레저스포츠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산업잠수사 취득을 위한 훈련생도 머무르게 될 것이다.

-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지역상권도 저절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관련 인프라조성과 함께 연계된 새로운 직업도 창출될 것이라 기대된다.
-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이제 고래 없는 고래문화특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장생포고래축제는 틀에 갇힌 고래, 수족관에 갇힌 고래로는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수 없다.
- 무엇보다도 동물학대의 대명사였던 고래수족관이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다른 모든 고래수족관의 고래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학대를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시대감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공적인 시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처벌법」 보완정책

이승우 울산시당 당직자

1. 서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 및 목적)

노동자들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 기준을 통한 산재예방 노력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이라는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2020년까지는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이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의 미비 혹은 공백으로 인해 위험의 전가(transfer of risk)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재취약계층’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산재취약계층’의 대표 유형이 바로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조직에서 소위 외주화(outsourcing)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7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여 ‘이중착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파견노동이 합법화되었으며, 2007년 7월 이후 소위 비정규직법이 작동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통과로 인해 기업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고용이 오히려 고용에 대한 ‘규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파견 이외의 용역, 사내하도급, 독립도급 등의 ‘대체고용’을 활용하면서 고용의 탄력적인 운영과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간접고용’ 중에서 특히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유형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이다.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은 생산의 외부적인 분할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기업 간 및 기업 내 ‘고용관계’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고용관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거래관계’의 특징이 모두 반영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반적인 고용자-피고용자 간의 ‘고용관계’가 모호해지고 희석될 수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실상 소속 사업장 원청의 지휘, 감독관계 하에서 원청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경제적 거래관계인 ‘도급’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에 고용문제는 오로지 사내하도급업체 사용자와의 관계로만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내하도급 노동을 법적으로 규명하거나 사회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산재의 발생 후 그 처리의 부조리 및 다자간의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여러 가지 처리상의 문제가 발생 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재취약계층’의 존재와 이들의 문제가 심화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슈가 된 시기가 바로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업장에서 2년도 되지 않아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무게 2톤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는 산안법 위반 시 처벌이 낮기 때문이다.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 유기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매년 3~5건에 불과하며, 실행기간은 평균 9.3개월에 그쳤다. 대부분 피고인에게 재산형(벌금)이 선고되었는데 그 벌금액은 평균 5백만 원 정도였다. 산안법 위반 사건의 책임자에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산안법의 벌칙규정에 처벌의 하한선이 없고,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형량구간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안법 위반의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산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약 93%가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이익보다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재범 확률이 더욱 더 높게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의 대규모 시민재해의 경험과 김용균씨의 죽음과 같이 다수의 산재사망사고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언론들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다.

2003년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2006년 ‘살인기업선정식’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는 이후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확장되어 사회의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왔고 이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법률안으로 모여진 것이다. 이후 19대 국회 입법청원운동, 20대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어졌으나 이 법안은 단 한번도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제정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어주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처벌에 관련된 법률을 다양한 법학, 법 이론적으로 그 법안의 허점과 보완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은 언제나 완전 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기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이 아닌 재해의 예방기능을 만들어 안전을 그 사회적 통념과 가치라는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을 사전에 관리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자 한다.

II. 중대재해처벌법 세부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산업재해	<p>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p>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를 두도록 하였다.

처벌 대상 및 내용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의 주요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1) 안전보건 확보 의무대상의 정의 및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 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의 의무사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처벌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라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손해배상의 책임 및 시행시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1. 26. 공포)

4)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 등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용자로서의 시민과 근로계약,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보호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보호대상이 다르고 입법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가 상이한데 중대재해의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앞서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적용 될 것으로 파악되며 그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3.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점(중대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한계점 분석)

1) 발주처의 공기(납기) 단축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공무원 책임자의 처벌 조항의 삭제

발주처의 공기단축에 대한 처벌, 공무원 책임자 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의 경우 중대재해에 있어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 불법 인허가 등이 주요한 사고원인이다. 이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문제는 동의하면서 입법안에서 삭제되었다.

특히 건설업,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선재의 주요 원인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된 한익스프레스 이천산재참사의주요 원인이었던 발주처의 공기(납기)단축이 도입되지 못한 것은 핵심조항이 누락되었다.

2) 처벌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모호해진 법안

법안의 명칭에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이 사라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었다. 법안 적용대상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 법인,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전체가 대상임이 드러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중대재해의 책임 소지를 전가 할 명분이 되었으며 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지 못 할 수 있다.

3)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의 검토 및 대안필요

중대재해를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은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는 지역별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상설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역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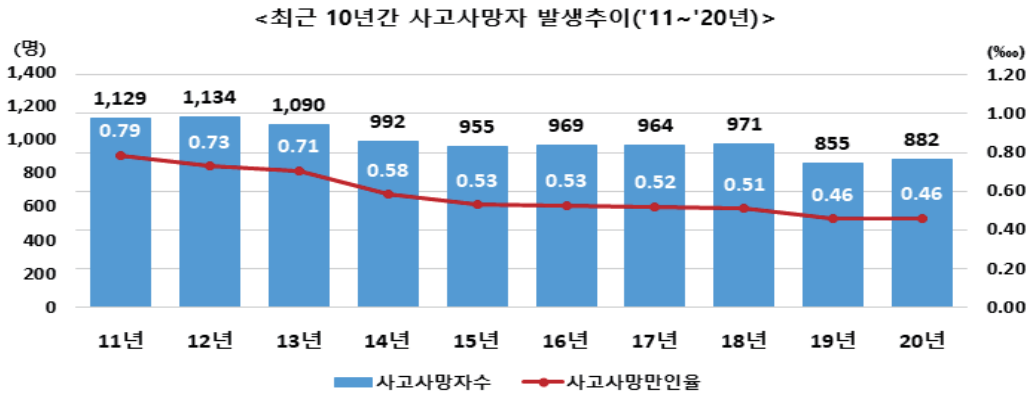
중대재해발생시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개입이 진행될 때 수사, 감독, 기소, 처벌과정에서 현장의 제대로 된 현실이 반영되고, 실제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부의 준비는 매우 미약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초기 대응, 피해자 지원, 수사 및 기소와 처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 구축 및 대응체계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예방에 있고, 그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가 정부의 산업재해 감독의 혁신이다.

산업재해와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노동자,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정부감독은 어떤 위상과 내용으로 획기적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안전보건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산업구조,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양태에 입각한 실질적인 논의와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Ⅲ.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취약산업 요인 분석(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출처 :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020년 산재 사망사고자는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이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천 화재사고(38명 사망)로 인해서 증가하였으며 산재사망사고가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산업재해가 주로 일어나는 산업의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 요인을 살펴보면 주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이 분석가능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요인 예방요소를 적극적으로 투입시켜야 할 포인트를 확인 할 수 있다.

[업종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추이]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산업		
	사망자수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020년	882	0.46	458	51.9	201	22.8	0.50	223	25.3	0.18
2019년	855	0.46	428	50.1	206	24.1	0.51	221	25.8	0.18
증감	27	0.00	30	1.8	-5	-1.3	-0.01	2	-0.5	0.00

* 기타산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122명), 운수·창고통신업(67명), 임업(16명), 광업(8명), 농업(7명) 순

세부산업으로 살펴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8명(전체의 51.9%)이며 ‘제조업’은 201명(전체의 22.8%)으로 전체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74.7%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고용인원)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추이]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20년	882	0.46	312	35.4	1.04	402	45.6	0.49	131	14.9	0.29
2019년	855	0.46	301	35.2	1.00	359	42.0	0.44	147	17.2	0.33
증감	27	0.00	11	0.2	0.04	43	3.6	0.05	-16	-2.3	-0.04

* 건설업 근로자 수 산정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공사기간)

고용인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으며, 5미만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전체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 발생요인]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사업장의 교통사고		화재		기타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20년	882	328	37.2	98	11.1	72	8.2	71	8.0	64	7.3	54	6.1	46	5.2	149	16.9
2019년	855	347	40.6	106	12.4	84	9.8	49	5.7	67	7.8	49	5.7	14	1.6	139	16.3
증감	27	-19	-3.4	-8	-1.3	-12	-1.6	22	2.3	-3	-0.5	5	0.4	32	3.6	10	0.6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사망자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재해요인 또한 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압도적이다. 또한 50인 미만인 고용인원이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하청구조 또는 하도급 계약의 소규모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다른 사망사고의 주요 발생요인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산업의 구조와 노동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산재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사망자 비율분석]

(단위: 명, %, ‰, ‰p, ‰pp)

구분	소계		1억원 미만		1~20억원 미만			20~120억원미만		120억원 이상		분류불능					
	명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020년	458	2.00	108	23.6	5.17	170	37.1	3.36	81	17.7	1.99	91	19.9	0.80	8	1.7	2.63
2019년	428	1.72	108	25.2	4.20	132	30.8	2.31	71	16.6	1.61	111	25.9	0.94	6	1.4	1.93
증감	30	0.28	0	-1.6	0.97	38	6.3	1.05	10	1.1	0.38	-20	-6.0	-0.14	2	0.3	0.70

1~20억원 미만에서 170명(37.1%), 20~120억원 미만에서 81명(17.7%)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년대비 각각 38명, 10명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1억원 미만(5.17‰), 1~20억원 미만(3.36‰), 20~120억원 미만(1.99‰), 120억원 이상(0.80‰) 순으로 높아서,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산업체 규모별 사고사망자 비율분석]

(단위: 명, %, ‰, ‰p, ‰p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미만		50~299인 미만		300인 이상					
	명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020년	201	0.50	38	18.9	0.94	120	59.7	0.70	34	16.9	0.32	9	4.5	0.11
2019년	206	0.51	43	20.9	1.07	121	58.7	0.70	30	14.6	0.28	12	5.8	0.15
증감	-5	-0.01	-5	-2.0	-0.13	-1	1.0	0.00	4	2.3	0.04	-3	-1.3	-0.04

5~49인에서 120명(59.7%), 5인 미만에서 38명(18.9%)이 발생하여 50인 미만의 사고사망자가 158명(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사고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0.94‰), 5~49인(0.70‰), 50~299인(0.32‰), 300인 이상(0.11‰) 순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리하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주요 발생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고 공사대금 또는 하도급의 대금이 적을수록, 사업체규모가 적을수록 사고사망자의 발생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약한 구조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곳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중대재해에 노출되어 일 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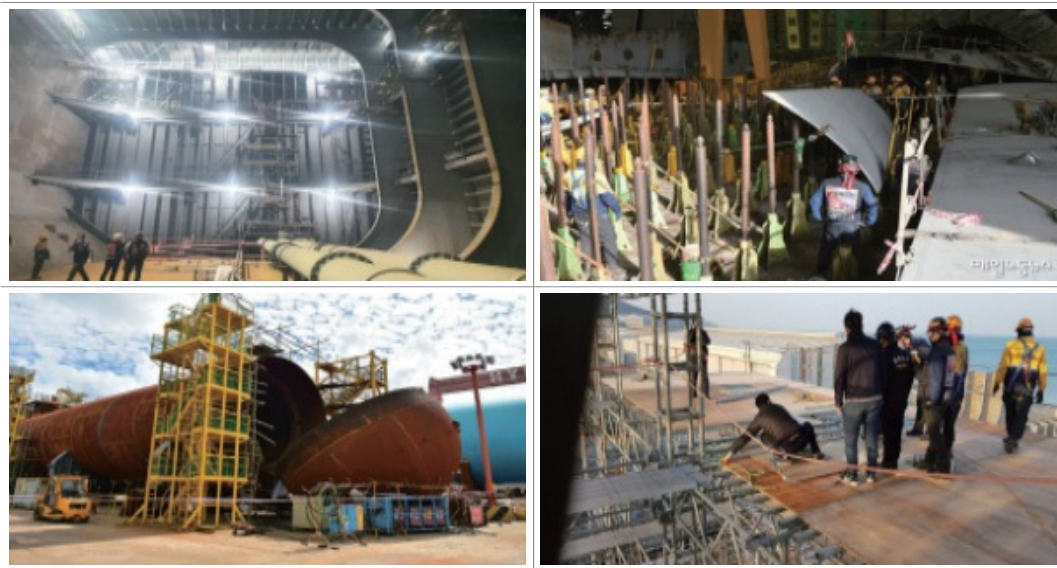
여기서 건설업과 제조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는 중공업이 왜 산업재해에 취약한지 단편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복잡한 하도급 계약구조에 따라 그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이뤄 질 수 있어서 산업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본청이 아닌 취약한 하도급 사내협력사 또는 노동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1년 2월 22일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는 산업재해 사망자의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문제’라며 노동자의 탓으로 전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산업재해에 처벌이 약했으며 산업재해의 책임을 본청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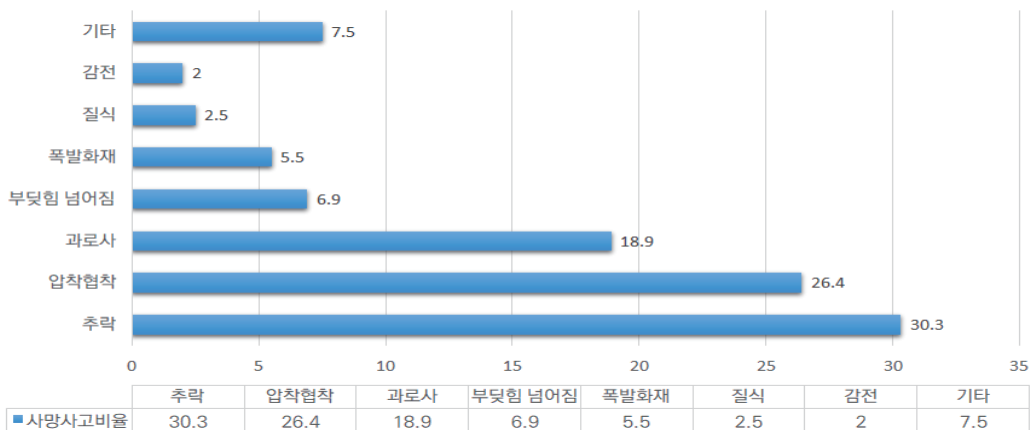
IV. 중공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요인

1. 중공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이유

[중공업의 작업현장]



[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원인]



위의 중공업 작업현장 사진을 확인하면 설명 할 수 있듯이 중공업의 작업현장은 용접을 하고 조립을 하는 ‘제조업’과 비계 등을 설치하여 높은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건설업’의 복합 현장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매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사망사고 원인 46년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추락 30.3%, 압착협착 26.4% → 중공업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복합산업(산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군)으로 이는 앞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공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함께 이뤄진 중대산업재해의 취약한 복합구조로 설명 할 수 있다.

2. 산업분석 및 문제요인 파악

2017년 조선업 위기 이후 조선업 노동자가 대폭 감소하였고 조선업의 경우 지역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및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하여 2019년부터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정규직 인력은 감소하고 사내 협력사(비정규직) 인력은 감소된 인원을 유지하여 감소된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 인력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5대비
합 계	계(①+②)	68,900	53,474	37,216	35,096	35,252	33,730	-35,170
	정규직	26,500	25,654	19,154	17,425	16,480	16,142	-10,358
	사내협력사	42,400	27,820	18,062	17,671	18,772	17,588	-24,812
현 대 중공업	소계(①)	57,600	44,538	29,835	26,430	26,523	25,621	-31,979
	정규직	23,000	22,308	15,980	14,308	13,505	13,156	-9,844
	사내협력사	34,600	22,230	13,855	12,122	13,018	12,465	-22,135
현대 미포 조선	소계(②)	11,300	8,936	7,381	8,666	8,729	8,109	-3,191
	정규직	3,500	3,346	3,174	3,117	2,975	2,986	-514
	사내협력사	7,800	5,590	4,207	5,549	5,754	5,123	-2,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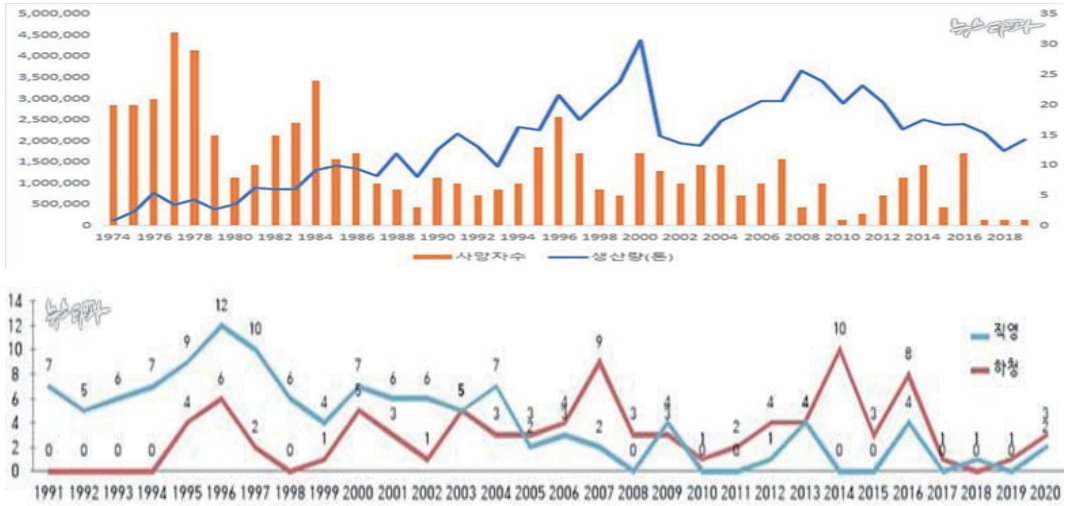
출처 : 현대중공업 및 미포조선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현대중공업 그룹 인력 증감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주량	1,844	1,309	1,099	222	761	1,308	943	819
건조량	1,250	1,218	1,269	1,236	1,057	772	951	880
수주잔량	3,362	3,323	3,228	2,094	1,768	2,238	2,260	2,216

출처:Clarksons Research,「World Shipyard Monitor」

현대중공업 46년 산업재해 전수조사 내용을 확인하면 중대산업재해는 선박 건조량에 따라 증감하여 선박 건조량이 많으면 산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이 월등히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노동의 계층구조가 형성



이를 정리하면 중공업은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조선업 위기이후 대폭 인원감축이 있었으며, 한국조선해양으로 지주사를 분리하며 현대중공업을 계열사로(한국해양조선의 하부구조 형태) 만들었다. 또한 현재까지 조선업과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조선산업은 회복세지만 현장인원은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의 모든 취약점을 다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수주물량은 늘어서 작업량은 많아지고 있지만 ‘납기’와 ‘비용의 감소에 따른 공사대금의 축소’로 산재에 취약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져 고스란히 사내협력사에게 비용은 전가하여 인원을 감축하여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동환경이 된 상황이다. → 일터의 모든 안전망 구조가 망가졌다.

V. 결론 및 보안을 위한 정책제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점 중 하나인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의 검토 및 대안필요’가 있다. 이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게 망가진 중공업을 중대산업재해에서 노동자가 안전하도록 가장 중요한 대응방안인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공동대응체계 구

축과 노동자 공동체 의식 및 활동 고취를 통해서 일터 안에서의 산업재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제언 1. 자치경찰제도의 산업안전예방 담당관제 운영]

중대재해발생시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개입이 진행될 때 수사, 감독, 기소, 처벌과정에서 현장의 제대로 된 현실이 반영되고, 실제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부의 준비는 매우 미약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초기 대응, 피해자 지원, 수사 및 기소와 처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 구축 및 대응체계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예방에 있고, 그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가 정부의 산업재해 감독을 자치경찰제도를 활용하여 산업안전예방 담당관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중대재해의 초기 대응, 피해자 지원, 수사 및 기소와 처벌까지 중앙과 대응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2. 일터의 노동자간 커뮤니티 케어활동 진행]

‘커뮤니티케어’란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또는 아동돌봄 등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이를 일터에 접목시켜 ‘노동자간 커뮤니티 케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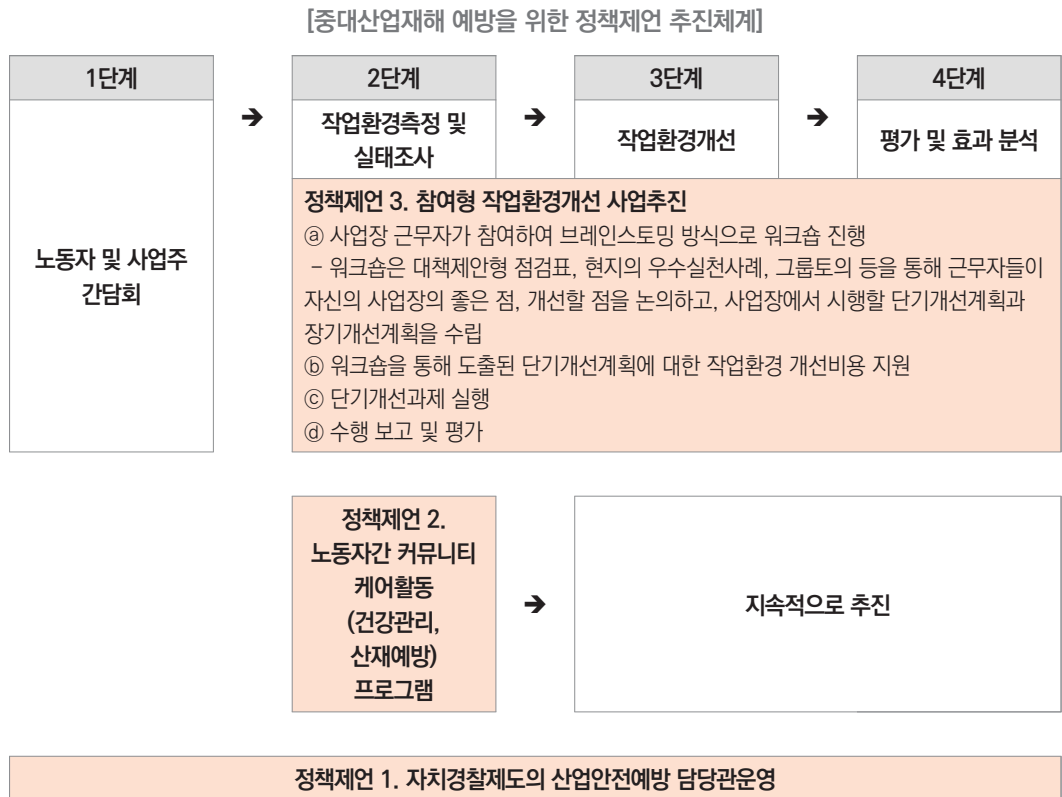
그 방식은 현장에 ‘헬스케어코디’를 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를 배치하여 노동자 서로서로 일터의 건강 및 산재를 예방하는 운동을 전파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여 배치 노동자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간 케어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간 건강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제언 3. 산업재해 취약산업 참여형(PAOT) 작업환경개선 사업추진]

현재 주요제조업은 기업측면(작업시간단축, 자동화, 기업측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리와 안전선 정비 등)에서의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었다. 여기서 맹점이 당사자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다. 산업재해의 피해대상이자 현장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노동자’이다. 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인자 및 작업관리상의 문제점을 노동자 스스로가 발견하고 개선하게 도움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민주적인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제조업 시설의 작업환경개선사업의 당사자 중심으로 변형하고자 한다.

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란? 노동자들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많은 좋은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와 자극을 받아 능동적으로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훈련기법이다.

PAOT는 외부 전문가나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주적,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개선안을 만들어 작업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황해권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 및 평화지대 조성 정책

방지현 용진군의회 의원

1. 지역환경(백령도는 어떤 섬?)

• 지리적 위치

인천에서 직선거리 222km, 북한과는 약 15km정도 떨어진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하여 국가 안보 상 전략적 요충지로 발해만을 포함한 환 황해권역 미래 해상교통의 중심지

• 인구현황

주민은 2,949가구 약6,000명, 군인 4,000명 약 1만 명의 인구로 구성
연간 40만명 방문

• 면적

국내 섬 중 8번째로 큰섬. 여의도 면적 6배 51.09km²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안면도, 완도)

2. 환경분석

백령도 용기포신항과 해양교통

- 물양장이 축조되어 2,000톤급 여객선과 부정기 화물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3000톤급 쾌속선이 접안 할 수 있는 여객부두 및 화물부두 1개 선석과 500톤급 여객부두 2선석 등 모두 3선석의 부두가 건설되었음.
- 현재, 항내북측에 3,000톤급의 해양경찰 함정 부두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기상여건 악화로 결항일수가 많으며 인천과 백령도 여객선의 운항일수가 1일 2회로 증가하였으나 기상악화와 선박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교통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 또한 인천으로 220km떨어져 있어 해상교통이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동 시간 4시간 이상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1일 생활권 불가.
- 인천-백령항로의 카페리선은 2004년 7월에 3,000톤급 대형 카페리선 만다린호가 취항하였으나 현재, 2,000톤급 대형 카페리 하모니플라워(여객정원 544명, 차량 47대 적재 규모)가 2012년부터 투입되어 1일 1왕복 체제로 운항 중이나 선령이 노후하여 정부의 여객선 현대화사업지원으로 신조 선박을 건조하여 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 백령권 제2의 제주도화 필요성

- **긴장의 바다가 아닌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바다로 조성**

천연·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의 섬으로

-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관광과 환항해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

문화예술·평화안보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품격 한국 관광자원

-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년) 발전에 기여**

백령도와 중국을 잇는 해운노선과 항공노선 개설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제2의 제주도로 육성하고 중국 동부연안지역과 서해 연계를 시작으로 환항해권 관광벨트 및 해상 물류거점으로 조성하여 서해와 황해를 제2의 지중해로 육성

환황해권 해상교역 예상항로도



4. 정책제안 선택과 집중

(1) 백령도 국제 여객선 항로 운영(국제 크루즈선기항 유치)

- 백령도 용기포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국제항로 기항지로 운영

- 종합적인 미래형 항만 개발 계획 수립

인천-백령 항로는, 현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천후 운항이 절실한 상황이며, 향후 백령도와 중국 및 북한 간 국제항로가 개설되면 해상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며, 백령도는 환황해권 여객과 화물교역의 거점항만 기능의 수행으로 용기포항의 종합적인 항만개발을 위한 미래 수요분석과 항만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대형 쾌속 선박의 조기 도입 추진

여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10,000톤급 수준의 선속 40 노트 이상의 초쾌속 대형카페리로 취항 선박을 변경하여 인천-백령도간 3시간 이내에 운항할 수 있는 선진형 교통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10,000톤급 쾌속 카페리 선박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항만배후단지의 확보 및 종합개발 추진

환 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대형선박의 입출항 및 접안이 가능한 대규모 항만기반시설 구축과 급속히 증가하는 여객의 편의시설과 화물의 가공과 환적을 위한 넓은 항만배후단지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함.

• 백령도 중국 관광객 대상 퍼블릭 카지노 개설 추진

(1) 서해 5도 지역내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및 건립

- 중국인 등 외국인 위락시설로서 퍼블릭 카지노 시설 건립이 필요
- 중국 발해만권 유일한 카지노로 중국관광객 유인효과와 사업성이 아주 높음
- 카지노 유치에 현실적으로 가능토록 허가기준의 완화 및 특례 추진

(2) 서해5도 지역의 카지노 허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서해5도 지역의 카지노 허가는 4성급 이상 호텔이면 가능토록 특례조항을 신설

• 교통의 다양성 백령공항 건설

(1) 대체 교통수단 및 백령공항의 필요성 및 전망

단기: 인천국제공항~백령공항 항공노선

- 백령주민의 일일 생활권화
- 백령주민 에어앰블런스 역할
- 초쾌속여객선 강풍으로 운항불가시 대체역할
- 국내관광객 차별화 수요
- 군작전용 민군겸용공항

중단기: 국내 주요 공항(김포, 청주, 무안, 대구, 부산, 제주 등)~백령공항 항공노선

- 국내관광객 차별화 수요

중장기: 중국 주요 공항(웨이하이, 따렌, 베이징, 텐진, 칭따오 등)~백령공항 항공노선

- 중국 주요항만(웨이하이, 따렌, 단둥 등)
- 백령 초쾌속여객선 강풍으로 운항불가시 대체역할
- 중국관광객 에어앰블런스 역할
- 중국관광객 차별화수요

장기: 주요 북한 공항(평양 순안, 린산(해주), 원산갈마 등)~백령공항 항공노선

- 북한관광객 차별화 수요
- 북한 주요 항만(장연, 옹진 등)~백령 초쾌속여객선 강풍으로 운항불가시 대체 역할
- 북한관광객 에어앰블런스 역할

5. 백령도 국제 여객선 항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치 군사적 문제 개선방안

- 한-중 국가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항로 운영과 통항의 안정성 확보
- 한-중-북 3자간 정치, 군사적 합의와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화 추진
- 백령도를 동북아 평화의 섬으로 규정하여 자유무역지대 설정 운영
-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한 공영개발로 평화분위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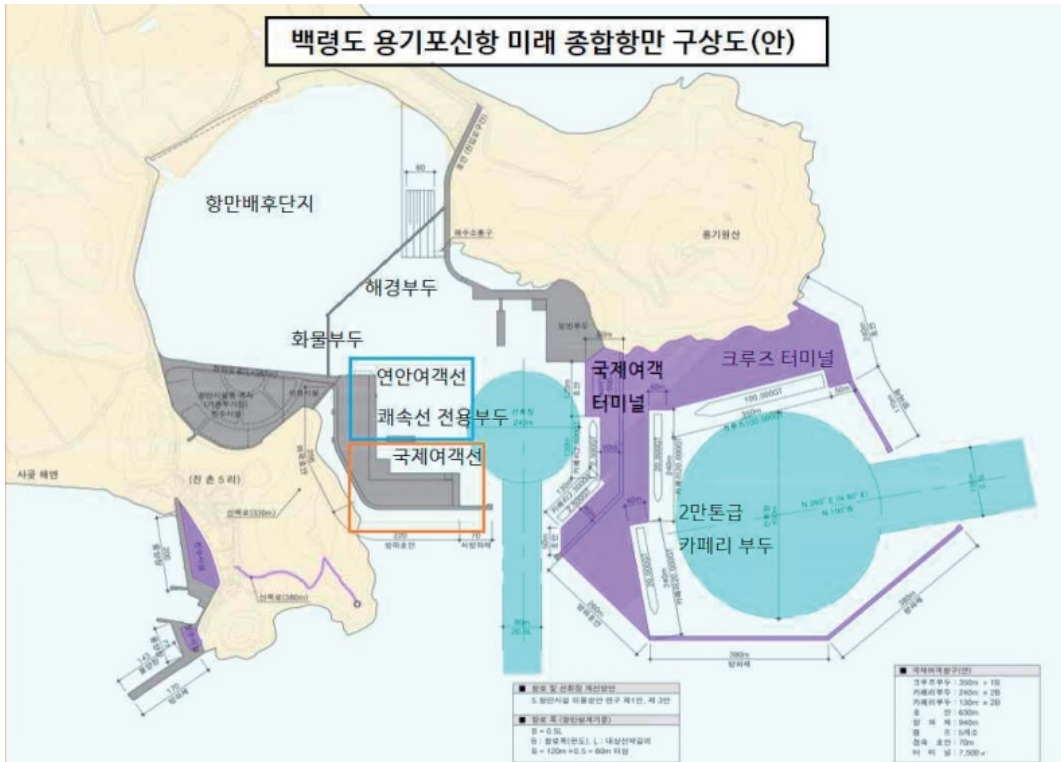
• 항만수요 및 규모의 문제

- 백령도 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백령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이 우선
- 백령도 용기포항의 규모를 백령권역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되는 종합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 최소한 2만톤급 이상의 여객과 화물수송이 가능한 카페리 선박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이 되어야 함.
- 8만톤급 크루즈선박이 입항 가능한 외항의 장기개발계획의 필요

6. 용기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용진군 추정 2030년 기준 국내 관광객 증가 추정 39만명과, 백령공항 항공여객 추정 수요 2030년 53만명,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약 10만명 등의 대규모 관광객 수용 기반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조성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

용기포신항의 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과 편의시설 배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를 확보하고,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7. 자원 조달(예산) 방안

• 자원조달 방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사업 특별예산, 국비, 지방비 등, 남북협력 기금 및 부처별 자원, 한중간 정책협력 자원, 민간투자/해외투자자 유치

• 초기자본의 형성

1) 항만시설 투자

국가 무역항 지정-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재정지원 추진

- 용기포항, 선진포항 무역항 전환
- 무역항 개발 및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국비지원 유치
- 백령권 종합항만개발전략 수립(100년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별 개발 추진)

2) 선박운항 투자

- 한-중 운항선사의 투자유치 조기 추진
- 지역개발기금 등 선박(국제여객선) 투자 펀드 조성
 - 국적(백령) 여객선사의 설립
 - 한중 합작선사의 적극적 투자유치
 - 국가지원 정책자금의 집중투자(서해5도 지원 특별법 자금, 접격지역지원 자금, 특수지역개발 자금 등 유치)

3) 관광개발 투자

- 국가지원 정책자금의 집중투자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유치
 - 웅진군 자체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관광단지 지정 추진
 - 서해5도지원 특별법 자금, 접격지역지원 자금, 특수지역개발 자금 유치
- 민간사업자 유치 및 지원
 - (가칭)웅진개발공사 특수법인 설립(대외적 사업 신뢰성 확보)
 - 관광개발지원기금 유치(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조직적 지역개발기금 증대 및 유치 활동
 - 민간자본 유치 및 자본 참여(마카오 등 카지노기업 투자유치)
 - 국제적 관광전문가 인재영입과 전문가 육성

4) 카지노 유치

- 백령도 대중형 카지노 유치 구상
 - 중국 관광객 대상 카지노 및 부대시설, 특별법에 의한 백령도 카지노 추진
 - 외자유치, 해외 카지노 업계의 투자 유치
- 장애요인의 제거 방안
 - 한중 합작사업으로 공동 추진
 - 국내 기존 카지노 업계의 반발(중국인 고객의 분산, 매출감소 우려)
 - 확실한 중국 투자자 유치 (홍콩-마카오 카지노 기업의 투자유치 추진)
 - 국내 민간 카지노 업체 협약
 - 국제적 복합리조트 계획 추진

8. 결론

- 백령도 국제 항로 개설을 통한 황해권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 및 평화지대 조성 역할 가능하며 중국-백령도-북한 간 관광객 교류와 환승을 통한 경제적 발전
- 한-중-북한 3국 무역 활성화 및 공동어로 사업의 거점
- 여객 및 화물과 환승 운송의 기점항으로 발전 효과
- 신 관광로드탄생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조성
- 지역주민 소득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지원
-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백령권 해양관광 자원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을 통한 남북한 긴장완화 유도

정부의 정책과제 : 국토 균형 발전 및 주민 안전 보장

불안한 안보사항과 불편한 교통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온 섬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 되는 유일한 사업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새로운 시각

정부의 한반도 평화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남북 평화지대 조성

놀이터, 도시를 바꾸다 -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 제안

유세움 인천시의회 의원

들어가는 말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우연히 지나치는 놀이터 주변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목격하고 부터 이다. 큰 문제의식 없이 몇 년을 지나온 길인데도 그날따라 그 쓰레기들이 지독해 보였다. 그 이후 놀이터를 몇 달간 관찰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고민은 쓰레기에서 놀이터의 생성과정과 행정 프로세스, 주변 환경과 안전 등으로 확장이 되어졌다.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토론회를 시작하니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견한다. ‘놀이터’를 둘러싼 행정 주무부서가 최소 5개 이상이며, 대부분이 ‘기초 지자체’ 위임 사무이기에 한계가 명확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약 10회 가량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이중 7회 차의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제안자는 동시에 놀이터에 대한 글을 언론에 연속적으로 기고를 하게 된다. 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놀이터 문제를 꽤나 단순해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개발 사업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에 도시에 숨어있는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확장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기에 제안자는 지난 5월 20일, ‘인천광역시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놀이터 TF’를 제안하였고 TF구성 절차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제안서 역시 이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놀이터가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제안자는 이런 맥락에서 놀이터를 삶 안에서의 ‘놀이’와 발을 딛고 서 있는 ‘터’의 근본적 의미를 찾는 시작이라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왜 놀이터 인가?

‘놀이터’(Playground)는 사전적으로 ‘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이라 정의하고 있음. 제안자는 놀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고 있으며, 놀이터의 존재와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함. 그리고 정체 또는 방치 되어있는 놀이터를 재구축함으로써 ‘동네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자 함.

2. 제안 배경 및 목적

1) 제안 배경

① 환경적 문제

: 인천의 구도심 안에 놀이터들 대다수가 주변에 쓰레기 수거지로서 사용되고 있음.



〈인천 구도심 내 공공 놀이터 주변 쓰레기〉

② 도시 불평등의 문제

: 구도심의 공공 놀이터는 아파트 내 놀이터와는 달리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며, 관리와 점검이 신도시 내 놀이터에 비해 미비함. 이는 아동들의 놀권리 안에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불평등을 나타내기도 함.

	분류	시설 수		분류	시설 수
신도시	연수구	77	구도심	미추홀구	70
	중구	64		동구	13
	서구	133		중구	64
	남동구	112		계양구	49

〈2021년 기준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 인천 신도시(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 대비 구도심(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내 아동놀이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
-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정 후 검사 기준에 미달된 전국 2064개 놀이터가 임시 폐쇄되었으나, 이후 후속적인 대책 미비로 방치된 사례가 있음
-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조성 이후 관리 소홀로 방치되는 일부 상황 발생

[경인 WIDE] 구도심·신도시 차별의 상징 된 공공 놀이터

'놀 수 없는' 어른들 쉼터 vs '놀 것 많은' 호기심 천국

공승배 기자 | 발행일 2021-05-17 제1면



아이들 놀이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

인천시의회, 신·구도심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 추진

공승배 기자 | 발행일 2021-05-06 제3면

우레탄 바닥-쓰레기 방치 대조
유세울의원 "차별의 공간 안돼"
개선 논의... 구성 결의안 발의



〈신도시-구도심간 놀이터 불균형 관련 기사〉

③ 안전 문제

: 대부분 '놀이기구'에 따른 안전 문제에만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놀이터 주변 도로와 보행 환경이 안전하게 구축 되어져있는지,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 CCTV에 설치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져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④ 획일적 놀이터 설치의 문제

: 획일적 놀이터 구성의 문제, 놀이터 대부분이 조달 입찰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획일화 된 놀이기구 설치에만 집중하고 있음. 놀이의 환경과 도시의 환경, 아이들의 욕구가 반영된 놀이터의 조성이 필요함. 아이들의 의견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정책 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획일적인 놀이터의 모습〉

2) 목적

-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이기구만을 타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과 현재, 대한민국 놀이터들의 종합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 정책 안에서 놀이터의 혁신 방안의 도출
- 놀이터 조성에 따른 놀이기구 조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놀이터 기획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함.
- 놀이터 주변의 교통안전 진단과 둘러싼 주차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 놀이터 주변 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과 위생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 놀이터의 주체로서의 어린이 의견 수렴 기관 및 네트워크 구성
- 신도시와 구도시의 놀이터의 비교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3.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과 문제 해결

1) 놀이터에 대한 인식 전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놀이터)

지금의 놀이터는 장애물 통과 놀이터, 화려하고 예쁜 조경, 남는 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공간과 안전에 불친절한 놀이터 또는 지나치게 통제된 놀이터가 대부분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① 머무르고 싶은 곳

: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전환할 놀이터의 환경적 개선이 필요함. 놀이터는 아이뿐 아니라 전 연령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 하여야 하며, 공간이 도시와 어울림과 균형적 배치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

② 새로운 발견이 가능한 곳

: 정형화된 놀이터의 틀을 개선하고 기후, 환경,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에서 새로운 발견이 가능한 곳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위생과 안전이라는 이유로 법제화 시키고 틀에 가둬 버리는 놀이터는 자체만으로 다변성의 한계가 있음. 더불어 계절과 기후,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풍부하도록 기획 되어져야 함.

③ 통제의 가능, 빠른 인식, 적당한 위험

: 아이들의 신변적 위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과 동시에 놀이에 대해서는 적당한 위험을 개방하는 놀이터 구성이 필요함. 이는 놀이기구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 환경에 대한 놀이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④ 금지되는 것이 적은 곳

: 활동에 따른 금지와 제약이 적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공원의 조성 계획에서 놀이터는 후순위에 남는 공간에 배치가 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기에 놀이터는 이후 남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도시 계획 안에서도 놀이터의 전면적 배치와 면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함. 이는 도시의 교통 환경과 주차 및 주거계획을 수립할 때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

2)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① ‘섬’에서 ‘연결’로

: 구도심의 놀이터들은 대체로 도로에 둘러싸여 단절된 형태로 존재함. 이는 마을 안에서도 동떨어져 ‘섬’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놀이터로 가는 길 자체가 차량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도로와 주차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장기적 과제인 이면도로 주차문제 개선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함. 놀이터 주변의 보행 환경 개선은 곧 인근 주민의 보행과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직결 될 것임.

인민일보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04면 004면

놀이터 이야기(완) 세상을 바꾸는 놀이터 꿈꾼다

인민시의원 발언대
유세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놀이터에 대한 연구와 사례 조사를 하며 느끼는 점이 많다. 놀이터를 갖는 시기가 다양해졌지만, 공원 재개발, 필자 또한 놀이터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지난 5~6년 정도의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인민시가 추구하는 할 놀이터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지를 준수하고, 부속도시 생활에도 손쉬운 편에 편입된 보행에 일하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다음은 아이들이 지친 놀이터의 문제점을 다룬다. 아이들의 생각과 놀이 습관을 바꿔 준다.

첫째, 놀이터를 중심으로 동네를 만든다. 상권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그 주변 중심으로 지역을 만든다. 그러나, 상권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그 주변으로 지역을 만든다. 그러나, 상권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그 주변으로 지역을 만든다.

셋째, 놀이터 크기가 축소되고 개편되었다. 놀이터 면적 대부분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노니 아이들이 하는 놀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셋째, 놀이터 크기가 축소되고 개편되었다. 놀이터 면적 대부분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노니 아이들이 하는 놀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인민일보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04면 004면

놀이터 이야기(3) 도시재생, 놀이터에서 묻다

인민시의원 발언대
유세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오늘은 놀이터와 도시재생을 연결해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민시가 다른 곳에서 '놀이터' 내용으로 도시재생, 환경개선 '놀이터' 재개발'이란 이야기를 인민의 언급할 주어야 한다. 인민도시의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놀이터가 없고 있다. 다양한 국은 지금 고민하는 상황인데, 놀이터가 없고 있다. 이것은 곧 현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놀이터가 없고 있다. 이것은 곧 현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놀이터가 없고 있다. 이것은 곧 현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셋째, 놀이터 크기가 축소되고 개편되었다. 놀이터 면적 대부분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노니 아이들이 하는 놀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셋째, 놀이터 크기가 축소되고 개편되었다. 놀이터 면적 대부분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노니 아이들이 하는 놀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놀이터가 넓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놀이터와 도시재생에 관련한 제안자 칼럼>

② 공공 놀이터의 한계 극복

: 공공 놀이터는 공공주택(특히, 신도시 내 아파트)의 놀이터와의 비교 대상이 되곤 함. 이는 관리의 한계, 예산의 한계,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임. 더불어 공원 조성 시 놀이터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욕구가 반영되지 않음. 이는 자연스럽게 신도심-구도심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낳는 악순환이 지속됨.



〈실 사용자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토론회〉

초기 기획 단계에서 지역의 욕구와 환경,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놀이터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건을 개선하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③ 아이에서 어른으로

: 놀이터가 아이들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성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콘텐츠를 기획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놀이터의 개념을 확장하고 체육 시설 뿐 아닌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을 고민하고 고려 할 수 있도록 함.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놀이터의 확장성을 넓혀감.

사용자가 생애주기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전 연령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놀이터로 변화하도록 함.

④ 공공의 커뮤니티 환경 조성

: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며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임. 제안자는 지금 남은 공공 커뮤니티 시설은 ‘도서관’과 ‘놀이터’라고 생각함. 놀이터는 아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스러운 커뮤니티의 형성이 가능함. 놀이터가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주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역 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이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3) 행정과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① 도시 재생과 놀이터**

: 현재의 놀이터는 공원 녹지의 업무에 속한 사무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사무가 위임되어 있음. 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놀이터가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함.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변화의 모습은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에 재생적 관점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여의 주체 또한 어린이, 주민, 건축, 예술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가능함.

② 시민력과 놀이터

: 행정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져선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에 대한 시작으로 시민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등을 함께 행정이 보완 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주민 참여예산’의 적극적 활용과 교육, 마을 자치 등을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국가 정책 차원의 논의

① 법제도 및 예산 정비

: 여성가족부 또는 국토교통부 내에 기획, 정책개발, 예산과 관련한 전담 관리부서를 설치 운영을 통해 집중적 감시와 관리, 연구 개발.

② 어린이 직접 참여위원회 설치

: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공론화, 건축, 디자인, 환경, 예술, 교육, 발달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 참여.

③ 놀이터 어워드 등을 통한 대시민적 놀이터 혁신

: 좋은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할 수 있는 ‘놀이터 어워드’등을 개최하여 놀이터 개혁을 활성화. 이를 통해 도시 재생, 육아, 환경 등의 복합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

5. 기대 효과

① 마을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 공공 놀이터의 혁신은 마을 전체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나아가 지자체로 그리고 국가의 도시재생과 아동복지, 시민 복지에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②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놀이터를 중심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며 도시재생의 추상적인 개념을 집중하고 종합 할 수 있도록 함. 폐쇄적인 도시재생에서 개방적이고 공공적 도시 재생으로 발전,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의 변화 기대.

③ 일상적 친화 공간으로의 놀이터

: 특수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놀이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생애주기 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김수미 목포시의회 의원

1. 서론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사회복지, 환경 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 4년간 사회복지지는 2017년 대비 2021년 11.6%가 늘었다. (나라살림리포트 제166호-문재인정부 4년 정량분석 vs 박근혜정부 4년과 비교' 2021.5)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인해 빈곤, 건강, 일자리 등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맞물려 야기되는 사회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복지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돌봄영역과 관련하여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노인 복지서비스는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해졌으며, 돌봄영역의 공적 책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의 국고지원도 2020년(8조 9627억 원)보다 5373억 원(6.0%) 늘어난 9조 5000억 원이 증액되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2020년 1조 4185억 원에서 2021년 1조 7107억 원으로 2922억 원(20.5%) 늘어나고,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74만→80만 개)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2020년보다 1137억 원(9.5%) 많은 1조 3152억 원이 지원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도 4183억 원이 확정돼 2020년보다 12.2% 많아졌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0년보다 13.6%(1조 7869억 원) 증가한 14조 9634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 원) 늘어난 8291억 원 이 편성된다.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적영역의 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기본, 종합)서비스 등이 보호의 필요도 및 욕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 : 노인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시스템

가. 노인 인구 비율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진행속도는 다른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진행은 가족규모 감소와 노인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 소득 격차의 심화 등의 변동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표 1〉 시도별 노인 인구 비율 - 2021. 4 기준

시도별	고령인구비율(%)	65세이상인구(명)	전체인구(명)
전국	16.6	8,604,592	51,702,100
서울특별시	16.3	1,563,588	9,588,711
부산광역시	19.7	663,053	3,369,704
대구광역시	16.9	407,397	2,406,296
인천광역시	14.3	419,142	2,936,214
광주광역시	14.4	207,981	1,444,787
대전광역시	14.7	214,400	1,457,619
울산광역시	13.0	146,425	1,128,163
세종특별자치시	9.9	35,841	361,396
경기도	13.4	1,810,255	13,479,798
강원도	21.1	324,009	1,536,175
충청북도	18.3	292,705	1,596,303
충청남도	19.4	410,362	2,116,452
전라북도	21.7	389,856	1,796,331
전라남도	23.8	438,769	1,844,148
경상북도	22.1	582,987	2,635,896
경상남도	17.7	590,560	3,329,623
제주특별자치도	15.9	107,262	674,484

출처: 통계청, 시도별 고령인구비율(2021a)

인구 고령화 현상이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노년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표 1〉의 시도별 노인 인구비율에서 강원도(21.1%), 전라북도(21.7%), 전라남도(23.8%), 경상북도(22.1%)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전라남도가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23.8%였다.

〈표 2〉 전남(목포,여수,순천,나주시) 노인 인구 비율 - 2021. 4 기준

행정구역별	고령인구비율(%)	65세이상인구(명)	전체인구(명)
소계	18.3	164,631	899,170
목포시	17.2	38,058	221,156
여주시	19.8	55,317	279,613
순천시	16.0	45,049	282,069
나주시	22.5	26,207	116,332

출처: 통계청, 전라남도 고령인구비율(2021a)

〈표 2〉를 보면 전남 지역 중 시 단위 고령인구 비율은 현재 나주시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수(19.8%), 목포(17.2%), 순천(16.0%)순이었다.

농어촌지역인 전남 중 도시라고 일컫는 곳의 고령 인구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표 3〉 목포시 노인복지 예산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일반회계예산	7,388억원	8,220억원	8,555억원
사회복지예산	3,154억원 (42.69%)	3,557억원 (43.27%)	3,829억원 (44.76%)
노인청소년예산	1,066억원 (14.43%)	1,199억원 (14.59%)	1,370억원 (16.02%)

출처: 지방재정 365

〈표3〉에서처럼 목포시의 노인복지 예산 현황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도 2019년 42.69%에서 2021년 44.75%로 증가하면서 노인청소년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예산은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 예산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예산 또한 정확한 통계적 예산인지 알 수 없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표4〉 목포시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내용 현황에서처럼 한 담당과가 아닌 여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칸막이 정책으로 인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음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표 4〉 목포시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내용 현황

담당실과	사업내용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활성화지원, 노인회관/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및 합참단지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지원사업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센터 읍면동 사례관리,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노인행사지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복지증진사업 경로당 시설 및 운영, 경로당 찾아가는 교실 경로당 무료급식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보건소 건강증진과	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하당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구강건강센터 치매검사센터, 노인결핵검사, 자살예방 낙상예방 등 예방 교육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교육체육과	노인체육활동사업, 성인문교육
자치행정과	동행정센터 방문간호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근 노인 돌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공급기관의 서비스 제공 흐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종전의 경우와 달리 최근에는 1개의 기관에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을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간의 유사성으로 인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급기관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표 5〉 복지부처의 담당부처와 집행기관

영역	주요제도	담당부처	집행기관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국방부	국방부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미래창조과학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주택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의료보장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NH공사, 지방자치단체
	사회문화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지방자치단체
어른신문화프로그램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지속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간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와 서비스간 연계, 조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5〉의 복지부처의 담당부처와 집행기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당 중앙부처가 있고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허브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사업운영에 있어 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조정의 역할보다는 직접 서비스 수행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운영의 어려움에는 상위 지자체의 유사 재가서비스의 도입, 별도의 통합서비스망 구축과 같은 중복의 문제가 작용하였다. 일선현장에서는 서비스 수행에 혼선이 가중되며 이는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관련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및 조정기구의 부재 역시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과 지침, 보조, 홍보, 사업의 평가 지도 감독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이든, 중앙정부이든 공급주체의 컨트롤 타워인 전담부서가 있거나 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대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 이중수혜와 누락이 없는 수요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경우 A라는 노인에게 복지 담당자가 언제 방문했고, 어떤 복지 자원을 받고 있으며, 어떤 복지시설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A노인의 욕구가 읽혀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칸막이 정책에 막혀 서로 공유나 협업이 않고 있다. 이에 대상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공급받은 내용이 기록되고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복지와 건강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한 서비스의 중복수혜가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다.

지역의 노인복지 서비스 서비스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내용의 차별화가 없다.

서비스내용의 일관성 있고 다양한 제공을 위해 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지침, 업무내용의 한계 등을 표준화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제시가 필요하다.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내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대상자들 간에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있어서 차이가 미미하다.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유사서비스가 산재하여 이들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지역 내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는 서로 다른 운영체계(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실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시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은 대체로 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의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건강증진, 주거환경개선지원, 서비스 연계 등이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역시 예방적 사업의 일환으로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등이 주를 이룬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 또한 복지관의 선택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나 대다수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로당에서도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 등의 급식지원 서비스, 건강증진, 주택수리 사업 등이 운영되면서 유사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긴급한 욕구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서비스 명칭이 다름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통합된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적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대다수는 중앙정부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서비스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 하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간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수요가 동일하시 이 같은 중복은 공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노인 복지 서비스의 정보가 데이터화 되지 않고 있어 통합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통합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 제공되었는지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칸막이 정책의 문제점이 보완되고, 이증수혜나 누락되는 대상자들을 발굴해 낼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어떤 노인이 일자리가 필요한지 고독사의 위험에 처했는지 알게 되는 수요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노인 전담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인구의 고령화의 진행은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복지자원 확충과 자원 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소득보장,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등 관련 사회보장정책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확대와 노령부문 사회보장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공급자 중심, 중앙부처별 칸막이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 지방정부 포괄 사업비 이양이나 사업에 관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4.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 과제: ‘봄날’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통합 중복수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하여 어르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들과 더불어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스마트컴팩트 도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처럼 복지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많은 예산이 들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너무나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목포지역의 집행부에서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은 방문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소 방문간호사 그리고 민간복지 기관 노인 돌봄 종사자로 민·관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복이음시스템(국가시스템)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보편적 복지과 보장 복지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시스템에 대해 고민했고 이 시스템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실무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복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 등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서울시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구축비용 15억, 매년 운영비용이 8억이 드는 상황에서 재정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고, 노인복지의 기초적 통합센터의 형태를 사회에서는 이미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중복수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 한다.

최근 화성시와 춘천시의 경우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지역 내 어르신들께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다.

중복수혜나 누락이 없는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해결을 위한 '봄날' 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다.

5. 나의 지역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어떤 상황 하에서 가치 있는 희소자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단정 지을 때 권한이 있거나 더 많은 몫을 받은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 노인 복지서비스는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의 갈등을 야기한다.

노인 복지서비스의 경우 젊은 층과 노년층의 입장이 다르다.

젊은 층 입장에서는 선거 때마다 노인 복지 공약만 넘쳐 난다. 결국 재원은 젊은 층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다.

노년층 입장에서는 노인 복지를 하는 것은 지금 노인들 뿐 아니라 젊은 층들도 나중에 받을 복지 혜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젊은 층과 노년층들 사이에 불공정의 감정 생기고 세대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봄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투명화를 꾀한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읍면동 사례관리, 생활 관리사, 지역사회 보장체, 경로당, 통장, 보건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모두들 다른 방면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노인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각기 수행을 하는 있는 상황에서 '봄날' 복지정보시스템으로 노인복지의 정보가 일원화 될 수 있다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의 문제 뿐 아니라 노인의 수요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개방·협업시대에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다른 성격의 형태로 유사하게 편성되어 협업하지 못하면 예산의 투명성이 결여된다. 폐쇄성을 지양하고 노인복지의 컨트

를 타워가 지정되고, 통합시스템을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며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더욱더 나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 한분 한분의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사는 하루까지도 눈부신 '봄날'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봄날' 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지방재정 365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나라살림리포트 제166호(2021. 5) 문재인정부 4년 정량분석 vs 박근혜정부 4년과 비교'

정흥원, 심창학, 한은희, 황규성, 류진아(2014) 노인복지정책추진체계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역 섬 자원 활용 방안 정책 제언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1. 왜 섬 자원 활용인가?

가. 섬 자원 활용의 중요성

1) 국가적 차원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지리적 요건 상 섬 지역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보, 국가적 해상 안전확보 등의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섬 자원은 국토의 경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해양자원의 개발, 관광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해상풍력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근거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전략대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육지부에 개발된 관광자원은 여건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해양관광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관광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2) 광역적 차원

대한민국의 해안선을 보면 동해안은 단조롭지만 남해안과 서해안은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임을 알 수 있다. 리아스식 해안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다. 전라남도는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섬 자원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도 내의 섬 자원의 특성화된 개발을 통해 섬 자원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섬 관련 정책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 및 집행이 필요한 지역이다.

3) 지역적 차원

대한민국 남해안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여수시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지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특히 여수는 관 내에 365개의 유, 무인도가 존재하며 동, 서해안의 지형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섬 자원개발 모델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다. 즉, 섬 자원은 여수시가 가진 비교우위의 자산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남 여수는 미래에셋의 경도 개발을 위한 투자와 화양지구 개발 사업 그리고 연육연도교 사업 등 수많은 해양 관광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수시 차원에서도 2026년 섬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지역의 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나. 섬 자원 활용의 필요성

1)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계획의 대상지로서 섬

섬 자원은 그동안 지역발전 전략과 대상에서 소외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제는 제한된 공간의 육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일정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차별화될 수 있는 섬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섬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섬 자원 활용

섬 지역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섬 주민들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시행되었다. 때문에 섬 지역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소멸의 직접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통해 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3)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대상으로서의 섬

여수시는 세계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여수시는 명실상부한 남해안 관광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적의 공간과 자원이 바로 섬이다.

그리스 산토리니, 이탈리아 이츠키아, 카프리 섬 등과 같은 성공적인 관광모델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섬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특화된 모델을 집적하기 쉽고,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섬 자원을 통한 관광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다. 여수지역의 섬 자원 개발 여건

1) 여수시 섬 자원현황

여수시는 365개의 섬을 가지고 있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 중 유인도서는 46개이며 인구 100명 이상 유인도는 15개이다.

여수시 관내 섬은 양식 및 해조류 생산, 방풍, 해풍 쏘 등의 농산물 등의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여수시 섬 자원 활용의 기회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는 민간 기업의 투자 관심으로 이어지고 투자 유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의 해양 관광시설 개선 및 확충과 정부의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지원 노력이 맞물려 여수시 해양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3) 여수시 섬 자원 활용의 위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콘텐츠 및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은 여수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기에 여수만의 특징점이 따로 있지는 않다. 여수를 포함한 섬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섬 자원을 활용한 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인근 국가 또한 해양관광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라. 여수시 섬 자원을 활용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섬 자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와 다양한 도전, 산업경제 환경의 변화 등의 위기를 고려하면 지역 내 섬 자원활용 정책은 기존의 방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여수만의 특화되고 실현가능한 섬 자원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 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경도 개발 사업, 화양지구 개발 사업, 연육연도교 개발 사업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여수 거북선 축제, 향일암 축제, 영취산 진달래 축제, 동동북축제, 여수밤바다불꽃축제 등 여러 축제와 이벤트를 국제적 행사로 성장시켜 국제적 인지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③ 여수시에 위치한 365개의 섬에 각기 고유의 테마와 컨셉을 부여하여, 각 섬마다의 재미를 만들어야 한다.

이 연구는 위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수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섬 자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섬 자원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여 여수지역 섬 자원활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섬 자원 활용 사례 및 시사점

가. 섬 자원 활용 사례

1) 남이섬

- ① 화장품 '설화수' 공병으로 나뭇잎을 만든 남이섬 선착장 나무
- ② 2010년 삼성증권 사옥 이전 시 생긴 폐강화유리 재활용한 첫키스 다리
- ③ 약 3000여개의 소주병을 쌓아 만든 이슬정원은 이슬이 가장 먼저 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남이섬의 재활용센터와 폐목재로 만든 표지판과 조형물 또한 남이섬만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2) 나오시마

- ①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함께 협의하여 섬 이미지와 테마를 만들어왔다. 이에 민간기업인 베네세 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고,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를 섭외하여 섬 고유의 테마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와 같이 지역민의 참여속에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도모와 관광 자원 잠재력 발굴 및 재창조, 지역 인지도 및 이미지 재고를 야기하였고 이는 관광객 증가와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 ② 이 중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자원(미술관, 전시관)으로 활용한 ‘빈집 프로젝트’가 있다. 저명한 건축가 및 예술가, 권역 별 총괄 계획자(PM)로 임명해 프로젝트 진행, 관리, 관광패키지화하여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나. 섬 자원 활용 성공 요인

1) 자원성

그리스의 델로스, 일본의 야쿠시마, 덴마크의 삼소 등의 섬은 지역자원을 그대로 최대한 활용하여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2) 지역성

일본의 하츠시마, 뉴질랜드 와이헤케, 한국의 외도 등의 섬은 지역민이 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풍부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3) 화제성

일본 나오시마, 한국의 남이섬 과 보길도 등의 섬은 자원의 재활용이나 자체 축제,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4) 지속성

일본 나오시마, 한국의 남이섬과 외도 같은 섬은 테마를 정한 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발전시켜온 섬으로서 그 섬만의 고유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5) 접근성

앞서 말한 이 모든 섬들의 공통점은 해상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최대한 높였다는 부분이다. 섬 자원 개발에 있어서 접근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 섬 자원 활용 실패요인

1) 지역리더의 부재로 지속성 저하

섬 자원 활용에 있어서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지역리더라는 구심점이 없으면 증구난방의 의견 제시로 인해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워진다.

2)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섬 자원 활용에 있어 각자의 이권과 관점으로 인해 상호 의견 충돌이 벌어지며 이와 같은 내부 분열은 그 외의 지역민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3) 프로그램 중심보다 시설 중심의 접근

섬 자체의 테마나 이미지 구축은 뒤로하고 단지 시설 투자만 신경 쓸 경우 관광객들은 한번 정도만 와 볼 만한 곳으로 각인될 수 있다.

4) 단계적 개발계획의 부재

정확한 테마 설정이 없이 우선 개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흥물화 되는 경우가 많다.

5) 관광시설 운영의 전문성 부재

지역민의 교육을 통해 섬 자원 활용의 연속성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분	성공요인	실패요인	시사점
활용자원	자원성	시설중심 접근	섬 고유자원의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시설적 요소가 정성적 요소에 대한 연구 개발 필요
참여주체	지역성	지역리더 부재 이해관계자 갈등	지역민의 참여를 위한 리더육성 및 공동체 소통교육 필요
홍보	화제성	전문성 부족	전문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법 도입 및 전문가 육성 섬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필요
사업시기	지속성	단계적 개발 부재	장기계획에 의한 단계적 프로그램 및 시설도입, 교육과정에 대한 로드맵 구성 및 주민협의 필요
사업장소	접근성		섬 자원 활용을 위한 접근경로의 다변화 필요

3. 섬 자원 활용 성공 전략

가. 섬 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여수시 섬 자원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Hardware(개발)

여수시 중심권에 국한되어 있는 교통 및 숙박 인프라를 각 섬 지역으로 확장하여 편의성 증대에 힘써야 하며, 각 섬마다 고유의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성에 맞는 관광시설과 경관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

② Software(진흥)

각 섬마다 테마가 있는 관광 상품과 코스, 축제 및 이벤트를 발굴하여 차별점을 두고, 이에 맞는 관광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Human ware(혁신/교육)

연속성 있는 섬 자원 활용을 위해 각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추진주체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나. 섬 자원활용의 원칙 제언

여수시는 365개의 각양각색 아름다운 섬들을 보유한 천혜의 해양관광산업의 보고이다. 비록 지금은 접근성과 인프라 시설의 미비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 여수시와 지역민의 관심을 통해 발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간 자본 유치로 인한 개발은 섬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수 있으며, 소중한 관광자원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섬 자원 활용 방안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우선으로 보존하면서 지속 개발이 가능한 발전 방안을 설정하여 환경 친화적 섬 개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상기해야 한다.

다. 섬 자원 활용을 위한 실천 전략

1) 바다낚시 활성화를 위한 피싱 파크 건설과 같은 지역성에 맞는 관광 시설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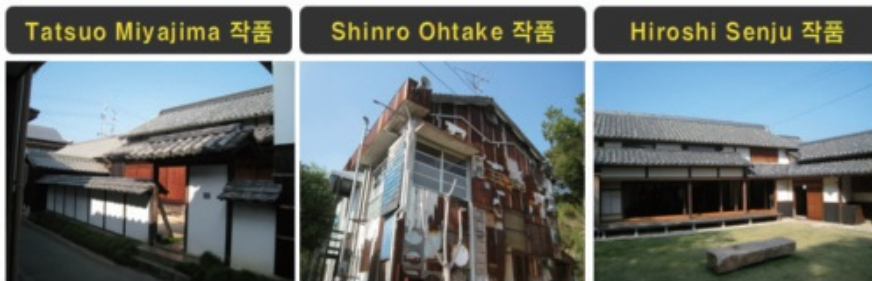


〈포항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설치 사례〉

2) 교통 인프라 구축의 예시로는 수상 택시 도입을 통해 섬 접근성을 강화한다.



3) 여수 지역 섬 표준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경관디자인을 도입한다.



일본 나오시마 섬의 빈집 프로젝트 성공 사례

4) 섬 별 특산품을 활용한 푸드 투어를 만들어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코스를 발굴한다.

설레임 가득한 여수의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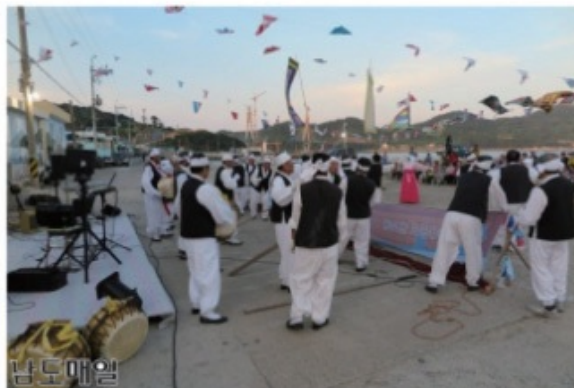


5) 섬 고유 문화를 전승한 축제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제공한다.

여수시, '만선 기원' 거문도 전통 '풍어제' 재연

22~23일 삼산면 거문도 거문리 마을 앞바다서

특설 수상무대서 풍어제과 거문도 뱃노래 등 재연



6) 기존 여수시내권 관광 안내에 머물던 모바일 앱 뿐만 아니라 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관광 홍보 및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섬 주민 리더십 교육 및 갈등 해소 교육 강화를 통해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군산 고군산군도 리더 주민 설명회 사진)

8) 주민 중심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통영섬지니와 함께 섬으로 찾아가는 농DD이들

통영섬지니협의체, 섬으로 찾아가는 농촌 디자인 교육 실시

김홍준 기자 승인 2020.08.21 13:39



▲ 통영섬지니와 함께 섬으로 찾아가는 농DD이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익산시 사례 중심)

오임선 익산시의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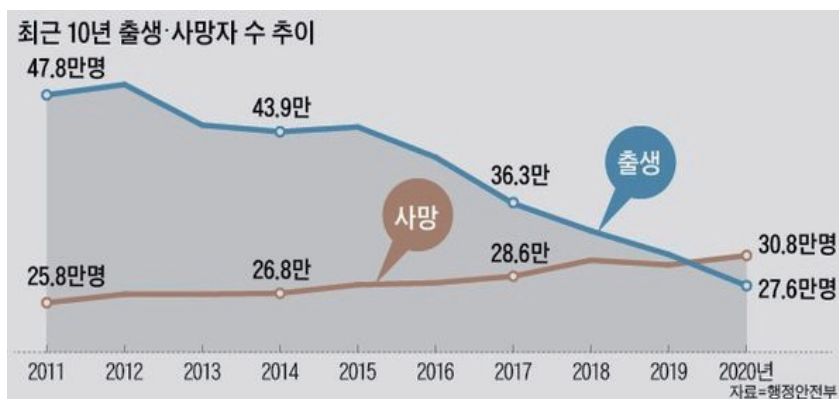
I. 들어가며

1.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우리나라는 작년에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처음 겪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게 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이 97곳(42.5%)에 이르며, 특히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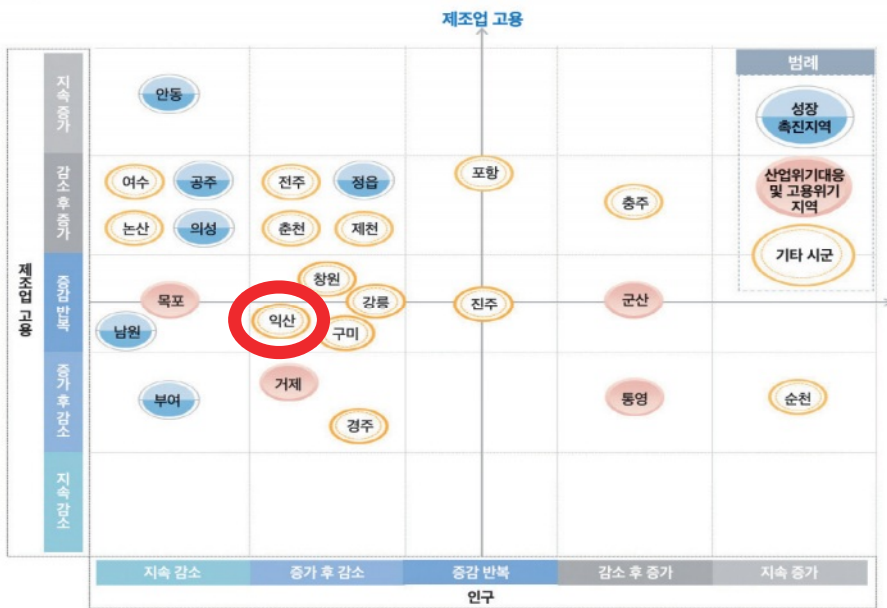
인구감소는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과 소비, 경제성장률, 부동산, 공적연금수급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은 이를 쉽게 느낄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을 체감할 것이기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에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



2. 지방중소도시 실태

지방중소도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¹⁾와 제175조²⁾에 의거하여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1개 도시가 지방중소도시에 해당하며, 전라북도에는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등 5개의 도시가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중소도시들은 순천시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축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규모가 축소되자 기업들의 지속적인 이탈과 신규 진입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출처 : 국토정책brief 2021. 5월호 p.7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41개 지방중소도시 중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도시는 삼척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영주시, 문경시, 통영시 등 12개 도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과거에는 지역의 거점이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교통의 발달, 외곽지역 개발, 혁신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거점도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구감소 양상의 특징은 유소년 인

1)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로 파악됐다.

이처럼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이며, 정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각종 시책과 관련 법률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모든 대책들의 근간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리가 튼실해야 풍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해결책들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인구문제의 국가적 해결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인구문제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이다.

II. 익산시 인구현황 및 인구유입 정책

1. 익산시 인구현황

익산은 인구나 도시 규모에서 광주, 전주와 함께 「호남 3대 도시」라 일컬어져 왔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32만 8천명으로 출범한 익산시는 1999년 33만 7천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2021년 4월 기준 28만 399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순천시에 비해 인구규모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 익산시 인구 수 】



출처 : 익산시

이렇듯 익산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익산시가 지난해 타 지역으로 이주한 전출자들을 대상으로 유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업 38%, 가족문제 27%, 주택 17% 등을 전출 사유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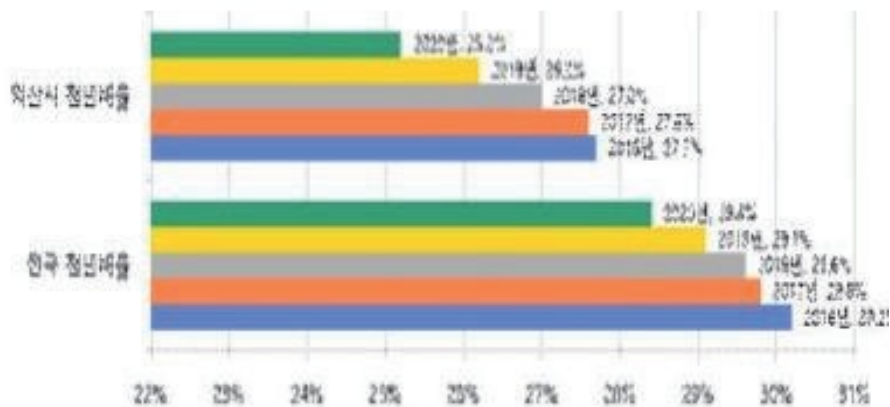
【 2020년 전출사유별 현황 】

구 분	전출자	주민등록에 의한 전출 요인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 체	19,629	7,463	5,293	3,405	1,375	571	266	1,256
		38.0%	27.0%	17.3%	7.0%	2.9%	1.4%	6.4%
전라북도 내	7,786	2,177	2,174	1,978	394	263	144	656
		39.7%	28.0%	27.9%	5.1%	3.4%	1.8%	8.4%
전라북도 외	11,843	5,286	3,119	1,427	981	308	122	600
		60.3%	44.6%	26.3%	12.1%	8.3%	2.6%	5.1%

출처 : 익산시

특히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청년층(18세 ~ 3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체 연령대에서 청년층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2%p 낮은 25.2%에 불과하여 도시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청년인구 비율 】



출처 : 익산시

2. 익산시 인구유입 정책

익산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시세(市勢) 위축 현상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다양한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입세대 전입장려금(1명당 10만원), 전입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최대 100만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기숙사비의 50%), 주소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금(최대 100만원), 집단전입 장려금(1인당 10만원),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열차 정기승차권 운임의 50%), 전입자 무료건강검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구전입 대책들은 대부분 지원금 지급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으며, 동족방뇨(凍足放尿) 형태의 단기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대책들은 타 자치단체와 거의 유사하여 시민 공감을 얻거나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p>01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중 2021. 1. 1. 이후 익산시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디아로움 지급 ※ 주소전입 학생 지원 및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기획예산과 ☎ 859-5165 <p>02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시민(※ 공무원 제외) · 지원내용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한 관외자가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시(최종 전입자 포함) 5명이상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기획예산과 ☎ 859-5165 <p>03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기숙사 입소생)으로 2021. 1. 1. 이후 익산시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고등학교 기숙사비의 50% 지급 · 신청장소 : 해당 고등학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기획예산과 ☎ 859-5163 <p>04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고등학생 - 최초 학기 30만원(2021.1.1. 이후 신청자에 한함), 이후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대학교(원)생 - 최초 학기 30만원(2020.1.1. 이후 신청자에 한함), 이후 학기별 10만원, 최대 100만원 	<p>05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자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 기관 · 단체, 기업체, 군부대 ※ 전입자 10명 이상시 신청 ·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입자 1인당 10만원 (개인당 1회만 지급) · 문 의 : 기업-신성장동력과 ☎ 859-5225 기관 · 단체 · 군부대-행정지원과 ☎ 859-5173 <p>06 관외 출퇴근자 열차 운임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 지원(시지역화폐 익산디아로움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익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 문 의 : 기획예산과 ☎ 859-5163 <p>07 태극기, 쓰레기봉투, 익산사랑카드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세대(익산사랑카드: 만19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 ① 태극기 : 세대주 1세트 ② 쓰레기봉투 : 세대원 각 20L 3매 ③ 익산사랑카드 : 공공시설, 민관협약업체 약 24개 업소 할인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p>08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자료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전입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간기능 검사 등 총 23종에 대한 무료 검진 · 구비서류 : 전입주소 기재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보건소 · 문 의 : 보건지원과 ☎ 859-4845
--	--

Ⅲ.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

1)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악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인력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지역과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감소시키게 되며, 인구의 속성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기준 194,040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5,000여명씩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성장력 저하가 우려된다.

【 익산시 생산가능 인구수 변화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수(명)	213,581	212,037	211,453	206,355	200,214	194,040

출처 : 익산시

2) 소비위축 및 디플레이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력이 떨어지고 노동자 한 사람이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총부양비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줄어든 소비는 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져 기업투자가 위축된다. 이 같은 악순환은 결국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어 인구감소가 고용과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요소를 골고루 발목 잡으면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3) 도심공동화 가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3)에 따른 활성화지역 선정기준에 따르면 인구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쇠퇴 징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전체 읍·면·동 241곳 중 185곳(77%)이 쇠퇴지역으로 꼽혔다.

3)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북지역 도심쇠퇴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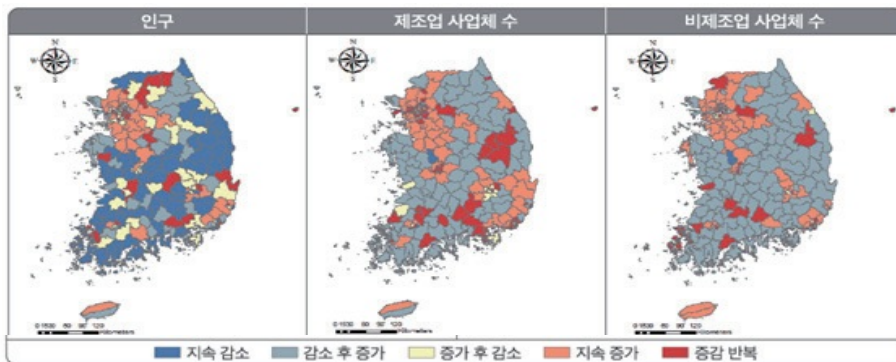
4) 지역사회의 영향력 약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인구 상하한선을 139,000 ~ 278,000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로인해 당시 인구가 28만명을 약간 웃돌던 익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익산의 국회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치적 위상이 축소된다는 의미이다. 그리되면 가뜩이나 낙후되고 지역개발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에 엄청난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질 것이다. 지역사회 이미지 및 위상 실추는 덤이다.

2.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

1) 일자리 증대

인구유입을 위한 최상의 키워드는 일자리이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을 불문하고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인구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자리를 따라 인구가 이동한다는 방증이다.



출처 : 국토정책brief 2021. 5월호 p.6

일자리 증대의 첩경이 기업유치임은 모든 지자체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하나라도 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따른 기업체 수는 한정되어 있고 기업의 투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국가 경제나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청년 실업률 증가는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청년창업의 확산이다. 창업 확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창업보육지원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실패의 경우 재창업에 대한 자금 및 서비스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업자가 갖는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줄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익산시의 경우 청년창업 장려를 위해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차량 구입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창업 드림카 지원 사업」, 창업 시 시설비의 50%와 1년간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2) 정주요건 개선

최근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의 근간을 이루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지금도 주거 여건에 따른 인구이동이 빈번한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거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몫이라고만 할 수 없으며, 지자체도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가 익산시의 민간특례 공원개발이다. 익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5개의 공원(마동, 모인, 소라, 수도산, 팔봉)에 7,600여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올해 4월에 전북 최초로 착공하였다. 이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70%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서 도심 속 친환경 주거의 개념이다.

공원명	공원 테마 및 주요시설	건설사	분양 예정	세대수
마동공원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 커뮤니티센터, 풍경서고(전통북카페), 수림재(예절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	GS지이	2021.	1,446
모인공원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 : 숲속도서관, 청년갤러리, 청년광장, 연꽃정원, 생태습지 등	중흥 S클래스	2021.	968
수도산공원	남부권 복합커뮤니티 공간 : 수영장, 복합문화센터, 숲속도서관, 산수침경원, 민속놀이마당 등	제일 풍경채	2021.	1,515
팔봉공원 (1지구)	아름다운 향, 꽃, 빛을 품은 문화플랫폼 : 팔봉노을전망대, 이리아외공연장, 기적의 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서희 스타힐스	2022.	2,330
소라공원	도심 속 자연이 품은 황금빛 문화공간 : 소라문화광장, 꿈꾸는 도서관, 출발문학마당, 실벗마당 등	공모 선정예정	2021.	1,357

또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정주여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출산 및 보육환경의 조성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는 이를 위해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보육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지자체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익산시의 주요 시책에는 시간당 1천원의 보육료로 야간과 휴일에도 영유아를 보살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야간 및 휴일 시간제 보육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3)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

지방중소도시의 도심지역은 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현재 쇠퇴하였지만, 인구 감소시대에 도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측면에서 도시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다. 이 공간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시스템은 정책 초점이 인구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력이 미흡했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지향적 도시정책에서 축소도시정책으로 전환할 때이다. 빈 사무실과 상점, 근대문화유산, 공원 등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유희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시설의 활용방안은 공공문화센터 조성, 청년 등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벤처형 상업공간 제공 등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익산시도 한때 익산의 명동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익산역 앞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오래전에 폐업하여 도심속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4) 도시간 연계협력 강화 및 국가적 지원

정체나 축소의 경향을 보이는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들은 주변지역으로의 통근 및 통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의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와의 연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익산에 일터가 있음에도 전주나 군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최상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들이 더 이상의 쇠퇴를 막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력이 필연적이다. 도시간 흐름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인근 도시와 연계협력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각종 인프라를 공동 이용 및 관리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연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행정협의회, 시의장단 협의회 등) 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에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중소도시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IV. 맺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2017~2067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수없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적으로 대칭을 이루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중소도시들은 존립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의 존립 기반인 인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다. 익산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의 각 지자체

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 내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은 아쉬운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비단 지자체의 문제로만 귀결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의 시행, 축소도시 지향적 도시 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중소도시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바탕 위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영켜 버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사회적 공동체마을

이정하 전북도당 당직자

■ 부안군 내 농촌마을의 지역 소멸 위기

○ 인구 유출 현황

전라북도 부안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부안군의 인구는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이후 2%가 넘는 감소율을 보이며 총 인구수가 50,000명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였다.

표 1 부안군 2015 - 2020년 총 인구수 변화(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구분	인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안군	총 인구수	56,848	57,005	56,086	54,441	53,295	52,140
	전년대비 증감률	-	0.27%	-1.61%	-2.93%	-2.11%	-2.17%

인구수 감소의 원인은 외부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이뤄 졌기 때문이다. 2019년 전 입, 전출 인구수는 각각 4,988명, 5,682명으로 전출 인구수가 694명 더 많았다. 그나마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부안으로 들어온 경우를 제외하면 1843명에 불가하다. 부안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유입 집단이 되어야 할 귀농, 귀촌인들은 지역 갈등, 문화 적응 등을 겪으며 다시 부안군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

○ 인구 유출 속 고령화 심화

인구 유출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부안군은 단순한 인구 유출 뿐 아니라 지역 고령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2020년 부안군의 인구 비율 중 30대 이하는 27.8%에 불가하였다.

표 2 부안군 연령대별 인구수 및 인구비

	연령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구수	2,561	3,723	4,305	3,903	6,145	8,845	9,629	7,708	5,321
퍼센트	4.9%	7.1%	8.3%	7.5%	11.8%	17.0%	18.5%	14.8%	10.2%

만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410.95명에 달해, 전국 평균인 138.8명, 전라북도의 185.4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높은 노령화 지수는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 인구 감소를 의미하고 있다.

○ 농촌 소멸의 가속화 - 노인층의 유출

최근 들어, 부안군 내 농촌마을은 인구 유출 현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층 역시 농촌마을을 떠나고 있다. 부안군의 노령화지수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병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복지 및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부안군 내 의료서비스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절대적 부족하다. 2021년 3월 기준 전체 노인요양시설은 8곳에 불과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데이터에 따르면 부안군의 병원 접근성은 다음 그림과 같았다. 그림과 같이 그나마 부안군 내 의료시설이 부안을 근처에 밀집하기 때문에 많은 농촌마을 내 고령자들이 읍내 혹은 부안 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안 내 농촌마을들은 고령화 현상을 넘어선 마을 소멸 위기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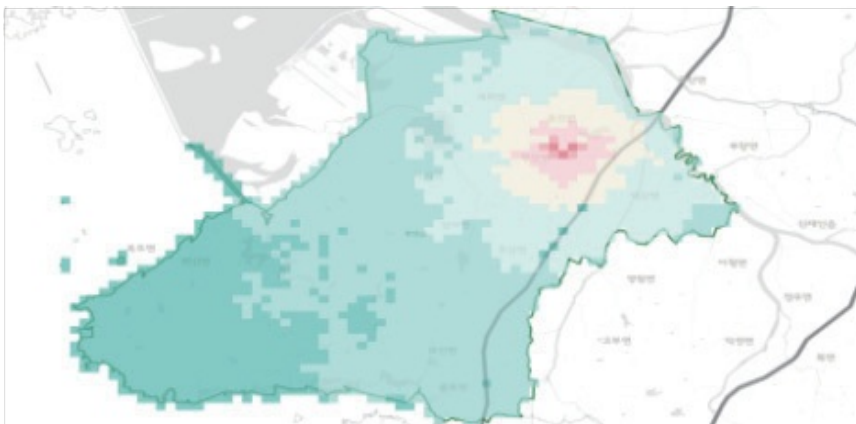


그림 1 부안군 내 병원 접근성 지도

■ 지역의 비전

발표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안군의 지역 비전은 부안군 유출 인구가 다시 한 번 부안에서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 조성이다. 부안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며 방황하는 청년, 의료서비스, 돌봄시설 부재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 고향을 떠나 자녀들의 도시로 가는 노인들, 낯선 곳에 새로운 생활을 꿈꿔 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떠나는 귀농 귀촌인들이 다시 부안에서 함께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지역 안에서 새로운 청년, 청소년이 꿈을 꾸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모든 주민이 상호 도와 가며 행복한 삶을 이뤄 농촌마을의 가치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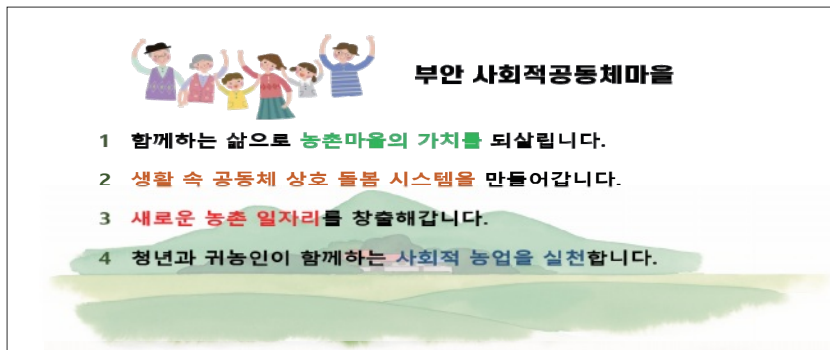


그림 2 부안 사회적 공동체 마을 비전

■ 정책과제

○ 사업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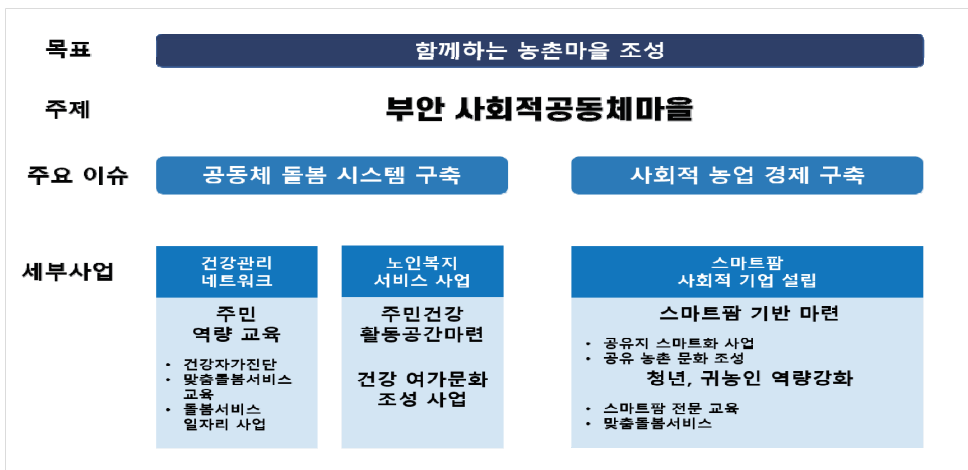


그림 3 사업전략 및 목표

○ 전략 수립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농업이 선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한 농촌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있다. 조직 형태는 본 제안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농림축산부는 사회적 농업을 농촌분야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며 사회적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 사업을 추진해가며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2021년 전국 60곳이 있으며, 전북에는 10곳이 존재한다.

표 3 농촌진흥청 인증 전라북도 내 사회적 농업 법인

전북지역 사회적 농업 농촌진흥청 공식 인정 법인	
지역명	법인명
무주	•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완주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키움협동조합
완주	• 완주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임실	•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익산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 정원
	• 익산시 농촌마을 연구회
고창	• 농업회사법인 행복한 치유농장
군산	• 사단법인 산돌
진안	• 교육협동조합 마을 학교

○ 건강관리 네트워크사업 - 주민역량교육 - 건강자가진단 교육

전문 의료시설이 아닌 마을 단위에서의 상호간 건강관리를 위해선 건강 관련 기본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 부안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노인건강질환에 대한 기본 교육 및 자가진단 방식에 대한 교육은 응급상황은 물론 생활 속 건강에 대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표 4 부안군 생활건강 교육 관련 보건소 진행 프로그램

생활건강 교육 관련 보건소 진행 프로그램	
사업명	사업 내용
성인기 건강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건강교실 • 건강증진센터 • 웰빙식생활건강센터 • 건강생활실천 홍보 •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후 질환관련 정보 제공 • 질환별 건강행태 유의사항 • 대상자 내소 및 상담 진행 • 건강생활 습관 관련 상담 진행 • 영양, 신체활동 전문상담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지속적인 상호 건강관리를 위해선 식생활, 힐링, 치매예방 등의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역시 중요하다.

표 5 건강네트워크를 위한 추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안

추가 제안 프로그램	
사업명	사업 내용
건강 요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연령대, 보유 질환, 체중 등에 따른 맞춤형 식생활 습관이 필요 • 개인별 맞춤형 식단 가이드와 함께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요리 프로그램 진행
치매예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습관 교육 프로그램 • 생활 속 단체놀이 공유를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마음치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불안 등의 감정 상담 프로그램 • 주민 상담 프로그램 • 힐링 문화체험 프로그램

식생활 건강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 건강관리 네트워크사업 - 주민역량교육 - 맞춤형돌봄 서비스 교육

맞춤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마을 내 주요 활동가를 모집한다. 주요 활동가는 전원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현재 부안군에서 진행 중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6 부안군 운영 노인복지서비스

부안군 노인돌봄 서비스 개요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독거, 조손, 고령부부 등)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의 돌봄 필요 노인
대상자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돌봄군(월16시간 ~ 40시간 미만) - 신체적 기능제한이 큰 대상 •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
서비스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안부확인 • 사회참여 • 신체, 정신건강 교육 • 일상생활 지원 • 민간 후원자원 연계

부안 사회적공동체 마을에선 일반돌봄군 역할에 특화된 활동가를 운영한다. 마을 단위 활동가기 때문에 월 16시간 미만이 아닌 일상 생활 속에서 수시로 활동을 진행한다. 돌봄서비스 활동가들의 활동은 일지 등으로 기록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활동가는 인근 여러 마을 단위 활동을 통해 사회적공동체마을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한다.

표 6 돌봄서비스 핵심 추가제안 사업

추가 제안 부분	
구분	내용
노인 주간 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지내며 주기적으로 활동가들이 관리
재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내 노인과 지역의 어른신들께 맞춤형 생활지원 및 노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마을에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특화 프로그램 및 관련 물품 전달 네트워크 구축
아동복지센터 마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대상을 노인에서 아동까지 확대하며 농촌 마을 내 귀촌, 청년 부부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 확보로 교육과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마련



○ 노인복지 서비스사업 - 주민건강활동공간 마련

공동체 활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할 핵심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마을회관 내 주민건강활동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에서는 간단한 건강 측정(혈압, 혈당 등)과 함께 운동 프로그램 진행, 건강식문화 공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 노인복지 서비스사업 - 건강 여가문화 조성사업

주기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마을 공동체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보건소 내 건강 여가문화 조성사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하여 불안사회적공동체마을 사업의 차별성으로 발전한다.

표 7 부안군 보건소 진행 건강 여가문화 프로그램

건강 여가문화 관련 보건소 진행 프로그램	
사업명	사업 내용
노년기 건강증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건강경로당 • 폼지락체조교실 • 동네방네 9988 걷기 동아리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표 8 건강여가문화 구축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

추가 제안 프로그램	
사업명	사업 내용
실버 체조프로그램	• 스트레칭 위주의 노인 특화 건강 프로그램
노인여가활동	• 단체로 만들기, 꽃밭 가꾸기 등의 공동 여가활동을 진행하며 농촌마을 삶의 활력 증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연령대 및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생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세대 공감 운동 프로그램	• 마을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설립 - 스마트팜 기반마련

부안군 내 다양한 공유지에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한다. 공유지 및 은퇴자 토지, 사회적 농장등을 활용하여 귀농을 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없는 청년들에게 부담없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참여를 제고한다. 또한 공유지 내에 마을 특화 전문 농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농촌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일을 나누는 문화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기에 인력부담이 없어 마을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하면서도 지속적인 공동 농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농업사업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농업활동이 자리를 잡게 되면 부안군의 지원 하에 청년사회적농장을 만들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진행 한다.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설립 - 청년 귀농인 역량강화

스마트팜의 경우, 기술, 프로그램, 통신 등 다양한 관련 지식을 요구한다. 기술 습득력이 좋은 청년층과 통신 등 최신 기술에 익숙한 귀농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인이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과 융화되는 계기로 삼으며, 청년, 귀농인은 마을 주민에게 스마트팜 관련 지식을, 마을 주민은 청년, 귀농인에게 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



○ 사회적공동체마을 사례 - 전남 영광 '여민동락'

본 제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내 사례가 존재한다. 전남 영광 여민동락은 농업과 고령 노인 일자리를 연결시켰으며, 동시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 및 청년들에게 전문 농업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의 적응을 도우며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고향 집에서 여생을 살고 싶은 노인,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농촌 정착이 힘든 귀농 청년 등에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마을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농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제안과 그 맥락이 일치한다.

여민동락 모습



여민동락 노인돌봄 서비스 모습



■ 기대효과

○ 농촌마을 복지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

현재 부안지역뿐 아닌 모든 농어촌지역은 소멸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더라도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의 부재로 현장의 체감율은 극히 떨어지는 무제가 있다. 하여 사회적 공동체 마을 사업을 통해 활동가를 조직화하고 거점화하며 도시인의 유입을 유도하여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을 농촌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 귀농인 등의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부안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노인 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를 마을 단위 돌봄 서비스로 해결하며 농촌 내 고령자들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도시의 주택난과 일자리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가치를 제발견하여 정주민구 뿐 아닌 유동인구의 증가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은퇴후 지역으로 돌아와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 노인복지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기본소득 창출

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농촌 마을 내 주민들이 농업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 사업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체적으로 농업을 하기 힘든 농촌마을 주민에게는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창출한다.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현재 노인주간 보호시설,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직접적으로 돌봄서비스 양성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유휴토지를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창출하고 무엇보다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여 농업 수입만으로 자립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동체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생산과 소비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관광자원까지 연계한 농촌 복합 거점시설로 활용 가능하며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농사기술과 지역의 특성 등을 교육하고 본격 이주하기 전에 1년 살기등 지역에 있으며 소득 창출 방향과 삶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율을 높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돌봄체계를 통해 자녀들에게 이주하는 노인인구를 지역에서 자원으로 활용하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일자리

와 지역소비활동을 창출하고 도시의 자년들이 부모님들을 지역에서 만나게 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업적 농업에서 벗어나 자립적 농촌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취약계층에 대해 하향적 지원이 이뤄졌던 기존 지원정책에 반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운영되는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동시에 일자리와 정부의 추진 정책의 체감율을 높여 각종 농업 농촌 사업과 복지 사업을 현실감있게 구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과밀화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석으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화

사회적 농업은 앞으로 유럽의 경우를 지켜보았을 때 농촌 사회의 커다란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농업의 경우,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이 되기에 그 중심이 될 축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부안군에 사회적공동체마을이 자리 잡게 되면 그곳을 거점으로 인근 마을과 다른 10개면에 확장 사업이 활발해 질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의 복지사업 및 돌봄사업의 허브역할을 하여 서로 연대와 협력으로 사용자들의 서비스 질이 좋아질 뿐 아니라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곳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과 노인 아동에 이르는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와 돌봄을 통하여 공동체가치를 구현하며 도시민들을 지역으로 부르는 마중물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언택트 시대! 전북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책 제안

장미숙 전북도당 당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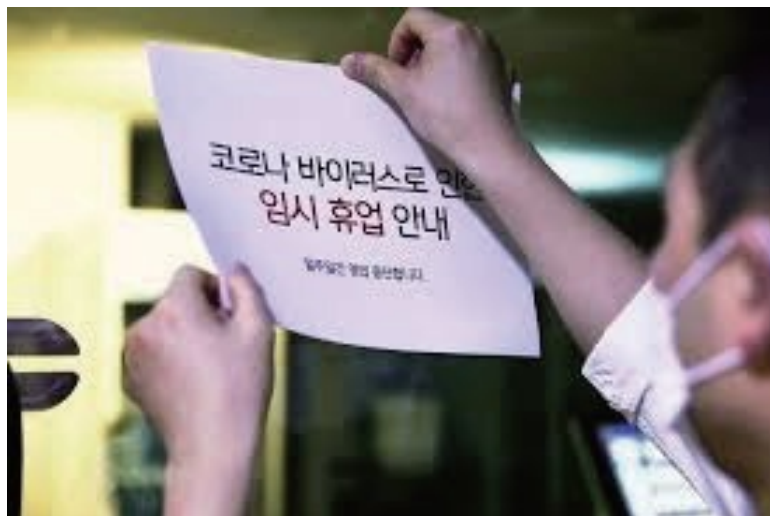
□ 제안 배경

2019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을 즐기지 못하고 그 동안 살면서 당연히 즐겼던 일상들을 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요 체온 체크부터 출입기록까지 모든 것들이 불편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조금씩 이 상황에 적응하며 일 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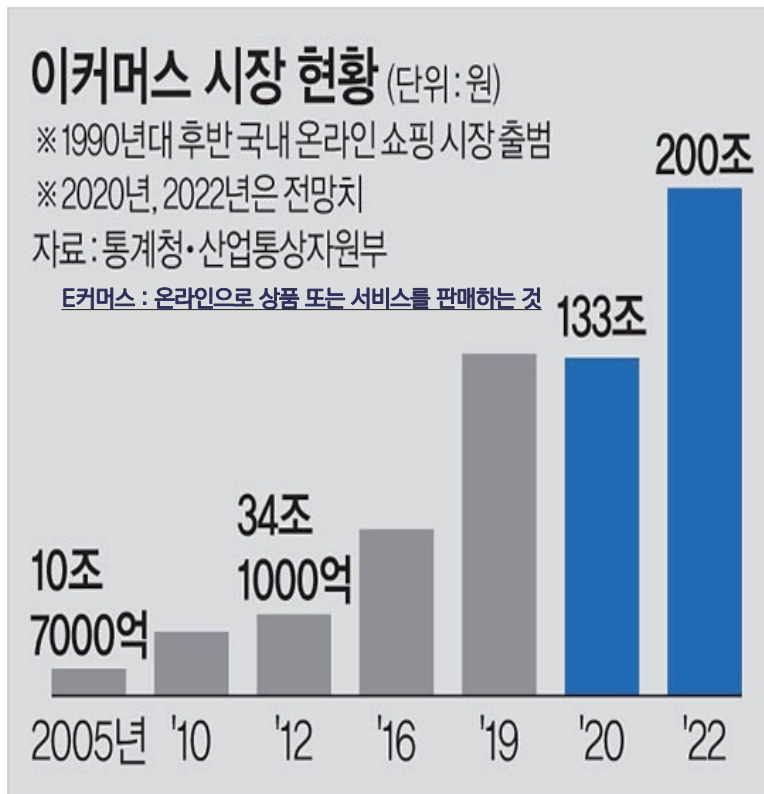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들이죠.

특히 우리지역 전라북도는 농토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큰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중단됨에 따라 제 때 출하를 해야 하는 많은 농산물들이 그냥 버려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으로 상품은 물론 농산물을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 온라인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장을 이커머스라고 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오픈마켓 - 다수의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올려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 소셜커머스 -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
- 종합몰 -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소수의 상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입점 형태로 소싱하여 MD가 운영하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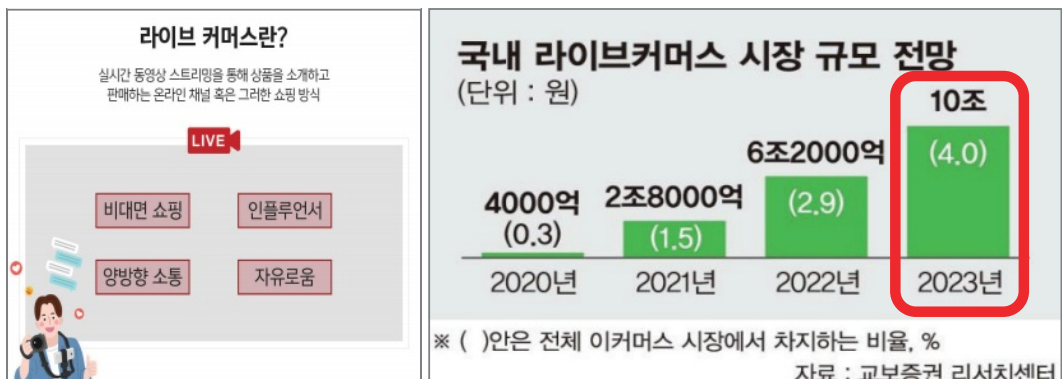
하지만, 기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 특히나 이제 막 판매를 시작하는 소상공인이나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내 용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 커머스
입점방식	쉽다	어렵다	쉽다
수수료	5%~12%	25%~40%	10%~20%
정산주기	+8일	45일~60일	월 마감 40일 이내
특징	입점 편의성 / 정보수정 용이	충성고객 / 백화점 스타일 서비스	최저가판매 / MD 유대관계 요

□ 지금은 라이브커머스가 대세!

입점 방식 및 수수료 등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벗어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는 바이다.

- 라이브커머سر란,



- 기존 라이브커머스에도 문제점은 있다?

라이브커머스 및 TV 홈쇼핑

수수료 (단위: %)



기존 라이브커머스는 대기업에서 운영 중으로 입점은 용이하나 이용 수수료(판매자 부담)가 크다. 이에 지자체에서 직접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은 제안한다.

- 군산하면?!? 배달의 명수~

배달 앱 비교	배달의 명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운영자	전라북도 군산시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계 기업, 국내 배달업 시장 점유율 100%)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계 기업, 국내 배달업 시장 점유율 100%)
점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수: 31,478명 (군산 인구 대비 11.5%) * 주문 건수: 7,282건 * 매출액: 1억 7,4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 전국 1위(55.7%) * 앱 다운로드 5,100만 명 * 월 이용자 1,200만 명 * 등록 가게 20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 전국 2위(33.5%) * 앱 다운로드 2,200만 명 이상 * 월 이용자 700만 ~800만 명(업계추정치) * 등록 가게 17만 개 이상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수수료 없음 * 배달중개비 없음 * 가맹점은 소비자 위치로부터 거리 순 노출 구축 *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 잔액 남았을 시 결제방식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선택 후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수수료 없음 * 배달중개비 없음 * 광고 상품 1. 오픈리스트(배달의 민족 앱 상위 노출): 주문금액의 6.8% 광고 수수료 2. 울트라콜(전형적인 광고 정액제): 월 8만 8,000원, 별도의 광고수수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수수료: 1개 등록당 최초 5만 원 * 배달중개비: 주문건당 12.5% 수수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급상승 중인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배달 어플.

기존 어플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전북 군산에서 직접 배달앱을 개발. 군산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이뤄지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라이브커머스 개설,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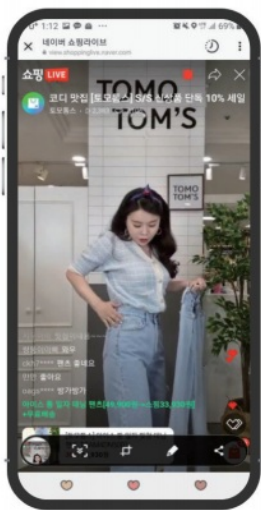


박영선 전 장관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라이브커머스임.

‘가치샵시다’는 입점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홍보비용 등의 명목으로 15%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민간 쇼핑몰과 달리, 별도의 입점 수수료를 없애도 판매 수수료만 3% 정도 부과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라북도만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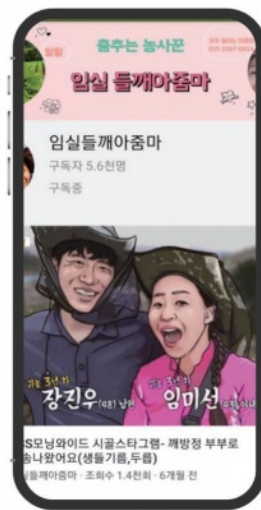
- 전라도! 여~(전라북도는 라이브커머스도 한대! 여기서! 가칭)



지역 방송인



끼있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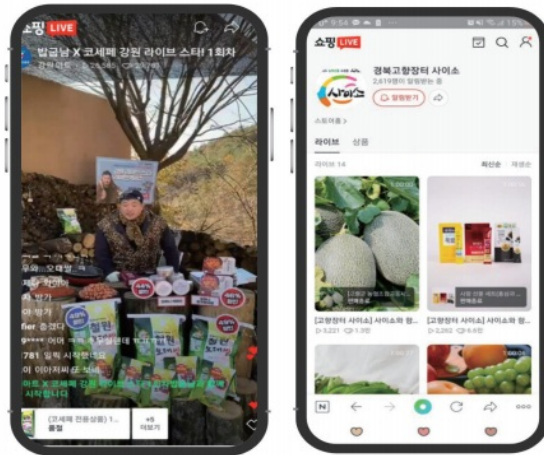
농사꾼

지역 청년 인재들을 발굴, 직접 라이브 쇼호스트로 양성.

생산자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판매하는 플랫폼 구축.

• 선진사례

강원도 밥굽남 - 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를 활용, 지역 농산물 판매 중
(경상북도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 사이소)



□ 결론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에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3년에는 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한 판매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소통하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구축은 전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인 스튜디오 (전북 생생TV 스튜디오)를 활용

비용 절감도 가능하며 전북을 시작으로 각 시, 군별로 라이브플랫폼을 구축, 이원 생중계 방식의 새로운 소통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국에서 어디서든, 누구나 전북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농산물과 상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교육은 우리의 자화상 - 의무교육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

박현지 일반당원

1. 연구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K-방역을 이끌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고 이에 G7으로부터의 공식초청, K-문화(음악, 영화 등) 등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면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많은 사회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행동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매해 치러지는 수학능력검정평가에 따라 한 학생의 12년 학교생활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수단이 되었으며, 대학의 이름은 일명 성공의 명함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교육법에 의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 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우리의 교육목표는 이미 잊힌 지 오래이며, 좋은 대학-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수단과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너무 달라진 우리 아이들에게 미군정 때 개편되었다는 학제는 맞지 않으며, 인문학 같은 학습은 무시되고 단순 지식 축적과 수직적 성적 평가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 결여라는 말이 나오게 할 정도이다. 일례로 ‘촉법소년’, ‘민식이법 놀이’ 등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니 이는 우리 교육이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며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만들어졌고, 이에 불거져 나온 교육 콘텐츠의 질,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줬다.

이에 오래된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하는 목적을 다시 찾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 목표

1.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의무교육을 받는 12년간, 주 5일 동안 다니는 학교가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가고 싶은 곳,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 한다.
2. 특정 직업군을 이상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 귀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꿈도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의 어떠한 꿈도 감히 비난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다양한 미래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교육.
그런 교육을 줄 수 있는 어른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
이들이 모여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3. 의무교육 학제

3-1. 의무교육 학제 개편 내용

[현재]

- 초등학교 6년제
- 중학교 3년제
- 고등학교 3년제



[개편]

- 초등학교 5년제
- 중학교 4년제
- 고등학교 3년제

- 정규과정 1년
- 나머지 2년은 진로, 진학의 자유 학기제

3-2. 학제 개편의 이유

① 신체적 발달 - 키

구분		평균키(cm)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초등 학교	1학년	122.1	120.9	121.6	120.6	121.5	120.5	121.8	120.8
	2학년	127.8	126.8	127.8	126.7	128.0	126.5	127.7	126.5
	3학년	133.8	132.4	133.5	132.4	133.5	132.3	133.5	132.6
	4학년	139.7	139.1	139.2	138.8	139.4	138.8	139.3	138.9
	5학년	145.0	145.6	145.1	145.6	144.8	145.5	144.6	145.1
	6학년	152.2	152.2	151.9	152.3	152.1	152.3	151.4	151.9
중 학교	1학년	160.4	156.9	160.3	157.0	160.1	156.7	159.4	156.8
	2학년	166.3	158.9	166.1	159.0	165.9	159.0	165.5	158.5
	3학년	170.2	160.3	170.1	159.9	170.0	159.8	169.7	159.8
고등 학교	1학년	172.6	160.9	172.3	160.7	172.2	160.5	172.1	160.4
	2학년	173.3	160.9	173.0	160.7	173.1	160.6	172.9	160.6
	3학년	173.8	160.9	173.5	160.8	173.5	160.9	173.5	160.9

* 자료출처 : 교육부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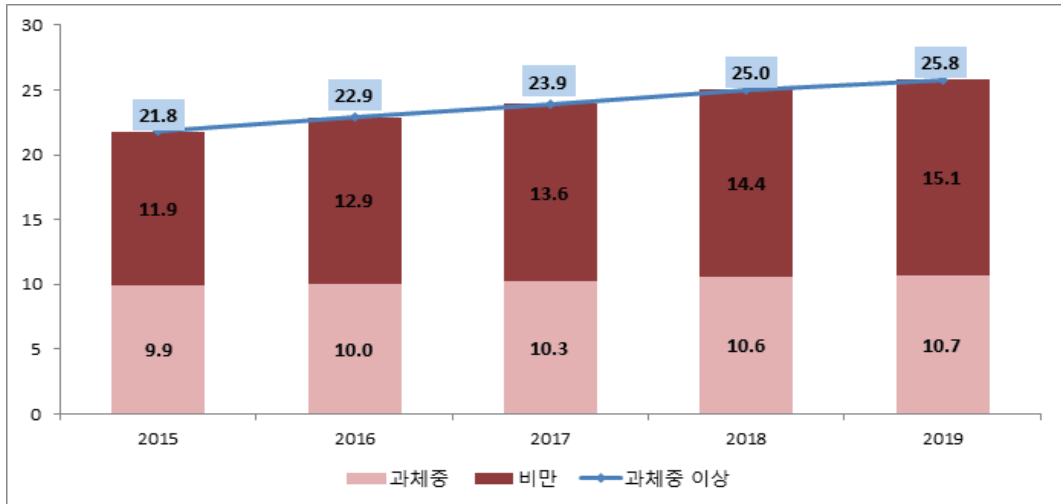
② 신체적 발달 - 몸무게

구분		평균몸무게(kg)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초등 학교	1학년	25.2	24.2	24.8	23.8	24.8	23.7	24.8	23.8
	2학년	28.9	27.4	28.6	27.1	28.7	26.8	28.3	26.9
	3학년	33.3	30.8	32.8	30.7	32.6	30.4	32.5	30.7
	4학년	38.0	35.3	37.4	35.0	37.2	34.5	37.0	34.7
	5학년	42.7	40.3	42.4	40.2	42.0	39.9	41.6	39.7
	6학년	49.1	46.0	48.1	45.8	48.2	45.5	46.6	45.2
중 학교	1학년	54.6	50.4	54.4	49.7	54.2	49.8	52.7	49.5
	2학년	60.7	53.1	59.8	53.3	59.3	52.7	58.8	52.5
	3학년	64.6	55.4	63.6	54.5	63.7	54.4	62.3	54.4
고등 학교	1학년	67.8	56.7	67.1	56.3	66.0	55.9	65.9	56.0
	2학년	69.3	57.0	68.8	57.3	69.0	57.0	67.8	56.4
	3학년	71.3	57.5	71.0	57.8	70.0	57.2	69.4	57.1

* 자료출처 : 교육부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 2015년~2018년 3년간의 자료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평균 키, 몸무게는 매해 자라고 있다.

③ 신체적 발달 - 비만도



※ 2019년 지역별(도시, 읍면 지역) 과체중+비만 비율 현황(단위: %)

⇒ 과체중 이상 비율은 25.8%(비만 15.1% + 과체중 10.7%)로, 최근 5년간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사이의 신체적 차이는 키 약 30cm, 몸무게 약 20kg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 비만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의 성조숙증, 2차 성장도 빨리 나타날 것임을 증명한다.
- 보통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이제야 막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1~2학년생을 같은 교육 테두리 안에 묶어 두는 것은 이제 더는 맞지 않는다.
- 초등학교 6학년생을 신체적으로 어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의 학제를 5년으로 구성하여 8세~12세(1~5학년생)로 보고, 지금의 6학년(13세)을 중학교에서 교육하고 하는 것이 좋다.
- 고등학교는 기존의 3년제를 유지하되, 고등학교 1학년생을 의무교육의 마지막 정규수업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2년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 고등학교 2~3학년생의 나이는 18세~19세.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인식의 차이에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에 2~3학년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인문계, 실업계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이미 2017년 2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 교육개혁 의제에서 5-4-3 학년제 개편을 주문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의 학제 개편 내용〉

초등학교는 5 학년제로 1년 단축하되 아동의 빠른 성장, 발달 속도에 따라 중학교에 1년 일찍 진학하도록 한다. 중학교는 4 학년제로 연장하고 직업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중4 전환학년제'를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3 학년제를 유지하고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하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무학년제하에서 학생들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주문한 학제 개편 내용은 내 생각과 거의 비슷하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1년을 정규과정을 두도록 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무학년제를 도입하여 대학과 같이 학점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차이가 있다.

4. 교육과정

4-1.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단점과 문제점

1) 단점

- | | |
|------------------|--------------|
| ① 인문학 부재 | ② 수직적 성적 평가 |
| ③ 신체적 활동 감소 | ④ 획일적인 학교 공간 |
| ⑤ 대면교육 주입식 교육 한계 | ⑥ 성교육의 부족 |

2) 문제점

- | | |
|-----------------|----------------|
| - 촉법소년 | - 민식이법 놀이 |
| - 집단 따돌림 | - 학교 폭력, 성폭행 |
| -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 - 성조숙증, 조기 사춘기 |
| - 디지털 기기 의존도 심화 | - 소년범죄의 심각성 |

4-2. 다른 나라의 교육

1) 핀란드 교육의 특징

☞ Better standardized test

핀란드 학생들은 국가에서 마련한 한 가지 학력평가를 중학교까지 딱 한 번만 보게 되며, 이 평가의 목적은 개인마다 진로와 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이 아닌 학생들 개인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자료라는 의미가 있다.

☞ More time for play

15세 학생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핀란드의 학생은 방과 후 하루에 2.8시간을 학교 과제와 공부에 보내는 반면, 한국 학생을 같이 생각해 볼 때 요즘 학교 과제는 적어졌다고 하지만, 학원 숙제와 계속되는 시험 준비를 모두 생각해 본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또한 법으로 핀란드 학교에서는 45분 수업 이후 15분의 쉬는 시간을 갖도록 정해져 있다.

☞ College is free

핀란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물론 핀란드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이다. (외국의 유학생들은 경우가 다르다) 아이러니하게 공짜라면 무조건 대학에 가려고 할 것 같지만, 북유럽의 고등학생들은 졸업 이후 사회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배우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이다. 오히려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의 전문적인 배움은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조정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일뿐이다.

☞ Elevated teaching profession

사회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예우, 국가적인 지원이 확실하다. 핀란드의 선생님이 되려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할 정도로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된 후에도 국가는 계속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학생 수와 가르치는 시간도 알맞게 보장받고 있다. 핀란드는 좋은 선생님을 갖는 것이 좋은 교육 환경의 첫 번째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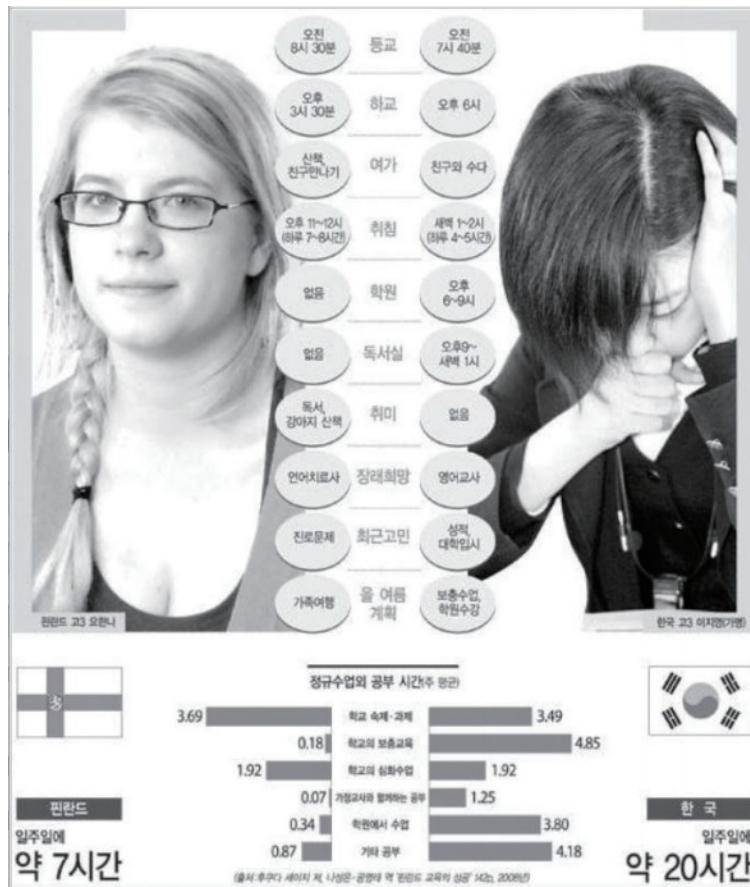
☞ Universal preschool

모든 북유럽 나라들은 유아원 Preschool부터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자유롭게 갈 수 있다. 특히 서로 좋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는 “유명 프리스쿨”들의 학비는 엄청나다. 핀란드의 어린아이

들은 프리스쿨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알아 가면서 아이들마다 능력과 생각이 개발되어 간다.

자료출처: : <http://www.nordikus.com/%EB%B6%81%EC%9C%A0%EB%9F%BD-%ED%95%80%EB%9E%80%EB%93%9C-%EA%B5%90%EC%9C%A1%EC%9D%98-5%EA%B0%80%EC%A7%80-%EB%B4%EB%A5%B8%EC%A0%90/>

〈핀란드와 대한민국 고3 학생의 하루〉



자료출처 : 후쿠타 세이지 (지은이), 나성은, 공영태 (역) '핀란드 교육의 성공', 2008년

2) 독일

〈세계 2차대전 이후 #독일교육에서 중요한 3가지: 성교육/정치교육/생태교육〉

♣ 성교육 (=자아 교육) :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 맺기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다."

성교육은-자아 문제-심리적 문제로 연결되며-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잘못된 성교육은 죄책감을 들게 하고 죄책감이 내면화된 자아는 권력 앞에 굴종하게 된다.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

♣ 정치교육 :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 맺기를 배운다.

선동이 판별 교육을 통해 불의의 권력에 맞서는 능력,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 등을 키우는 저항권교육이다.

독일 초등학생들은 직접 시위를 주도하고 교육자협회나 교육청에서도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도 한다.

♣ 생태교육 : 자연과의 관계 맺기

독일 아이들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환경을 위해 소비를 포기한다.

플라스틱: 비행기를 탈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비행기가 지구온난화(온실가스가 직접 상공에 뿌려지므로)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를 기차로 8시간 걸려서 간다.

자료출처 : <https://blog.naver.com/starwind98/221948090856>

4-4.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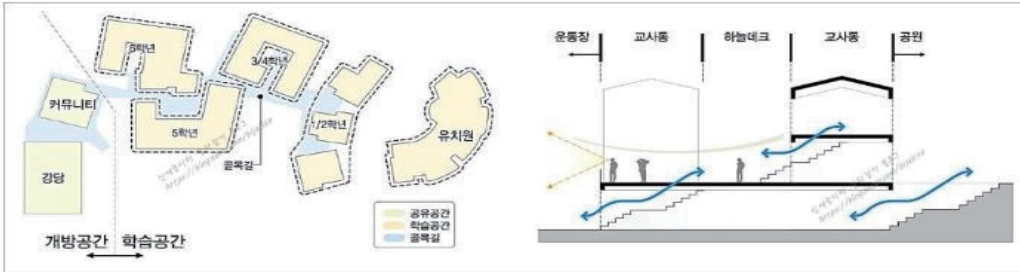
○ 경쟁 없는 교육 시스템

- 시험이나 등수는 존재하지 않고, 학생의 평가는 수업 시간에 수행하는 과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
- 과제물을 평가하면서 점수가 아닌 선생님의 의견을 나눔
- 엄연히 학생들이 서로 다른 성적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고 학생의 특성을 키워 줄 필요가 있음

○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와 시설

- 획일적인, 흡사 교도소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유현준 교수가 제안하는 ‘스머프 마을’

1. 유치원 & 초등학교



- ① 공간과 학습공간의 동별 분리 계획 : 골목길을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유공간은 동별 분리 계획하여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
- ② 외부공간으로의 이동 거리 최소화 : 학생들의 편리한 외부공간 접근을 위한 저층 계획 및 동별 코어 계획으로 외부공간으로의 이동 거리 최소화 계획
- ③ 지형을 활용한 입체 공간 계획 : 접근이 쉬운 2층 골목길을 통해 각실별 학습공간의 확장, 저층부 경사 공간을 활용한 독서 마당 계획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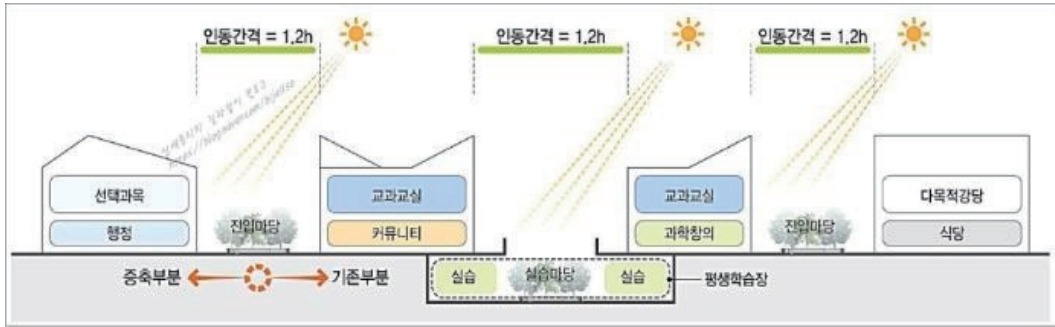
- ① 내, 외부 연계 교육 중심의 마당계획 : 각 시설 성격에 대응하는 외부공간 특성화로 다양한 마당계획 / 중정 마당을 중심으로 각 시설 및 마당의 연계성 확보
- ② 각 클러스터 접근성 높은 순환 동선 체계 : 중정 마당을 중심으로 교과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효율적 이동수업 및 학년별 독립성 확보
- ③ 기존지형을 고려한 레벨 계획 : 기존지형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통해 인접한 마당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3. 고등학교

- ① 홈베이스 중심의 메인 동선 계획 : 학년별 분사 배치된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교과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메인 동선 계획
- ②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연계된 마당 :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마당을 활성화시켜 정

보교류, 개인학습, 휴식 등 학생 중심의 공간 계획

- ③ 시설별 연계성을 고려한 증축계획 : 양호한 일조 환경을 고려한 수평 증축 계획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학습장과 학생 공간을 분리하여 방과 후에 개별운영 가능한 단면 조닝 계획



외부공간계획

1. 학생 및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순환형 둘레길
2. 외곽부 프로그램 공간을 열어주는 커뮤니티 링
3.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수용하는 너른 뜰
4. 공원 내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이벤트 및 활동적인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력 마당과 족구장, 풋살장, 등 운동시설을 계획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어반 커뮤니티 형성





특화계획

1. 시설 복합화 : 시설별 내부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4개의 테마(여가, 체육, 주민참여, 공원 편익) 이야기로 공유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해밀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2. 가로계획
 - ① 아트 허브, 돌봄 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 등이 모여 있어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해밀 두레길 계획
 - ② 학습센터, 사색 마당 및 중, 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 및 평생교육의 중심가로 계획
 - ③ 인근 주거단지와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마당을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입체 보행로 계획

운영계획

1. 마을 교육공동체 이념의 실현 및 발전과 공동체의 화합 및 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모
2. 학교 간의 경계를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강당, 도서관 및 특화 교실 등을 학생 및 공동체에 개방
3. 학생 수 및 수요의 변동에 따른 가변적 학교 공간 운영계획 수립
4. 특별교실의 공유를 통한 일반교실 수 확보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대응 방식 추진
[출처] 스마트 마을 같은 학교 (feat.유현준,6-4생활권)작성자 푸른나무

○ 엄격한 교원양성 정책

-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이 되기는 까다로우나, 이후 획일적인 교육방식에 의해 선생님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부족
- 교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교원양성 시스템이 필요
-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만을 담당할 수 있게 행정 사무 인력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음

○ 학교 평준화

- 고등학교, 대학교의 평준화가 필요
- 대학을 서열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요한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 나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 역시 특정 직업군을 우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생김

○ 교육비 면제(초-중-고-대)

- 잘 사는 집은 사립으로, 그렇지 않으면 국공립에서 교육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는 어릴 적 교육을 받을 때부터 차별화, 양극화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내내 불공정을 겪고 자란다는 의미가 된다.
-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에 관해서는 어떠한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체험 활동 과목 및 다양한 과목 개설

- 지식 축적의 책상머리 공부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 및 시수를 늘린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존의 예체능 교육의 시수가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더 늘이는 방향으로 한다.
=> 대한민국과 핀란드는 닮은 점이 많다. 강대국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과거 농업국가에서 현재 3차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나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나라이다.

두 나라는 세계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란히 1,2를 다룰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두 나라 학생들의 모습은 극과 극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교육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제도보다는 장점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핀란드 외에도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적극적으로 본받고 활용해야 하는 교육 정책들이 많이 있다.

이를 일방적 수용이 아닌 선택적 수용과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교육정책을 개편하는 것이 좋다.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 한·중·일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구축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

I.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

1.1.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

○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본토와 중국 대륙 및 일본 열도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동쪽으로는 일본의 쓰시마 및 나가사키 현과 마주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 본토의 상하이, 남쪽으로는 태평양과 연결된 동중국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는 약 2천 년 전 '탐라'라는 해상왕국으로서 고구려, 신라, 당, 일본까지 활동범위를 넓힌 동북아 해양문명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후 천 년왕국 탐라는 고려왕조에 복속되었고 이후 1121년 탐라의 명칭이 '제주'로 바뀌게 된 것이다.

○ 한편, 현재의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육상의 면적은 1,833.2km²로 남한 면적의 1.83%에 불과하여 인구,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1% 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해양영토 측면에서 보면 약 11.5만km²로 우리나라 해양영토인 43.8만km²의 약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사실상 아시아 해양경제권의 최 선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 특히,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첩 수역에서 핵심위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국가 간 영토, 국방, 산업 등 사회경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1.2.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위상

- 제주는 20세기 후반까지 한반도 최남단 변방에서 1945년 해방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냉정시대는 대륙진출의 한계는 남한의 해양진출의 교두보로 그 위상이 급변하게 되었다. 그 후 20세기 말 탈냉전시대 한·소 정상회담(1991. 4. 구소련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노태우), 한·중 정상회담(1995. 11,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 한·미 정상회담(1996. 4, 김영삼-클린턴), 한·일 정상회담(1996. 6, 김영삼-하시모토), 남·북고위급회담 등 2002년까지 10개국에서 13명의 정상급 인물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제주도는 국제적 평화와 다자간 네트워크의 연결 역할로서 국제적 평화의 섬 이미지는 굳히게 되었다.
-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지정학적으로 자리매김 하였다면 평화의 섬 본연의 경쟁력을 알리는 과거는 바로 유네스코의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타이틀(‘02년 생물권보전지역’, ‘07년 세계자연유산’, ‘10년 세계지질공원’)을 획득한 것이다. 이러한 제주의 가치는 현재 1천만 관광객 내외가 방문하는 메가투어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즉 청정 자연과 평화의 섬이라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1.3. 코로나 19 이후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역할

- 제주가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실험 모델이며 세방화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촌은 국가간 폐쇄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지방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경쟁력 강화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24.4%의 해양공간을 넘어서 한중일 해역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적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향후 코로나 19 이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코로나 19 발생과 전파는 새로운 국경의 기준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경제안보와 상생협력은 새로운 인접국간의 경제생태계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를 부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중첩 공간인 해양에서의 환경은 각국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거나 보호하는데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는 한중일 해역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평화의 섬 국제도시 제주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한·중·일 해역의 공통문제

1. 해양쓰레기 문제

1.1. 국내 해양쓰레기 현황

-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 의하면 제주도내 2개소(김녕, 사계)의 발생수치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2만여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수거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평균은 14,017톤이며 '20년도 기준 16,702톤으로 '16년 10,800톤 대비 54%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1>.

〈표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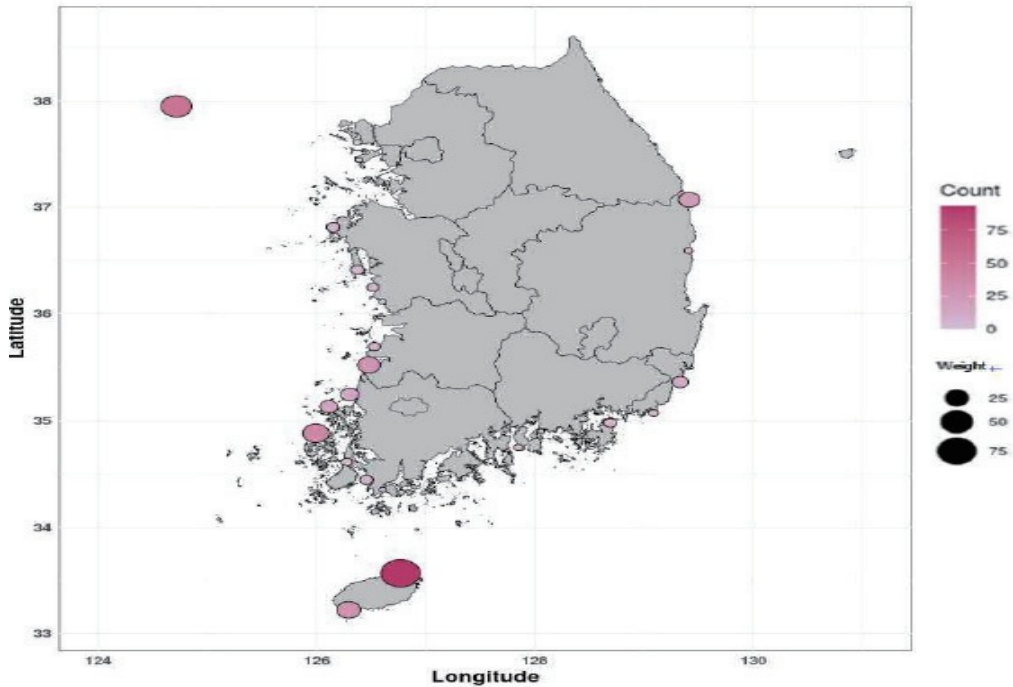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수거량(톤)	10,800	14,062	12,412	16,112	16,702	14,017

- 특히, 제주의 경우 동중국해에서 이동해오는 외국기인쓰레기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發 팽생이모자반은 '21년 2월 기준 약 8,000톤이 유입되면서 '20년도 유입량을 훨씬 초과 하였다. 이처럼 중국발 팽생이모자반은 제주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해상과 해안가(조간대)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인력, 장비, 선박 등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표 2>.

〈표 2〉 중국 發 팽생이모자반 수거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월
수거량(톤)	11,719	2,441	4,407	2,150	860	5,186	8,000

-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20년 외국기인 쓰레기는 전국 40개 정점 중 28개 정점에서 발견 되었는데 가장 많은 곳은 제주 김녕리해안>인천 백령도 사곶해안>신안 고장리해변>제주 사계리해안 순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쓰레기는 주로 중국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이 등 표식이 없는 쓰레기도 유입되어 식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향후 제주는 4면이 바다이며 서로 다른 환경 탓에 기존 2개소에서 4개소 모니터링 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그림 1>.



〈그림 1〉 2020년 외국기인 쓰레기 개수와 무게 지역별분포(해양환경관공단)

※ 제주 김녕리해안>인천 백령도 사곶해안>신안 고장리해변>제주 사계리해안

1.2.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발생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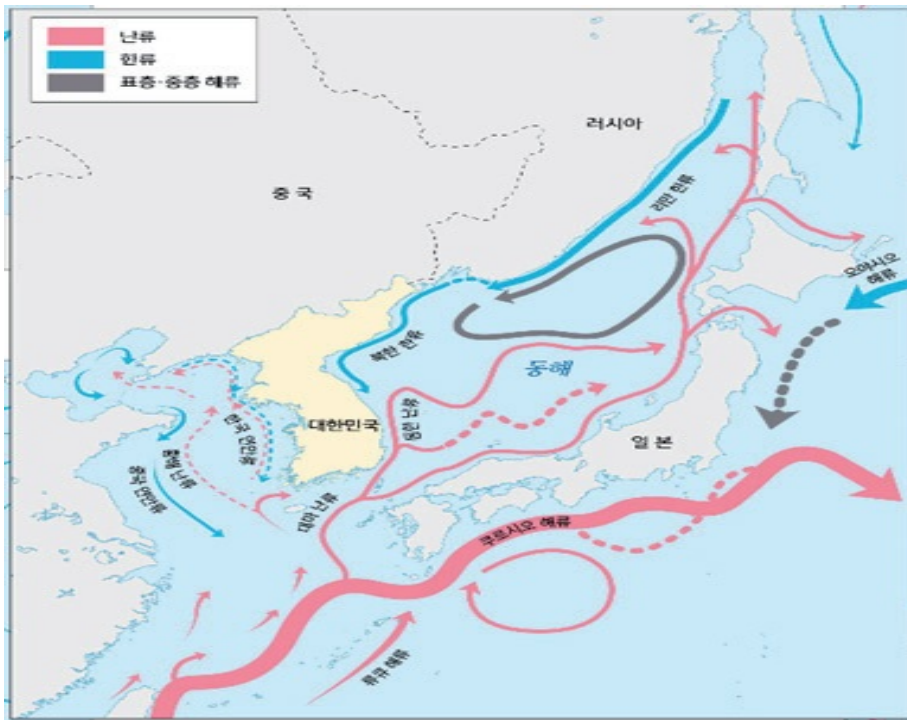
○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UN차원에서 해양쓰레기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조사가 2000년 초반에 시작했고, 일본의 경우도 이 시기에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분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00년부터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해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기인 폐기물이 상당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에 대한 장 등(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2012)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해안 일대 조사대상 지역 중 제주 차귀도 지역이 전체 발생량(2008-2010)에서 수량(15,418개) 뿐만 아니라 부피(19,904.9 L)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발생량을 보였으며 이 중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량(5,112개) 역시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 제주지역에 발생되는 외국기인 해양쓰레기는 남풍 계열의 계절풍에 의해 확대되는 중국 연안수와 동중국해 해수 유입이 중국 연안과 동중국 해상에서 발생된 부유쓰레기를 제주도로 유입시키는 주요 기작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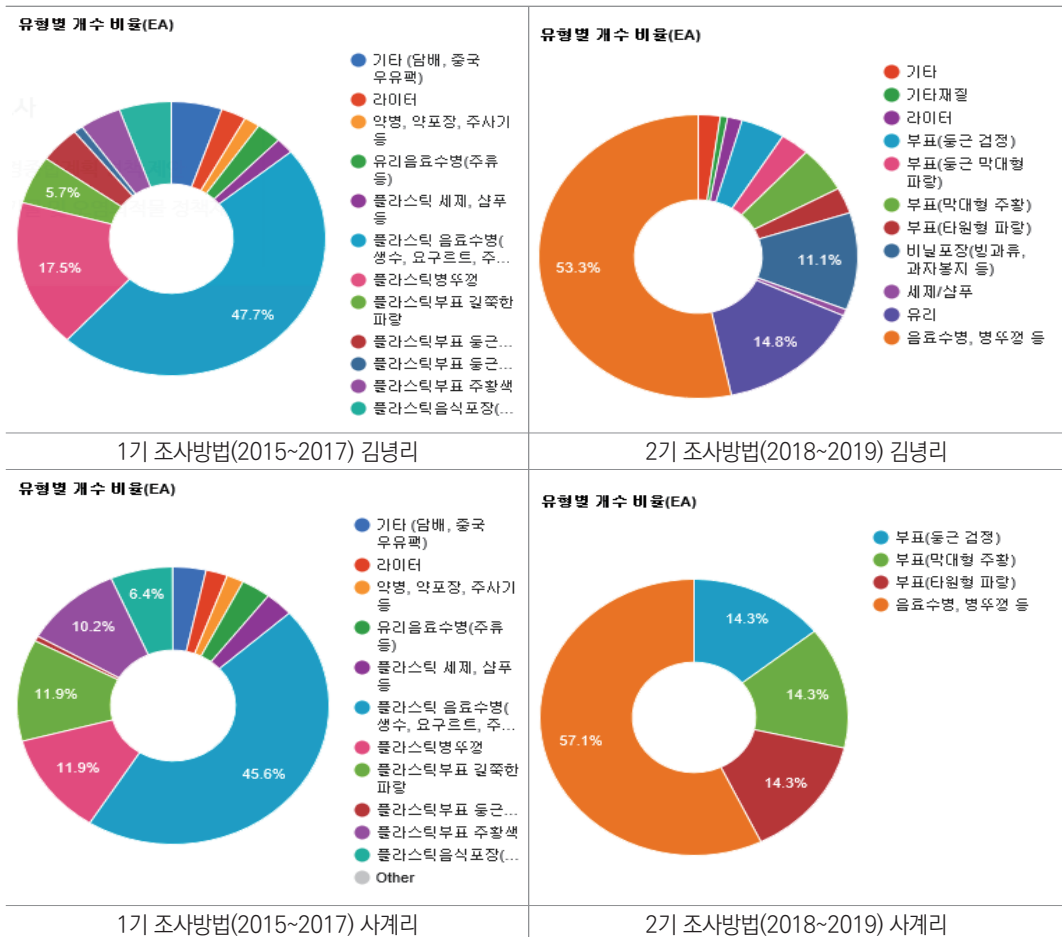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의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제주 한경면 중간집하장)



<그림 3> 한중일 수역에서의 해류도

○ 또한, 제주도의 김녕과 사계에 외국기인 해안쓰레기의 시기별로 1기(2015~2017년)과 2기 조사(2018~2019년)를 통한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기와 2기에 플라스틱 음료수병(생수, 요구르트, 주류, 중국맥주병 등) 등이 각각 45.6~47.7%, 53.3~57.1% 범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4> 외국기인 해안쓰레기의 종류별 조성 비율

1.3.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적 협력 논의

○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국가에 대한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젤협약 규제대상에 플라스틱 포함되었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는 취지의 유엔 협약에 180개국이 합의함으로써 플라스틱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해상을 통해 이동되는 타국의 해양쓰레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와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이 승인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러 4개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회의】

-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UN 환경 계획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관리를 위하여 추진해온 지역협력프로그램(한중일러, 북위 33~52°, 동경 121~143°관할해역)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환경분야 최고위급 회의

〈해양수산부 한중일러 4개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모색, 2018년〉

- 일본 타케우치 교수는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한국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일본으로 오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해양쓰레기로 인한 인접국간 갈등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한중일 주변국에서는 해양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중국→한국→일본 등으로 이동하면서 표착지역의 민원 및 각종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민원으로 국가 간 외교 분쟁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해양쓰레기 표착문제는 우선적으로 자연의 흐름(해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국가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계절에 맞춘 맞춤형 정화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한·중·일 민간단체와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사전문〉

“아무리 삼중수소(트리튬)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더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후쿠시마 어민들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35년간 일본 도쿄 쓰키지 어시장에서 생선 경매를 해 왔다는 이시이 히사오(石井久夫) 씨는 13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구호를 외치며 본보에 이처럼 말했다.

일본 어민들의 반발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후쿠시마현 소마후타바어업협동조합 다치야 간지(立谷寛治) 조합장은 13일 NHK 인터뷰에서 “정부는 바다에 흘려보내면 괜찮다고 간단히 말하지만 국민이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 올해 1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그쳤다. 도쿄신문은 “후쿠시마 어민들이 도쿄전력에 ‘속았다’며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2015년 후쿠시마 어업 연합 측에 “어민들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가 해양 방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현 소마시 어민들은 “해양 방출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외교부의 반응

중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과 충분 협의해야"

송고시간 2021-04-10 11:33

"원전사고로 이미 해양환경·식품안전·인류건강에 심각한 위협"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 방침을 굳히자 중국 정부가 주변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일본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이미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인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무책임한 일방적 결정"

"주변국에 심각한 손해...관련국·국제기구 합의 전 배출 안 돼"

송고시간 2021-04-13 18:39



카로넷

[首页](#)
[外交部](#)
[外交部](#)
[外交动态](#)
[政府信息公开](#)
[驻外机构](#)
[国家相册](#)
[资料](#)
[服务](#)
[移动客户端](#)

© 2021 - 3158人浏览

外交部发言人就日本政府决定以海洋排放方式 处置福岛核电站事故核废水发表谈话

2021-04-13

【字体：大 中 小】 [打印本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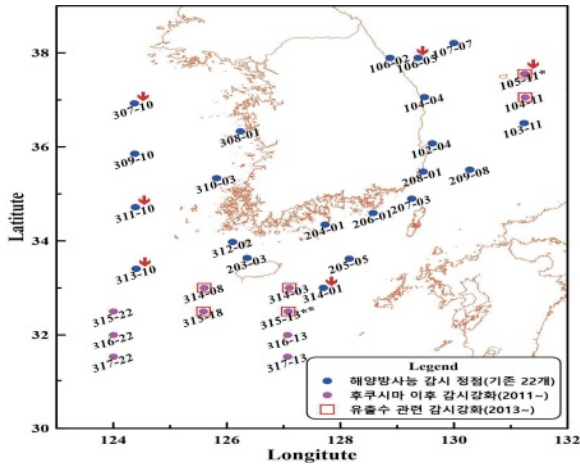
4月13日，日本政府决定以海洋排放方式处置福岛核电站事故核废水。作为日本近邻和利益攸关方，中方对此表示严重关切。

福岛核事故是迄今全球发生的最严重核事故之一，造成大量放射性物质泄漏，对海洋环境、食品安全和人类健康产生了

2.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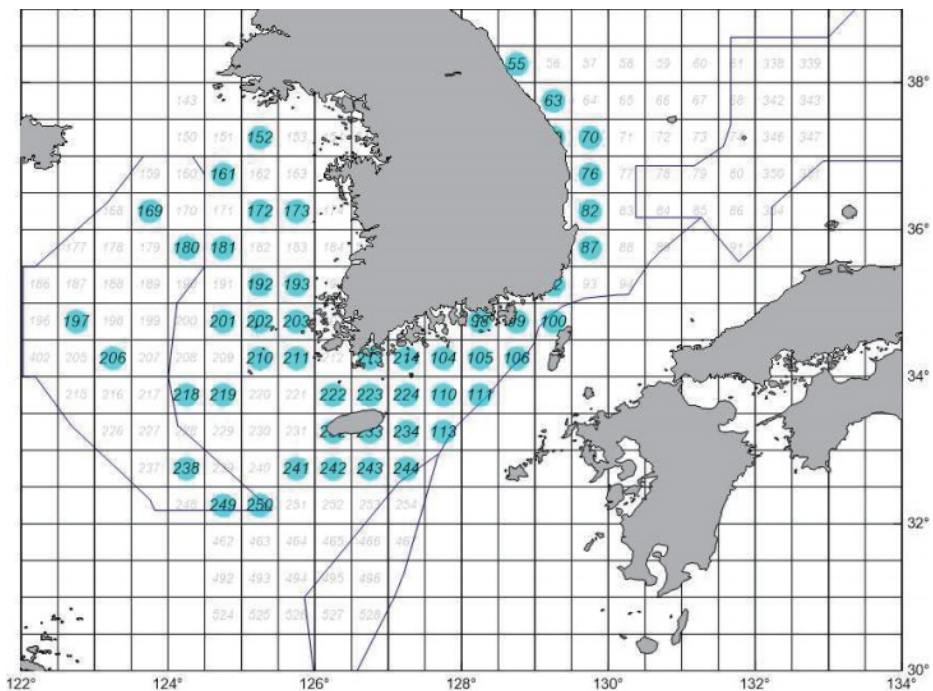
- 한국 정부는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응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은 1994년부터 해양에서 환경방사능감시를 시작하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해양으로 방출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림 6>은 조사정점을 나타낸 것으로 2011년 이후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범위를 제주 남방해역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강화된 해양환경 방사능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소, 2019년 해양환경방사능조사).
- 또한, 2019년 방사능 감시 강화계획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전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생물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시료가 확보되었으며 수행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7>2019년 12월 기준 보고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수 및 어류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여 제주 남방해역에서 해수, 어류, 해조류, 패류, 해저퇴적물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원자력연구소, 2019년 해양환경방사능조사).
- 국내 조치와 달리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중미와도 해양환경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외교부 보도 4. 23).



(ê) 수심별 해수채취 지점
 * 기존 조사정점과
 2011 감시강화 중첩 정점
 ** 2011 감시강화와
 2013 감시강화
 중첩 정점

〈그림 6〉 해양방사능 감시강화 정점(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2019)



〈그림 7〉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시료(어류) 확보 해구도(50개)

III. 결론 및 제언

-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한·중·일 중간수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진출의 가장 선단부에 위치해 있다. 특히, 제주가 역사적 아픔(제주 4.3)을 간직한 채 수많은 정상회담 개최를 통하여 세계 평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평화섬 가치 확립과 법적인 제도 마련도 하였다. 게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 청정 제주국제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발생이후 국가 간 사회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질서와 경쟁력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지정학적 위치와 지위를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변화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는 해양에서 실마리를 풀고자 하였다.
- 사실 한·중·일 3개국은 육상의 영토는 달리하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공동이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해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접 국가 간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 피해가 주변국에 발생하면서 갈등을 야기 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 및 기구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금까지 명확하고 실천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한중일 해역에서 공동으로 취급해야 할 문제로 해양쓰레기 문제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한중일간 공동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 동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는 3개국(한중일)은 해류와 바람에 의해 중국발 해양쓰레기가 한국을 거쳐 일본해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발 팽생이모자반은 대규모 양들이 이동은 해상교통 및 제주도에 많은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
-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출은 태평양을 거쳐 중국과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본 자국민 및 어업인들의 생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이러한 한중일간 해양에서의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한중일 3개국이 공동으로 모니터링 및 처리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 가칭 ‘한중일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센터는 정부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이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신력을 인준 받고 해양쓰레기 및 일본원전 오염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리, 대응, 회유성 수산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 정보를 통한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한·중·일 공유 해양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은 통상이든 자국선박이 어획하여 국내산으로 유통하던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해양쓰레기 및 오염수의 거동, 수산물의 안정성 등 안전하고 청정한 해양을 공동으로 가꾸어 나가는 역할에는 자국의 실익을 떠나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특히, 제주는 평화의 섬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35조제2항제1~2호에 따르면 국제평화와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또는 연구소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 사실,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 현대사에서 전환 모멘텀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추상적 선언이 아닌 실천적 의미로 제도까지 마련되었다. 그 역할의 초석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놓아 주신 것이다. 그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신 대통령께서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이제 평화의 섬에서 시작하여 평화의 바다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경제정책의 거점 지역으로 제주국제도시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중·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센터)를 유치 또는 구축하여 현재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 그 역사의 시작을 평화의 섬 제주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린시티, 탁 트인 미래를 그리다

김미성 일반당원

I. 서론

충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며, 미세먼지 수치가 수도권과 비견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남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도시화된 아산, 천안을 중심으로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 차단 숲' 정책이다. 하지만 토지매입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 생활권 내 미세먼지 차단 숲 또는 공원 조성은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건물과 도로를 철거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을 투입해 효율적으로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입체녹화'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로와 건물 위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입체녹화는 별도의 토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옥상, 벽면 등을 녹화하는 것이다. 특히 도로 위에는 대기질을 개선하는 인공나무와 같은 설치물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문제의식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실제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초미세 먼지 노출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평균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32\mu\text{g}$ 으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으며,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곳 가운데 대전 충남권이 6군데로 40%를 차지했다.¹⁾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환경과학은 2016년, "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된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지역 상공에 아황산가스 등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울보

1) 국내 초미세먼지 노출도 순위 중 충남도 시군 현황(OECD, '15년 기준)

- 1위 서산, 3위 아산, 7위 천안, 9위 대전, 12위 보령, 13위 공주

다 최대 2배 이상 많이 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력발전소와 정유시설이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주요 원인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 총 61기 중 절반가량인 30기가 충남의 당진, 태안, 보령 등 충남의 서북부 지역에 있다. 실제 충남 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남 서북부권 도민들이 금강, 내륙권 도민들에 비해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권²⁾ 도민들의 57.2%, 서해안권 도민 49.3%가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반면, 내륙권 도민의 38.0%, 금강권 도민의 36.3%가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충남도의 북부 지역은 아산과 천안이 위치해 있다. 아산, 천안은 충남의 대표적인 도시 지역으로 2021년 4월 기준 충남도 인구의 60%가량이 아산, 천안에 집중됐다.³⁾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충남도 중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책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인구가 집중돼 있는 아산, 천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질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Ⅲ. ‘미세먼지 차단 숲’ 정책의 한계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은 2018년도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생활권에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하지만 도시숲 조성 정책은 토지 매입비로 인해 재정의 한계가 있다. 도시숲을 조성하려면 지속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토지지가 일반 농지와 달리 고가이므로 공공이 이를 매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에서도 생활권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림의 확대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산림 이외의 토지를 확보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⁴⁾ 실제 산림분야 종사자의 83%가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4%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⁵⁾

2) 북부권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해안권 :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내륙권 : 공주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금강권 :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3) 2021년 4월 기준 충남도 인구 1679933명, 천안 인구 683649명, 아산 인구 334951명

4) 「제2차도시림 기본계획」(산림청, 19.01.), p.19

5) 송갑수, 「도시숲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조성관리 정책 연구」(강원대학교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2018.08.), p.46-47

IV. '입체녹화' 정책 제언

1. 대기 정화용 거리 설치물

해외에서는 시티트리, 인공나무 등을 도시의 거리에 설치해 대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마곡신도시를 중심으로 SH가 'SH 스마트 모스월'을 개발, 특허를 출원하고 이끼를 이용해 공기 중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공기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물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및 정책 실현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시티트리

시티트리는 독일 스타트업 '그린시티솔루션'(Green City Solutions)이 개발한 공기를 정화시키는 벤치다. 벤치 뒤 패널에는 이끼가 설치돼 있다. 이끼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를 정화할 수 있다. 그린시티솔루션에 따르면,

최대 주변 50m 범위의 미세먼지 30%, 이산화질소 10%, CO2 240t/년의 저감 효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시간당 최대 7천명이 호흡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나무 약 275그루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⁶⁾

시티트리 한 개 가격은 약 2만5000 달러(약 2800만 원)이지만, 센서가 태양열로 유지되고 있어 유지비용은 저렴하다. 벤치는 현재 베를린, 파리, 암스테르담, 오슬로 등 유럽 20여개국 이상 설치돼 있다.



▲ '시티트리' 사진

6) 'SH공사, 스마트·그린기술로 CO2와 미세먼지 '동시 해결''(연합뉴스,21.01.04)

(2) 인공나무 '바이오어번'

멕시코 스타트업 '바이오미테크'가 개발한 인공나무 '바이오어번'은 해초에서 추출한 세포의 자연광합성 기능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을 활용한다. 높이 4.2m, 너비 3m의 금속밴드로 둘러싸인 나무와 비슷한 형태를 갖췄다. '바이오어번' 한 대는 1년에 약 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할 수 있으며, 이는 1300그루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공기정화능력을 갖춘 것이다. 바이오어번의 필터는 해초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시중의 공기청정기 필터가 오염원으로 작용되는 것에 비하면, 바이오어번은 환경오염의 우려를 덜 수 있다.

설치비용은 한 대에 약 6천만원이지만, 태양광 패널로 만든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 '바이오어번' 사진

(3) SH 공사의 '스마트 모스월'

SH공사가 민간전문기업과 협력을 통해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은 실제 서울 마곡지구에 시범 설치됐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를 이용해 공기 중 오염물질을 분해해 미세먼지 솔루션으로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SH에 따르면, '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t의 CO₂를 저감할 수 있다.



▲ '스마트 모스웰' 사진

(4) 소결

거리에 설치하는 대기정화용 설치물은 현재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시범 설치되고 있다. 시티트리, 바이오어번과 같은 설치물은 한 개당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6천만원가량 비용이 소요되지만, 공기정화능력을 보았을 때 실제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17년 m^2 당 사유림매수 평균가가 872원이다. 116ha 크기의 서울숲과 같은 도시숲을 조성하려면 약 10억의 비용이 드는 셈이고, 19.49톤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대 설치비용으로 약 6천만원이 소요되는 '바이오어번'이 한 대당 연간 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대기정화 설치물을 충남의 아산, 천안과 같은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남에는 이미 조성된 내포신도시가 있으며, 앞으로 아산신도시도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지자체가 LH와 협업해 기술을 개발하고, 충남 내 신도시에 시범 설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숲 및 대기정화용 설치물 효율 비교〉

	도시숲	대기정화용 설치물
면적	116ha*	$10m^{2**}$
비용	약 10억원***	약 6천만원**
효과	오염물질 19.49톤 정화(연간)****	이산화탄소 60톤 정화(연간)

*서울숲 기준

**바이오어번 기준

***872원('17년 m^2 당 사유림매수 평균가) X 116ha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1ha는 168kg 오염물질 제거할 수 있음

2. 그린 리모델링

또한 본 보고서는 노후화된 민간 건축물을 녹지화 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제안하고자 한다. LH에 따르면, 건물에 수직정원을 도입할 경우 식물이 약 30%의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Co2 등 단지 내 대기오염농도를 저감하는 한편, 여름철에는 실내온도를 3℃ 가량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난다.⁷⁾

하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건물 녹화 사업이 제외됐고, 에너지 절감 사업인 ‘ESCO’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수직정원은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하는 데 그쳐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건축물 중 민간 건축물이 93.8%를 차지하고,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이 노후화된 점을 살펴볼 때, 민간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재 그린 리모델링 정책에 건물 녹지화 사업을 추가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1)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입체녹화’ 추가

국토부는 지난 2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공고했다. 민간 대상 이차지원 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 총 1000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민간 이차지원’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ESCO 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ESCO 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자들이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될 때, ESCO 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 비용을 조달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2월 공고한 그린 리모델링 이차지원 대상 공사범위를 보면, 모두 에너지성능을 향상하는 공사에만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도 국토부 용역보고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개념 정립이 ESCO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ESCO와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린 리모델링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⁸⁾

7) ‘LH, 폭염·미세먼지 막는 청정 주거단지 조성 위해 수직정원 도입’(LH 보도자료, 2019.8.16)

8)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 2016.01.), p.5

그러나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여전히 기존 ESCO 사업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데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집중시키고, 이에 ‘건물 녹지 조성’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건축물 공사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고, 그린 리모델링 녹지 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 공사 지원 범위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 既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구 분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필수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건축물 외피 성능 향상 * 일사조절장치 :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추가지원 가능공사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 주의사항

- 필수공사(건축물 성능향상 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

(2) 건물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올해 2월,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 관련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자율 부담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더해 지방은행의 상품을 확대해 지방민의 주거은행을 통해 대출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복수 은행의 대출상품을 다양화해 비교를 통해 유리한 상품을 민간이 찾도록 해 매력적인 금융상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존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을 감면, 면제하고, 줄어든 지방세 만큼 중앙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상승한 공시지가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국토부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구분	대상 금액	거치 기간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50억원	3년 이내	120개월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은행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3%)	
주거	공동	최대 2천만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없음
				36개월	롯데카드*신한카드	
				12,24,36개월	삼성카드	
	단독	최대 5천만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은행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3%)
36개월	신한카드			없음		

〈해외 그린 리모델링 제도 현황〉

국가	정책 종류	특징
미국	PACE 제도	-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출하고 채우는 재산세로 상환
독일	CO2 감축건물개보수프로그램	- 독일재건은행의 이차보전자금을 활용해, 건축개보수자금을 대출 -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지원범위를 구분
프랑스	에코론	- 주거용건물을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 - 적용되는 요소 기술의 개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
영국	그린딜	- 기존 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 비용을 공사 이후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상환 -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들 중 선착순으로, 개·보수된 사항에 대해 보조금 지원하는 Cash back제도 병행

(3) 소결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고, 취득하는 데에 재정적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노후화된 민간 건물을 입체 녹화해 발코니, 옥상, 벽면 등에 녹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실제 서울 시민청 신청사 로비는 벽면은 수직정원으로 설치하고, 14종 6만 5000여 본의 식물들을 식재한 바 있다.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원, 조세지원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그린 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수정한다면 입체녹화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IV. 기대효과

(1)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거리 설치물,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입체녹화를 통해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건물 외벽에 수직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도시의 열섬 효과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식물의 증발산 작용이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2) 정부기관, 고효율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정부기관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고, 기존의 도로와 건물을 유지한 채로 도시 녹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멕시코시티와 같은 도시에서는 수직정원을 적극 도입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수직정원을 이용하고 있다.

(3) 신산업 발전

대기정화 설치물,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요구된다. 실제 시티트리와 바이오어번의 경우 각각 독일과 멕시코의 스타트업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었으며,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투자 기구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독일의 혁신 지원 기관인 ‘클라이밋킵(Climate KIC), 청년 기업의 디지털 사업 모델 육성 기관인 ‘오딘(ODINE)’과 같은 소셜 벤처 지원 기관 및 투자자들의 기여가 바탕이 되었다.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공공 자금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신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V. 결론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이슈이지만, 충남의 경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충남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가까이 있고,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몰려있는 아산, 천안과 같은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보고서는 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대책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정책과 비교해 ‘입체녹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임을 입증했다. ‘시티트리’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용 거리 설치물은 서울숲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저렴한 비용이 드는 반면, 공기 정화 효과는 서울숲 정화 효과의 약 3배에 이른다. 또한 건물에 수직정원을 도입할 경우 식물이 약 30%의 미

세먼지를 흡착하고 Co2 등 단지 내 대기오염농도를 저감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지매입비가 높고, 건물 철거비 등이 요구되는 도시의 여건 상 기존에 있는 도로와 건물에 녹지화 방안을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입체녹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민간이 그린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젊은도시 천안

이병하 일반당원

안녕하세요, 충남도당 천안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먼저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이 주최하는 이번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제1회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책을 우리 지역에 맞게 제안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천안시 동남구이며 정당 활동도 천안 갑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경부선 철도 중심으로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뉘어져 있고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남구 지역이 천안의 중심부였으나 지금은 구도심 지역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 젊은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였습니다.
어떡하면 젊은 청년들이 동남구 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활동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젊은 도시 천안을 바라며...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이 있으며 인구연령 평균을 보면 39.5세로 전국에서 11번째 젊은 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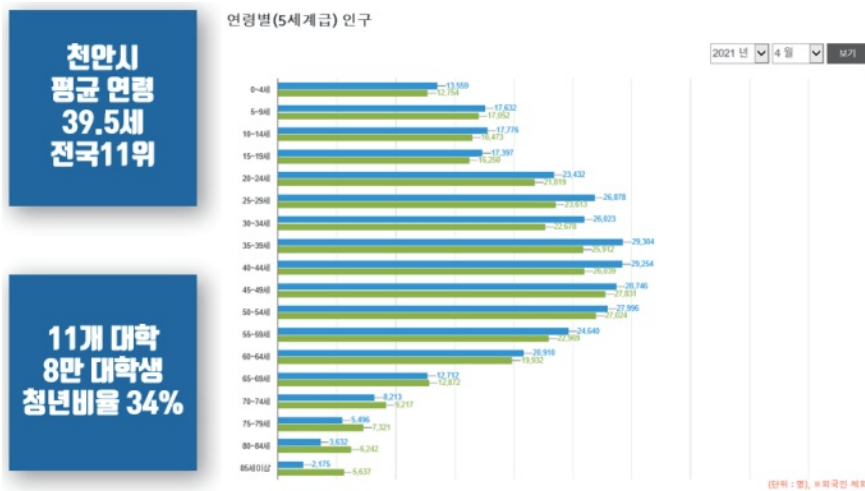
그리고 11개의 대학이 8만명의 대학생들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비율로 보면 34%입니다.

젊음은 가장 큰 성장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년정책의 플랫폼화를 통한 집약적 수행을 한다면 보다 많은 수혜자와 참여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 천안의 평균 연령, 청년비율 〉



그리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임의의 자율 생태계인 “청년생태계를 만드는 첫 번째 단추는 청년허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다양성과 지속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지향하기 위한 청년의 생활·문화·자산의 플랫폼.

청년허브를 위한 경제적 제시를 하겠습니다.

1. 청년 창업 아카데미
2. 기술교육원/직업훈련원
3. 지역기업/인턴쉽
4. 코워킹 플랫폼

〈 청년허브를 위한 정책제시 〉



청년허브를 위한 문화적 제시를 하겠습니다.

1. 플리마켓
2. 플프마켓
3. 청년공동체지원
4. 청춘공간조성

〈 청년허브를 위한 정책제시 〉



홍보 방법으로는 각종 SNS를 활용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많은 소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년허브를 홍보방법 〉

홍보방법 : 유튜브(YouTube) 활용



수많은 콘텐츠
다양한 연령대
뛰어난 접근성
홍보효과 높다



유튜브(YouTube) 사례
"충주시 유튜브"

재밌고 중독성 있는 영상으로
충주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채널을 구독하게 만드는 충주시 사례



페이스북(Facebook) 활용



페이스북 또한 폭 넓은 사용 연령대와, PC 또는 모바일로의 편리한 사용 시스템으로 인해 광고나 홍보를 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위 예시 사진과 같이 광고 계정을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천안 청년 허브'라는 계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이 관심있는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며 더 발전해나가는 하나의 공간으로도 예상

그리고 천안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천안 역사를 중심으로 서부광장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청년허브 위치 제안 〉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워
청년 창업 확장이 용이하고
청년 문화와 복지 등이 수도권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천안의 경우, 천안역 교통 인프라나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후보지 주변에 밀집된 대학, 투자기관, 대학 등 혁신주체와 창업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 유입뿐 아니라 향후 성장 지원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기지정돼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이후 기업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천안역을 중심으로 서쪽은 스타트업파크 동쪽으로는 지하상가를 활용해 청년허브공간과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구성되어 진다면

청년 정책 인지도가 올라가고

문화요소확산

인구유입 증가

경제적 자립

지역균형발전 등

동남구 지역은 젊은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 청년허브 기대효과 〉



그런 젊은 도시 천안을 꿈꿔봅니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K 허브 - 세계자유무역지구 형성 제안

조재환 일반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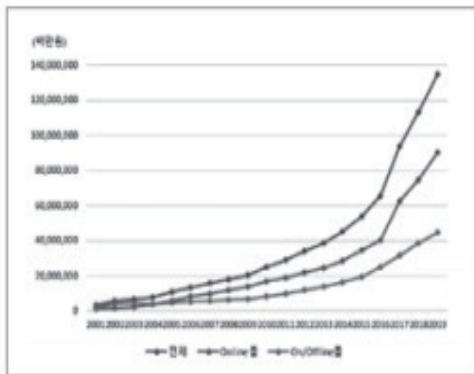
I. 추진배경 및 방향

□ 시대적 과제「6차 산업」이후 새로운 소비키워드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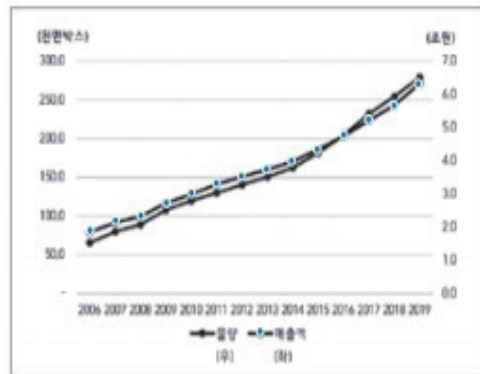
- 세계는 지금 천연물질로의 기능성화로 또는 부작용 없는 의약품등으로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의 인삼 또는 약초는 어쩌면 인류의 천연자원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소재로 대두될 전망으로 보임.
 - 최근 환경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으로 우리나라 고유종의 약초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 축소 되어 가고 있으며, 육성 및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제도적인 부분과 해외시장의 한계가 있어 제안함.
 -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것은 물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킴
 - 해외시장 변화 대처 능력 미흡 및 한정된 국내시장 규모로 인한 성장 한계
 - 기존 정책이 생산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새로운 정책 구심점 필요
 - 아시아 신흥 중산층의 소비는 내구재 위주에서 점차 문화·관광, 교육, 보건의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2014 다보스 포럼)
 -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들의 소비 확대가 중요
- * 2030년 글로벌 중산층은 49억명, 아시아는 30억명 추정(전 세계의 66%)
- 경제발전예 따른 중산층의 증대와 교육수준의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웰리스(wellness)의 개념이 확대

□ 새로운 산업의 키워드 <생활물류>

- 물류서비스가 다양화·일반화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대표되는 도시생활물류 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 재택생활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이러한 환경변화는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온라인 쇼핑 성장



택배시장 성장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 건강과 위생을 중요시하는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 증가
 - 고품질의 식음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생산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제품의 프리미엄화 추세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해 대규모로 생산 및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들의 등장

-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화
 - 상당한 투자를 통해 제품 생산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글로벌 스탠다드한 제조 및 유통 환경 필요성

□ 약초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 약초는 전래의 한방 약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생명산업이자 기능성 식품, 산업소재로도 발전
 -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한약 시장에서 벗어나 중요한 신약개발의 소재로써 그 가치가 부각
 - 재배기술의 발달과 건강한 삶을 열망하는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약초는 신선채소와 기능성 식품으로 활발히 개발

□ 국내 특구 및 특화단지와의 다른 개념

- 국제 약재 자유무역지구로의 형성으로 경제자유무역지구처럼 국제 유통지역이라 보면 됨.
 - 국내의 지역 한방특구, 특화단지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국내유통의 중심의 역할로서의 기능을 수행.
 - 지리적 특성상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서해의 국제 무역항에 있어서 최적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상 국제유통의 중심역할 최적.

II. 약초산업 시장 규모

□ 중국 건강식품 시장규모

-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8년 한약재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4.2% 성장한 2,105억 위안(36조 원)에 달했고 2020년에 시장수요가 3,500억 위안(60조 원)을 돌파할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2009년 1,600억 위안(한화 약 28조원)에서 2019년 3,965억 위안(한화 약 69조)으로 연평균 9.5%의 성장률로 10년새 2.5배 증가했다. 올해는 4,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 홍콩 건강식품 시장규모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7년 홍콩 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64억 8,750만 홍콩달러이며, 2022년에는 67억 5,500만 홍콩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8~2022년 기간 동안 보조식품은 홍콩의 인구노령화 및 건강 의식의 증대 등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세계 건강식품 시장규모

-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동향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2015년 기준 1,17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7.3% 성장하여 2020년에는 1,6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으로 2015년 기준 약 404억 달러 규모이며, 일본은 약 10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조 3,291억 원으로 나타남

III. 사업기획요인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또는 %)

구분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점유율 (2015기준)
미국	404	568	7.1	34.3
서유럽	168	190	2.5	14.2
중국	163	267	10.4	13.8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118	187	9.5	10.0
일본	109	122	2.3	9.2
남미	89	155	11.7	7.5
기타	127	188	8.2	10.8
합계	1,179	1,677	7.3	100.0

□ 홍콩리스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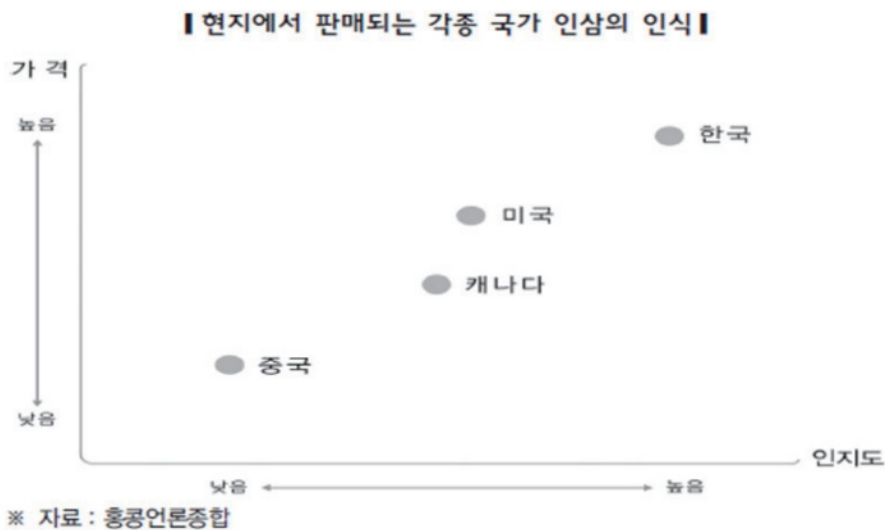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사업 중심추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 추세
 - 홍콩은 약초생산국이 아니나 중국약초시장의 관문으로 중요성이 있으나 홍콩 리스크로 기능이 약화됨
 - 최근에는 언택트 소비의 정착으로 온라인이나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추세
- 최근 시위로 해외방문객 축소로 홍콩 관련상품 축소 추세로 돌입

□ 중국건강식품 수요증가

- 코로나19 발발 이후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쑤닝(苏宁)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춘절 기간 건강식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8%가 증가했다.
 - 최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 대한민국 제품 신뢰도 증가

- 2018년 전까지 중국 내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가장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여 중국은 2019년 '백일행동(百日行动)'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대대적 시장 정비
 -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건강식품의 수출량은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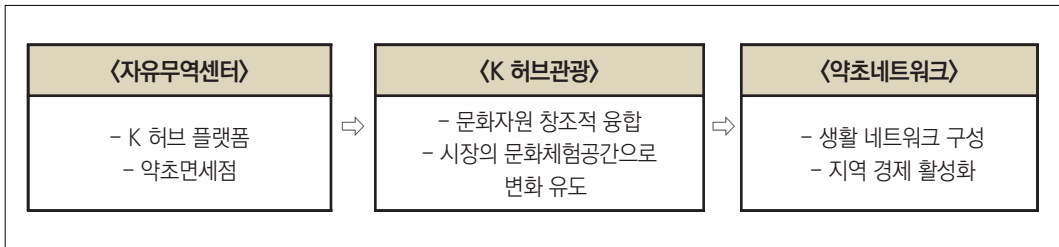
- 홍콩에서는 한국 제품은 고급약재라는 인식이 강하며 중국인 인삼 제품은 선호도 낮음
 - 중화권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품 성분, 기능 권장 섭취량 등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김.
 -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건강 기능식품의 임상실험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짐

-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이 약으로 쓰일 만큼 기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럽등 해외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K팝, K문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의 신뢰도 상승효과도 있다.

III. K 허브 세계자유무역지구

□ 개념

- K허브의 국제유통을 위한 플랫폼과 인삼축제 등 문화 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시켜 세계적 K허브 명소로 육성
 - 유통구조를 변화해야겠지만 우선먼저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제반사항들이 필요하기에 경제자유무역지구처럼 인삼, 약초를 그저 하나의 농산물로 볼게 아니라 향후 인류의 천연자원물질로 본다면 그 시장 규모는 여타의 종류의 규모보다 클 것이고 전망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K 허브 자유무역센터

- 개념
 - 약초 상품의 세계 유통을 위한 각종 정책적(세제, 수출입 물류) 지원 및 물류플랫폼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기구 추진
 - 홍콩은 인삼약초 생산량이 전무하나 국가의 관광정책 및 수출입 과정의 정책적 지원으로 세계적 수입 수출국이 됨
- K 허브 수출을 위한 It 기반 물류 플랫폼 구축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적용, 온도·습도·충격에 민감한 제품 또는 고가의 상품 배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운송 관제 서비스 제공

- 화물 크기와 수량을 AI로 분석해 최적의 배송공간을 추천

《 생활물류 성공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과 AI, 로봇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 물류와 재고,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 비용과 지출을 줄이고 배송 시간을 단축 - 아마존 물류센터가 아닌 판매자가 자신의 물류나 직접 혹은 판매자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매자에게 제품을 배송 처리하는 공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해외 직구 사이트 아이허브 아시아권역 국제물류센터(ODC) 인천공항에 유치 - 축구장 4개 규모, 3만㎡(약 1만평) 첨단 물류센터 운영 ... 아시아 소비자 주문 처리 - 관세청 추산 고용창출 300여명, 1천억 원 경제효과

○ 정책지원 방안

- K 허브 수출 품질 인증소 건립 : 수출제품 품질 검사 및 인증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K 허브 위생가공 공동 작업장 구축 : 수출 및 유통상품의 전처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작업장 설치 해외의 각종 수출 규제 대응

□ K 허브 관광

- 2019년 기준으로 매년 9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금산인삼축제는 금산의 전통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2018년 7월 4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 자문그룹 심사 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유산의 가치성을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 유산 등재가 결정되었고 신대리 일원 테마파크 조성예정



2015년 제34회 금산인삼축제 문화예술 공연 모습

○ 또한 4계절 축제는 고른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으며 인삼 시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높음

《 금산의 4대 축제 》



〈봄 : 비단고을 산꽃 축제〉

· 1,000만㎡의 국내 최대의 산벚꽃 자생 군락지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다채로운 힐링프로그램 및 금산군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여름 : 금강여울축제〉

금산의 금강여울축제는 여름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 체험과 농촌체험, 전통민속 공연이 어우러져 색다른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름축제로 각광받음



〈가을 : 금산인삼축제〉

· 금산인삼축제는 가장 성공적인 문화관광형 축제로 금산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제의 원형이라 할 정도로 활성화된 대한민국 대표축제임



〈겨울 : 장동 달맞이축제〉

· 지역의 정월대보름 민속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축제로 민속놀이 체험과 사랑나무 달등놀이,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달집태우기 등의 전통문화행사가 진행됨

○ 인삼엑스포 기간 동안 총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관람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금산군만의 차별화 가능



□ K허브 네트워크

- K허브의 생산자들의 권익 향상과 구성원들의 성별, 연령별 문화적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기획으로**
- 인삼 및 약초 재배농민을 기반으로 한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당사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
- 상호간 정보 공유 및 사업의 정책 연계 및 조정 기능 수행

□ K허브를 통한 평화통일

- K허브 남북 교류
 - 북한 고유의 약초 및 생산물등 민간교류 및 무역교류
 - 인삼재배(연작장애)의 특성상 북한의 농경지 농업교류
 - 북한 천연자원(약초)의 수출 지원 및 품질지원의 지원센터 설립
- * 국제 약재무역지구 형성으로 인한 물류 및 민간교류 형성
(농업기술과 경제적인 교류를 통한 생활안정 → 지역 고유 문화예술 승계 및 교류를 통한 공연 → 도외시 되고 있는 북한의 문화재 보호의 관광자원 → 북한의 기초 경제성장 해결)
- * 국제 정세에 흔들림 없는 교류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이 오길 희망하며 후세의 물려줄 천연자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K팝, K문화, K방역 이제는 K허브입니다.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빛나는 고속도로(Green highway)

곽명환 충주시의회 의원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대통령
2050탄소중립 선언



2019.12.13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2050탄소중립 선언



2021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탄소중립 2050을 강조

2050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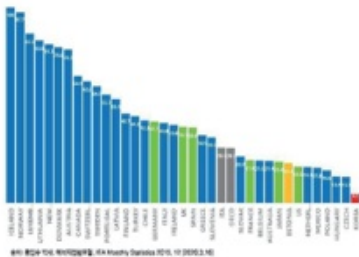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2050 탄소중립의 핵심?



2050탄소중립은 전세계의 과제

新탄소통상시대 -탄소국경조정, 탄소발자국, 탄소세



- ✓ EU 2021년 6월에 법제화 2023년 시행 발표.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제품 같은 원자재 가공제품 우선
-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4800만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순수출국. 탄소집약도 높음 ⇒ 에너지전환
- ✓ EU 집행위, '배터리 지침' 개정안.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휴대용 배터리 2024년 7월 1일부터부터 탄소발자국 공개. 2027년 7월 1일부터 탄소발자국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제품 판매 금지
- ✓ 폐배터리 수거율 45%,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는 재활용된 코발트, 납, 리튬, 니켈 의무 포함
- ✓ **재생가능에너지 100%와 순환경제**

문제점

- 현재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세계 최하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



에너지 빈국 한국...재생에너지 사용율도 세계 최하위권

A 노호섭 기자 | Ⓜ 입력 2017.06.26 09:16 | Ⓜ 수정 2017.06.26 09:39 | 🗨 댓글 0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원유나 천연가스가 거의 나지 않아 대표적 에너지 빈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면에서도 세계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 성장 지표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 중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은 2015년 기준 1.5%로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45번째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인 9.6%보다 낮았고, 비회원국까지 아우른 세계 46개국 평균인 13.8%와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 적은 국가는 세계 3대 산유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0%)뿐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정의에 따르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조력, 바이오가스 등을 뜻한다. 재생에너지에 기대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88.5%에 달했고, 코스타리카(50.2%)와 스웨덴(45.9%), 노르웨이(44.6%), 뉴질랜드(40.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석탄과 원유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의 사용 비중은 30.6%로 46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고 원유의 사용 비중은 37.2%(2015년 기준)로 46개국 가운데 17번째였다.

MBC NEWS

독일 친환경 에너지 비율 43% 사상 최고... 우리나라는 5%대

입력 2019.10.26. 오전 8:07 · 수정 2019.10.26. 오전 8:41

 최훈 기자 >

 공감  댓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4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에너지 수자원협회 조사 결과 작년까지 화석 연료 생산량과 비슷했던 친환경 전력 생산량은 1천830억 킬로와트시(KWh)까지 늘어나 화석 연료 생산량보다 50% 많았습니다.

특히 강풍이 불었던 3월엔 풍력발전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친환경 비중이 52%에 달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5%대에 불과합니다.

최훈 기자 (iguffaw@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특징



태양광 에너지 -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어디든 설치가 가능함
비교적 일정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함

풍력에너지 -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비쌈
비교적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규칙적인 전력생산이 어려움
규모의 따라 높은 전기 생산이 가능함

수력, 조력 에너지 - 큰 매스 수조물을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의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함
오랜 시간 전력생산이 가능함
홍수등 자연재해에 대처가 가능함

수소에너지 - 전력대비 생산 효율이 너무 떨어짐(부생수소 예외)
전력사용량이 작을 때 수소생산후 저장 가능

가장 보편적으로 생산이 쉬운 설비는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의 단점



태양광 발전 단지



태양광 발전 단지

태양광설비의 단점

1. 지역주민민원
 2. 보석재배사 등 면적설치
 3. 산림 및 자연훼손
 4. 자연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5. 자연훼손으로 인한 홍수
 6. 태풍으로 인한 민가피해
 7. 설비로 인한 조망권피해
- 등

현재 태양광단지의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이로 인해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도시계획 위원회 통과도 불투명한 사항

예) 충주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2019년 태양광 설치 조례를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어렵게 함

하지만 위의 단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줄이고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됨

※ 본 교육생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수적으로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해서 중앙정부의 유휴 태양광 설치부지를 제안하는 내용

문제해결과제

1. 산림 및 농경지 훼손이 없어야 함
2. 탄소제로화가 가능한 전력이 생산되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없는 태양광설치 정책이어야 함
4. 탄소제로화 가능전력이 생산 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
5. 빠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기관이 주도해야 함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교육생이 제안하는 정책은 고속도로 및 철도위 태양광발전



(태양광설비설치 정책 제안)

고속도로와 철도 위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이유

1. 고속도로, 철도는 국가소유의 토지
2. 고속도로, 철도의 위는 유희부지로 볼수있음
3. 1차훼손이 이루어진곳으로 더 이상 훼손할것이 없음
4.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있음
5. 전체 국토면적의 0.42%로써 부지면적의 제약이 없음



단순계산으로 우리나라 총 전기사용량은 국토의 2.8%의 태양광설비가 있으면 생산이 가능한 수준임



한국 총 전기사용량 : 534TWh(2017년 기준)

4차산업혁명으로 꾸준히 전력량은 증가추세 (전기차,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등)

단순면적계산(100%전력생산시)

태양광패널 300w (1,000×1,670)

1kW생산면적 :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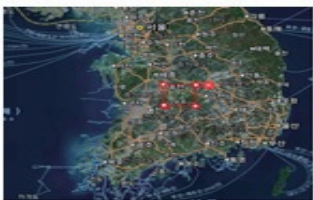
1년 생산전력 : 1kW×3.7시간×365=1,350.5kWh

1㎡당 년 생산전력 : 1350.5/5.56=243kWh

534TWh=534,000,000,000kWh

534,000,000,000kWh / 243kWh

= 2,197,530,864㎡ = 2,198㎢(국토면적의2.8%)



국토총면적대비 2.8%

태양광패널의 효율을 일반적 가정용 패널중 가장 저렴한 패널로 계산했으며
태양광 생산 시간은 1일 3.7시간으로 계산하여 계산식보다는 많은 에너지가 생산될 것으로
사료됨

면적의 계산 - 고속도로



고속도로총면적 = 341.5km²

고속도로에 태양광 패널 설치시 장점

- 1.전부 국유지 이므로 시민 민원이 적을
- 2.패널이 가림막역할을 하여 전천후 차량이용이 편리함
- 3.콘크리트 구조물로 태양광철탄구조물을 안정적으로 고정할수있음(안전성)
- 4.전국을 연결하고있으므로 전력이용이 간편함
- 5.자연훼손이 최소화됨

단위: km²

구분	합계		도로부지		사육부지		휴게소부지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304,610	341.5	271,715	312.4	1,525	2.57	7,309	12.54	24,061	13.932

한국도로공사제공

면적의 계산 - 철도



단순면적계산

철도 총연장 : 4900km(코레일제공) 복선철로 폭 : 18m

철도 총면적: 4900km×0.018km = 88.2km²

***복선을 가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오차가 있음**

코레일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은 아니지만 복선철로일때의 폭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으로 사료됨

결론

고속도로 면적의합 : 341.5km²

철도 면적의합 : 88.2km²

두 면적의합 : 429.7km²

고속도로, 철도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용시
우리나라 년 총 전력사용량의 20%를 충당할 수 있음

- ※ 해당 정책제안은 고속도로와 철도만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방의 산업도로 및 간선도로를 포함한다면 태양광 설비만으로도 현재 원자력 및 화력발전을 멈추게 할수 있을 것
- ※ 발전시설의 위하여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현재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교육생은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는 나무를 심고 시골에서는 50년 된 산림을 훼손한다면 맞는 정책인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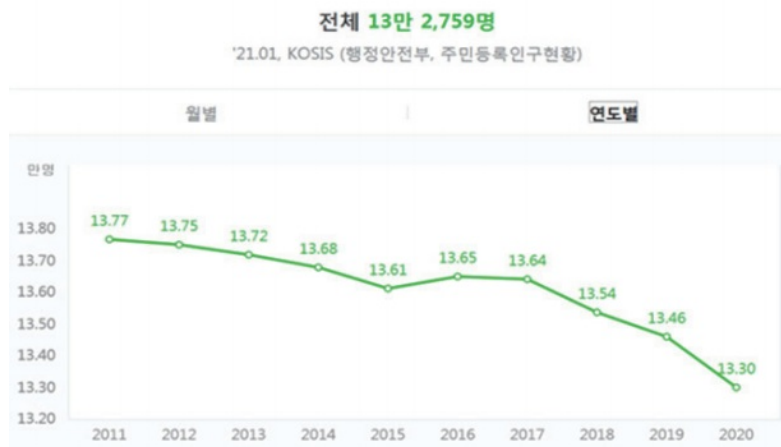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하여

이정현 제천시의회 의원

I. 제천시 인구 현황 및 문제점

1. 제천시 인구



2. 제천시 출생아 수



3. 문제점

-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 기록
- 15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 지속
- 제천시 연간 출생아수 700명 이하로 진입, 이는 곧 도시소멸 위험을 뜻함
- 실제로 2019년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신규 분류
-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취직과 교육, 주택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II. 저출산 원인

1.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 양극화, 주택, 사교육,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의 결과물**
-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 및 고용 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등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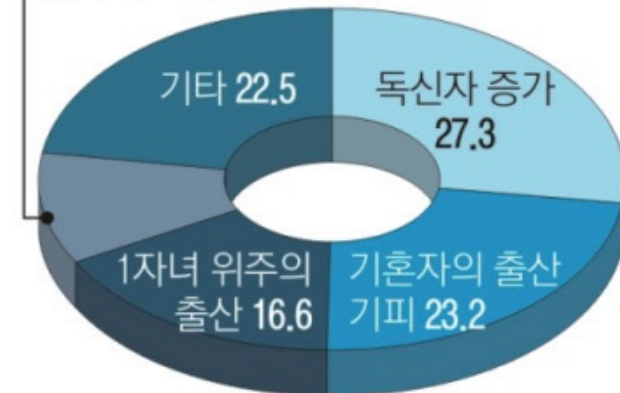
2.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 독신자 증가 이유
 - 주택마련 등 **과다한 결혼부담**으로 인한 결혼포기 43.8%
 - 취업준비·직장생활 등으로 **적정결혼연령 경과** 28.1%
 - 결혼생활을 유지할 양질의 직장이 부족 18.8%
- 기혼자의 출산기피 이유
 - 경제적 부담** 84.4%
 -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10.4%
 - 비경제적 부담 5.2%
- 한자녀 위주의 출산 이유 또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이 84.0%

- 난임 치료시 가장 힘든 점 역시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이 98.6%로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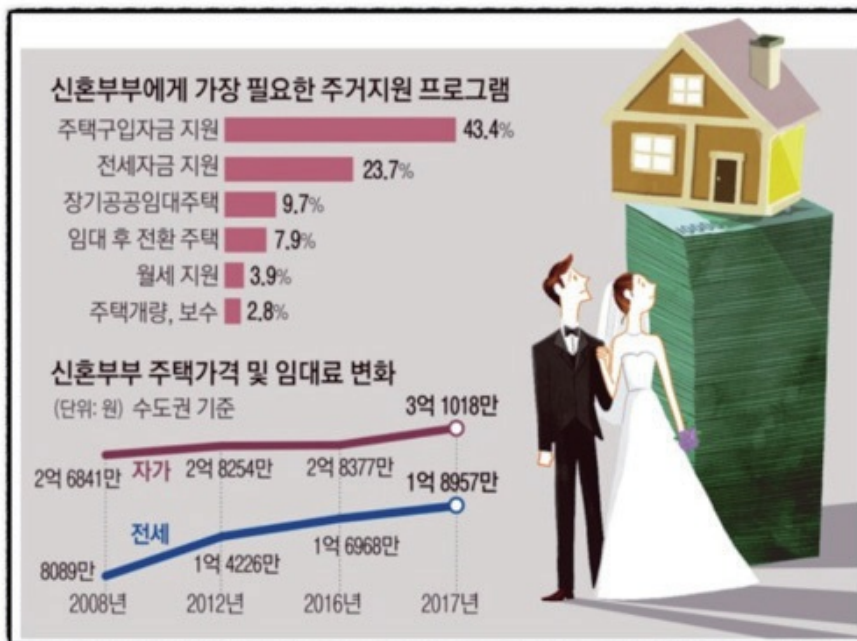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단위: %)

난임자 증가 등 출산 곤란 10.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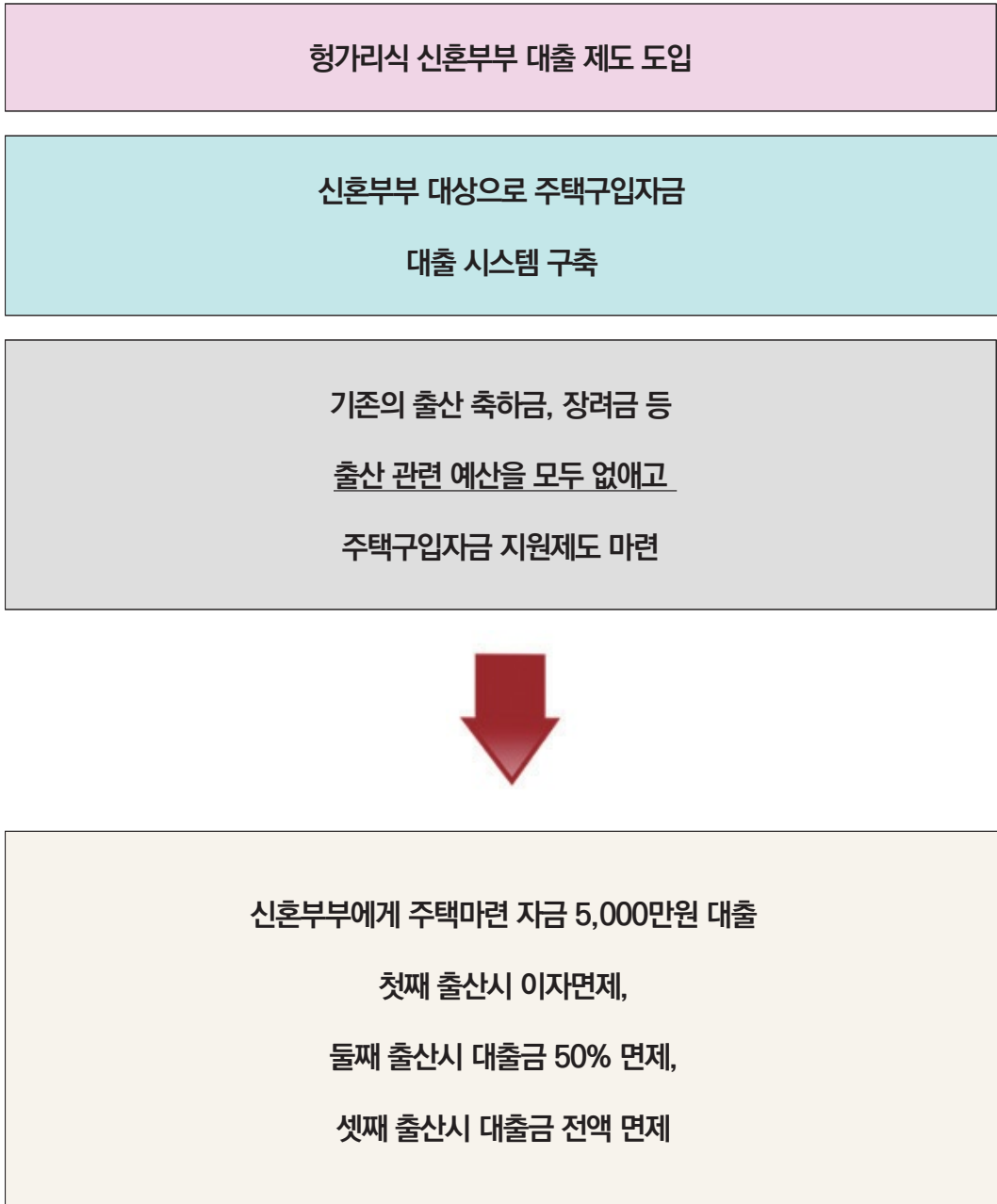
4. 개선 방안(사례)



- 인구 1천만명의 헝가리는 수년 전부터 인구가 연간 4만명씩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부딪혀 국가적인 위기감이 감돌던 상황
- 헝가리 정부는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현지에선 일반 직장인의 2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겐 대출 이자 면제,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
- 정책 효과 기대이상으로 '결혼붐' 일어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결혼 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
헝가리 통계청,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혀 2019. 9.에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

Ⅲ. 저출산 극복 정책제안

1. 정책제안



2. 제안방법



제천시의회 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헝가리식 결혼출산 장려정책 도입 제안

뉴스 사회
연립뉴스 언론사 선택 가능

이정현 제천시의원 "헝가리 본떠 신혼 부부 대출 제도 도입해야"

박재천
입력 2020. 10. 14. 16:21

0 14

"5천만원 빌려준 뒤 자녀 수 따라 이자 감면, 대출금 면제"
제안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등 이색적인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14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가 기존 500만원이던 셋째아 출산 축하금을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저출산 해결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 2021.03.02. | 네이버뉴스

"결혼·출산·주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합니다"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처음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일보 | 2020.10.15.

이정현 제천시의원 "제천시 출산장려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제천시의회 제공 이정현 제천시의회 의원이 제천시 출산장려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천시의회 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산율을...



충청투데이 | 2020.10.14.

"출산금 올린다고 저출산 해결 못해"...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 문제 지적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이 14일 "출산금만 대폭 올려주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 축하금, 양육비 지원, 가...

IV. 추진경과

1	제천시의회 294회 임시회 이정현의원 5분자유발언	2020. 10. 14.
	-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출산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인구정책 도입 필요성 강조(형가리식 사례)	
2	시장 지시(신혼부부 출산장려 주택자금 지원방안 검토)	2020. 10. 15.
3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지원 기본계획 수립	2020. 10. 30.
4	제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2020. 11. 06.
	- (장소) 의장실 / (참석자) 27명(시장님 등 제천시 8, 의장님 등 의회 19)	
5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요청(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위원회)	2020. 11. 10.
6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충북도)	2020. 11. 30.
7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1.
	- (입법예고) 2020. 11. 09. ~ 2020. 12. 07. / 별도 의견제출 없음	
	- (2020년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 2020. 12. 08. / 원안가결	
	-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 수정가결	
	- (조례 공포 및 시행) 2020. 12. 31. / 조례 제1738호	
8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지원 실행계획 수립	2020. 12. 30.
9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지원 사업 시행 공고 및 시행	2021. 01. 04.

V. 사업 추진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지원규모) 출생아 750명(주택자금지원 525, 출산자금지원 225)
- (사업비) 2,800백만원(시비) * 2021년 당초예산 1,400백만원 편성
- (지원내용) ①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② 출산자금지원금 * ① / ② 중 택1

구분	①주택자금지원금	②출산자금지원금	비고
첫째아	150만원	120만원	
둘째아	최대 1,000만원	800만원	2년간 4회 분할 지원
셋째아	최대 4,000만원	3,200만원	4년간 8회 분할 지원
셋째아 이상	-	3,200만원	4년간 8회 분할 지원

2. 지원 신청 및 지원 현황

○ 지원신청 현황

(2021. 5. 21. 기준)

구분	계				주택자금지원				출산자금지원				비고
	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계	첫째	둘째	셋째	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계	153	72	55	26	45	22	17	6	108	50	38	20	
1월	25	12	7	6	7	4	2	1	18	8	5	5	
2월	27	12	10	5	6	3	2	1	21	9	8	4	
3월	32	14	15	3	11	5	6	-	21	9	9	3	
4월	47	20	16	11	17	8	5	4	30	12	11	7	
5월	22	14	7	1	4	2	2		18	12	5	1	

○ 지원금 지급 현황(첫째아) * 둘째아 이상 2021. 7. 지급 예정

(단위 : 명 / 천원)

구분	계		주택자금지원		출산자금지원		비고
	명	지급액	명	지급액	명	지급액	
계	58	75,600	20	30,000	38	45,600	
1월 신청	12	15,600	4	6,000	8	9,600	
2월 신청	12	15,300	3	4,500	9	10,800	
3월 신청	14	18,300	5	7,500	9	10,800	
4월 신청	20	26,400	8	12,000	12	14,400	

3. 주요 언론사 보도 현황

[2021. 01. 18일자 보도]

- (Y T N) [뉴스가 있는 저녁] 지자체, 파격 출산 정책 효과 있을까?
- (중앙일보) "셋째 낳으면 은행 빚 5000만원 갚아줘"…제천 첫 수혜자 나와
- (서울경제) (연합뉴스) 등 18개 언론사

[2020. 12. 28일자 보도]

- (경향신문) 제천시, 셋째 아이 낳으면 주택대출 빚 5000만원 갚아준다
- (서울신문) "아기 셋 낳으면 주택자금 500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25개 언론사

[2020. 11. 09일자 보도]

- (Y T N) 충북 제천시, 아이 셋 낳으면 주택자금 5,150만원 지원
- (조선일보) "주택자금 5150만원 준다, 아이 셋 낳으면" 파격 출산장려 정책 내놓은 제천시
- (중앙일보) "아이 셋 낳으면 5150만원" 주택자금 지원 승부수 던진 제천시
-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언론사

4. 홍보 마케팅 추진

○ 수도권 등 관외지역 홍보

- (TV 스포광고) ▲MBC충북 ▲CJB청주방송 ▲KBS충주
- (영상모니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영상모니터(18대)
- (LED전광판) ▲청량리역 대합실 ▲충무빌딩(명동입구) ▲우신빌딩(강남대로)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 홍보현수막 게시 : 63개소

- 관내 주요도로 등 인구밀집 장소 47개소 / 시군 접경지역 16개소

○ 설명절 연휴 언택트 홍보존 운영

- (운영기간) 2021. 2. 10. ~ 14. - (운영장소) 제천역 앞 광장
- (주요내용) ▲홍보영상존 ▲웍툰존 ▲시정홍보존 운영

- 제천시에서 태어났“소”축하이벤트 개최 : 14회 / 19가정
 - ▲1월(1회 / 1가정) ▲2월(3회 / 4가정) ▲3월(5회 / 6가정), ▲4월(3회 / 4가정)
▲5월(2회 / 4가정)
- 리플릿, 포스터 및 홍보배너 설치 : 23개소
 - 읍면동(17개소) / 관내 금융기관(6개소)

5. (향후계획) 주택자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영역 추진

○ 용역개요

- (용역명) 제천시 주택자금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2021. 06. 01. 착수 예정
- (소요예산) 15백만원
- (과업내용) 주택자금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등 환류 정보 도출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등 성과분석

○ 주요내용

- 주택자금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주택자금지원사업 서비스 효과성 평가
- 저출산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사업 모형 도출

○ 추진일정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2021. 5. 말
- 용역 착수 2021. 6. 1.
- 중간보고회 2021. 9. 중
-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 2021. 11. 말

VI. 결론

1. 기대효과



2. 결론

위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젊은 부부들에게 주택마련의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지역에서 결혼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인근 도시 젊은이들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마련의 도움으로 초혼연령을 낮추어 난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수도 증가하는 등 결론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교육지책이 될 것입니다.

부록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 목적

- 만45세 이하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과 국가·지방 등 공공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 전문가 양성

□ 운영 개요

- 시기 : 2021년 5월 11일 ~ 6월 3일(총 11강의)
- 장소 : 온라인 화상강의(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9층 민주백송홀)
현장 워크숍(위드스페이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
- 행사명(강좌명) : 제1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 대주제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주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 주관 :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매청협)

□ 신청(모집) 개요

- 신청자격 : 만45세 이하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대상
- 모집인원 : 51명 (※각 시도당별 수강생 3명 선발·추천)
- 선발절차 : 각 시·도당별 수강생 모집 → 각 시·도당별 3명 선발·추천
(남녀 각 최소 1명 이상 포함) → 수강생 직접 온라인 신청·등록
- 추천기간 : 2021년 4월 05일(월) ~ 26일(월) 오후 2시, 총 22일
- 등록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26일(월) 오후 2시, 총 15일
- 등록방법 : 아카데미 신청서 온라인 등록
- 수강료 : 20만원

□ 수강(강의) 개요

○ 수강 인원 : 51명 (※각 시도당별 수강생 3명 선발·추천)

구분	계(51명)			계(51명)		계(51명)		
	일반당원	지방의원	당직자	남	여	20대	30대	40대
인원	15명	18명	18명	31명	20명	9명	25명	17명

○ 수강기간 : 2021.5.11.(화) ~ 6.3.(목)

- 수강생 오리엔테이션(OT) : 2021.4.29.(목) 오후 7시 (※온라인 화상진행)
- 입학식 : 5.11.(화) 19:00 ~ 19:10 (※온라인 화상진행)
- 화상수강(7강의) : 5.11.(화) ~ 6.03.(목) 19:00 ~ 20:30 (※온라인 화상진행)
- 현장 워크숍(4강의) : (1일차) 5.22.(토), 13:00~17:50 / (2일차) 5.29.(토), 13:00~17:50
-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 5.31.(월) 10:00까지
- 최종보고서 심사·평가 : 5.31.(월) ~ 6.01.(화) (#수강생 평가 방법 참조)
- 수료식 : 6.03.(목) 20:30 ~ 21:00 (※현장 및 온라인 화상진행)

○ 수강방법 : 화상수강(7강의) + 현장 워크숍(4강의)을 결합한 온·오프 방식

- 화상수강 : 1강 90분(60~70분 강의, 20~30분 질의응답), 10분 휴식
- 현장 워크숍 : 1강 120분(수강생 7분 주제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 수료기준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강생 평가 방법 참조)

○ 수료자 특전

- 아카데미 수료자 '정책전문가 인증서' 수여
- 우수 수료자 특별포상(당대표 등)
-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 클럽' 등록(동기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 당내 교육연수 최대 10시간 인정(민주당 당원 '교육이수시스템' 등록)

□ 커리큘럼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국가 현안·비전 의제 : 국가 비전과 전략	(온라인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입학식	05.11.(화) 19:00~ 19:10	◦ 환영사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 격려사 - 송영길 당대표	
제1강	05.11.(화) 19:10~20:40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 방향 - 코로나19 이후 국가 비전과 대응 전략 등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前 청와대 경제보좌관)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제2강	05.12.(수) 19:00~20:30	◦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 -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안보 대응전략 등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외장 (前 통일부장관)
제3강	05.13.(목) 19:00~20:30	◦ 권력기관(검찰 등) 개혁 성과와 과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생각한다" 저자)
지방재정·분권 의제 :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온라인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4강	05.18.(화) 19:00 ~ 20:30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이기원 한림대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5강	05.19.(수) 19:00 ~ 20:30	◦ 동네안의 시민정치와 시민경제 - 자치분권과 지방정부 혁신 등	염태영 수원시장 (前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제6강	05.20.(목) 19:00 ~ 20:30	◦ 정부예산 편성과 지역정책예산 - 지방재정과 예산의 이해(조세/재정/예산/결산) 등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역 현안·비전 의제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현장 워크숍 : 위드스페이스 P홀)	
제7-1강	05.22.(토) 13:00 ~ 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A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윤대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제7-2강	05.22.(토) 15:20 ~ 17:2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B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우영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7-3강	05.29.(토) 13:00 ~ 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C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하승창 前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7-4강	05.29.(토) 15:20 ~ 17:20	◦ 수강생(12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D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前 국회의원)
특강 및 수료식		(온라인 화상강의 : 민주당사 9층 민주백승홀)	
제8강	06.03.(목) 19:00 ~ 20:30	<특강> ◦ 세대·계층별 사회·정치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수료식	06.03.(목) 20:30 ~ 21:00	◦ 수료사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 축 사 : 송영길 당대표 ◦ 정책전문가 인증서 수여식, 우수 수료자 표창	

□ 현장 워크숍

- 개요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지역 비전 관련 정책연구 과제 주제 발표, 지도교수 코멘트(심사평), 수강생 간 피드백 과정
- 일시 : (1일차) 2021.05.22.(토) 12:30~17:50 / (2일차) 2021.05.29.(토) 12:30~17:50
- 장소 : 위드스페이스 P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4층)
- 대상 :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강생 전원(51명)
- 주관 :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매청협 대표 : 박희정)
- 프로그램 (진행사회 : 박희정 매청협 대표)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1일차INTRO	5.22.(토) 12:30 ~ 13:00	◦ 현장 등록 ◦ 수강생 지역 현안 정책연구과제 훑어보기	
개회식	13:00~13:10	◦ 인사말, 진행 안내, 강사 소개, 사진촬영 등	
제7-1강	5.22.(토) 13:10~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A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Break Time	15:10 ~ 15:20	◦ 발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코멘트 달기	
제7-2강	5.22.(토) 15:20~17:2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B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우영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ENDING	17:20~17:5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2일차INTRO	5.29.(토) 12:30 ~ 13:00	◦ 현장 등록 ◦ 수강생 지역 현안 정책연구과제 훑어보기	
개회식	13:00~13:10	◦ 인사말, 진행 안내, 강사 소개, 사진촬영 등	
제7-3강	5.29.(토) 13:10~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C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하승창 前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Break Time	15:10~15:2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제7-4강	5.29.(토) 15:20~17:20	◦ 수강생(12명)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D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등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前 국회의원)
ENDING	17:20~17:5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 수강생 평가 방법

○ 수료 기준 : 9강의 이상 출석,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 득점(60점미만 과락)

○ 수강생 평가 방법 : 종합 평가 100점 만점 + 가산점

① 출석 개근 가산점	② 수업 참여도 가산점	③ 현장 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	④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합계
(+2점)	(+2점×횟수)	(20점)	(80점)	(100점 만점 + 가산점)

① 출석 가산점 : +2 가점 부여(출석 개근)

② 수업 참여도 가산점 : 매 강의마다 +2 가점 부여(강사 3인 추천)

③ 현장 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PT) 평가 : 20점 만점

발표 주제	(대주제)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소주제) ○○○○○○					
평가 항목	주요 내용	평가 척도				
자세·태도	표정, 자신감, 열의, 표현력(적절한 언어 사용)	수(5)	우(4)	미(3)	양(2)	가(1)
논리력	발표의 기승전결 흐름	수(5)	우(4)	미(3)	양(2)	가(1)
이해도	주제·내용 이해 정도	수(5)	우(4)	미(3)	양(2)	가(1)
설득력	논리 전개 타당성, 근거	수(5)	우(4)	미(3)	양(2)	가(1)
종합 평가 점수(20점 만점)						

④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 80점 만점

- 평가위원 : 내부 전문가 5인
- 평가방식 : 전문가 5인 평가 중 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3명 합산 평균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논리정합성	20	글의 체계와 짜임새
시의성	20	시대상황, 주민요구 등 반영
의성	20	독창적 아이디어
정체성	10	당 이념과 노선 부합성 여부
실행가능성	10	추진방식, 예산 등의 타당성

※ 최종 보고서 작성방법

- 대주제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소주제 : 각자 연구과제 발표 주제
- 보고서 내용
 -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문제
 -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제
 - 나의 지역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 보고서 작성 형식
 - 서술형식 : 자유(개조식 또는 서술식)
 - 작성분량 : 12 포인트 기준, A4용지 10페이지 내외(그림, 표 등 포함)

□ 아카데미 결과

○ 수료 인원 : 총 수강 인원 51명 중 36명 수료(정책 전문가 인증서 수여)

구분	일반당원	지방의원	시도당 당직자	계
수강 인원	15명	18명	18명	51명
수료 인원	10명	13명	13명	36명
수료율	66.6%	72.2%	72.2%	70.5%

○ 우수 수료자 표창

- 우수 수료자 선발 기준 :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당대표 표창(최우수상) : 2명(이승우, 손혜민)
- 민주연구원장 표창(우수상) : 5명(강한솔, 김효숙, 임성화, 임정서, 차승연)
- ※ 우수 수료자에 대해 특별포상 최고위원회의(2021.6.2.) 시행 의결

제1기 정책 전문가양성과정 아카데미(2021.5.11.~6.3.)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 **발간일** 2021년 7월 16일
 - **발행인**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 **편 집** 정책네트워크실(고영국 박정식 이용진)
정책연구실(강병익 박동욱 박혁 이경아 정상희)
 - **발행처** 민주연구원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민주당사 10층
-

주최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주관


매니페스트 청년 협동조합
Manifesto Youg Coop